

'97 新進研究者
北韓與統一關聯 論文集

北韓實態(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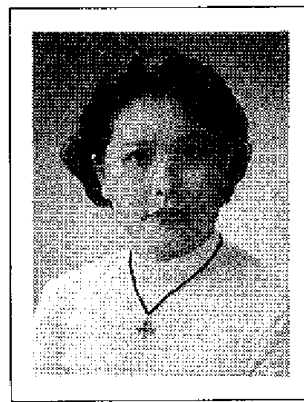
統一院

본 논문집은 '97년도 북한 및 신진 연구자(학자) 연구지원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5권의 책으로 편집·발간한 것입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통일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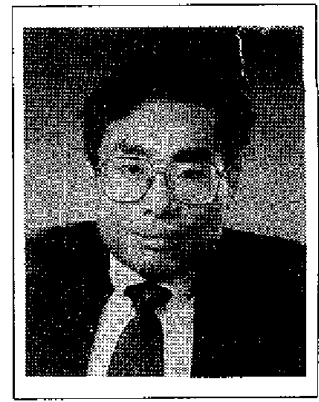
〈收錄論文 目次〉

1. 北韓의 住宅實態와 北韓地域 住宅政策 方向 設定을 위한 研究 1
尹 惠 楨(平澤大)
張 成 洙(住宅產業研究院)
2. 金正日 體制下 北韓軍 및 軍 엘리트 研究 83
金 秉 租(國防大學院)
3. 解放直後 北韓의 教育·文化 實態 一研究 143
姜 仁 求(國史編纂委員會)
4. 北韓住民의 이미지에 대한 社會心理學的 研究 185
鄭 基 仙(成均館大)
5. 北韓 社會主義體系의 轉換과 構造的 制約 223
盧 炳 喆(서울大)
6. 北韓社會의 諷刺的·隱語的 談論分析을 통해본 體制 安定度 問題 279
吳 有 錫(全南大)
崔 奉 大(江原大)

北韓의 住宅實態와 北韓地域 住宅政策 方向設定을 위한 研究



尹 惠 楨(平澤大)



張 成 洙
(住宅産業研究院)

목 차

<요약문>	3
1. 서 론	7
2. 북한의 주택실태	11
3. 통일에 따른 여건변화전망 및 주택부문 수요추정	43
4. 북한지역 주택정책의 방향과 정주권 개발계획	63
5. 요약 및 결론	76
※참고문헌	81

표 목 차

<표-1> 북한의 계층별 주택유형	17
<표-2> 평양시의 계층별 거주지역실태	19
<표-3> 북한발표 경제건설 계획개요 및 주택건설실적	22
<표-4> 북한의 주택건설실적	23
<표-5> 1970년대 이후 평양시의 주택건설현황	27
<표-6> 북한의 주택보급율 추계	28
<표-7> 주택건설의 장성	30
<표-8> 평균주택건설면적	31
<표-9> 남북한 주거면적 비교	31
<표-10> 북한의 주택 소구역 및 기본단위 설정원칙	35
<표-11> 주택 소구역 및 주택군의 면적에 따른 인구 및 시설배치 방안	36
<표-12> 남북한 시멘트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추이비교	38
<표-13> 남북한의 주택사정 및 거주실태비교	42
<표-14> 남북한 인구현황비교	43
<표-15> 북한의 지역별 인구와 증가율	44
<표-16> 남북한간, 동서독간 경제력 비교	45
<표-17> 통일후 지역별 인구규모	47
<표-18> 인구 이동전망 종합	48
<표-19> 북한의 토지개혁의 결과	51
<표-20> 북한지역 주택건설 수요추정	62
<표-21> 주택건설시 투입인력	64
<표-22> 북한지역 정주권 설정기준	75

【요약문】

1. 북한의 주택실태

본 연구는 북한지역에 주택을 대량 건설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보장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공급된 주택안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를 해소하는 한편, 정주권의 개발을 통해 문화적 요구를 해소함으로써 경제적·문화적 곤궁에 따른 북한 주민의 남한으로의 비자발적 이주를 방지하여 통일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러한 바탕에서 통일후 북한지역에 대규모 주택건설에 입각한 주택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북한의 주택 실태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북한의 주택실태에 대한 연구결과, 북한의 주택보급율은 대략 75%에서 83%로서 주택부족이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에서는 한세대에 2가구가 거주하는 것이 불가피하는 등 북한주민들의 주택소비수준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적인 부족은 물론이고 건설된지 20년이 넘는 주택이 전체 주택재고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어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문제도 우려할 수준이다. 1인당 주거면적의 경우 1990년에 5.9~7.6㎡로서 남한의 40~53%정도에 지나지 않고 북한 당국이 계획기준으로 삼고 있는 1인당 10~1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서 과밀주거라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도시주택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연립주택의 형태이며, 주택당 규모가 약 10~11평에 방 2개, 부엌, 약간의 마루와 상수도시설이 있고,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며, 흙벽돌이나 시멘트 블록 또는 실리카트 벽돌조에 시멘트기와 또는 슬레이트가 없어진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의 질적 수준과 형태는 남한의 1960년대 초반의 도시지역 주택의 수준이나 노후화된 시민아파트와 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촌주택은 흙벽돌조에 시멘트기와 또는 슬레이트가 없어진 형태를 하고 있으며, 한 채당 규모는 역시 10~12평에 방 2개, 부엌, 약간의 마루와 재래식 화장실, 그리고 창고가 달려 있으며, 상수도는 공동수도를 이용하고 있다.

북한의 연간 최대 주택건설 능력은 지난 1953년 이후 북한의 주택건설실적을 분석할 때 호당 약 건평 15평을 기준으로 약 10만호 수준이하로 분석된다. 북한의 주택건설과

관련된 자재공업을 살펴보면, 시멘트 생산능력은 연 1,200만톤으로서 북한의 자체수요를 충족하고도 남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부족으로 철근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 아파트는 평양 등 일부지역에만 건설하고 있으며, 강제가 필요하지 않은 조립식 시멘트블록이나 실리카트 벽돌을 생산하여 연립주택을 건설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 남한과 북한은 주택과 주택소비, 그리고 주택의 생산능력에 있어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주택보급을 및 주택의 규모측면에서 남한의 1인당 소비수준은 북한의 1인당 소비수준에 비하여 적어도 2배 이상의 소비수준을 보이고 있다. 남한에서의 주택에 대한 질적 수준을 배제하고 단순히 남북간의 주택건설실적과 건자재 생산능력을 비교할 때 남한은 택지부족분제만 해결될 경우 건평 15평을 기준으로 최소한 연간 70만채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경우는 10만채 이상의 건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일이후 북한지역에서는 기존주택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북한의 주택 부족분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어도 전용면적 18평규모의 주택을 20만호 정도를 새롭게 건설하여야 한다. 현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경우 주택건설자금은 말할나위 없고 적어도 매년 10만호 건설분의 건설자재와 건설중기 그리고 주택건설 및 공급체계가 남에서 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2. 통일후 북한지역 주택 정책방향

통일이후 북한의 현 경제 및 사회체제가 붕괴될 경우 이제까지 북한 정부의 획일적 계획으로 이루어졌던 주택건설사업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통일 한국의 정부는 우선적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주택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지역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급에 그치지 않고 생활, 문화, 교육 그리고 가능하다면 생산시설과 함께 연결된 정주권개념을 도입한다.

북한지역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인구 및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북한지역의 인구 및 주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한편 북한 주택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를 근거로, 재고주택의 개보수 수요 및 연차별 개보수 계획수립, 신규주택건설 규모 추계 및 건설계획 수립, 기존주택 입주자 및 신규주택건설 입주자 등에 대한 대기자 명부를 작성한다.

둘째, 복지개념에 입각한 주택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북한지역의 경제력과 생활 수준을 감안할 때 북한 주민이 자력으로 남한의 주생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통일후 적어도 20년 이상은 북한 지역의 주택정책 기조는 복지주택정책이 채택되어야 한다.

셋째, 정주권개념에 입각한 신도시 및 주택단지 개발방식을 도입한다. 통일후 북한지역에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정주체계에 입각하여 주택과 주거환경시설 등 주요 부문의 건설계획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공급주택규모에 따른 지원방식을 설정한다. 전용 18평을 기본으로 전용면적 12평, 18평, 25평까지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그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별도의 지원없이 자력으로 건설 하도록 한다.

다섯째, 주택 건설공급 및 개보수 관리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 북한주택의 신규 및 개보수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주택건설 자금조달, 주택건설(기술인력, 기능인력, 건축자재 조달체계) 및 주택관리 체계정비 등을 관장하는 조직체계의 정비, 장기임대주택을 계획임대기간이 지나면 이를 분양하여 매각대금을 주택 개보수사업과 연계하여 투자하는 등의 업무를 관장할 조직의 정비가 요구된다.

여섯째, 현 거주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현 주택을 공유화하되 특호와 4호주택을 제외하고는 현 북한 당국과 입주계약권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현재 세입자형태로 거주하는 집단과 가족수를 고려하여 신규 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특호와 4호주택 거주자는 그들이 누렸던 특권을 박탈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북한 전체주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입주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일곱째, 응급 가수용 주택시설을 설치한다. 체제실업자 및 과밀한 기존 주택 거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일후 북한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가수용 주택시설을 우선 건설한다.

3. 결론 및 제언

북한의 주거실태에 대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북한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수립한 계획 및 실적을 재인용한 연구로서 그를 바탕으로 주택수를 추정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주택 실태를 추측하였다. 이러한 빈약한 자료를 재인용하는 범위도 북한 주택의 양적인 측면을 주로 다루었을 뿐이며, 주택의 규모, 방수 등 질적인 측면과 북한의 건설산업 및 주택 건설능력 등 북한의 주택부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주택부문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북한주택 관련연구와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후 북한지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통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대량건설이 필요함을 밝혔고, 주택만을 공급하는 차원이 아닌 인간의 기초수요에 대응하는 정주권체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진행을 통해 주택의 대량건설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어떠한 기초자료가 필요할 것인가라는 맥락에서 북한의 주택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체계화시켰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통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써, 그리고 북한인구의 남한으로의 유입가능성을 감소시켜 통일한국의 빠른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특성인 폐쇄성이 강요하는 자료접근의 어려움과 부족으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의 모색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특히 통일후 북한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때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검토하지 못하고 총량건설목표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매우 아쉽다. 결국 본 연구는 통일후 북한 지역의 주택정책의 대안 모색에 대한 연구라기 보다는 대안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안을 모색하여가는 과정을 제시한 연구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와 상세한 사료를 통해 통일을 대비하는 여러 분야의 정책과 계획이 보다 실천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통일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1945년 독립이후 지속된 분단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은 계속 노력하여 왔으며, 다양한 통일 노력은 때로는 평화적인 대화로, 때로는 전면전을 치르는 형태로 표출되었다. 각각의 노력이 좌절된 경우에도 통일은 민족적 일체성의 회복이라는 명제에 따라 민족적 정서에 호소하는 감성적 접근에 바탕을 두고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통일은 남과 북을 불문하고 한민족에게는 “당연히 해야하는 일”로 받아들여졌으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당위적 가치였다. 바로 이러한 점이 보다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틀에 입각한 통일 논의의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민족적 정서와 민족의 일체감 회복이라는,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명제를 제외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이 분명하다. 인구 5천만과 2천 5백만의 두 정치체제가 50년 이상 상대체제를 적대시하면서 지속되어 왔으며, 심지어 두 체제는 3년간의 전면전을 치렀다. 이로 인해 대다수 남북한 주민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체제에 대한 적개심은 손쉽게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두체제는 국민 일인당 경제력에서 5:1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이탈리아를 분단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지역간 소득격차의 경우, 북부이탈리아의 경제력이 남부에 비해 3:1정도인 것을 볼 때 남북간 통일 논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까지 남과 북, 양측이 제기해왔던 통일논의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불순한 동기를 품고 있었다는 의혹을 가져온다. 통일하겠다는 각각의 정책 속에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접근보다는 상대방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개재(介在)된 경우도 있었으며, 통일논의를 통해 각 체제가 지닌 내부적 문제를 약화시켜 체제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동기가 깔려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 입각할 때 지난 기간에 전개되었던 통일 논의는 기실은 한쪽의 정치체제를 다른 한쪽에 강요하는 ‘병합’ 또는 ‘합병’,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정복’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도 역시 이제까지 진행되어왔고, 제기되었던 통일논의의 바탕을 두고 전개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의 전제는 통일한국

의 정치이념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어떠한 형태로든 남한의 정치적인 주도하에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고 남한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지역의 개발과 남북한 주민간의 생활격차를 해소한다는 낙관적 전제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택분야의 전문가로서 어떠한 형태의 통일인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통일이 이루어졌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추론해내고, 아울러 그 대안을 수립함으로써 사회와 민족에게 봉사하고 통일논의의 과학화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

여전히 “감성적 접근”에 근거한 통일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통일에 따른 문제를 예상함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에 따라 각분야의 전문가들은 통일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민족에게 봉사할 수 있으며, 점진적으로 통일논의의 활성화와 과학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남한의 정치적 주도하에 통일이 될 경우 “남북간 경제적 격차의 해소”가 통일후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이므로 경제격차를 완화하는 대안으로 북한지역에 주택을 대규모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는 주택의 대량건설이 양측의 경제적 격차해소와 북한인구의 남한내 유입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전제에 입각한 것이다.

인구의 이동은 생산력의 차이 및 소비수준의 차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인간적 욕구가 제기하는 각종 기회 및 교육과 같은 문화적 격차에 따라 촉발된다고 한다. 통일후 북한주민들이 수백만 명이 남한으로 유입될 경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문제이겠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우선은 북한지역을 지탱할 수 있는 노동력의 손실 및 상품시장의 축소로 인해 북한의 경제가 통일 이전보다 오히려 위축되어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하여 남한으로 유입된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으로 인하여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간의 갈등이 노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통일이후 서독지역내 극우집단의 대두와 집단폭력사태를 통해 쉽게 예견되고 있다. 북한경제의 황폐화는 북한인구가 남쪽으로 유입되는 속도를 한층 가속화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남한사회에서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남한내 대도시 지역으로 집중

하고 또 거주하게 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직장, 주택, 의료, 교육, 치안 등 사회적 대책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결국 북한지역 경제의 붕괴와 남한 사회의 사회적 불안정은 통일 한국의 바탕을 뒤흔드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대안들 중 한가지가 주택부문의 육성이라 할 수 있다. 주택은 그 자체가 생산재이며, 소비재이고, 동시에 문화적 속성을 갖고 있는 한편, 사회적 안정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추구하는 정치체제하에서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북한지역에 대한 주택의 대량 건설을 통해 고용을 창출,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1.2 연구의 필요성

북한지역의 인구와 가구, 주택에 관한 통계는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의 주택보급을 등 주거상황은 간접자료에 의한 추정이 불가피하다. 북한에서는 당이나 국가기관의 간부급 이상에게는 가구당 한채씩의 주택을 할당하고 있으나 일반 노동자에 대한 주택배정은 약 57% 수준에 머물러 있어 1주택 2가구 거주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양적인 부족과 더불어 북한주택의 질적 수준도 남한의 그것과 격차를 보이고 있다. 주택의 규모는 약 10~11평정도 2개의 침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엌, 재래식화장실에 연탄이나 이탄분을 이용한 조개탄을 주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질적 수준은 한국의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반의 주택수준이다.

이러한 주택의 양적 질적 수준의 남북간 격차의 해소는 통일후 사회안정정책 및 복지정책 그리고 경제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후 구 동독지역의 사회안정과 경제재건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 및 건설분야에 대대적으로 투자했으며, 총 통일비용의 15%가 주택부문에 투입되었다.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통독 7년동안에 구 동독지역에서는 52만 호의 주택이 신축되었고, 210만 호의 기존주택이 개량 또는 보수되었다. 2000년대 초반의 통일을 가정할 경우 현 북한지역의 주택부족수 약 100만 호와 기존 북한 주택의 절반 정도는 재건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통일후 북한지역에서만 약 200만호정도의 주택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주택

부문에서의 부담은 그 자체가 부담이기도 하고 또 기회일 수도 있다. 즉, 통일 한국에서는 북한의 주택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커다란 부담이 예상되는 한편으로 북한지역에서의 대규모 주택건설은 고용창출 및 주거안정을 가져와 북한지역의 경제재건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불필요한 인구이동을 방지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울러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북한의 주거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통일후 북한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인구가 현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주(定住)체계’ 개발의 기초마련과 방향설정 에 관한 연구가 매우 절실하다.

1.3 연구목적 및 구성

본 연구는 통일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최소한의 통일비용으로 남북간 생활 및 문화적 격차 해소의 핵심 항목인 주택부문에서의 대책 마련의 근거와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북한의 주택상황을 북한이 직접 발표한 자료와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남북간의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는 주택부문의 통일후 대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변화 가운데 남·북간의 인구이동 및 토지제도의 변화와 소유권문제는 주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주택 및 주거생활에 영향을 줄 통일후 인구이동, 토지제도의 변화를 각종 자료를 통하여 예측하고 가능한 사안을 살펴본다. 통일후 북한지역에 주택을 건설·공급함에 있어 필요한 주요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주택은 단순한 주택만 공급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대안으로서 정주체계이론에 바탕을 둔 개발을 제안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통일후 사회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인 주택문제에 대한 예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발표한 자료 및 관련자료를 토대로 주택상황, 즉 주택건설실적, 기존 주택제고, 주택보급율 그리고 각종 주택의 질적 측면, 주택산업현황, 도시개발현황 등을 검토하여 북한의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남·북간의 주택부문의 격차를 밝힌다.

둘째, 통일후 인구 이동의 규모와 양 그리고 문제점 및 토지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택 건설부문의 중요성을 밝히며, 통일후 북한지역에서 공급할 주택의 양과 건설비용, 택지개발수요 등을 추정한다.

셋째, 통일후 남북한간의 주거상황의 격차 및 도시개발과 관련된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주택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정주체계개발에 대한 이론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정주 체계개발방안을 제안한다.

2. 북한의 주택실태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총인구 및 주택 센서스개념에 입각한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주택실태에 대해서는 각종 관련자료를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북한이 그들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수립한 계획 및 실적을 재인용한 연구가 있었고, 북한의 주택에 관한 연구들은 이 자료를 다시 인용하는 방식으로 주택수를 추정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주택실태를 추측하였다¹⁾. 이제까지의 연구는 자료의 빈약때문인지 북한의 주택상황 가운데서도 주로 양적인 측면을 다루었고, 주택의 규모, 방수 등 질적 측면과 북한의 건설산업 및 주택건설능력 등 북한의 주택부문 전반에 대한 종합적 분석에는 한계를 보여왔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일후 북한지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주택의 대량건설을 위한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전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을 설정하여 북한의 주택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주택건설 및 공급 등 주택정책개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주택건설실적 및 평양지역에서의 주택건설실적, 총주택재고, 주택보급율 및 주택부족율, 소비수준 특히, 주택규모, 난방, 수도시설, 재료 등 주택의 질에 대한 사항을 남한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단지구성체계, 건축자재생산 능력, 주거지계획 기준과 기술 등 생산기술현황을 검토하여 북한의 주택부문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한다.

1) 주로 인용된 북한의 주택에 관한 연구는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9, 1994. ; 조현식, 「북한의 주택 건설」, 「북한」, 1990. 9. 등이다.

2.1 북한 주택정책의 목표와 개요

2.1.1 정책의 목표와 개요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제2장 제18조²⁾에 따라 부동산은 국가 소유이며, 이에 따라 주택의 사적소유 및 개인의 건축을 금지하고 있다. 동법 제 28조³⁾에서는 주택을 국가의 부담으로 건설하여 공급할 것을 밝히고 있으며, 동법 제 50조⁴⁾에서는 국가가 주택을 건설·소유하며, 북한 주민은 이용권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6.25동란 중 약 60만 호의 주택이 파괴되어 극심한 주택난에 직면하게 되자 휴전 직후부터 평양을 중심으로한 도시 및 공업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에 주력하였다. 1960년대 들어서는 농촌지역의 주택건설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⁵⁾.

북한은 주택건설에 있어 주택규모·형태의 획일화, 집합주택위주의 건설, 주택생산의 공업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1970년대 들어서는 평양 등의 대도시에서는 사회주의의 번영과 우위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주택건설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민족 양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도입”한다는 조선노동당의 정책에 따라 노동력의 집단적 수용과 주민상호간의 감시 및 견제, 관리주체에 의한 일괄적 통제 등을 고려한 주택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주택의 규모와 내부구조는 몇가지 등급에 따라 평면구성 및 평형 등이 획일화되어 있으며 집단적으로 일시에 건설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주택

2) 제18조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제19조 :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다.

3) 제28조 :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하며 균의 역할을 높히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4) 제50조 :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이용권을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민에게 넘겨주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5) 조선중앙인감, 1962. pp.181~183. <내각결정 제76호(1961.4.24)>

“조선로동당의 혁명한 령도에 의하여 도시와 농촌에서는 전후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고 우리나라는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 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되었다. ... 농업생산력이 발전되고 농업생산물이 증대됨으로써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은 급격히 향상되어 전반적으로 중농 또는 부유중농수준에 도달하였다. 농촌 각지에는 많은 주택들과 문화 후생 시설들이 새로 건설됨으로써 농촌의 면모는 일신되고 있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61년 3월 전원회의는 7개년계획기간에 농업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동시에 우리나라 농촌을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시키며 문화주택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촌건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튼튼한 물질 기술적 토대가 있으며 패허 우에서 도시와 농촌을 건설한 풍부한 경험이 있다.”

공급정책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의 획일화 정책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집단화하고 밀집화하기 위하여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추진하고 도시에서는 고층아파트⁶⁾, 농촌에서는 연립주택(2층에 2~3세대 거주)을 중심으로 건설하였다. 건설공법으로는 조립식공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택의 설계와 건설은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다.

둘째, 집합주택위주의 건설

사회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공동생활의 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은 집합주택을 위주로 건설하고, 시설의 공동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계층적인 서비스체계를 구성한다. 집합주택을 통한 주민생활의 집단화로 통제와 감시를 쉽게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북한은 도시내 주거지건설과 개발의 기본 단위로 이른바 주택 소구역⁷⁾을 설정하고 있다. 주택소구역 계획의 수립은 다음에 원칙에 따른다.

- 주택 소구역은 주민의 생활에 편리하게, 즉, 사회주의적 내용을 갖추도록 계획해야 한다.
- 주택 소구역은 그 건설이나 경영에 있어 가장 경제적으로 해야 한다. 즉, 소구역내의 건물들을 통합, 배치하고 건물과 지하시설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경제성을 제고하며, 대지의 이용율을 높이고 공업적 방법에 의한 건설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 주택소구역은 아담하고 아름답게 건설하여야 한다.

한편 소구역의 규모는 도시의 성격과 입지 및 지형조건 등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구역 조성의 최적 규모는 15~30헥터 정도이다.

셋째, 주택생산의 공업화

북한은 전후 단기간에 주택을 대량건설하고, 주택건설의 경제성제고에 높은 관심을

6) 북한에서는 고층살림집이라고 한다.

7) 주택 소구역이란 도시에서 주거지역을 형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여기에는 주택지, 각종 문화·후생시설부지, 정원, 도로 등이 포함된다. 주택소구역을 형성하는 기본 단위는 그 규모에 따라 주민 1,000~1,500명 혹은 2,000~2,500명이 거주하는 소구역 봉사 중심(서비스 중심)을 축으로 한 4~5개 주택군이다.

두고,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 건재생산의 공업화, 건설의 기계화 등을 실천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특히 북한지역은 동절기가 길어서 1년중 건설공사기간이 짧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하절기에는 농업분야에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택건설은 주로 농한기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 조건과 인력부족문제를 감안하여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조립식 공법⁸⁾의 의존도가 높다. 1960년대에는 주택건설의 약 60%, 그리고 2차 7개년계획기간(1978년~1984년)에는 주택건설의 약 90%가 조립식으로 건설되었으며, 평양 등 대도시에 건설되고 있는 고층 아파트도 모두 조립식공법으로 건설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전반적인 생산력과 자본의 부족 그리고 중공업 중심이었던 공업생산력증가를 우선하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재원과 자재의 부족으로 인하여 북한주민들의 주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건설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주택건설투자 재원과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에서의 속도전과 같이 경제적 동기의 부여보다 사상부장을 통한 노력동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건축자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자력갱생의 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자재를 자체조달하여 사용하고 있다. 농촌주택의 경우 “지방의 일은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는 김일성의 경제자립원칙에 따라 그 지역자체의 노동력과 자재로서 건설되고 있다. 중소도시 및 농촌주택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축행위를 허용하고 있다⁹⁾.

건설인력이 노력동원으로 조달됨으로써 전문화되지 못하고, 자제도 지방에서 자체조달함으로써 중·소도시와 농촌의 주택은 그 질적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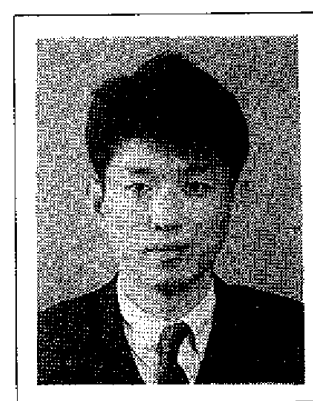
8) 북한의 경우 구 소련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형 콘크리트관넬 방식의 조립식 공법이 채택되고 있다. 대형 콘크리트관넬 방식의 조립식 공법이란 주택을 바닥판, 벽판, 지붕판, 간막이 벽판, 계단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공장에서 콘크리트로 미리 만든 뒤 각각을 주택건설현장을 옮긴 뒤 주택으로 조립하고 각각의 부분의 틈을 콘크리트나 접착제로 메꾸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현장 생산 방식에 비해 현장 투입인력이 절약되고, 시멘트 등 원자재 이용효율이 높고, 현장에서 공사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대량건설이 필요한 경우, 기능인력이 부족한 경우, 동절기가 길어 공사기간을 단축해야 할 경우 등에 주로 이용된다.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 제2장 건물관리.

제17조 : 도시경영기관과 제정, 은행기관은 개인 살림집을 소유자가 국가소유로 전환시켜줄 것을 요구할 때에는 그것을 넘겨받고 보상하여야 한다. 살림집 소유권을 국가소유로 넘긴 공민은 그 살림집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北韓 社會主義體系의 轉換과 構造的 制約



盧 炳 喆(서울大)

목 차

<요약문>	225
1. 머리말	229
2. 분석모델의 구성	231
3. 북한 사회주의체제 존속의 위기	238
4.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전환유형 분석	248
5. 맺는말	264
※참고문헌	268

주택배정은 주택유형과 계급을 연계시켜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택거주에 대한 임대사용료¹¹⁾를 징수하고 있다. 주택배정의 우선순위는 유가족세대, 후방가족, 당원 및 간부가족, 일반노동자, 농민, 월남자가족, 불순계층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새로이 건설된 현대적 문화주택은 시급 이상의 장, 과장, 3급 기업소 기사장 등의 간부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있다. 지방기관 간부급 이상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이 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일반노동자들은 1주택 2세대가 보편적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

북한의 계급별 주택배정 기준은 <표-1>과 같고 이와 연계된 주택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주택형은 60평이상의 대규모 독립고층주택으로부터 8~15평의 아파트 및 주택이 있으나 대부분의 일반주민들은 방1개 정도의 문화주택이나 구옥에서 살고 있다.

1) 특호주택 : 부부장급 이상의 고위당간부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말하며, 크게 부부장급(단층건물과 아파트), 부장급(단층 또는 2층의 단독주택), 부총리급(2층 단독주택)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요한 건물의 면적 같은 것을 고려하여 살림집과 공공건물의 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리용허가증없이 국가소유의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쓸 수 없다.

11) 월 사용임대료로는 방1칸, 부엌1칸 규모(약 6~7평)의 경우는 매월 북한 화폐로 5원 정도를 내며, 방 2칸, 부엌1칸 이상은 그 규모에 따라 월 7~20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평양의 경우 폐열이용 중앙난방식 아파트는 월 30원이상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체육, 「서울문화-평양문화」, 신원문화사, 1989.

12) 조선일보 1994년 4월 14일자.

“.....일반서민은 인립식 구가옥이 많은 서성구역 비파거리에 집중되어있다. 이들 지역엔 주택부족으로 2가구가 함께 사는 「동거살이」가 많다.”

스포츠조선 1996년 5월 23일자.

“.....또 TV나 외국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30평짜리 세아파트(방 3개짜리)는 방마다 한 세대씩 사는 이른바 동거집이라는 것이다. 주택이 형편없이 모자라다 보니 한집에 2~3세대가 각기 방 한칸씩만 가지고 부엌을 공동사용하거나 배란다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다. 북한 전역에 걸쳐 자기 혼자 독집(한주택에 한가족만 거주하는 경우)을 쓰고 사는 사람은 대부분이 중간간부급이거나 혹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일부 개인주택을 소유한 사람들 밖에 없다.”

<표-1> 북한의 계층별 주택유형

구분	주택형및규모	가 옥 구 조	입 주 자	총주택 재고 점유비율
특호	고급단독 주택 (60평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층 또는 2층 단독주택 ◦ 정원 ◦ 수세식변소, 냉난방 장치 ※ 수입건자재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 ◦ 정무원 부부장급 이상 ◦ 연민군 소장급 이상 	10%
4호	신형 고층 아파트 (20~25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2개이상 ◦ 목욕탕 및 수세식변소 ◦ 발코니, 냉온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당 과장급이상 ◦ 정무국 국장급이상 ◦ 대학교수 ◦ 인민군 대좌 ◦ 문예인 간부 ◦ 기업소 책임자 	15%
3호	중급단독 주택 및 신형 아파트 (8~15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2개 ◦ 부엌, 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기관 지도원급 ◦ 도단위 부부장 이상 ◦ 기업소 부장급 ◦ 인민학교,고등중교장 ◦ 인민군 중좌이상 	25%
2호	일반아파트 (8~15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1~2, 마루방1, 부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 기관지도원급 ◦ 인민군 대위이상 ◦ 인민학교,고등중교장급 ◦ 일반노동자 ◦ 기업소과장급 ◦ 천리마작업반장 ◦ 노력유공자 	
1호	단독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1~2개, 부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단노동자, 사무원 	50%
	농촌문화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층연립주택 ◦ 방2, 부엌, 창고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농장원 	
	구 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2~3개의 농촌기존구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두리 협동원 	

자료: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9.

부부장급의 고위층용 아파트는 온돌방 2, 마루방 1(응접실겸용), 다다미방1, 창고, 목욕탕, 수세식변소 등 모든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부총리급 주택에는 정원, 분수, 온실까지 있다. 특별히 당비서, 정치국위원, 정무원 부장 등의 특별주택 규모는 대지 300~500평에 건평 200평 정도로 3층 구조이다¹³⁾. 특별주택의 비품으로는 응접세트를 비롯하여 피아노, 냉장고, 선풍기, 침대, 책상, 의자, 찬장, 카페트 등이 지급된다. 따라서 이사갈 경우 비품은 그대로 남겨두어야 한다¹⁴⁾.

13) 이 주택에는 경비병력 1개분대와 간호장교 1명이 배치되는 외에 전용요리사 2명, 식모 2명, 운전수 2명, 경리원 1명이 배속된다.

2) 4호주택 : 방 2~3개이며 수세식 변소 및 목욕탕, 냉온수시설, 발코니 등의 시설을 갖춘 신식 고층아파트이다. 세대당 25평 내외이며 입주자는 중앙당 과장급이상, 정부원 국장급 이상, 대학교수, 간부문예인들이다. 중앙집중식 난방에 수도물도 24시간 공급되며, 취사에는 보통 석유콘로를 사용한다.

3) 3호주택 : 방 2, 부엌1, 창고 반칸, 즉 궁륭식(중복도식)의 아파트¹⁵⁾와 일부 색짜아식 아파트¹⁶⁾가 이런 규모이다. 3호주택의 방 두칸은 모두 온돌방이며, 각기 벽장이 있고 도로변에 면한 방은 발코니가 붙어 있다. 방 한 칸의 크기는 2평내외이며, 주택들은 폭 1.5m, 길이 3~5m의 북도에 면해 있다. 3호주택은 각 층과 각 방마다 급수배수관이 시설되어 있는데 수압관계로 4층이상에는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결함이 있다. 아파트 비품으로는 침대·책상·의자 등을 비치한 곳이 많으며 각 층마다 쓰레기 투입구가 마련되어 있다.

4) 2호주택 : 방 1~2개, 부엌 1개의 규모를 가진 아파트이다. 신 외랑식 아파트¹⁷⁾와 일부 궁륭식 아파트에 이와같은 규모가 많으며 주택의 전용면적은 6~7평가량이다. 내부시설은 벽에 부착된 벽장뿐이고 입주자 자신들이 선반을 매어 사용한다. 수도, 변소 시설이 되어 있으나 급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아침저녁으로 각각 2시간씩의 제한 급수제가 실시되어 공동변소와 가변소를 이용해야 한다. 연탄으로 난방하며, 이 때문에 겨울철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빈발하고,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

14) 북한의 주택과 관련된 기존연구에서는 특호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북한주택제고 총수의 10%로 추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연구결과 북한측 발표가운데 주택규모가 가장 큰 것이 110㎡인 것을 감안할 때, 특호주택이 총 주택제고의 10%를 차지한다는 분석은 다소 과대평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약 3%로서 10만호 안팎으로 추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5) 궁륭식(穹隆式) 아파트 : 각층마다 중간에 긴 단일북도가 있고 그 북도좌우에 방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형식으로 일명 중간북도식 아파트라고도 한다. 우리의 중북도 아파트와 같은 구조이다. 궁륭식 아파트는 모두 스틱장치가 되어 있고 2.5평내지 3평정도의 방은 모두 다다미방이다.

16) 색짜아식 아파트 : 「색짜아」란 러시아어로 「부분」이라는 뜻. 한 개의 현관으로 올라가며 각 층마다 2세대 혹은 3세대씩 연결되는 주택형식이다. 따라서 한 아파트에 이런 현관이 5개 내지 6개씩 있게 되며, 출입구가 다른 이웃세대와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 우리의 계단식 아파트와 유사한 구조이다. 현대식 아파트는 대부분 이런 형식을 띠고 있으며, 주로 간부용 주택으로 사용된다. 일반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벽이 두꺼워 상대적으로 방음이 되는 편이다. 중앙난방장치가 되어 있는 것도 있다.

17) 외랑식(外廊式) 아파트 : 각층마다 후면으로 단일북도가 설치되어 있고 긴 단일북도에 따라 방이 줄지어 있는 형식으로 북한이 조립식 주택건설을 시작한 초기에 많이 지은 건물형태이다. 우리의 편북도아파트와 같은 구조이다. 급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주부들은 연탄계를 버리는 일과 물을 길어 올리는 일에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

여 각 동마다 주민들끼리 순회조를 조직하여 순찰을 돌기도 한다. 이를 가스 순찰대라고 한다.

5) 1호주택(집단공영주택, 구옥, 농촌문화주택) : 일반적으로 방1, 부엌은 두세대가 1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일반 노동자와 사무원용으로 건설공급된 주택으로서 외랑식 아파트가 이에 속한다. 방은 규모가 1.5~2평 정도이며 현재 1호주택은 전체 도시주택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불편하고 바좁은 주택이지만 1호 주택도 배정받지 못하고 남의 집에서 기거해야 하는 신혼부부들도 많다. 모두가 조립식에 의한 건물이며, 벽의 블록이 너무 얇아 사생활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계층별로 주택유형이 배정되므로 계층별 주거지입지분화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평양시의 경우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층별로 거주지가 구분되어 있다.

<표-2> 평양시의 계층별 거주지역실태

지	역	신	분
중구역	창광거리	중앙당 및 정무원 간부	
	승리거리	예술, 문화인, 체육부문 종사자	
	안상택거리	국가에 거금을 헌납한 재일동포가족	
	버드나무거리	외국인에 대한 관광안내를 위한 지역으로서 호텔, 외화상점 등이 주로 자리한 거리	
동대원구역	문수거리	배우, 가수 등 연예인, 교육자, 과학부서 근무자 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학교, 학원 등이 주로 자리하고 있다	
대동간구역	낙원거리	중간층 일반노동자의 거주지역으로서 방직 공장 및 각종 기계공장이 산재해 있다	
만경대구역	광복거리	인민군 고위군관, 출판 보도부문 종사자, 언론인, 국가에 공헌한 재외동포 가족친지 등	
서성구역	비파거리	일반서민층(구가옥지대)	

자료 :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자료원, 1995. p.255에서 재인용.

2.2 주택 건설실적 및 추정 주택보급율

북한지역의 총량적인 주택사향을 파악하고 통일시 필요한 주택건설량을 추정하여 주택정책수립의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¹⁸⁾를 기

본으로 각종 2차자료를 참고하여 주택건설량과 현 주택재고량을 추정한다.

2.2.1 시기별 건설실적

북한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기본으로 모든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도 경제개발계획과 연계된 부분계획의 하나로 추진하기 때문에 경제계획 단계별로 주택건설실적을 추계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1948년 북한 정권 수립으로부터 1953년 휴전까지는 별다른 주택건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주택건설은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져 있었고, 일본인이 살다가 남기고 간 주택이나 이남으로 이주한 지주 및 부농층이 남기고 간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주택 건설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전쟁기간 60여만 채의 주택이 파괴된 이후 1954년부터 실시된 전후복구 3개년 계획과 함께 북한 정권에 의한 주택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표-3>은 계획기간별 경제건설목표와 실적, 주택건설실적을 요약한 것이다.

1) 전후복구 3개년계획과 5개년계획기간(1954~1960)

전후복구 3개년계획의 목표는 공업 및 농업생산을 전쟁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었으며, 이어서 1957년부터 1960년간에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기반의 구축 및 주민들의 의식주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국민소득 2.2배 증가, 공업 총생산량 3.5배 증가, 알곡수확고¹⁹⁾ 380만 3천톤을 기록하여 계획목표를 1년 앞서 조기에 달성하였다. 전후복구 3개년계획과 5개년계획 기간 중 모두 100만 호의 주택건설을 목표하였는데 약 77만 1천 5백여 호의 주택을 건설하였다. 이 당시 건설된 주택은 평균 약 10평 정도의 규모로 침실 2개와 부엌 및 마루방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동화장실과 공동 펌프를 사용하였고, 주택의 벽체재료는 목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1950년대 후반에는 흙벽돌을 사용하였고 기와 또는 슬레이트를 얹은 것이었다.

18) 조선중앙통신사 발행, 「조선중앙연감」, 1955년에서 1995년까지 참고.

19) 북한은 식량생산에 있어 남한이 양곡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한글전용 등의 이유로 알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알곡이라는 표현에는 쌀, 보리 등의 주요 작물이외에 옥수수(옥수수)생산량도 포함되어 생산량에 포함되는 식량의 종류는 남한과 북한이 다르다.

2) 제 1차 7개년계획기간(1961~1967)

북한은 1961년부터 중공업발전, 경공업·농업의 병행발전, 기술혁신, 문화혁명 및 국민생활향상, 국방·경제병진을 기본과업으로 설정하고 제 1차 7개년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기간 중 계획 목표는 국민소득 2.7배, 공업 총생산 3.2배, 알곡수확고 600~700만톤이었다. 북한 당국은 계획 최종년도인 1967년에 국민소득은 발표하지 않았고 공업총생산은 3.3배, 기계·금속공업성장률은 18.4%,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47.5%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알곡수확고도 발표하지 않은 것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계획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북한은 이에 따라 계획기간을 3년 연장하여 경제와 군사의 병진정책, 기술혁명의 추진, 군수공업의 강화와 1970년대 무력통일을 목표로 제 1차 7개년계획을 3년간 연장하였다. 이러한 완충기간을 통하여 석탄·전력생산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1961년부터 1970년 사이에 120만 호의 주택건설을 목표하였으나 도시지역에 50만호 농촌지역에 30만호 등 총80만호의 주택을 건설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3) 6개년계획기간(1971~1976)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강화, 산업설비근대화, 기술혁명 촉진을 기본과업으로 설정하고 계획기간 중 국민소득은 1.8배, 공업총생산은 2.2배, 알곡수확고는 7백~750만톤을 목표로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1976년 계획기간이 종료되었고 국민소득은 1.7~1.8배, 공업총생산은 2.5배, 기계·금속공업성장률은 19.1%,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55%, 알곡수확고는 1976년에 약 800만톤을 달성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여러 분야에서 계획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하여 1977년을 완충기로 설정하고 6개년계획에서 미달된 철강, 시멘트생산 목표의 달성, 수송난 해소 등 6개년계획 미달성목표완수를 시도하였다. 1971년부터 1977년 사이에 북한 정권은 200만호주택건설 계획을 수립하여 북한주민들의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기간 중 도시 지역에 연간 10만호 건설을 위한 대중운동이 전개되었고, 주택건설예산을 증액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하였다. 평양시내 천리마거리와 서성거리 등에 5층에서 15층 사이에 고층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 41만 4천호, 농촌지역에 47만 2천호가 건설되는 등 총 88만6천호의 주택이 건설되는데 그쳤다.

<표-3> 북한말표 경제건설계획 개요 및 주택건설 실적

구분	기본과업	계획목표	실적(북한 말표)	주택부문	
				목표(만호)	실적(만호)
제1차 5개년계획(1947년~1951년)	기업소 복구와 조업재개, 국경수공업 확대, 생산증대의 생활향상	공업총생산:46만대비 92%증가, 양곡수확고:46만대비 30%이상	공업총생산:46만대비 70%증가, 양곡수확고:46만대비 17만, 생산	-	-
제2차 5개년계획(1948년~1952년)	공업의 파괴성 극복, 생산물의 결여고의 원기질감	공업생산:47만대비 4%증가, 양곡수확고:47만대비 13.5%증산	공업생산:46만대비 280%증가, 양곡수확고:28만 생산	-	-
제3차 5개년계획(1953년~1957년)	낙후된 산업과 농업발전, 전지역 경제 복구기반조성	공업총생산:48만대비 19.4%증가, 양곡수확고:46만대비 158%증산	공업총생산:49만대비 102.9%증가, 양곡수확고:280만	-	-
제4차 5개년계획(1958년~1962년)	전전 수준 도달	금인소득:53만대비 75%증가, 노동생산:268%, 양곡수확고:49만대비 119%증산	금인소득:53만대비 160%증가, 노동생산:288%, 기계·금속공업성장률:47.5%, 농업생산성장률:195%, 양곡수확고:46만대비 126%증산	-	77.5
제5차 5개년계획(1963년~1967년)	공업화의 기관구축, 의식주 문제해결	금인소득:약 2.2배, 공업총생산:2.6배, 양곡수확고:378만	금인소득:2.2배, 공업총생산:3.5배, 기계·금속공업성장률:48.6%, 노동생산성장률:40%, 양곡수확고:380.3만, 체육포:1년 조기 달성	100	-
제1차 7개년계획(1968년~1974년)	공업발전, 중공업, 농업, 병합발전, 기술혁신, 문화혁명 및 국민생활향상, 국경·경제발전	금인소득:약 2.7배, 공업총생산:3.2배, 양곡수확고:600~700만	금인소득:의탈로, 공업총생산:3.8배, 기계·금속공업성장률:48.4%, 노동생산성장률:47.5%, 양곡수확고:의탈로, 계획기간 3년 연장	120	80
제2차 7개년계획(1975년~1981년)	경제의 근세의 발전정책, 기술혁명의 추진, 군수공업의 강화	석탄·전력생산 목표달성	-	-	-
제3차 7개년계획(1982년~1988년)	사회주의물족·기술적 토대강화, 산업발전근대화, 기술혁명 촉진	공업총생산:2.2배, 양곡수확고:7백~750만	금인소득:1.7~1.8배, 공업총생산:2.5배, 기계·금속공업성장률:19.1%, 노동생산성장률:55%, 양곡수확고:800만(76만)	200	88.6
제4차 7개년계획(1989년~1995년)	6개년계획 미달성목표(철강, 시멘트)의 완성, 수송난 해소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생산력기인하, 수송의 근대화, 주민생활향상, 독립체산지의 강화, 대외무역 증대	6개년계획 미달성목표완수 금인소득:의탈로, 공업총생산:2.2배, 전력생산성장률:178%, 철강생산성장률:185%, 공작기재생산성장률:167%, 양곡수확고:의탈로, 철도 60% 건설	140~210	75~105
제5차 7개년계획(1996년~2002년)	1980년대 10대전망목표 추진, 기간산업(연료·에너지)의 공업과(문수)의 우선발전	공업총생산:1.9배, 양곡수확고:1천만, 80년대 10대전망 목표의 4배, 자연계조사업* 추진	서해길은 완성, 공업·농업생산실적:의탈로	-	-
제6차 7개년계획(2003년~2009년)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기술혁신의 추진, 10대전망목표의 실현, 국민생활 향상, 무역 및 경제발전 증대	금인소득:1.7배, 공업총생산:1.9배, 양곡수확고:1.4배	공업총생산:1.5배, 전력생산:1.3배, 석탄생산:1.4배, 비철금속:1.3배, 철강생산:1.3배, 화학비료:1.5배	105~140	29~34
제7차 7개년계획(2010년~2016년)	농업·중공업·무역의 선진·발전, 철도·전력·금속공업발전, 경제관리 강화, 경제지도기반생활 제고	금인소득:의탈로(1천5백만), 전력생산:1.2배, 신발생산:1.1배, 화학공업:1.1배, 석탄:1.3배	공업총생산:1.5배, 전력생산:1.3배, 석탄생산:1.4배, 비철금속:1.3배, 철강생산:1.3배, 화학비료:1.5배	-	-

자료: 매월경제 3월 24일자 및 조선중앙연감 각년치.

<표-4> 북한의 주택 건설실적

경제계획기간	연도	총 주택건설 목표(만호)	총 주택건설 실적(만호)	도시 (만호)	농촌 (만호)	평양	북기시당(지역)	참고사항(층고, 재료)	기타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1956)	1954~1956									
	5개년 계획 (1957~1960)	1957~1960	목표 60 도시 40 농촌 20	77.15						북한의 기본 건설부문 총예산의 13.4%배정
		1961~1960	목표120	80	50	30				조선중앙연간1971년
	67년 계획 (1961~1969)	1971	목표 100 도시 48 농촌 52	88.6	41.4	47.2	천리마거리 서성거리 안뜰에 58.10.12.15층 아파트 건설			조선중앙연감
		1972							평천식주택(2~3층)건설 전 계획기간 중 도시에 매년 10호 건설을 위한 전근중적 운동 전개	
		1973					리진 주택 2천세대 건설		리진 6개 벽돌공장, 2개 시민 트램양, 2개 기원공중 건설	
		1974								
		1975								
		1976~1977							1982년 이후 1972년 사이 주택재고 약 3배 증가	
	제2차 7개년 계획 (1978~1984)	1978	목표 140~210	75~105			· 대동로 좌우에 20.30층 아파트 건설 · 창림거리 연건평 40만 m ² 조성확공			도시와 농촌에 문화적인 살림집이 많이 있어서 근로자들의 살림 수요 원만히 보장
1979~1980										
1981										
1982							은파군 양덕리 은덕마을 건설			
1983										
1984						원산사9~25층 7천세대 함흥 단원시1만 5천 9백채 학공, 5천채 영공 신포 6개월간 아파트 5백채, 문화주택3백채 무신광산 1천 6백세대 지강도 1천세대 의주군 연하리 8백세대 평남문덕 286세대	문수거리 10.12.15.18층 창광거리15~45층 보통월40~41층			

경적거점기간	연도	총 주택건설 목표(만호)	총 주택건설 실적(만호)	도시 (만호)	농촌 (만호)	지방	특기사항(지역)	철교사항(층고, 자료)	기타
제2차 7개년 계획 (1976~1984)	1985					평촌시 수원세대 아파트 4천 5백세대, 착공 예정 1천 5백세대, 가성 근 1천세대, 영신시 1천 5백세대, 순천시 6천세대, 신의주시 3천세대, 용화동도 시군 1만여 세대, 용화남도 3천 6백세대	철교사양(층고, 자료) 평광거리 세대당 110m짜리 40층, 41층		
	1986	2				평촌시 1천 2백세대, 용안남도 1만 9천세대로포, 원산시 특양신 거리 5백여 세대			
	1987	2				천리마거리 2단계 4천세대 (84~87)			
	1988	3~4	105~140			민중대구역, 동성구역, 순안구역에 씨리키트복을 5천세대	평촌시 612, 14층 다층주택 3천세대 건설목표, 안주, 순천가덕, 덕천 6천 2백, 순천 1천 5백, 용촌강원도 김화, 풍강, 철원여 씨리키트복을 1천세대 이상	평촌시 시발등자구에 씨리키트 복을 100까지 주택건설	
	1989	3~4				광복거리 2단계(88~89)	남산의주 4천세대, 용해북도 고종실밀진 1천세대 등 5천 5백여세대		
	1990	6~7				민중대, 순안, 용해식 북로에 씨리키트 복을 5천세대, 평안고 씨리키트복을 5천세대 건설	평양북도 3천 5백여 세대, 자강도 4천 6백여 세대, 11월 8일 공산 혁명음악을 1천세대		
제3차 7개년 계획 (1987~1993)	1991	8~9				광복거리 2단계 3만세대 (90~92)	순천 비탈은 2천 3백세대, 원로 1천 6백세대		
	1992	3~4				동일거리 2만세대(90~92)	평남시 7~9층 1천 2백세대, 강원도 철원, 금강, 풍강 1천 1백세대, 자강도 원 5천세대		
	1993	4				평양시나 3만세대	남산의주 1천세대, 안주/순천/북강/음성 5천세대, 신계미루 6백세대, 강계서신 3천세대, 해주수양 1천 2백세대		

4) 제 2차 7개년계획기간(1978~1984)

1970년대 후반에 들어 북한 정권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생산원가인하, 수송의 근대화, 주민생활향상, 독립채산제의 강화, 대외무역 증대 등을 기본 과업으로 한 제 2차 7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 계획에서는 국민소득은 1.9배, 공업총생산은 2.2배, 알곡수확고는 1천만톤을 목표로 하였고 1980년대 10대전망 목표와 4대자연개조사업을 추진할 것도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이 종료된 1984년경 국민소득은 발표되지 않았고, 공업총생산은 2.2배, 전력생산성성장률은 178%, 철강생산성성장률은 185%, 공작기계생산증가율은 167%, 알곡수확고는 1천만톤, 그리고 철도의 60% 전철화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1985년부터 1986년까지를 제 2차 7개년계획의 부진한 목표달성을 위한 조정기를 설정하고 「80년대 10대전망목표」를 추진하는 한편, 연료·에너지력 등 기간산업과 공업과 운수의 우선 발전을 목표달성에 노력하였다. 이 기간에 서해갑문이 완성되는 등 목표가 부분적으로 달성되었으나 공업·농업생산분야의 실적은 미진하여 북한 당국은 계획실적을 발표하지 않았다. 동 계획기간 중 140만호에서 210만호에 이르는 주택건설을 목표로했으나 실제로는 75만호에서 105만호의 주택만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평양에서는 대동로 주변, 창광거리, 문수거리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설되었다.

5) 제 3차 7개년계획기간(1987~1993)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기술혁신의 촉진, 「10대 전망목표의 실현」, 국민생활 향상, 무역 및 경제협력 증대를 기본과업으로 설정하고 국민소득을 1.7배, 공업총생산은 1.9배, 농업총생산은 1.4배 신장할 것을 목표로 제 3차 7개년계획이 추진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공업생산은 1.5배, 전력생산은 1.3배, 석탄생산은 1.4배, 비철금속은 1.6배, 철강생산은 1.3배, 화학비료는 1.5배 생산량이 증가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역시 이기간 중에도 연간 15만호에서 20만호씩 총 105만호에서 140만호의 주택을 건설할 것도 아울러 계획하였으나 북한 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29만호에서 34만호의 주택만이 건

설되는 부진을 보였다.

북한은 1994년 이후 새로운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제 3차 7개년 계획 이후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석탄·전력·철도운수·금속공업발전, 경제관리 강화, 경제지도기관역할 제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알곡수확고 연간 1천5백만톤, 직물생산은 1.2배, 신발생산은 1.1배, 화학공업은 1.1배, 석탄·전력·운수능력은 1.3배로 증가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에 대한 북한측 공식발표는 아직 뚜렷한 것이 없는 실정이다.

2.2.2 주택 건설실적 추정

제1차 7개년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한 1961년 이후 1993년까지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북한의 총 주택건설목표는 525만~630만호로서 연간 15만호에서 20만호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목표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상황 및 소비재의 부족, 그리고 계획 목표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점으로 인하여 추정된 건설실적 2백 72만 6천호에서 3백 7만 6천호에 불과하여 달성율은 약 43.3%에서 58.5% 정도이다. 이는 연 평균 8만 2천 6백여호에서 9만 3천 2백여 호를 건설한 것으로 1980년대 남한의 연평균 주택생산량 약 20만호의 40%정도를 건설하였고, 1990년대 남한의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 약 60만호에 비하여 1/6수준에 불과하다(<표-4>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혁명수도 평양에 대규모로 고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건설에 치중하였다. <표-5>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된 평양의 고층아파트 건설은 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건설되었으며, 평양시내에서도 외국인의 왕래가 비교적 잦고 북한 당국의 공식행사가 집중되는 천리마거리, 창광거리와 광복거리를 중심으로 주택이 건설되었다.

<표-5> 1970년대 이후 평양시의 주택건설현황

건설사업명	기간	사업규모(세대)	건축형식	비고
천리마/서성거리	1970	-	5,8,10,12,15층 아파트	
비파거리	1971년	-	탑식,평천식 2~3층 연립주택	평천식은 안산식 이라고도 함.
대통로	1980	-	20,30층	
창광거리 1단계	1980	1천 2백여		40만 m ²
문수거리	1981~1983	1만7천		
창광거리 3단계	1984	2천,4백여		
버드나무거리	1984	1천여		
천리마거리2단계	1984~1987	4천여		
북새거리	1984~1987	4천여		
창광거리 2단계	1985	2천여		
만경대/동성구역	1988	-		
순안구역	1988	5천여	실리카트벽돌	
광복거리	1985~1989	2만여	12층~30층	구상안
안상택거리	1985~1989	-	10층~30층	
광복거리2단계	1990~1992	3만여		
통일거리	1990~1992	2만여		
	1993	3만		

자료: 통일원 편, 「92 북한개요」, 1992.

2.2.3 북한의 주택재고 및 주택보급을 추계

북한의 양적인 주택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통일 이후 북한에 건설해야 할 주택의 건설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북한의 주택재고 및 주택보급율을 추정한다. 주택재고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1953년 이전에 건설되어 남아 있던 주택수와 북한측이 1953년부터 1993년 사이에 건설하였다고 발표한 주택수를 추계하고 이 두 수치를 합산하여 구하고자 한다.

1953년 당시 북한에 남아 있던 주택의 수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즉, 1953년 현재 북한 인구는 9백 35만 9천명, 평균가구원수 6인으로 볼 때 총가구수 1백 56만세대에 이른다. 당시의 주택보급율을 약 50%로 가정하면, 1953년 현재 북한의 재고주택수 약 78만호로 추정된다²⁰⁾. 1953년 이전에 건설된 주택 재고에 대하여 매년 1.5%의 감실율을 적용할 때 1993년말 현재 41만 9천 6백호가 잔존하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²¹⁾.

20) 1960년 남한 주택보급율은 약 80.1%로 추계되었다.

이어서 1953년부터 1960년 사이 건설된 주택의 잔존수를 추정한다. 북한측은 이 시기에 약 77만 1천 5백여호의 주택을 건설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연간 1.0%의 감실율을 적용할 때 1993년말 현재까지 55만 4천호의 주택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²²⁾.

1961년 이후 1977년까지 건설발표된 주택수 총 168만 6천호의 잔존수를 추정할 때 이시기에 건설된 주택 재고에 대하여 연간 0.5%의 감실율을 적용한다면 1993년말 현재까지 155만 6천호의 주택이 잔존된 것으로 추정된다²³⁾.

이어서 1978년부터 1993년건설분에 대해서는 감실율 적용하지 않을 때 이 기간동안 건설한 주택수가 104만호~139만호이기 때문에 1993년말을 기준으로 북한의 총 주택재고수는 3백 56만 9천 7백호에서 3백 91만 9천 7백호로 추정된다. 1993년도 북한 인구는 2천 2백 64만 5천명으로서 평균 세대원수를 5인 (1987년 기준)으로 할 때 추정세대수 4백 71만 7천가구가 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주택보급율은 75.67%~83.09%로 추정할 수 있다²⁴⁾.

<표-6> 북한의 주택보급율 추계

구 분		주 택 수(호)	비고
주택건설 실적(북한)	1953~1960년(A)	771,500	
	1961~1977년(B)	1,686,000	
	1978~1993년(C)	1,040,000~1,390,000	
	소계(D=A+B+C)	3,497,500~3,847,500	
1953년당시 주택재고 추정	1953년당시 남아있는 주택수		
	북한 인구수(1953)	9,359,000(인)	가구당 6인기준
	북한 가구수(1953)	1,559,833(가구)	
주택보급율 50%가정시 주택수(E)	779,917		

21) $78만 \times (1-0.015)^{41} = 780000 \times 0.538 = 41만 9천 6백호$

22) $77.15만 \times (1-0.01)^{33} = 771500 \times 0.718 = 55만 4천호 잔존$

23) $168.6만 \times (1-0.005)^{16} = 1686000 \times 0.923 = 155만 6천호 잔존$

24) $추정세대수/주택재고수 \times 100 = 75.67\% \sim 83.09\%$

구 분	주 택 수(호)	비고
1993년 현재 주택재고현황 추정		
1953년이전 건설된 주택재고 (F=0.538E)	419,595 (연간감실율 1.5% 적용)	총재고대비 점유비10.7~11.8%
1953~1960년 건설된 주택재고 (G=0.718A)	553,937 (연간감실율 1.0% 적용)	총재고대비 점유비14.1~15.5%
1961~1977년 건설된 주택재고 (H=0.923B)	1,556,178 (연간감실율 0.5% 적용)	총재고대비 점유비39.7~43.6%
1978~1993년 건설된 주택재고 (C)	1,040,000~1,390,000 (연간감실율 0% 적용)	총재고대비 점유비26.6~39.0%
1993년 현재 주택재고수 (I=F+G+H+C)	3,569,710~3,919,710	F:G:H:C = 1:1.5:4:3.5
1993년말 인구수	22,645,000	
1993년말 가구수(J)	4,717,708	가구당 4.8인가준
1993년말 기준 주택보급율 (K=I/J×100%)	75.7% ~ 83.1%	

자료: 조선중앙연감, 각년치.

이러한 북한의 주택사정에 대하여 통일이후 1960년 이전에 건설된 주택 재고분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북한의 주택보급율을 100% 달성하기 위해서는 79만 8천호에서 1백 14만 8천호의 주택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물론 북한의 인구추계발표시 군인수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후 병력 감축에 따른 제대군인들의 주택수요도 이에 더해져야 할 것이다. 1960년 이전에 건설된 주택의 질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북한의 주택재고에서 배제하고 신규주택의 건설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1961년 이후 건설된 잔존주택재고 259.6~294.6만호만이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주택보급율 100% 목표시 1백 77만 1천 5백에서 2백 12만 1천 5백호의 주택을 추가로 건설해야 할 것이다.

2.3 북한 주택의 질적수준

북한주택재고의 양적인 추정에 이어 북한의 주택사정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주택의 질적수준을 고찰한다. 주택의 질적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택의 평균 규모 및 일인당 주거면적, 난방방식, 재료, 수도시설 등의 항목에 따라 고찰한다.

2.3.1 주택의 평균 규모 및 일인당 주택규모

조선중앙연감(1963년)²⁵⁾의 관련항목에 따르면, “1962년에 24만 4천 3백 13세대의 도시 및 농촌문화주택건설이 착공되었고, 그중 연말까지 18만 3백 33세대가 완공되었으며, 마지막 완공단계에 있는 것은 2만 7천여 세대에 달하였다. 1962년에 건설된 주택의 규모는 전후 즉, 1953년부터 1960년 말까지 년 평균 주택건설의 1.9배에 해당하며 1961년에 비하여서는 2.8배에 달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표-7> 주택건설의 장성

(단위:천㎡)

	1953하반~1960		1961(ㄴ)	1962(ㄷ)	ㄷ/ㄱ(%)	ㄷ/ㄴ(%)
	합계	평균(ㄱ)				
건설한 주택총면적	24,648	3,286	2,196	6,129	187	279
그중 도시에 건설한 것	12,312	1,641	1,394	3,113	190	223
농촌에 건설한 것	12,336	1,645	802	3,016	183	376

출처: 조선중앙연감, 1963. p.227.

이 자료에 근거할 때 1962년 주택건설수는 18만 3백 33호로 1961년에 2.79배이고, 1953년부터 1960년까지의 연평균 건설량의 1.83배에 따라 계산하면 1962년 주택건설수 18만 333호에 평균 주택건설면적 33.987㎡(10.28평), 1961년 주택건설수는 6만 4천 404호 평균 주택건설면적은 34.097㎡(10.314평)이다. 이렇게 1953년부터 1960년사이의 연평균 9만 6천 434호에 총 77만 1천 4백78호의 주택이 건설되었고 평균 주택건설면적은 34.075㎡로서 10.307평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들어 북한에서는 살림집 건설시 1인당 주거면적을 10~12㎡로 설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²⁶⁾. 이러한 수치를 5인 한 가족의 주거면적으로 환산하면 세대당 50에서 60㎡에 달한다. 이 수치는 현재 남한에서 국민주택규모의 하한선인 전용면적 60㎡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상의 목표와는 달리 실제로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는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의 선전매체는 평양 시내 창광거리 2단

25) 조선중앙연감, 1963. p.227.

26) 라인원, “위성도시 형성계획에 관하여, 『조선건축』, 1994년 2호, pp.41~42.

계 세대당 평균규모는 110m²에 달하고, 농촌형 살리카트벽돌살림집은 세대당 100~110 m²에 3개의 살림방, 목욕탕, 위생실 등 총 9개의 실로 건설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²⁷⁾.

<표-8> 평균주택건설면적

(단위: m²/호)

구 분	1953년~ 1960년대 ¹⁾	1980년대 평양 ²⁾	1990년대 계획기준 ³⁾	서울시 평균
평균주택규모	34 (10.28평)	100~110 (30.2평~33.2평)	48~57.6 (14.5평~17.7평)	92.5 (28평)

주 : 1) 조선중앙연감, 1963. p.227

2) 조선중앙연감, 1985. p.232

3) 1987년 북한의 평균가구원수 4.8명/세대 기준

<표-9> 남북한 주거면적 비교

(단위: 평)

구 분	1990년 북한		1990년 한국	1995년 한국(b)	a/b
	전체평균(a)	고위간부주택			
1가구당 주거면적	8.7~11	20	15.7	17.2	0.51~0.64
1인당 주거면적	1.8~2.3	4	4.33	5.2평	0.35~0.44

자료 : 「북한총람」, 「총인구 및 주택센서스」

한편, 국내연구들은 1990년초 북한의 일반주민이 생활하는 주택의 평균면적은 주택 당 10평수준이며, 1인당 거주면적은 약 2.1평으로서 북한 당국이 계획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당 3~3.6평의 약 60~70%수준, 가구당 8.7평~11평수준으로 협소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간부급의 경우 1인당 주거면적이 4평수준으로 전체평균의 2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북한주민은 실제로 평균치보다 훨씬 좁은 주거공간에서 거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²⁸⁾.

27) 조선중앙연감, 1985, p.232.

28) 북한연구소, 「북한 총람」, 1994. p.579.에 의한 것.

2.3.2 난방설비 및 재료

1) 난방 및 전기

주택의 난방 및 취사연료는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다. 평양에 건설되고 있는 최신형 아파트는 인근 화력발전소의 폐열과 전기를 이용한 중앙난방식 급탕설비가 갖춰져 있으나 오래된 아파트는 연탄과 무연탄, 농촌주택은 장작에 의존하고 있다. 주택에는 대부분 전기가 들어가고 있으나 전력을 절약하기 위하여 주택내에 1개실에만 전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절전을 위하여 전기 자동차단기가 설치되어 일정시간이 되면 전기가 차단된다. 부락이나 아파트단위로 강제절전이 가능하고 1실1등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은 1967년 12월 6일 평양시 평천구역 안산 2동에 건설된 18세대의 아파트에 최초로 중앙난방을 도입하였다²⁹⁾. 평양시에서는 1971년 현재 천리마거리와 서성거리에 건설된 고층 아파트와 시내 주택에 중앙난방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협동농장에서 중앙난방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³⁰⁾. 이러한 중앙난방의 경우에도 연료절약을 위하여 주택의 일부분에만 배관하여 부분적인 난방을 하고 있을 뿐이며, 배관파이프의 간격을 넓게 시공하여 온도를 낮춰 에너지를 절약하고 배관 파이프를 절약하고자 하고 있

29) 조선중앙연감 1971. p.280.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앙난방이 운영되었던 1967년 12월 6일 이비이 수령께서는 평양시 평천구역 안산 2동에 건설된 18호동의 아파트를 찾으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온수온돌이 높은 방들을 돌아보시고 조선사람은 예로부터 아래목을 던개하고 옷복은 서늘하게 했는데 아래목에는 관을 더 넣어서 더운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래목에서 자고 서늘한 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옷목에서 자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의 온도가 너무 더운 것 같다하시며 관의 간격을 좀 넓게하여 온도를 조정하게 하고 관을 절약하여 평양시를 다 이렇게 하여야 하겠다고 가르치 주시었다. 그이께서 난방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돌려주시므로써 도시경영부문에서는 보일러난방관리체계가 새로 세워지게 되었다.”

30) 조선중앙연감, 1972. p.355

조선중앙연감, 1974. p.248

“1973년 난방부문에서는 평양시 중앙난방공사를 적극 다그쳐 비파거리를 비롯하여 새로 일떠선 거리의 주택들에 대한 난방공사를 적극 다그치는 한편 모란봉구역, 보통강구역, 서성구역, 동평양지구 에 열망을 확장하여 더 많은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에 온수가 공급되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조선중앙연감, 1975. p.407

“1974년 1월 7일과 13일 전국농업대회를 지도하시는 그 비쁘신 때에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새로 지은 평양시 삼석구역 2층 4세대짜리 집을 찾으시어 집구조를 세세히 보시면서 웃음을 두칸 다 텅힐 방도를 세워주시었다.”

다. 일반주택의 경우 난방연료가 연탄이나 장작 등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노동력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취사용연료로는 평양시내 일부에서는 전기곤로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³¹⁾.

2) 재 료

북한주택의 사용되는 주된 재료는 목재, 흙벽돌, 슬레이트, 기와, 벽돌, 시멘트 및 시멘트 블록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재료의 종류라는 측면에서는 남한의 주택과 큰 차이는 없다. 각종 판유리와 유색타일을 생산하여 주택건설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자재의 종류는 많으나 그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어 평양과 대도시 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는 시멘트, 철근, 판유리, 유색 타일 등을 사용하고 있고, 대도시 주변 협동농장에서는 실리카트 벽돌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고, 부엌이나 화장실에 유색 타일을 바르는 정도의 수준이다.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서는 건축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목조외벽에 슬레이트나 초가를 얹은 주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³²⁾.

31) 조선중앙연감 1973. p.286

“열 및 온수난방부문 일군들은 1972년에 중앙열난방간선공사를 적극 추진시켰으며 외성구역, 중구역, 보통강구역의 기존살림집 1만여세대에 대한 옥내난방공사를 진행하고 전기곤로도 공급하여 녀성들을 부엌일에 무거운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였다.”

32) 조선중앙연감, 1973. p.241

“1972년 벽돌생산이 1971년에 비하여 112%, 런마석재는 135%, 건축타일은 108%, 목석유판은 136%, 비닐경질판은 142%, 금속건재는 129%로 각각 늘어났다.

건재공업부문에서는 1972년에 무엇보다도 먼저 3대기술혁명의 기치를 따라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이미 마련하여 놓은 건재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였다.

새로운 소성법을 받아들여 소성로의 시간당 생산능력을 1.8배로 높인 천내리세멘트공장의 경험을 살리어 해주, 고무산, 승호리 세멘트공장들에서는 원료계통에는 원료교반기, 세멘트분쇄에는 령각제 진장치를 설치하여 소성로의 시간당 생산능력을 높이면서도 유해작업을 무해작업으로 바꾸었다.

각지 요업공장에서는 이해에 내벽타일과 벽돌 소성실수율을 각각 113%로 높이였을 뿐만아니라 내벽타일의 1등급비율을 1.8배로 올리었다.

년산 1억내의 홍상요업공장 벽돌생산능력확장공사, 안변요업공장의 위생자기직장, 박충요업공장의 외벽타일직장 건설을 다그쳐 생산을 시작하였다.

또한 30만평방미터씩의 길주합판공장도자장식판 생산계렬과 길주목섬유판의 벽지생산계렬을 새로 꾸리어 장식판지와 벽지생산에 들어갔다.”

조선중앙연감, 1974. p.191

“남포유리공장에서는 국가의 큰 투자없이도 전처리건설과 같은 주체적인 생산공정을 세워 현존설비의 유리물용해능력을 1.6배로 높였는가 하면 인상기를 개조하여 인상속도를 1.3배로 올리었다. 그리하여 년간에 300만~400만평방미터씩의 판유리를 더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벽돌공장 같은데서도 여러 가지 색깔의 타일식 유색벽돌을 마음대로 뽑아낼 수 있게 되었다.”

2.3.3 수도시설

북한은 1950년대 전후재건 및 중화학공업 우선 건설정책을 추진하고 협동조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택에 수도시설을 공급하는 문제에 큰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 단적인 사례로는 1962년에 들어서 평양시, 개성시 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들은 수질이 불량한 지대에 정수설비를 설치할 것이며 5~10세대에 한 대의 수동 펌프를 설치하여 좋은 음료를 공급하도록 할 것을 계획하였다³³⁾.

이후 수도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1974년에 이르러 60% 이상에 달하는 세대들에 수도가 들어갔다고 발표하였으며³⁴⁾, 1976년에는 전년대비 물생산량이 1.7배 증가하였고 군소재지와 노동자구는 물론 거의 모든 농촌마을까지 상수도시설이 갖추어졌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에 근거할 때 군소재지 및 노동자구나 그 이하의 행정단위에서는 주로 공동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³⁵⁾.

한편 평양을 제외한 일반도시의 경우 수도시설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펌프로 지하수를 양수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정전시 물을 사용하기 곤란하며 하루에 3~4시간 밖에는 물이 나오지 않고 농촌지역에는 상수시설이 없어 우물이 일반화되어 있다.

2.3.4 주택의 입지 및 주거환경

북한의 경우 식량생산을 위한 농지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 특히, 농촌주택의 입지를 주로 산기슭이나 고지대를 이용하고 있다. 김일성은 1967년 2월에 소집된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농경지가 제한되어 있는 조건하에서 있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데에 대하여 교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논밭기운데 있는 집들을 조사하여 설태를 파악하고 주택들을 양지바른 산기슭에 옮김으로써 많은 토지를 농토로 전환시키는 계획이 추진되었다³⁶⁾. 북한의 농촌주택은 경사지대와 산기슭을 비롯한 비경지들에 단층 또는 2~3층의 연립주택형태로 주택을 건설하는 동시에 농경지에 산재되어 있는 주택들도 고

조선중앙연감, 1979년. p.269

“각 건설사업소들에서는 24만립방메터의 부제생산기지, 800만개의 벽돌과 95만개의 기와를 비롯한 지방건제생산기지도 꾸려 건설을 정상화하는데 잘 리용하였다.”

33) 조선중앙연감, 1962. p.182

34) 조선중앙연감, 1975. p.414

35) 조선중앙연감, 1976~1977. p.378

36) 조선중앙연감, 1968. p.223

지대로 점차 이·개축하고 있다³⁷⁾. 농촌에 건설되는 주택들의 경우 1980년대 들어서는 실리카트벽돌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3칸을 기본으로하는 살림방과 부엌, 전실, 목욕탕, 위생실, 쌀창고와 일반창고, 자전거보관창고, 농산물을 건조할 수 있는 노대, 노인들이 휴식할 수 있는 노대 등이 계획되고 있다³⁸⁾.

평양 등 도시지역에서 건설되는 고층 아파트 주거의 경우 주동의 층고와 형태가 다양하여 한동의 길이가 보통 300~400여m'에 달하는 경우도 있고 한동에 평균 500~600여세대가 들어있다. 이러한 단지에 경우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폭원이 다양한 도로망과 연결하고 있다. 단지건설에 있어 하수도 시설의 경우, 우수관망과 오배수관망 그리고 지역난방공사배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³⁹⁾.

2.3.5 북한의 주거지 계획 원칙

<표-10> 북한의 주택소구역 및 기본단위 설정원칙

구 분	소주택구역	기본단위	비 고
성 격	도시에서 주거지역을 형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여기에는 주택지, 각종 문화·후생시설부지, 정원, 도로 등이 포함된다	주택소구역을 형성하는 기본 단위는 그 규모에 따라 주민 1,000~1,500명 혹은 2,000~2,500명이 거주하는 소구역 봉사 중심(서비스 중심)을 축으로 한 4~5개 주택군.	서울의 1개동 인구는 평균 2만명. 서울평균 인구밀도 179.6인/ha 서울평균 호수밀도 25.6호/ha
인구(명)	10,000~12,000	1,000~1,500 2,000~2,500	
주택(호)	2,000~2,400	200~300 400~500	
면 적	15~30ha 4만5천평~9만평		
인구밀도 (인구/ha)	333~666	333~666	
호수밀도 (주택수/ha)	67~135		

37) 조선중앙연감, 1962. p.182.

38) 조선중앙연감, 1988. p.187

39) 조선중앙연감, 1993. p.283

<1992년에 완공된 주요대상, 통일거리준공>

“우리당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에 따라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90년대 첫기념비적 거리-통일거리가 4월 12일 준공되었다. 총성의 다리로부터 락랑다리에 이르는 10여리구간, 1,080여만평방메터의 부지에 펼쳐진 통일거리에는 대동로 좌우에 18층, 20층, 25층의 탑식, 병풍식 살림집 30개동(2만여세대)과 다양한 업종을 가진 봉사당, 공공건물 등 모두 70여동이 들어앉았다. 도로망이 넓고 시원하게 형성되었다. 통일거리의 중심을 꿰 지른 약 5키로메터의 기본도로의 폭은 무려 120메터이며 이 중심도로의 중심차도 너비는 48메터이다. 땅속에는 우수, 오수, 상수, 열탕 등 그물처럼 형성된 지하망이 깔려있다. 살림집한동의 길이가 보통 300~400여 메타에 달하며 한동의 건물에 평균 500~600여세대가 들어있다.”

북한은 도시내 주거지건설과 개발의 기본 단위로 이른바 주택 소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주택소구역을 형성하는 기본단위는 그 규모에 따라 주민 1,000~1,500명 혹은 2,000~2,500명이 거주하는 소구역 봉사중심(서비스 중심)을 축으로 한 4~5개 주택군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소구역의 규모는 도시의 성격과 입지 및 지형조건 등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구역 규모는 15~30헥타(4만 5천평에서 9만평) 정도로서 페리(C. Perry)의 근린주구의 규모가 1km×1km 즉, 30만평임에 비해 약 1/6~1/3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다. 인구가 4천에서 7천 5백명으로 구성되며 이는 우리 서울의 한 개동의 약 절반정도의 규모라 하겠다. 이 규모는 주거지역건설에 따르는 외곽도로 시설 건설비와 구역내의 기반시설비를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다. 즉, 구역의 규모가 증가할 경우 단위 면적 당 주변도로 연장이 감소하여 경제적이나 내부기반시설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양자간의 비용선을 고려할 때 적정한 규모로 산정한 것이다. 단지계획상의 특징으로서의 중심 가로를 설정하고 가로와 가로가 교차하는 절절점에 그 중요도 차례에 따라 사상, 문화, 상업의 중심지가 위치하는 선형계획개념이 특징이라 하겠다⁴⁰⁾.

<표-11> 주택소구역 및 주택군의 면적에 따른 인구 및 시설배치 방안

번호	구분		주택소구역 및 주택구획의 크기(ha)						
	계획항목	단위	3.68	4.4	7.87	11.8	17	21	
1	층수	평균	4	4.5	4.95	4.3	4	4	
2	건축밀도	%	21	21.2	21.5	21.2	21	21	
3	인구밀도	명/ha	360	361	365	361	360	360	
4	인구수	명	1,320	1,580	2,830	240	240	7,560	
5	주요 시설 물	상수도	m/명	1.14	0.88	0.6	0.47	0.566	0.57
6		오수도	m/명	0.75	0.75	0.483	0.463	0.51	0.425
7		난방	m/명	1.27	0.64	0.66	0.338	0.364	0.34
8		포장	m/명	4.68	2.65	2.43	2.81	5.2	10.4
9		녹지	m/명	11.25	9.54	14	9.1	9.4	9.5

자료: 리순원, 백원기, 「주택소구역계획」, 국립건설출판사, 1963.

출처: 「북한의 도시정책과 개발현황」, 「치안문제」, 1995.4. p.34.

40) 「북한의 도시정책과 개발현황」, 「치안문제」, 1995.4. pp.34~35.

2.4 북한의 건축자재 산업현황

북한의 건축자재공업은 시멘트, 판유리, 내화벽돌, 합판 등을 생산하는 부문으로서 북한에서는 1980년대 이후 주민들의 생활 수준향상을 위해 생산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건축자재생산 공장들은 원산지와 대도시 소비지근처에 건설되어 있으며, 각 지방에서는 건축자재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소규모 시멘트공장, 벽돌공장, 슬레이트 공장 등 각종 건축재생산기지를 추가로 건설하여 건축자재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생산규모를 늘이고자 애쓰고 있다. 한 예로 제3차 7개년계획기간인 1987~1988년 중에는 평양시 등에 40개 건축자재생산기지가 조성되어 타일·합성수지·위생기구·금속건구·비닐장판·벽지·보온재·방열기 등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1989년에는 함경북도내 10여개 시·군에 시멘트·강재·벽돌·금속건구공장 등을 건설하였다. 이 기간 중 성진내화물공장, 청진 실리카트벽돌공장, 평양 8월17일 부재공장, 백암마그네샤지붕판공장, 혜산흡판공장 등을 새로 건설되었으며, 함흥 목재가공공장 및 평양금속건재공장 등은 생산시설을 개건·확장하였다. 그러나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등 풍부한 원료를 가지고 있는 시멘트 공업과 내화물공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낙후되어 있다⁴¹⁾.

2.4.1 시멘트산업

북한에는 시멘트공업의 원료인 석회석이 평안남도(순천), 황해북도(봉산), 황해남도(해주), 함경남도(운포노동자구), 함경북도(부령), 평양 등 전국각지에 약 1천억톤이 매장되어 있으며 풍부한 원료를 토대로 시멘트생산능력이 상당한 정도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1980년대 이후 남포갑문건설, 30만헥터 간척사업, 20만헥터의 토지개간, 태천 발전소건설, 대규모 주택건설 등으로 시멘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세를 보이자 생산시설능력을 1992년 약 1천 2백톤으로 증가시켰으나 실제 생산실적은 그에 못미치는 8백에서 9백만톤에 그쳐 시멘트 수급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다. 해방직후 남한의 생산능력의 10배에 가까웠던 북한 시멘트산업은 1993년말 현재 1천 2백만톤으로 한국의 약 1/4

41)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산업」, 1995. pp.157~16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북한이 풍부한 원료의 매장량과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생산능력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산량이 저조한 배경에는 시설노후화 및 최근의 전력과 유류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12> 남북한 시멘트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추이비교

(단위:만톤)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북 한	생산능력	977	1,177 (*1,350만톤)	1,202	1,202	1,202
	생 산	880	890	1,000	600	800-900
남 한	생산능력	2,986	3,079	3,341	4,210	4,473
	생 산	2,979	3,137	3,268	3,853	4,283

자료: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산업」, 1995. p.157

공장시설로는 시멘트제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성방식에서 현대화 설비인 NSP Kiln이 3기(한국 34기), SP Kiln이 3기(한국 8기)로 설비의 현대화율은 35%(남한 98%)에 불과하며 여타 설비는 낙후된 습식, 반건식, 단순건식의 제레설비이기 때문에 열소모율이 높고 가동률도 떨어져 있다. 또한 내화벽돌을 북한이 자체 제작한 저급품을 사용함으로써 장기운전이 어렵고 품질이 떨어진다.

북한에는 일제때 건설된 승호리, 2.8, 해주, 친내리, 8.2, 부래산, 고무산 시멘트공장과 1970년대 후반에 완공된 연산 300만톤 규모의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1989년 조업을 시작한 연산 200만톤 규모의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등 연 50만톤이상 생산하는 10여개의 대규모공장과 80여개의 중소규모 시멘트공장이 있다. 북한은 최근 기존의 순천, 2.8, 고무산, 해주시멘트공장 등의 시설개체와 생산능력 확장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사리원·개천지구에 새원료에 의한 대규모 시멘트생산계획(1천5백만톤급 증설, 사리원) 및 새로운 소성방법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포틀랜드시멘트 이외에 백색시멘트, 고강도시멘트, 급결시멘트, 저온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등도 일부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4.2 유리공업

유리공업은 전후 파괴된 주택, 공장 등의 건설에 판유리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는데, 생산성 및 품질에서 남한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품질 수준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리원료인 규사는 서해안의 봉금포, 구미포에서 양질의 규사가 대규모로 산출되고 있다.

종류별로는 판유리·압연·유리병유리·식기유리 등은 자체생산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나 품질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방탄유리·렌즈 등 특수유리의 생산을 군수용의 소량에 그치고 있다.

주요 유리공장으로는 1954년 설립된 남포판유리공장(판유리, 온도계, 압연유리, 공예품)과 1970년대후반에 설립된 이원판유리공장이 있다.

2.4.3 내화물

북한은 내화벽돌의 주원료인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이 36억톤으로 추정되는 세계최대의 마그네사이트 매장국으로 내화물공업이 비교적 발달되어 있다. 그중 용양광산은 북한내 최대의 마그네슘 광산으로 용양에서 전기기관차로 단천, 김책 등으로 운반되어 내화물의 주원료로 이용된다.

마그네사이트는 마그네샤 크링카로 가공되는데 이는 제강로 등의 혐기성 내화벽돌의 주원료로 사용되며 북한의 마그네샤 크링카는 규산분이 적고(1~2%), 용적무게가 높은(1cm³당 3.18~3.25g)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마그네샤 크링카의 연간 총생산능력은 1991년에 300만톤으로 추정되는데 내수용 20~30만톤을 제외한 나머지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표면이 고르고 단단해 별도의 외장공사가 필요없고, 여러 가지 형태로 생산이 가능한 실리카트벽돌(silicate brick)생산에 주력하고 있는데 실리카트는 성천강, 청천강 등 주요 하천지역에서 채취되는 규산염과 생석회를 가압하여 생산된다.

북한의 내화물공업을 대별하면, 원료인 마그네샤 크링카 공장과 내화벽돌 공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단천 마그네샤 크링카 공장은 직경 11m의 대형회전로 2개를 비

릇, 총 6개의 회전로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 최대의 공장으로 연간 마그네샤 크링카 200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 성진내화물공장, 고무산시멘트공장, 해주시멘트공장, 승호리시멘트공장 등에서도 마그네샤 크링카를 생산하고 있다.

마그네샤 크링카를 원료로 한 내화벽돌은 성진내화물공장과 제철소, 제강소, 시멘트공장 등에서 소규모시설을 이용하여 생산되는데 생산기술이 낙후되어 있어 제강소의 전로 및 시멘트공장의 소성공정에 필요한 1,800℃이상을 내는 고온소성벽돌은 생산치 못하고 대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일본으로부터 내화도 2,000℃이상의 벽돌을 생산하기 위해 대규모 내화벽돌 플랜트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4.4 제재 및 합판

북한은 풍부한 자연림을 바탕으로 산림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제재공업을 발전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급증하고 있는 건설부문에서의 수요에 대응해 합판제조시설의 확장에도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제재공장은 자강도 해산시에 위치한 위연제재공장으로 연간 20만m³의 목재판을 생산하고 있다. 기타 제재공장으로서는 평양목제종합공장, 신의주제재공장, 운천제재공장, 두만강제재공장(회령) 등이 있고, 무산, 신원, 안변, 문천, 만포 등에도 대규모 제재공장이 있다.

합판생산공장으로서는 함북 길주에 있는 길주합판공장이 대표적이고, 평양목제공장의 합판직장, 순천목제가공공장 등도 규모가 큰 편이다.

2.5 소 결

북한의 도시주택은 특호주택과 1980년대에 건설된 평양 등 대도시지역의 고층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연립주택의 형태이며 주택의 한세대당 규모가 약 10~11평에 방 2개, 부엌, 약간의 마루와 상수도시설이 있고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며, 흙벽돌이나 시멘트 블록 또는 실리카트 벽돌조에 시멘트기와 또는 슬레이트가 없어진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의 질적 수준과 형태는 남한의 1960년대 초반의 도시지역 주택의 수준이나 노후화된 시민아파트와 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촌주택은 흙벽돌조에 시멘트기와 또는 슬레이트가 없어진 형태를 하고 있으며, 한채당 규모는 역시 10~11평에 방 2개, 부엌, 약간의 마루와 재래식 화장실 그리고 창고가 달려 있으며, 상수도는 공동수도를 이용하고 있다.

북한의 주택보급율은 대략 75%에서 83%로서 주택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에서는 한세대에 2가구가 거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주택소비수준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적인 부족은 물론이고 건설된지 20년이 넘는 주택이 전체 주택재고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어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불편도 클 것으로 예측된다.

1인당 주거면적의 경우 1990년에 5.9~7.6㎡로서 남한의 40~53%정도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 당국이 계획기준으로 삼고 있는 1인당 10~1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서 과밀주거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북한의 연간 최대 주택건설 능력은 지난 1953년 이후 북한의 주택건설실적을 분석할 때 호당 약 건평 15평을 기준으로 약 10만호 수준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주택건설과 관련된 자재공업을 살펴보면 시멘트생산시설이 연 1,200만톤으로서 북한의 자체수요를 충족하고 남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유류 및 에너지 난과 주택건설투자자금의 부족으로 시멘트 생산시설을 충분히 가동하지 못하는 형편으로 약 800만톤의 생산에 그치고 있다. 강제부족에 따라 철근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 아파트는 평양 등 일부지역에만 건설하고 있으며, 강재가 필요하지 않은 조립식 시멘트 블록이나 실리카트 벽돌을 생산하여 연립주택을 건설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제재목 및 합판생산의 경우는 북한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판유리의 경우는 질이 조악하고 생산품종이 단순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연감의 경우 온수난방인 경우 배관재 절약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설비배관재의 생산능력이 북한의 자체 수요를 충족시키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표-13> 남북한의 주택사정 및 거주실태비교

구 분	북한	남한		비 고
		1990	1995	
총 인구수(천명)	22,645*	43,411	44,606	북한은 1993년기준 단, 군인은 제외
총가구수(천)	4,718*	11,355	12,961	
총주택수(천호)	3,569~3,919	7,160	10,113	
주택보급율(%)	75.67~83.09	72.4	86.0	남한 '96년 80.2%
연평균 주택건설량(천호)	82.6~93.2	750	61.9	
연간주택건설량	최대 10만호*	-	70만호	
1인당주거면적(m ²)	5.9~7.6	14.3	17.2	1990년기준
가구당주거면적(m ²)	28.7~36.4	52.8	56.8	1990년기준
주택평균면적(m ²)	48~57.5	84.2	80.7	북한은 계획기준
100인당 주택수	-	16.5	21.5	
주택의 주재료	시멘트, 목조, 시리카트벽돌	시멘트, 벽돌	시멘트, 벽돌	
수세식화장실비율(%)	-	51.3	75.1	
입식부엌율(%)	-	52.4	84.1	
온수목욕시설율(%)	-	34.1	74.8	
상수도보급율(%)	-	78.5	89.7	

주 : * 은 추정치

이상의 분석결과 남한과 북한은 주택과 주택소비 그리고 주택의 생산능력에 있어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주택보급율 및 주택규모 측면에서 남한의 1인당 소비수준은 북한의 1인당 소비수준에 비하여 적어도 2배 이상의 소비수준을 보이고 있다. 남한에서의 주택에 대한 질적 수준을 배제하고 단순히 남북간의 주택건설실적과 건자재 생산능력을 비교할 때 남한은 택지부족문제만 해결될 경우 건평 15평을 기준으로 최소한 연간 70만채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경우는 10만채 이상의 건설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일이후 북한지역에서는 기존주택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북한의 주택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어도 전용면적 18평규모의 주택을 20만호 정도를 새롭게 건설하여야 한다. 현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경우 주택건설자금은 발할나위 없고 적어도 매년 10만호 건설분의 건설자재와 건설중기 그리고 주택건설 및 공급체계가 남에서 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통일에 따른 통일의 열매가 북한지역에 골고루 배분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 주민들의 주택소비수준을 향상시켜 일정기간이 지나면 남한지역 주민들의 주택소비수준에 근접하도록 하여야 한다. 북한의 주택실태에 대한 검토 결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남북간의 주거수준 격차 및 그 해소는 남북통일에 따른 부담이자 최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3. 통일에 따른 여건변화전망 및 주택부문 수요추정

3.1 통일에 따른 인구 이동전망

본 절에서는 통일에 따른 여려변화 가운데 가장 심각한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북한지역 인구유출과 남한으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문제를 살펴보고, 북한지역 인구의 유출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맥락에서 북한지역에 건설공급해야 할 주택수요를 추정한다.

3.1.1 인구현황

주택과 관련된 계획수립을 위해 남북간의 인구현황을 살펴본다. 현재 남북한의 인구를 비교해 보면, 남한에 4천4백85만명, 북한에 2천3백26만명으로 북한인구는 남한인구의 52%에 불과하다. 북한의 국토면적은 남한의 국토면적 보다 1.24배 넓기 때문에 인구밀도에 있어서 남한이 2.38배정도 과밀하다. 그러나 인구증가율에 있어서는 남한이 1% 미만이지만 북한은 1.6%로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14> 남북한 인구현황비교

(1994년 현재)

구 분	남한(A)	북한(B)	B/A
인구(천명)	44,851	23,261	0.52
면적(km ²)	99,314	122,762	1.24
인구밀도(명/km ²)	451.6	189.5	0.42
연평균 인구증가율 (1985~1995)	0.95%	1.6%	

자료: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5. ; 통일원, 남북한 경제지표, 1995.

현재 북한의 지역별 인구분포와 증가율을 살펴보면, 평양에 약 3백33만명, 총인구의 15.1%가 거주하고 있으며,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 지역에 47.1%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5> 북한의 지역별 인구와 증가율

구 분	1991년		'91인구밀도 (명/km ²)	비고
	인구(천명)	구성비(%)		
평양	3,335	15.1	1,667.5	남한지역 인구밀도 (1994년) 최고 : 서울 17,836.4(명/km ²) 최저 : 강원도 90.7(명/km ²)
남포	802	3.6	1,065.1	
개성	385	1.7	306.8	
함경북도	2,084	9.5	118.6	
함경남도	2,886	13.1	152.1	
양강도	673	3.1	47.0	
자강도	1,218	5.5	71.8	
평안북도	2,533	11.5	207.8	
평안남도	2,854	13.0	246.5	
강원도	1,571	7.1	140.9	
황해북도	1,635	7.4	204.2	
황해남도	2,052	9.3	256.4	
계	22,028	100	179.4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동향, 1996.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5.

지난 10년간(1982~1991년) 인구증가율에서 20%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인 지역은 남포와 함경남도, 황해북도 순으로 최근에 이들 지역에서 규모가 큰 개발이 일어나고 있음을 반영한다.

북한의 지역별 인구배분은 지역내의 지형과 같은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인구가 서해안의 평야지대, 특히 평양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 유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해안 지역은 원산, 함흥, 청진 등이 점적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발달되어 있어 동해안 지역이 전반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양강도와 자강도 지역의 경우는 험준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수준에 비해 크게 낮다.

남한과 북한의 인구배분정도는 지역인구밀도의 분산계수(Coefficient of Variance)를 계산함으로써 비교할 수 있는데, 남한과 북한의 인구밀도의 분산계수는 남한이 12.41이며, 북한이 2.82로 북한의 인구는 남한에 비해 비교적 균등하게 지역별로 배분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²⁾.

3.1.2 통일후 인구 이동에 대한 선행연구들

통일후의 인구이동과 사회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북한지역으로부터 남한으로, 특히 수도권으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이동할 것인가에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고, 북한인구의 남한유입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예측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나 아직 문제의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통일후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남한과 북한간의 경제력격차에서 찾을 수 있다. <표-16>은 1989년의 남북한간, 동서독간 경제력을 비교한 것이다. 남북한간의 GNP와 1인당 GNP의 격차가 동서독보다 매우 크고, 또한 무역총액에 있어서도 격차가 커서 통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구 이동의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16> 남북한간, 동서독간 경제력 비교

(1989년 기준)

구 분	한 국	북 한	한국:북한	서독:동독
GNP(억달러)	2,379	231	10:1	7:1
1인당GNP(달러)	5,569	1,064	5:1	2:1
무역총액(억달러)	1,349	46	29:1	13:1
무역의존도(%)	56.7	20.1	-	48:27

출처: 윤혜정·장성수, 「통일시대 국토개발의 방향」, 1997. p.106.

통일독일에서는 경제력 격차 때문에 일어나는 구 동독지역 인구의 서독이주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화의 1:1 교환정책 등으로 인구 이동의 근원적 요인을 차단하였다. 그결과 1989년 통독직후 4/4분기에 약 27만명이, 1990년에는 약 40만명이 이주하여 최고치를 보이다가 그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동서독간 인구 이동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서독으로 이주하는 동독 이주민의 대다수가 양질의 노동력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향후 구 동독지역의 노동잠재력을 구조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류우익은 북한의 도시화율이 남한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통일이후 북한의 실업율이

4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지역경제의 변화와 인구이동”, 「통일시대 한반도 국토개발구상」, 1997.2. p.112~114.

20~3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잠재적 이동인구가 북한 총 인구의 1/4인 450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2/3인 300만이 남한으로 이주할 것이며, 특히 이중 2/3인 200만이 수도권으로 집중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⁴³⁾.

김상균의 경우, 북한의 계층분류(3계층 51분류)에 의거, 북한 총인구규모의 50%를 주변적 계층으로 분리하고, 이를 1,000만을 잠재적 이동인구로 보았다. 이중 1/2이 한계적 상황에 있다는 가정하에 500만명이 남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를 초기, 중간, 종결단계로 나누어 각각 400만, 70만, 30만으로 분리하여 추정하였다⁴⁴⁾.

한편, 대한주택공사는 통일후 한반도 전체의 순 인구이동규모를 810만명으로 추정했다. 이중 남한으로의 이동은 399만명, 북한지역 내부의 인구이동은 411만명 정도로 추정하였다. 동 연구는 통일후 초기, 정착단계, 통일완성단계로 나누어 남한으로의 인구이동과 북한지역내 인구이동 규모를 추정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총인구이동은 약 160~170만명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평양의 인구규모는 600만정도로 서울에 이은 제2의 대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⁴⁵⁾.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등은 시나리오별⁴⁶⁾로 인구이동방향 및 규모 등에 대해 예측하였다. 통일후 10년간(2011~2020년)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동할 총인구 규모를 시나리오별로 6백20만8천명과 5백88만명으로 추정하였다. 시나리오#1의 경우 1994년 북한인구기준 총인구의 26.7%, 시나리오#2의 경우 북한 총인구의 25.3%가 남한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에서 전출한 인구가 남한내 각 지역으로 배분되는 규모는 시나리오 #1인 경우 4백33만9천명이 수도권지역으로, 동남권지역으로 1백11만9천명, 시나리오 #2의 경우 3백21만8천명이 수도권지역, 동남권지역으로 1백6만명이 이주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북한지역으로부터의 인구이동 대부분이 수도권지역과 동남권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43) 류우익, 「내륙과 해양을 잇는 K자형 발전축으로」,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2000년에 열리는 통일사대」, 1993.

44) 김상균, 통일후 인구이동대책에 관한 연구, 통일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1995.

45)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통일한국의 주택부분과 공사의 역할, 1995. 11. pp.97~108.

46) 북한의 개방화와 개혁이 실패하여 경제성장률이 1995년도 이후 계속해서 매년 1%의 감소를 경험할 경우를 시나리오 #1로 하고, 북한의 개방화와 개혁이 성공으로 이루어져 2000년까지 현재의 경제수준을 지속하다가 2001년부터 연 10%의 성장을 경험할 경우를 시나리오 #2로 설정하고 시나리오별로 인구이동규모를 예측하였다.

두 지역 이외 다른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인구가 전입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통일후 남북한 지역간 인구이동결과를 반영한 지역별 인구규모전망 결과 통일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 공히 남한지역과 북한지역 사이의 인구격차가 커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표-17>을 보면, 특히 남한지역 중 수도권지역의 인구비중이 시나리오 #1의 경우 2011년 27.8%에서 2020년 31.2%로 증가하고, 시나리오 #2의 경우 2011년 27.4%에서 2020년 30.9%로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⁴⁷⁾.

<표-17> 통일후 지역별 인구규모

(단위:천명)

구 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2011년		2015년		2020년		2011년		2015년		2020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남한 지역	수도권지역	21,749	27.8	23,670	29.2	26,473	31.2	21,437	27.4	23,586	29.1	26,284	30.9
	강원도지역	1,551	2.0	1,637	2.0	1,747	2.1	1,550	2.0	1,635	2.0	1,743	2.1
	충북지역	2,182	2.8	2,333	2.9	2,524	3.0	2,180	2.8	2,217	2.9	2,515	3.0
	충남지역	4,081	5.2	4,395	5.4	4,794	5.6	4,077	5.2	4,385	5.4	4,772	5.6
	전북지역	2,052	2.6	2,166	2.7	2,311	2.7	2,051	2.6	2,164	2.7	2,306	2.7
	전남지역	4,202	5.4	4,512	5.6	4,905	5.8	4,198	5.4	4,503	5.6	4,885	5.8
	경북지역	6,059	7.8	6,539	8.1	7,149	8.4	6,052	7.7	6,524	8.0	7,115	8.4
	동남권지역	8,663	11.1	9,446	11.6	10,444	12.3	8,649	11.1	9,419	11.6	10,383	12.2
	계	50,271	64.3	54,698	67.5	60,346	71.1	50,194	64.2	54,544	67.3	60,004	70.7
북한 지역	평양시	4,208	5.4	3,985	4.9	3,712	4.4	4,224	5.4	4,027	5.0	3,801	4.5
	남포시	1,003	1.3	950	1.2	885	1.0	4,007	1.3	960	1.2	906	1.1
	평안남도	3,623	4.6	3,431	4.2	3,196	3.8	3,637	4.7	3,467	4.3	3,272	3.9
	함경남도	3,667	4.7	3,473	4.3	3,235	3.8	3,677	4.7	3,492	4.3	3,278	3.9
	함경북도	2,660	3.4	2,518	3.1	2,346	2.8	1,667	2.1	2,532	3.1	2,377	2.8
	평안북도	3,205	4.1	3,035	3.7	2,828	3.3	3,212	4.1	3,044	3.8	2,848	3.4
	황해남도	2,592	3.3	2,455	3.0	2,287	2.7	2,598	3.3	2,461	3.0	2,303	2.7
	개성시	474	0.6	449	0.6	418	0.5	475	0.6	450	0.6	421	0.5
	황해북도	2,062	2.6	1,953	2.4	1,819	2.1	2,067	2.6	1,958	2.4	1,832	2.2
	자강도	1,533	2.0	1,451	1.8	1,352	1.6	1,536	2.0	1,455	1.8	1,362	1.6
	양강도	864	1.1	818	1.0	762	0.9	866	1.1	820	1.0	768	0.9
	강원도	1,979	2.5	1,874	2.3	1,745	2.1	1,983	2.5	1,879	2.3	1,758	2.1
	계	27,871	35.7	26,392	32.5	24,585	28.9	27,948	35.8	26,546	32.7	24,927	29.3
총 계	78,142	100%	81,090	100%	84,931	100%	78,142	100%	81,090	100%	84,931	100%	

출처: 대한민국토도시계획학회·삼성그룹, “지역경제의 변화와 인구이동”, 통일시대 한반도 국토 개발구상, 1997. 2. p.146.

47) 대한민국토도시계획학회·삼성그룹, “지역경제의 변화와 인구이동”, 통일시대 한반도 국토개발구상, 1997.

3.1.3 통일후 인구 이동에 따른 문제와 대안

통일후 인구이동전망을 종합하면, <표-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으로 이동하는 북한인구의 규모를 최소 300만명 600만명까지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 내에서의 인구이동은 제외한 경우이며, 북한내 인구이동까지를 감안하면, 최대 1천만정도가 이동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현재 북한 인구의 50%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이동의 방향은 크게 남에서 북, 북에서 남, 북에서 북이라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 따른 이동인구의 특성을 분석하면, 남한에서 북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는 북한지역의 낙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나 기업경영을 담당할 고급인력들로서, 전문기술자나 경영·관리자 집단이 주류를 이루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령자나 소수의 실향민들로 구성될 것이다. 그반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동하는 인구들은 접경지대에 거주하거나 대도시에 살고 있는 20~40대의 노동력을 갖춘 집단들이 우선적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의 낙후지역에서 북한내 대도시나 공업도시로 이주할 인구들도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18> 인구 이동전망 종합

이동방향	이동집단 특성	선행연구 결과			
		류우익	김상균	대한주태공사	국토도시계획학회
① 남→북	전문기술자, 경영·관리자, 투자자 등 고급인력과 고령의 월남피난민	- 총이동규모: 450만 북→남:300만	- 북→남 이동 규모: 500만 초기:400만 중간:70만 종결:30만	- 총이동규모: 811만 북→남:399만 초기:178만 중간:135만 종결: 85만 북→북:411만	통일후 10년간 남→북:588만 ~620.8만 수도권:322만 ~433만 동남권:106만 ~111.9만
② 북→남	20~40대 노동력 갖춘 집단	수도권:200만		초기:178만 중간:135만 종결: 85만	
③ 북→북	농촌·광산→대도시, 공업지역 20~40대 노동력 갖춘 집단			수도권 : 160 ~170만 유입	

인구의 이동은 생산력의 차이 및 소비수준의 차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인간적 욕구가 제기하는 각종 기회 및 교육과 같은 문화적 격차에 따라 촉발된다고 한다. 통일후 북한 주민들이 수백만명이 남한으로 유입될 경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문제이겠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우려된다.

첫째, 반세기동안 서로 대립된 이념체계속에 살아온 남과 북의 주민들이 정치제도나 경제체제가 통일되더라도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이념적 갈등을 노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념적 갈등이 남과 북이라는 지역적 차이와 연결된다면 새로운 형태의 지역간 대립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한 쪽의 고소득계층이 북한지역에 진출하였을 경우 상호가치관과 윤리관의 차이에 따라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둘째, 북한지역을 지탱할 수 있는 노동력의 손실 및 상품시장의 축소로 인해 북한의 경제가 통일 이전보다 오히려 위축되어 파국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하여 남한으로 유입된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으로 인하여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즉, 북한지역의 저임금노동력이 한국노동시장에 대규모로 유입될 경우 실직에 대한 위기감과 통일에 따른 사회적 기강의 해이에 따라 극우파폭력집단이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통독이후 서독지역내 극우집단의 대두와 집단폭력사태를 통해 쉽게 예견되고 있다.

셋째, 북한경제의 황폐화는 북한인구가 남쪽으로 유입되는 속도를 한층 가속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남한사회에서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노동생산성이 낮고, 기존의 생산체제는 붕괴되고 새로운 산업구조조정에 적응하기가 곤란할 것이므로 실질구매력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기대육구와 구매능력 격차에 따른 불만을 안게 될 것이며,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은 자칫 좌경화 경향을 띤 집단화로 이어져 남한 사회 곳곳에서 좌우간의 집단적 대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넷째, 남한내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게 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각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될 것이다. 결국 북한지역 경제의 붕괴와 남한 사회의 사회적 불안정은 통일 한국의 바탕을 뒤흔드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상에서 요약되는 통일후 부작용으로서의 인구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통일시점에서 일정기간동안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전략적으로 투자할 산업분야를 선택하여 집중 투자함으로써 북한지역의 경제적 안정과 소득증가를 통해 북한지역 인구를 안정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한가지 대안이 주택산업분야라 할 수 있다. 주택은 그 자체가 생산재이며, 소비재이고 동시에 문화적 속성을 갖고 있는 한편 사회적 안정의 초석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지역에 주택을 대량 건설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공급된 주택 안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를 해소하는 한편, 정주권의 개발을 통해 문화적 욕구를 해소함으로써 경제적·문화적 곤궁에 따른 북한 주민의 남한으로의 비자발적 이주를 방지하여 통일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3.2 통일후 토지 처리방안

본 절에서는 통일후 북한지역내 산업육성 및 사회안정을 위한 방안이자 주택건설 측면에 반드시 검토해야할 북한의 토지제도현황과 통일독일의 사례, 국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대안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북한지역 토지처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2.1 북한의 토지제도

일본의 식민통치가 종식되고 북한지역의 정치적 지배권을 장악한 공산주의 북한 정권은 식민지적 요소를 없애기 위한 북한의 첫번째 과업으로서 1946년 3월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 1946년 8월에는 「중요산업, 교통·운송·은행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여 산업을 국유화했다. 북한의 사회주의화 과정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제1단계는 1946~1953년까지로 토지개혁을 통한 농민에게 경자유전 원칙하에 토지를 분배하여준 기간이다. 제2단계는 1953~1958년까지로서 이 단계에 있어서는 토지를 모두 공유화하고 농민을 「집단농장화」한 단계이다. 요약하면, 북한은 1946년에 행한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에게 일시 농토를 부상으로 나누어주었다가 다시 1954년 집단농장제를 적용, 농토를 공유화하였다. 농민들이 노동을 제공하여 영농한 것에 대해 노동제공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는 생산체계⁴⁸⁾로 전환된 것이다.

48) 이러한 생산체계를 칭산리방법이라 부르고 있다.

1946년 당시 해당 도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에 의해 무상분배된 토지와 관련하여 농민들에게 토지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고, 소유관계를 새로운 토지대장(토지등기부)에 등록하였다. 이때 구 토지대장은 모두 불살라 폐기하였다⁴⁹⁾.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북한은 농업협동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수의 법령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북한은 전쟁기간중 많은 북한주민이 월남하자 「경작자없는 토지에 관하여」(1950.12.26), 「경작자없는 토지를 공동경작함에 대하여」(1951.5.22)라는 법령을 공포하여 월남자들의 토지를 국유화하고 협동조합원들에게 공동경작권을 부여하였다. 그 외에도 「협동단체들의 조직 및 사업강화에 관한 결정」(1951.8.22), 「생산협동조합들의 경제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제 대책에 관한 결정」(1953.3.27) 등의 법령을 공포하여 국가기관·국영기업소·기타 단체들이 부속농장을 조직하는 한편, 경작자 없는 토지를 부업경영케 함으로써 점차 협동적·집단적 토지소유제도를 정비하였다.

<표-19> 북한의 토지개혁의 결과

(단위:정보)

구 분	면 적	용 도 별		호 수
		경지면적	과수원	
몰수한 토지	1,000,325	983,954	2,692	422,646
일본인 및 일본국가의 토지	112,623	111,561	900	12,919
민족반역자 및 도피자의 토지	13,272	12,518	127	1,366
5정보이상소유지주의 토지	237,746	231,716	984	29,683
전부 소작시킨 자의 토지	263,436	259,150	292	145,688
계속적으로 소작시킨자의 토지	358,053	354,093	381	228,866
교회,사원,종교단체의 토지	15,195	14,916	8	4,124
분배한 토지	981,390	965,069	-	724,522
보통 농민에게	22,387	21,960	-	17,137
토지없는 농민에게	603,407	589,377	-	442,973
토지가 적은 농민에게	345,974	344,134	-	260,501
이주한 지주에게*	9,622	9,598	-	3,911
인민위원회 보유지	18,935	13,885	(2,692)	-

주 : 지주에게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조건부로 5정보를 넘지않는 토지를 나누어 주었음(법령 제6조 3항).

자료 : 통일조선신문사, 「통일조선연감(1967~1968)」, p.836.

출처 : 이태욱, 「경제:자력갱생정책의 이점과 한계」, 「북한 40년」, 을유문화사, 1989. p.123.

49) 이점에서 구동독의 경우와 구별된다. 구동독은 등기제도상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단이전의 등기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구동독의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및 세습건축권등기부의 3종이 있었다. 김상용, 「구동독과 북한의 토지제도의 비교」, 「토지연구」, 제5권 5호, 1994.

책의 일환으로 부분적으로 기존의 사용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 유상분배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북한지역에서 국유화되기 이전의 원소유주에게 소유권을 반환하는 방법을 통한 재사유화방식은 소유권분쟁을 야기시켜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고 이에 따라 북한지역 국영기업의 사유화과정도 지체시킬 것이기 때문에, 반환보다는 보상차원에서 북한지역 미해결재산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보상차원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다고 할지라도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상방법은 저리 장기채를 발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제성호는 한국적 상황에서의 몰수토지 처리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우리가 통일을 이룩하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을 재삼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재국유화방안 또는 보상방안을 제안하고 있다⁵²⁾.

그가 제시하고 있는 제1차적 대안은 재국유화방안이다. 통일한국에서 구재산권의 처리는 북한 내에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조속한 도입, 대북한 투자장애요인을 제거하여 북한주민의 토지이용권을 보호하는 등 조속한 생활안정 확보라는 거시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국유화방안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지역에서의 투자조건 개선을 통한 조속한 경제제건,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 보상재원 마련의 어려움 회피 등의 어려운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또한 이 방안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현상태 대로의 주택·토지 등에 대한 이용권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여 불필요한 대규모 남한이주를 방지할 수 있으며 정부의 추가재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2차적 대안으로는 보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국유화방안은 북한정권하에서의 불법청산이라는 과제, 그리고 사유재산권(월남자들의 구소유권)에 대한 보호에 소홀한 단점이 있으므로 대안적 차원에서 원소유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감안한 몰수토지 처리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밖에 통일한국은 가칭 「국유재산관리청」을 설립하여 북한토지를 직접 관리하는 한편, 북한토지의 이용실태에 관한 일체조사를 실시하여 토지 용도별로 새로운 지적공부(地籍公簿)를 작성한 후 북한주민에게 현재 이용하는 토지와 주택을 중심으로 분배를

52) 제성호, "통일과정의 북한토지문제", 『토지연구』, 1996. 5-6월호

실시하고, 일정한 분배상한을 설정하여 유상분배하고 장기지리로 상환토록 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분배된 토지는 일정기간 매매·처분 등의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투기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동시에 안정된 주택 및 고용정책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대규모 남한이주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북한주민에게 분배하고 난 나머지 토지는 관련 입법조치를 통하여 수용 내지는 국유화시키고, 국유화된 토지는 국가가 계속 관리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투자자들에게 매각처분을 하여 사유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양승종은 「무보상원칙」을 적용하여 국공유토지의 이용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⁵³⁾. 토지은행을 설립하여 국가가 미리 싼 값에 미개발토지를 대량매입하여 공공자유보유 또는 공공임대보유 형태로 비축하였다가 토지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이 비축된 토지를 수요자(주로 민간토지개발자)에게 팔거나 대여하는 제도, 즉, 토지 비축제도를 이용하여 처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북한토지중 원래 개인소유 이외에 협동농장 소유토지를 원칙적으로 농장원들에게 분배하여 사유화하고, 남은 국유화된 토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토지은행의 설립을 통해 관리할 경우 경제발전 및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국유화된 토지의 토지은행에 의한 관리는 토지사용에 있어 공공적 이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유화된 토지의 문제점인 개인들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한 토지개발을 막을 수 있고, 공공재나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를 제때에 큰 비용없이 공급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고 있다.

이같은 의견과는 달리 이진욱은 월남인의 북한지역내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회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토지소유권 중재원(가칭)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통일로 야기된 모든 토지소유권문제(부동산소유권문제중 대표적인 토지소유권을 통칭한)를 조정·해결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⁵⁴⁾.

이상의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 재국유화와 보상방안을 적절히 조화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지역 토지에 대한 공부(公簿)가 없는 상황에서 사

53) 양승종, "통일이후 북한토지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연구」, 1995. 1-2월호.

54) 이진욱, "통일후 북한의 토지정책", 「토지연구」, 1993. 11-12월호.

유화나 보상 등 처리방안의 실현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

3.2.3 통일후 토지 처리방안

이상의 통일독일과 국내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후 사유화에 근거한 자유시장 체제가 북한전역에 시행되고 행정당국의 관리가 이완될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심각한 분쟁이 예상된다. 특히 분단이전의 원토지소유자들이 토지소유권의 원상복귀를 요구할 것이 예상되어 문제의 양상은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의 경우, 서독의 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소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원상회복(반환)을 그 처리원칙으로 삼았다. 보상에 따른 과도한 재정부담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91년 10월 현재(경제통합이후 1년만에) 약 200백만건의 반환요구가 제기되었고, 그 대상면적만도 구 동독면적의 1/3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중 약 30%만이 처리되었을 뿐 그 성과는 매우 부진했다. 그 원인은 분단이전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대장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원소유자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는 북한내 국유토지의 불법점거 및 분할, 남한의 부동산 투기자본유입에 따른 토지가격의 앙등, 궁극적으로 북한주민의 토지로 부터의 유리, 원토지 소유자와 현토지이용자간의 분쟁 등 통일독일의 경우보다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북한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의 토지정책이 남한의 높은 지가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상품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토지 가격비율을 최소화하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보장하고 사회간접자본 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에서의 북한지역 토지는 원칙적으로 국유 또는 공유화하며, 이용자가 분명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은 이용자(개인이든 법인이든) 및 원토지소유자가 모여 이루는 조합(가칭 토지관리조합)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토지 이용자에게는 계속 사용권이 부여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에 대한 원상회복 및 반환은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원소유자가 앞서 언급한 조합에 가입하기를 거부할 경우 조합은 원소유자의 권리에 상응한 채권을 발행

하여 일정한 시점에 현금보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가칭)「토지관리조합」은 토지의 이용권을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하여 채권상환에 충당하도록 하고, 또한 대규모의 국공유지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기관(가칭 「토지관리공사」)을 설치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간접자본 형성을 위한 사업을 기존의 「토지공사」나 「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수행하는 방안도 제안하고자 한다.

기업소부지와 같이 생산기반이 되는 토지는 그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정 유예기간(약 5년내지 10년)이 지난후에는 임대료를 부과하며, 30~50년단위로 토지 및 건물의 이용권을 갱신하되, 계속이용권을 보장하는 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기업에 대한 불법전대 및 프리미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권자에 대한 불하원칙은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는 현거주자에게 토지분은 영구 임대개념에 입각하여 사유화 및 사적 거래를 방지하고, 원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해서만 합법적 점유자에게 분양하여 주고 사유화 및 사적 거래를 허용한다. 이것이 주택과 관련한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통일이후 공급되는 주택들은 이처럼 공공택지에 건물만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도록 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주거안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지의 경우, 현지농민이 계속해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생산물에 대한 매매는 자유롭게 하도록 하며, 일정기간이 지나 어느정도 경제력을 지닐 경우 농지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하고, 경작권의 자유로운 매매는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처럼 강력한 토지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유권과 이용권 그리고 이용에 따른 임대료를 관리하는 (가칭)「토지관리조합」, 토지의 개발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가칭)「토지관리공사」와 같은 조직이 정비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어 불법매매나 전매, 농업실적 등을 관리하는 기능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토지소유규제정책은 통일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북한지역의 사회기반시설확충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3.3 주택부문 수요전망

본 절에서는 2장 2절에서 추계한 북한지역의 주택사정을 감안하여 1994년말 기준으

로 주택보급율을 100% 달성하기 위한 주택량을 추정하고자 한다. 즉, 총 필요주택수와 건설비용, 필요택지규모 등을 추정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소요투자비용을 추계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이 통일후 북한경제 부흥에 기여하는 정도를 살펴본다.

3.3.1 수요추정의 범위와 방법

통일후 북한지역의 주택수요와 주택공급에 따른 관련 부분의 수요를 추정하는 것이므로 같은 기간에 있을 남한지역에서의 주택건설수요는 본 논의에서 제외한다.

주택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구수(인구)에 대한 전제가 필요한데, 본 장의 1절에서 인구이동의 규모와 방향 등을 검토한 결과, 일정기간 북한인구의 남한으로의 이동은 엄격하게 통제되어야만이 남과 북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며, 그 대안으로서 이동이 통제된 북한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인구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라 지적하였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인구의 이동이 통제되어 북한지역의 인구가 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하였다⁵⁵⁾.

주택가격은 택지비와 주택건설비로 구성되며, 택지비에는 토지가격과 대지조성비가 포함된다. 따라서, 필요주택수를 추정하고, 그 주택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토지가격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지역의 토지와 관련하여 통일후 처리방안을 검토한 결과 기간시설의 설치와 주민을 위한 주거용자 등의 확보와 토지사용화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국유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렇게 용지비의 부담을 없애는 것이 빠른 시간안에 남북한의 경제 및 사회안정을 가져오는 방법이라는 가정에 따라 토지를 국유화하고, 공공주택이 건설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용지비는 제외하고, 주택건설비용을 추계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계한 비용은 토지비의 부담이 배제된, 가정할 수 있는 최소비용이라 할 수 있다.

3.3.2 주택 수요추정의 전제

주택 수요추정을 위한 전제는 다음과 같다.

55) 남한에서 북한으로 이동하는 소수의 기술인력의 수와 통제를 벗어나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동하는 수가 서로 상쇄된다고 가정한다.

첫째, 북한의 인구와 가구수는 1993년말 기준으로 22,645천명이며, 평균가구원수 4.8인을 기준으로 하여 총 가구수는 4,717,708가구이다.

둘째, 현재의 주택수는 3,569,710~3,919,710호로 주택보급율은 75.7~83.1%이다.

셋째, 공급될 주택의 규모인 세대당 평균분양면적은 전용면적 60㎡와 공용면적 12㎡를 기준으로하여 72㎡ 즉, 21.8평으로 한다. 이 기준은 남한의 1990년말 주택평균규모 80.7㎡보다 작고, 북한의 현 수준 48~57.5㎡보다 25~50%정도 넓은 규모이며, 인당 15㎡(약 4.5평)의 규모이다. 이 수치는 단순한 계획수립상 편의를 위해 평균치로 사용한 것이며, 실제계획 단계에서는 북한의 인구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가족수에 따라 주택규모를 10평형이하의 소형부터 25평이상까지 다양하게 공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주택의 평당 건축비는 120만원으로, 건설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건축비보다 다소 낮은 가격이다. 북한지역의 경우 인건비가 현재의 남한수준보다 낮을 것이므로 현 건축비보다 낮게 책정하였다.

다섯째, 건설되는 주택의 평균 용적율은 5층 아파트를 기준으로 75%정도로 삼는다. 우선 용지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고, 적은 비용으로 많은 주택을 건설해야 하므로 고층 아파트보다는 5층의 중층아파트를 중심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주택건설을 위한 총 택지면적은 주택용지에 더하여 도로 등 도시하부시설, 편의시설 및 공급처리시설에 필요한 용지를 합한 것이다. 최근에 건설된 신도시들의 주택용지비율의 30~40%정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40%로 설정한다.

3.3.3 주택부문 수요추정

본 연구에서 주택부문 수요추정의 목표는 현 가구수와 주택수를 기준으로하여 주택보급율 100%를 달성하려는데 있다. 즉, 1가구 1주택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⁵⁶⁾. 추정항목으로는 총 건설에 투입되어야할 건축공사비와 택지수요량을 다룬다.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구수-기존 주택수>만큼의 주택이 건설되어야 한다. 이렇게 계산된 총건설주택수에 세대당 분양면적을 곱하면, 총 건설연면적이 계산되고, 총 건설연면적에 평당 건축공사비를 곱하여 총 소요건축공사비(TC)를 추산할

56) 주택보급율 지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으나 아직도 남한의 주택정책수립에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수 있다.

또한 총 건설연면적(TF)을 평균 건축용적율로 나누어서 주택용지 소요면적을 계산하고, 주택용지 소요면적에 주택단지내 주택용지비율을 계산하면, 주거지개발을 위한 총 택지소요량(TL)을 추산해 낼 수 있다.

<주택부문 수요계산식>

● 건축공사비 추정

$$\text{건설주택수}(A) \times \text{세대당 분양면적}(F) = \text{총 건설연면적}(TF)$$

$$\text{건설될 총주택연면적}(TF) \times \text{평당건축공사비}(AC) = \text{총주택건축공사비}(TC)$$

● 택지수요량 추정

$$\text{건설될 총주택연면적}(TF) / \text{평균용적율}(AV) = \text{주택용지 소요면적}(HL)$$

$$\text{주택용지 소요면적}(HL) / \text{주택용지비율}(RII) = \text{총택지수요량}(TL)$$

이상의 계산식을 가지고 북한지역에서의 주택부문 건설비용 및 택지소요량을 추정하는데 있어, 주택제고량과 관련하여 두가지 경우로 구분하고자 한다. 제1안은 현 주택제고의 양에 변화가 없는 경우, 제2안은 1960년 이전에 건설된 주택은 모두 감실된다고 전제할 경우로 나누어 추정한다.

1) 제1안 : 현 주택제고의 양에 변화가 없는 경우

제1안은 1993년말 현재 주택제고 3,569,710~3,919,710호가 감실되지 않고 계속 사용된다고 가정하는 경우이다. 이때 건설되어야 할 주택수는 79.8만호~114.8만호이다.

주택의 건설될 총 주택연면적은 <건설주택수×세대당 평균분양면적>이므로 (79.8만호~114.8만호×72㎡= 5,745.6만~8,265.6만㎡), 1천7백39만 5천평에서 2천5백2만6천평의 주택면적을 건설해야 하는 것이다.

◎ 총주택건축공사비 추산

<건설될 총 주택연면적×평당건축공사비(120만원)>을 하면,

$$1,739.6\text{천평} \sim 2,502.6\text{천평} \times 120\text{만원} = 20,875,632,040,000 \sim 30,031,632,040,000$$

이러한 계산에 따라 19만8천호~114만 8천호의 주택을 건설하는데 투입되어야 할 건축공사비는 20조8천7백56억3천2백4만원에서 30조3백16억3천2백4만원으로 계산된다. 이

금액에는 대지조성비나 부대비용 등은 제외되어 있다.

⊙ 택지 수요량 추정

평균용적율(75%)로 나누어 주택용지 소요면적을 계산하면,

1천7백39만 5천~2천5백2만6천/0.75=23,195,147~33,368,480(평)

즉, 2천3백19만5천평~3천3백36만8천평의 토지가 주택용지로 필요하다.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주택지개발시 총 택지개발면적에서 주택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40%로 할 때, 주거지로 개발되어야 할 총 택지면적은,

2천3백19만5천평~3천3백36만8천평/0.4=5천7백98만8천평~8천3백42만평

따라서, 주택 19만8천호~114만8천호를 건설하기 위해 개발할 총 택지수요량은 191.7km²~275.8km²이며, 분당신도시와 같은 신도시가 10~15개정도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2) 제2안 : 1960년이전에 건설된 주택은 감실된다고 전제할 경우

1960년이전에 건설된 주택재고분이 모두 감실된다고 가정하는 경우로서, 주택재고수는 1961년 이후 건설된 주택재고 259.6~294.6만호이다. 이때 건설되어야할 총주택수는 177.15만~212.15만호이다.

주택의 건설될 총 주택연면적은 <건설주택수×세대당 평균분양면적>이므로 (177.15만~212.15만호×72m²=127,550,160~152,750,160m²), 3천8백62만평~4천6백25만평의 연면적을 건설하여야 한다.

⊙ 총주택건축 공사비 추산

<주택연면적×주택건설의 평당건축공사비(120만원)>을 하면,

3천8백62만~4천6백25만평×120만원=46,343,233,520,000~55,499,233,520,000

이 계산에 따라, 177.15만~212.15만호의 주택을 건설하는데 46조3천4백32억원에서 55조4천9백억원의 건축비용이 투입될 것이다.

⊙ 택지수요량 추정

평균용적율(75%)로 나누어 주택용지 소요면적을 계산하면,

3천8백62만~4천6백25만평/0.75=51,492,482~61,665,815

주택용지로는 5천1백49만~6천1백66만평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주택용지비율을 40%로 할 때, 개발되어야 할 총 택지면적은 <주택용지/주택용지비율>로 계산되므로,

$$5\text{천}1\text{백}49\text{만평} \sim 6\text{천}1\text{백}66\text{만평} / 0.4 = 128,731,204 \sim 154,164,538(\text{평})$$

즉, 약 1억2천8백7십만평~1억5천4백만평, 425.56km²~509.63km² 정도의 택지가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면적은 분당신도시면적의 23~27배의 규모이다.

이상에서 두 개의 안으로 나누어 공급될 주택수와 투입건설비용, 필요택지면적 등을 살펴보았다. 제1안은 최소한도의 양을 실정한 것이며, 제2안도 감실율을 최소한도로 잡았다.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주택건설물량은 80만호에서 210만호까지 건설해야 하며, 주택건설에 투입될 비용은 최소 21조원에서 56조원으로 계산되었다.

<표-20> 북한지역 주택건설 수요추정

구 분	제1안 (현 주택제고 유지)	제2안 (1960년이전 주택감실)
주택건설목표(만호)	79.8~114.8	177.15~212.15
건설될 총 주택연면적(만평)	1,739.5~2,502.6	3,862~4,625
총 주택건축공사비(백억원)	2,087.56~3,003.16	4,634.32~5,549
주택용지 소요면적(만평)	2,319.5~3,336.8	5,149~6,166
총 택지수요량	5,798.8~8,342(만평) 191.7~275.8(km ²)	12,873~15,416(만평) 425.56~509.63(km ²)
비 고	분당신도시 10~15개 정도의 면적	분당신도시 23~27개 정도의 면적

우리는 지난 1988~92년까지 5개년동안 200만호를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달성한 바가 있다. 그이후 남한지역의 주택산업의 생산규모는 연 70만호정도가 되었다. 현재 북한의 주택건설실적과 그 추진양상을 볼 때, 북한의 주택생산능력은 최대한 연 10만호 정도 건설할 역량을 갖추었으므로, 남한에서 10만호정도 건설할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한다면, 북한지역에 연 20만호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 20만호를 건설한다고 가정하면, 주택보급율 100%를 달성하는데 4년에서 1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이다. 즉, 통일이 어느 시점에서 실현되는가와 관계없이, 통일후 북한의 주택부문

에 대한 꾸준한 투자는 북한주민의 경제적 안정, 주거안정, 나아가 북한사회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며, 통일 후 민족의 일체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4. 북한지역 주택정책의 방향과 정주권 개발계획

4.1 통일후 북한지역 주택 정책방향의 설정 및 정주체계개발

4.1.1 통일후 북한지역 대량주택건설의 중요성과 의의

본 연구의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북한의 주택수준은 남한의 주택수준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준격차의 해소는, 통일이후 한반도내에서 생활하는 민족구성원 각자가 기회균등을 통해 일정한 소비수준 및 생활조건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주택실태를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바, 양적 현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주택보급율에서 북한당국이 그동안 발표한 주택건설수치를 전부 인정할 경우 남한의 주택보급율보다 다소 낮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통일이후 북한의 현 경제 및 사회체제가 붕괴될 경우 이제까지 북한 정부의 획일적 계획으로 이루어졌던 주택건설사업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통일 한국의 정부는 우선적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주택정책을 수립해야한다. 이때에 여러 가지 정책목표가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주택보급을 100% 달성하려는 목표는 남한이 이제까지 추구했던 정책의 연장선으로서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하겠다.

질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기존 주택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생활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조건인 주거공간 면적에 있어 북한은 남한의 1인당 거주면적에 비해 대략 35%~5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주택의 주요재료나 설비수준, 상수도 보급율과 수세식 화장실 등 주택의 편의시설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주택과 남한의 주택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북한에 있는 주택의 대부분을 재고로 볼 수 없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즉, 북한 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재고의 약 65%가 건설된지 20년을 넘어서고 있으

며, 50년이 지난 주택도 약 25%로서 주택의 노후가 극심하며, 주택의 공유화에 따른 유지관리의 미비와 건물의 동절기 공사로 인한 노후화 경향까지를 감안한다면 전체 북한 주택재고의 약 20%를 차지하는 특호, 4호 이외의 주택은 남한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주택재고에 포함시킬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과업과 민족의 일체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지역에 대한 양질의 주택 대량공급은 통일정책 전반은 물론 주택정책 수립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통일후 북한지역의 토지를 공유화함으로써 토지의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의 대량건설공급과 점유권의 부여 및 장기적으로 주택이 입지한 토지를 제외한 주택의 사유화정책은 자본주의적 사회체제가 북한 지역에 조기에 정착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북한지역에서의 주택건설은 통일에 따른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동을 방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치이자 통일에 따라 발생하게 될 북한 정규군 등 체제실업층에게 일자리를 부여하고 북한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이라 하겠다.

<표-21> 주택건설시 투입인력

구 분	총계	보통인부	형틀목공	미장공	철근공	도장공	기타
소요인력 (인/일)	14,847	5,857	3,092	1,242	849	728	3,079
비율%	100	39.4	20.8	8.4	5.7	4.9	20.7

주: 대한주택공사 전용 18평형 주택건설시 투입인력 기준.

주택건설산업은 상대적으로 고도의 기술이 불필요한 노동집약적 산업이며, 그것의 파생계수는 0.68이다.

통일후 북한 지역에 연간 20만채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매년 12개월, 월 25일 근로를 기준으로 16만 7천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파생계수(0.68)를 고려하면, 총 28만개의 고용이 창출되어 총 140만명(5인가족)에게 안정적인 생계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주택과 안정적인 고용의 제공은 북한인구의 남한으로의 이동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북한의 전자재 생산설비는 양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지역내 생산공장을 완전히 가동시켜 북한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미 투자된 생산 설비를 활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북한의 생산설비를 현대화한다면 통일후 북한 경제의 안정에 소요될 시간과 비용은 크게 절감될 것이다.

또한 주택건설산업은 북한에 대한 남한자본의 투자통로가 된다. 즉,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에 유입되어 통일후 북한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⁵⁷⁾.

끝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지역주택 건설공급에 있어서는 단순한 주택의 건설과 주택의 공급에 그치지 않고 생활, 문화, 교육 그리고 가능하다면 생산시설과 함께 연결된 정주권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한의 경우 한 가구가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이미 주거지역내 각종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고, 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 어디에서나 개별적으로 주택을 선택하여도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지역의 경우에는 주민의 구매력이 부족하고 기초적인 지역여건이 마련되어 있지않고, 북한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통일후 상당기간 남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남한이주 선호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남북간의 사회·문화·심리적 이질감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활, 문화 그리고 2세에 대한 충분한 교육의 기회까지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주권개념에 입각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주택부문은 통일에 따른 북한 인구의 남한 유입억제, 남한의 대북한 투자기회의 제공 및 북한 경제의 활성화, 북한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부문이며, 통일후 북한 지역이 독자적인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족 공동체적 문화를 공유할 수 있게하는 기반이라 하겠다.

57) 통일독일의 경우 1990년 통일을 이룬후 1997년 3월말까지 서독이 동독에 지원한 공공부문의 순지원액은 약 1조마르크(한화 510조원), 서독 GDP의 4~5%수준이다. 지원액의 약 15%가 주택부문 및 관련 부문에 투자되었다. 이러한 투자에 따라 동독지역에서는 지난 7년간 총 52만여호의 주택이 건설되었고, 210만여호의 주택이 개량 또는 보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1997년 동독지역주택의 임대료 및 주택관리비용은 1991년에 비해 369%나 인상되었는데, 같은 기간 서독지역에서는 28%의 상승에 그쳤다. 조선일보, 1997년 10월 1일자.

4.1.2 북한지역 주택건설과 정책 수립의 전제

본 연구에서는 북한지역에 대한 주택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전제를 가정한다.

첫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구하는 통일한국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정부기구의 효율성 제고 및 북한 지역의 부흥을 위한 이른바 통일비용 최소화에 정책우선순위를 둔다.

둘째, 남한의 정책적 주도 및 지원

정치적 통일방식이 무엇인가와는 별개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지역에 대한 주택정책 수립의 주도권을 남한이 갖고 북한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에 대한 투자를 관리하는 한편 자금의 조달을 전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셋째, 비폭력·평화적 통일

비폭력, 평화적 통일이 달성되어 전후재건 등의 불필요한 낭비가 배제되며, 남과 북 두 지역주민간의 적개감이 없는 상태에서 상호호혜정신에 입각한 협조체계를 전제로 한다.

넷째, 토지의 공유

통일후 북한지역의 토지는 토지의 개발과 관리 및 개발이익을 전체 북한 주민에게 돌려주도록 토지관리기구가 소유하는 공유화(公有化)를 전제로 한다.

다섯째, 남한내부 주택정책과 분리

본 연구에서는 통일후 북한지역의 주택개발에 투입될 총 투자규모와 개발방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에 있어 남한의 주택문제 등은 일단 배제한다.

4.1.3 통일후 북한지역 주택정책의 개요

1) 인구 및 주택에 대한 조사실시

북한지역의 인구 및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한편, 북한주택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조사를 근거로

- 제고 주택의 개보수 수요 및 언차별 개보수 계획

- 신규주택건설 규모 추계 및 건설계획 수립
- 기존주택 입주자 및 신규주택건설 입주자 등에 대한 대기자 명부를 작성한다.

2) 복지개념에 입각한 주택정책 수립

북한지역의 경제력과 생활 수준을 감안할 때, 북한주민 자력으로 주생활수준이 남한의 주생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가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후 상당기간, 적어도 20년 이상은, 북한지역 주택정책의 기초를 복지주택정책에 두어야 하며,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주택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기간동안 연간 20만호 이상의 대량 건설이 이루어져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함께 20년 거주후 분양전환되는 장기임대주택개념을 도입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주택에 입주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축적하여 그 주택을 분양받도록 하여, 사유화를 인정하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3) 정주권개념에 입각한 신도시 및 주택단지 개발방식의 도입

단순한 주택의 공급만이 아니라 주택과 주택을 둘러싼 각종 편의시설 및 교육·문화 시설을 공급해 줌으로써 양질의 주거지를 형성토록 하는 정주권개발개념을 도입, 각 지역마다 신도시 및 주택단지를 개발한다.

4) 공급주택규모의 설정

전용 18평을 기본으로 전용면적 12평, 18평, 25평까지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그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별도의 지원 없이 건설토록 한다.

5) 주택건설 공급 및 개보수 관리조직의 정비

북한주택의 신규 및 개보수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주택건설자금조달, 주택건설체계-기술인력, 기능인력, 건축자재 조달체계- 등 정비, 주택관리체계정비 등을 관장하는 조직체계의 정비, 장기임대주택을 계획임대기간이 지나면 이를 분양하고 이 매각대금을 주택개보수사업과 연계하여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통일후 북한지역에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남한에서 자금과 자재와 기술인력을 조달하고 북한지역에서의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현장에 공급하고 인력을 조달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한다. 또한 북한내 입주자를 선정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며, 주택의 개조와 보수를 총괄하는 조직이 통일후 반드시 필요하다.

6) 현 주택거주자의 권리 존중

본 연구는 통일후 북한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기득권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인적 희생과 대가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용의 폭을 넓혀야 하겠으나 인권유린이나 인명살상 등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민족적 양심에 근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현재 존재하는 모든 주택을 공유화하되 특호와 4호주택을 제외하고는 현 북한 당국과 입주계약권자에게 입주우선권을 부여하는 한편 현 주택의 세입자 형태로 거주하는 집단과 그 가족수를 고려하여 신규주택입주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특호와 4호주택 거주자는 그들이 누렸던 특권을 박탈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북한 전체주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입주여부를 검토한다.

7) 응급 가수용 주택시설 설치

체제 실업자 및 과밀한 기존 주택 거주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일후 북한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가수용 주택시설을 우선 건설한다.

4.2 정주체계개발 개념 도입을 통한 북한지역 주택지 개발구상

통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그 대책중 하나로 북한지역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을 대량건설함으로써 북한주민들에게 생활근거를 제공하고,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을 비연에 방지하여 사회안정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한 대량의 주택건설을 통하여 북한지역 잉여노동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북한지역 산업 및 공장의 가동율을 유지하여 북한지역 경제부흥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북한주민들에게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함에 있어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주권 개발개념에서 접근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어서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한 주거단지의 개발규모와 방안 및 기준을 정리하고자 한다.

4.2.1 정주생활권의 개념

1) 정주생활권과 기초수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집단적으로 모여 생활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직주근접 또는 직장까지의 교통편의시설, 자녀의 교육환경, 일상생활의 편리를 위한 공공복리시설 등이 잘 갖추어진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생활환경의 조성이 요망된다.

인간의 정주체계개발에 있어 에베네저 하워드(E. Howard)⁵⁸⁾는 자기지속성(self-sustainment)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자기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 직장으로의 통근은 도시내에서 이루어질 것,
- 경제활동인구에 맞는 다양한 직장과 고용이 있을 것,
- 도시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한 부문의 산업이나 직업 위주로 경제조직을 구성하지 말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정주체계(협의로는 신도시 형태)는 대부분이 자기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실제로 이 지속성은 정주체계 내에서 도시적 편의시설, 충분한 고용, 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 문화시설 등이 완전하게 충족되는 것은 물론, 거주자들이 도시의 경계 안에서 일상생활의 욕구를 만족하면서 완전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이 후손에게 이어져간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러한 정주체계내에서는 인간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수요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때 인간이 제기하고 해결되어야 할 것을 기초수요라 한다. 1976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주최한 세계고용에 관한 회의(World Employment Conference)는 기초수요란 “품위있는 인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최소수요”라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균등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기초수요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과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58) Ebenezer Howard, *Tomorrow: A Peaceful Path to Real Reform*, 1898.

여기서 물품은 식사, 의류, 주거 등을 포함하여, 서비스는 교육, 의료, 교통 등을 포함한다. 물론 이러한 기초수요는 정태적이 아니라 시대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동태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만큼, 그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의 종류도 점점 다양해 지고 있으며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광의적인 견지에서는 물품과 서비스 외에 인간의 권리, 참여, 자율 등 정치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누리하고자 하는 부문도 포함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기본수요의 주요 구성요소를 건강(health), 식량(food), 교육(education), 작업환경(working condition), 취업(employment), 소비와 저축(consumption & saving), 교통(transportation), 주택(housing), 의류(clothing), 위락(recreation), 안전(security), 자유(freedom) 등으로 보았다.

이러한 기초수요는 다시 사회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적 수요는 국민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통과 대학교육이다. 개인적 수요는 특별한 책임이 없는 것이라 가정되는 것으로 친구사귀기, 여행 또는 음식 맛과 옷과 같이 개인 자신의 관심에 관련되는 것들을 의미한다⁵⁹⁾. 정주생활권 구상에 있어 기초수요는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질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을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인간의 욕구를 범주화하는 것이다. 통일후 북한지역에 있어 예상되고 있는 빈곤, 실업, 소득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내의 자원과 기술을 이용하여 자주적으로 사회정의에 입각한 개발과 성장을 유도해 가기 위해서는 정주생활권 개념에 따라 인간의 기초수요를 충족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노동기구는 기초수요라는 개념 속에 모든 개인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공급하는 것과 개발과정에서 한 지역의 자족성(self-sufficiency)과, 자립성장(self-sustained growth)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시킨다는 2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2) 정주생활권의 개념과 사례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이론은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요로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수요와 개인적 수요의 충족을 통하여 품위있고 편리한 생활을 함으로써 결

59) J. Friedmann and Clyde Weaver, *Territory and Function : The Evolution and Regional Plann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79, p.190.

국 주민들의 삶의 질 또는 복지수준을 제고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사회활동을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한적인 공간적인 범위가 필요하다. 이것이 곧 정주생활권이다. 통일후 북한 주민들에게 의식주, 교육, 의료서비스 등 최소한의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적인 개발전략이 필요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개발이론으로서 정주생활권 이론을 주목하게 된다. 이 개념은 지역개발의 실천사례로서 1970년말 일본에서는 정주권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 생활권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된 중기적 지역개발방식이다. 남한의 경우 정주권설정의 구체적 적용실례는 내무부에 의한 지방정주생활권, 건설교통부에 의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농림수산부에 의한 농어촌 지역종합개발 등이 있다. 정주생활권이란 인간정주생활의 기본단위로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그에 필요한 기본수요가 경제적 원리에 맞게 충족될 수 있을만한 규모의 공간영역을 의미한다.

정주생활권 개념에 의한 국토공간에 대한 기본인식은 국토공간을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인간정부의 공간, 중심지로서의 도시와 배후지로서의 농촌이 하나의 통합된 인간정주생활공간, 인간 정주생활의 기본적인 공간으로서 기본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 정치적·행정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며, 각각의 중심지간에 형성되는 계층구조를 인정하며, 중심지간의 수직적·수평적 통합을 통하여 국토공간의 통합된 정주체계를 구성하는 한편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개방체제로 파악하며 자연의 생태조직을 존중한다.

정주생활권에 의한 북한지역의 개발은,

첫째, 정주생활권 단위에서 종합추진함으로써 지역개발투자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둘째,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며,

셋째, 북한 전역의 지방적 다양성과 특성, 그리고 지방주민들의 개발수요와 개발의 우선순위에 따른 북한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자발적으로 계획수립과 개발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개발의 범위는 생활권(生活圈)이라는 형태의 사회단위로 구성되는데, 이 속에서는 각종 서비스 제공과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이나 각종 편의시설의 혜택을 받음

으로써 사회활동을 더욱 원만히 하며 나아가서는 지역공동체의 동질성을 통하여 지연의식을 함양시키는 장이 된다. 생활권의 기본적 개념은 주민의 일상적인 활동을 도보권 내에서 모두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생활권내에서는 생활필수품 구입,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놀이터 이용 등을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통일후 북한지역개발계획에 있어서 근린생활권 계획은 도시의 활동 및 공간의 조직화는 물론 각 생활권단위의 편의시설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서 주민들이 지역문화와 가치관을 공유함으로써 커뮤니티에 대한 애착심을 높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4.2.2 생활권과 주거단지

인간이 품위있는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과 서비스를 기본수요라 하였고, 이에 는 주택, 의료, 교육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주거단지개발의 목표는 무주택자에게 주택공급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기초수요를 충족하게 하는데 있으며, 일정한 공간단위내 주민에게 기본수요 중의 하나인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질적수준을 고려한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주거단지개발에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혼합,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계획적 주거지역의 개발, 주택부족의 해소와 다양한 주택수요의 충족, 공공시설과 사회적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는 정주환경조성, 사회변동에 따른 다양한 주거형태를 수용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창출 등 의의가 크다. 주거단지는 규모, 기능, 입지, 인구구성(소득 수준별, 연령별) 등의 특성에 따라 소규모에서 대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다. 다시말하면, 근린생활권은 인간의 정주생활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공간단위로서 공공시설, 근린시설 등을 인접된 정주환경 속에서 편리하고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지역사회단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후 북한지역에 대한 주택공급에 있어 근린주거단지구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계획단계로서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근린주구(近隣住區)는 1929년 페리(C. Perry)가 처음 사용하였으며 오늘날 근린생활

권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⁶⁰⁾. 근린주구란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초등학생들이 등하교시 도로를 건너지않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초등학교를 통학할 수 있는 일정한 규모의 물리적 환경을 말한다⁶¹⁾.

주거단지계획에 있어서 근린주구개념 도입의 의의로는, 사회적 측면에서 하나의 생활공동체로서 주민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동세대를 강화하고 영역성을 확보하며, 나아가서 주민들이 보다 공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 한편, 물리적·공간적 측면에서 인간척도와 주민활동의 주기성(週期性)이라는 두가지 기본척도에 알맞게 편리한 생활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확보·배치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의 장을 조성해 준다는 의의가 있다.

4.2.3 근린생활권 개념과 북한지역 정주권체계 설정

1) 근린생활권 개념과 위계

근린생활권(近隣生活圈) 단위의 개념은 1920년대부터 독창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주거(住區)안의 주택, 도로 그리고 기반시설의 공간적 배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정한 지구에 인구규모를 감안하여 근린단위와 배치모형을 제안하였으며, 토지이용의 기능적 분리와 동선체계 즉, 자동차교통과 보행교통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였다. 이 개념에 따르면, 생활권 내부에 집중적인 핵(core)과 여타 기능공간과의 경계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도시를 구성하는 기초단위를 근린지구로 삼았던 것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에 있어서 근린생활권단위는 개발단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1940년 공공보건협회(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가 주체가 되어 주거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계획지침을 제정하였다. 건강하고 위생적인 주거단지개발을 목적으로하여 단지의 계획설계 및 건설관리에 적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은 다양한 전문기구와 공공기관에서 널리 활용하였고, 그후 수정을 거쳐 미국의 지역계획편람과 단지 구획규칙(subdivision control)내에 포함되는 등 제도화되었다. 미국의 근린지구 계획지침은 많은 나라에서 신도시 개발시 검토되고 있다. 계획

60) C.A.Perry, "The Neighborhood unit and the Community", Report, vol.7, 1929.

61)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제5조)에서는 근린주구에 대한 정의와 함께 근린주구를 반경 400m이내, 공동주택의 경우 1,000~3,000세대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들은 ‘커뮤니티(community)’형성을 위해 받아들이고, 공공기관에서는 공공보건, 생활안전, 그리고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 계획지침은 실제적으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데 유일한 기준적 근거가 되었다. 이 같은 근린지구 개념은 계속 발전하여 근린생활권 단위를 대략 5단계로 세분화하여 개발계획작성에 활용한다. 즉 구성인구, 규모, 생활범위 등의 단위를 고려하여 일상생활권으로부터 도시생활권까지 구분하였다.

생활권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제1단계 생활권은 인구 약 1,500명, 규모 약 6ha, 범위 100m내에 유치원이나 놀이터, 소규모 상가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한다.

② 제2단계 생활권은 인구 약 6,200인, 규모 25ha, 생활범위 약 250m내에 작은 초등학교, 아동공원, 약국, 세탁소 등과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추가 배치한다.

③ 제3단계 생활권은 인구 약 25,000인 정도, 규모 100ha(1km), 생활범위는 최고 500m이며, 규모가 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추가되고, 동사무소, 파출소, 은행, 교회, 슈퍼마켓 등이 포함된다.

④ 제4단계 생활권은 인구 약 10만명 정도, 규모 400ha, 생활범위 1km내에 고등학교 및 도시생활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⑤ 제5단계는 근린생활권 이라기보다는 복합기능을 갖춘 대도시 생활권이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계획될 수 있으며, 바로 이 규모가 북한지역에 개발할 정주체계의 단위라 할 수 있다.

2) 북한지역내 정주권 체계설정

앞에서 공간적 규모에 따라서 생활권의 종류를 구분하였으나 사실상 도시에 있어서의 생활권 단위의 기본은 인구규모라 할 수 있다. 주택단지의 공간적 규모는 일정하게 규정할 수 없으나 앞에서 논한 근린생활권 범주에서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공간규모를 설정할 수 있다.

북한지역에서 건설할 정주권체계는 다음과 같이 계획되어야 한다.

소생활권은 약 4내지 5개의 주거단지로 구성된 소생활권에 준하는 인구와 시설종류를 중심으로 건설한다. 인구규모는 약 2~3만명 정도로 하고 현재 남한의 동단위를 기

본단위로 하여 생활권을 형성한다. 대형 슈퍼마켓과 자생적으로 형성될 전통적 시장의 이용권을 고려하고, 지형적 제약과 도로, 철도 등 물리적 요인에 따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한다.

이어서 중생활권은 2~4개 정도의 소생활권으로 구성되며, 인구규모는 약 10만정도로 읍·면 규모이다. 시설종류는 중고등학교와 전문대학 1~2개정도 설치한다.

정주체계구성상 가장 상위단계인 대생활권은 대학교육기관이 3~5개 정도 설치될 수 있으며, 인구규모는 약 50만정도로 설정한다. 산세, 하천 등의 자연적 조건과 도로, 철도 등의 인위적 조건을 고려하고 기간산업, 녹지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한다. 통일 후 북한지역의 지역개발의 기본적인 단위로 개발계획을 구상한다.

<표-22> 북한지역 정주권 설정기준

정주권	인구규모(인)	구분 고려사항	비고
소생활권	2~3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중교 ◦ 전통적 시장권역 ◦ 지형적 제약성 ◦ 지역특성 	근린분구 및 근린주구중심 (Neighborhood)
중생활권	10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교 ◦ 산세, 대하천 등의 자연적 환경에 의해 변화가능 	지역커뮤니티 중심 (Community)
대생활권	50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철도 등의 인위적 환경 ◦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부도심권(Sub-Core) 지역개발의 기본적 단위

4.3 소 결

통일후 북한에서 추진되어야 할 주택정책의 목표는 북한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북한지역에 대량으로 주택을 건설공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한 물리적인 주거공간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주택의 질적 측면을 보장하고 나아가 생산과 교육과 문화가 종합된 생활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맥락에서 정주권 개념에서의 접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북한주민들에게 생활의 기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살집을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더 나아가 주거를 둘러싼 근린환경의 조성과 교육 문화시설의 향유까지를 정책목표

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주체계에서 대생활권은 인구 50만, 약 10~12만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적 단위이며, 중생활권 5개, 소생활권 15~20개 정도가 위계적으로 조직화된다.

본 연구의 제3장 3절에서 추계한 주택건설수요량과 비교하여 보면, 건설되어야 할 주택의 총량이 약 80만채에서 210만채이다. 정주권체계상 대생활권에 해당하는 것이 약 7개에서 18개가 건설되어야 한다. 이들 생활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은 남한의 인구 30~50만 정도의 도시와 그 인근에서 서비스의 종류와 양과 유사한 수준이 요구된다⁶²⁾.

정주체계를 구상함에 있어 자료의 한계로 북한의 주택사정 및 지역여건을 지역별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의 지역별 배분이나 생활권의 배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지 평양이나 남포 등 북한의 대도시 및 기존의 개발된 지역을 제외한 북한의 9개도 인구가 평균 200만명이라면, 각 도별로 대략 2개 정도의 대생활권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도시는 기존의 도시여건, 인구이동의 최소화, 역사적·문화적 측면, 교통여건, 북한의 낙후된 지역의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⁶³⁾.

5. 요약 및 결론

5.1 북한의 주택실태

본 연구는 북한지역에 주택을 대량 건설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북한경제의

62) 우리나라에서 청주시, 창원시, 광명시의 인구가 각각 48만, 40만, 34만 정도이다.

통일후 북한지역의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주거지불 체계화시키고 하나의 대생활권을 형성할 때, 이를 감안하여 대생활권에서는 위 도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서비스와 기회를 제공하도록 계획한다.

63) 향후 정주권 중심도시선정을 위한 후속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나 하나의 예시차원에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정주체계상 대생활권의 중심도시는 다음과 같다.

평북의 구성, 의주; 평남의 덕천, 개천; 황북의 사리원, 곡산; 황남의 해주, 신천;
함북의 청진, 나진; 함남의 함흥, 단천; 지강의 강계, 회천; 양강의 혜산, 풍서;
강원의 원산, 판교 등이다.

이러한 대생활권 중심도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통일후 북한지역에 대한 국토 및 지역개발계획을 중심으로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활성화를 이루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보장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공급된 주택안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를 해소하는 한편, 정주권의 개발을 통해 문화적 요구를 해소함으로써 경제적·문화적 곤궁에 따른 북한 주민의 남한으로의 비자발적 이주를 방지하여 통일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러한 바탕에서 통일후 북한지역에 대규모 주택건설에 입각한 주택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북한의 주택 실태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북한의 주택실태에 대한 연구결과, 북한의 주택보급율은 대략 75%에서 83%로서 주택부족이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에서는 한세대에 2가구가 거주하는 것이 불가피하는 등 북한주민들의 주택소비수준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적인 부족은 물론이고 건설된지 20년이 넘는 주택이 전체 주택재고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어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문제도 우려할 수준이다. 1인당 주거면적의 경우 1990년에 5.9~7.6㎡로서 남한의 40~53%정도에 지나지 않고 북한 당국이 계획기준으로 삼고 있는 1인당 10~1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서 과밀주거라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도시주택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연립주택의 형태이며, 주택당 규모가 약 10~11평에 방 2개, 부엌, 약간의 마루와 상수도시설이 있고,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며, 흙벽돌이나 시멘트 블록 또는 실리카트 벽돌조에 시멘트기와 또는 슬레이트가 없어진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의 질적 수준과 형태는 남한의 1960년대 초반의 도시지역 주택의 수준이나 노후화된 시민아파트와 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촌주택은 흙벽돌조에 시멘트기와 또는 슬레이트가 없어진 형태를 하고 있으며, 한 채당 규모는 역시 10~12평에 방 2개, 부엌, 약간의 마루와 재래식 화장실, 그리고 창고가 달려 있으며, 상수도는 공동수도를 이용하고 있다.

북한의 연간 최대 주택건설 능력은 지난 1953년 이후 북한의 주택건설실적을 분석할 때 호당 약 건평 15평을 기준으로 약 10만호 수준이하로 분석된다. 북한의 주택건설과 관련된 자재공업을 살펴보면, 시멘트생산능력은 연 1,200만톤으로서 북한의 자체수요를 충족하고도 남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부족으로 철근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 아파트는 평양 등 일부지역에만 건설하고 있으며, 강제가 필요하지 않은 조립식 시멘트블록이나 실리카트 벽돌을 생산하여 연립주택을 건설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 남한과 북한은 주택과 주택소비, 그리고 주택의 생산능력에 있어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주택보급을 및 주택의 규모측면에서 남한의 1인당 소비수준은 북한의 1인당 소비수준에 비하여 적어도 2배 이상의 소비수준을 보이고 있다. 남한에서의 주택에 대한 질적 수준을 배제하고 단순히 남북간의 주택건설실적과 건자재 생산능력을 비교할 때 남한은 택지부족문제만 해결될 경우 건평 15평을 기준으로 최소한 연간 70만채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경우는 10만채 이상의 건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일이후 북한지역에서는 기존주택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북한의 주택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어도 전용면적 18평규모의 주택을 20만호 정도를 새롭게 건설하여야 한다. 현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경우 주택건설자금은 말할나위 없고 적어도 매년 10만호 건설분의 건설자재와 건설중기 그리고 주택건설 및 공급체계가 남에서 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5.2 통일후 북한지역 주택 정책방향

통일이후 북한의 현 경제 및 사회체제가 붕괴될 경우 이제까지 북한 정부의 획일적 계획으로 이루어졌던 주택건설사업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통일 한국의 정부는 우선적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주택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지역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급에 그치지 않고 생활, 문화, 교육 그리고 가능하다면 생산시설과 함께 연결된 정주권개념을 도입한다.

북한지역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인구 및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북한지역의 인구 및 주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한편 북한 주택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를 근거로, 재고주택의 개보수 수요 및 연차별 개보수 계획수립, 신규주택건설 규모 추계 및 건설계획 수립, 기존주택 입주자 및 신규주택건설 입주자 등에 대한 대기자 명부를 작성한다.

둘째, 복지개념에 입각한 주택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북한지역의 경제력과 생활 수준을 감안할 때 북한 주민이 자력으로 남한의 주생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통일후 적어도 20년 이상은 북한 지역의 주택정책 기조는 복지주택정책이 채택되어야 한다.

셋째, 정주권개념에 입각한 신도시 및 주택단지 개발방식을 도입한다. 통일후 북한지역에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정주체계에 입각하여 주택과 주거환경시설 등 주요 부문의 건설계획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공급주택규모에 따른 지원방식을 설정한다. 전용 18평을 기본으로 전용면적 12평, 18평, 25평까지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그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별도의 지원없이 자력으로 건설하도록 한다.

다섯째, 주택건설공급 및 개보수 관리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 북한주택의 신규 및 개보수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주택건설자금조달, 주택건설(기술인력, 기능인력, 건축자재 조달체계) 및 주택관리체계정비 등을 관장하는 조직체계의 정비, 장기임대주택을 계획임대기간이 지나면 이를 분양하여 매각대금을 주택개보수사업과 연계하여 투자하는 등의 업무를 관장할 조직의 정비가 요구된다.

여섯째, 현 거주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현 주택을 공유화하되 특호와 4호주택을 제외하고는 현 북한 당국과 입주계약권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현재 세입자형태로 거주하는 집단과 가족수를 고려하여 신규주택입주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특호와 4호주택 거주자는 그들이 누렸던 특권을 박탈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북한 전체주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입주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일곱째, 응급 가수용 주택시설을 설치한다. 체제실업자 및 과밀한 기존 주택 거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일후 북한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가수용 주택시설을 우선 건설한다.

5.3 결론 및 제언

북한의 주거실태에 대한 기존의 국내연구들은 북한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수립한 계획 및 실적을 재인용한 연구로서 그를 바탕으로 주택수를 추정하는 한편 이를 바탕

으로 북한의 주택실태를 추측하였다. 이러한 빈약한 자료를 재인용하는 범위도 북한 주택의 양적인 측면을 주로 다루었을 뿐이며, 주택의 규모, 방수 등 질적인 측면과 북한의 건설산업 및 주택건설능력 등 북한의 주택부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주택부문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북한주택 관련연구와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후 북한지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통일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대량건설이 필요함을 밝혔고, 주택만을 공급하는 차원이 아닌 인간의 기초수요에 대응하는 정주권체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진행을 통해 주택의 대량건설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어떠한 기초자료가 필요할 것인가라는 맥락에서 북한의 주택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체계화시켰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통일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그리고 북한인구의 남한으로의 유입가능성을 감소시켜 통일한국의 빠른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특성인 폐쇄성이 강요하는 자료접근의 어려움과 부족으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의 모색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특히 통일후 북한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때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검토하지 못하고 총량건설목표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매우 아쉽다. 결국 본 연구는 통일후 북한 지역의 주택정책의 대안 모색에 대한 연구라기 보다는 대안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안을 모색하여가는 과정을 제시한 연구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와 상세한 자료를 통해 통일을 대비하는 여러 분야의 정책과 계획이 보다 실천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통일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참고문헌

- 국토개발연구원, 통독후 국유재산의 사유화에 관한 주요법률, 1991.12.
- 국토개발연구원, 통독후 동독국유재산 관리제도의 변화연구, 1991.12.
- 국토통일원, 북한실태(I), 1983.
- 국토통일원, 북한개요, 1991.
- 국토통일원, 북한법령집.
- 김상균, 통일후 인구이동대책에 관한 연구, 통일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1995.
- 김상용, “구동독과 북한의 토지제도의 비교”, 「토지연구」, 제5권 제5호. 1994.
- 대한상공회의소, 북한경제의 실상- 남북한 경제교류의 가능성 및 대응방안-, 1990.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삼성그룹, 통일시대 한반도 국토개발구상, 1997. 3.
-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산업」, 1995.
-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통일한국에서의 주택부문과 공사의 역할, 1995.
- 류우익, “대륙과 해양을 잇는 K자형 발전축으로”,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2000년에 열리는 통일시대」, 1993.
- 민족통일연구원, 독일통일후 동독지역에서의 사유화정책연구, 1993.
- 법원행정처, 「북한의 부동산제도」, 1997.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9. 1994.
-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1995.
- 심의섭, “북한의 건설업과 남북건설협력”, 「해외건설」, 1992.5.
- 안두순, “통일후 북한토지 소유권의 처리방안”, 「통일경제」, 1995.6.
- 양승종, “통일이후 북한토지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연구」, 1995.1-2월호.
- 윤혜정·장성수, 「통일한국의 국토개발방향- 북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태림문화사, 1997. 3.
- 이진욱, “통일후 북한의 토지정책”, 「토지연구」, 1993.11-12월호.
- 이태욱 외, 「북한 40년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특성과 변천과정」, 을유문화사, 1989.
- 임채욱, 「서울문화 - 평양문화」, 신원문화사, 1989.

장성수·윤혜정, “북한의 도시 및 지역현황에 관한 소고:통일에 대비한 예비적 고찰”,
「주택」, 제53호, 대한주택공사, 1992.12.

정신문화연구원, 「북한체제연구」, 1987.

제성호, “통일과정의 북한토지문제”, 「토지연구」, 제7권 제3호, 1996.

조선공업출판사, 「조선건축」, 1990~1994년 각호.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71~1995년 각년도.

조현식, “북한의 주택건설”, 「북한」, 1990.

최명 외,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1990.

차안문제 편집실, “북한의 도시정책과 개발현황”, 「차안문제」, 1995. 4.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5.11.

통일원, 「남북한 사회·문화지표」, 1992.

통일원, 「남북한 경제지표」, 1993.

통일원, 「북한 산업지리도」, 1991.

한국산업연구원, 「북한」, 199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북한의 지방행정,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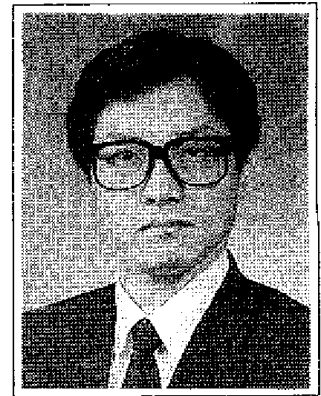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등 주요일간지.

Friedmann & Weaver, *Territory and Function: The evolution and Regional Planning*,
Univ.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79.

Howard, E. *Tomorrow: A Peaceful Path to Real Reform*, 1898.

Perry, C.A. “The Neighborhood unit and the community”, *Report*, vol.7. 1929.

金正日 體制下 北韓軍 및 軍 엘리트 研究



金 秉 祖(國防大學院)

목 차

<요약문>	85
1. 서론	87
2. 북한군의 제도적 위상	89
3. 김정일의 군권 공고화 정책	101
4. 김정일 체제하 북한군 역할분석	113
5. 북한군 엘리트 구조분석	128
6. 결론 및 전망	138
※참고문헌	140

【요약문】

1997년 10월 8일 김정일은 총비서직에 취임하였다. 김일성이 사망한지 만 3년 3개월만의 일이다. 그 동안 김정일은 총비서직이나 국가주석에 취임하지 않고 국방위원장 겸 최고사령관이라는 직책만으로 북한을 정치적으로 안정된 체제로 유지해왔다. 김정일이 군직책만으로도 북한을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설명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북한군의 특성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1) 북한에서 군이 갖는 위상을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군이 북한체제에서 점하고 있는 비중을 밝히고, (2) 김정일이 군을 어떻게 관리·통제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김정일과 군과의 관계양상을 분석하고, (3) 북한체제 유지와 관련하여 김정일 체제하에서 군이 수행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4) 북한군 엘리트 구조를 구성상 특성, 보직 및 사회적 배경을 분석함으로써 김정일과 군 엘리트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김정일이 총비서에 취임한 후 북한군의 향후 입장이 어떠한 것인지 전망 하였다.

북한에서 군은 북한정권에서의 역사적인 역할, 군 구성원의 양적·질적 우수성, 그리고 군사조직이 사회전체에 퍼져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중요한 권력기구로 존재해 왔다. 그리고 군은 점차적으로 당과 정에 대해 상대적인 자율성을 획득해왔다. 물론 제도적으로 당이 군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군이 당의 통제를 벗어난 예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당자체의 권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북한체제가 갖고 있는 수령이라는 독특한 의인화된 권력기구가 당을 통해서 군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일성-김정일은 1974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인된 이후 지속적으로 ‘수령의 군대’를 ‘후계자의 군대’로 변모시키는 작업을 실시했다. 김정일은 초기에 당조직을 통해서 군을 통제하였으나 점차 군에 대한 직접통제와 자신의 군계급을 이용한 통제를 통해서 군을 장악해 갔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에 최고사령관, 공화국원수,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군권을 장악하고, 북한군을 후계자의 군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군권을 장악한 김정일은 승진인사, 특혜제공, 현지도, 군사 능력과시와 같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군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세워나갔다.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

은 군의 최고지도자 입장에서 북한을 통치하면서, 북한군을 ‘후계자의 군대’에서 ‘김정일의 군대’로 만드는 작업을 가속화시킨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자신의 합법적 권력기반인 군대를 활용하여 북한체제를 통치해 왔다. 그 과정에서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이나 위상이 보다 강화되었으며, 경제에 대한 군의 개입이 증대하였고, 군이 직접적인 주민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군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북한체제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집단임에 틀림없다.

북한군 엘리트는 혁명 1세대, 혁명 2세대, 혁명 3세대, 노-장-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각 김정일의 후원세력, 보위세력, 친위세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혁명 2세대 3-6명이 군내 주요 보직을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 또한 유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보다 확실한 친위세력이라 할 수 있는 혁명 3세대를 점진적으로 북한군 엘리트 중심부로 진입시키고 있는 단계로 파악된다.

북한군 엘리트는 외형적으로 동질성이 상당히 높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군 엘리트는 자신들의 동질성에 기반하여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보다는 김일성, 김정일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권력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군 엘리트는 자체적으로 김정일과 대립하거나 경쟁하는 정치세력화를 모색하지는 않을 것이 예상된다. 이들은 김정일에 대한 군사참모 및 정책참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확실한 ‘김정일의 군대’인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총비서로 추대된 이후 북한체제의 향방과 군의 역할은 어떠한 것인가? 김정일은 총비서에 취임한 다음 당을 정비하고, 당을 중심으로 북한체제를 운영할 것이 예상된다. 이는 사회주의사회 운영방식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김정일은 그 동안 높아진 군의 영향력을 당으로 흡수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그럴 경우 당의 이익과 군의 이익은 크게 상반되지는 않을 것이 예상된다. 설령 군우선 정책이 다소 후퇴 하더라도 군이 김정일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개입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북한군의 자율성이나 위상제고가 모두 김정일의 의지와 연관된 것이고, 또한 북한군 엘리트 개개인이 김정일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 할 것이기 때문이다.

1. 서론

김일성 사망 3년째가 되는 1997년 7월 8일, 북한은 김일성 사망 3주기 중앙추도대회를 열면서 탈상을 공식 선언하고 김정일을 “김일성의 가장 충직한 계승자”로 내세우면서 유일한 후계자임을 밝혔다. 그러나 당시 김정일은 국가주석이나 총서기라는 직책이 아니라 여전히 김일성 사망시 갖고 있던 군 관련 직책인 국방위원장겸 군 최고사령관으로 호칭되었다.

김일성 사망직후에는 김정일이 국가주석이나 총서기직에 취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권력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일부 있었으나,¹⁾ 현재는 군사적 위기의식을 조장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체제이탈을 방지하고, 동시에 주민들에게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통치술로 보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건 지난 3년을 돌이켜볼 때, 북한체제가 김정일을 정점으로 비교적 안정된 정치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군직책만을 갖고 북한을 통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가장 유력한 해석은 북한체제의 전체주의적 특성과 함께 김일성이 김정일로 이어진 후계체제구축을 장기간 주도면밀하게 수행한 결과라는 것이다.²⁾ 그러나, 이상과 같은 해석은 김정일의 권력기반이 안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왜 하필이면 군직책을 이용해 통치하느냐에 대한 설명으로는 미흡한 감이 있다.

결국 북한군의 특성을 분석해야 김정일체제가 그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정치적 안정성을 보다 완전히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북한과 같이 의인화된 통치구조를 갖는 사회에서는 김정일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지, 그가 사용하는 직책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북한이 상징성을 매우 중요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정일이 군관련 직책을 사용하여 통치를 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군이 차지하는 다음과 같은 비중을 감안할 때, 김정일이 군직책을 통해 북한을 통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까지 보인다.

1) 북한 스스로는 상중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려 깊고 세련된 정사처리”라는 식으로 선전하였다.

2) 사회주의권 붕괴이전 사회주의 사회의 정치적 안정을 설명하는 이론들로는 주로 전체주의 모델이 활용되었다(Friedrich and Brzezinski, 1965 등). 김정일체제하 북한을 분석할 때 전체주의론을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가치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정태적 이론이라는 한계가 있다.

첫째, 북한에서 국방위원장직 최고사령관 통제하에 있는 집단이 그 규모에 있어서 엄청난다는 점이다. 북한군은 한국전쟁직후 약25만에서 점차 증가하여 80년대말 약100만에 이르고, 1996년 현재는 105.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국방부, 1996). 그러나 이는 정규군의 수치일 뿐, 인민무력부에 소속되지 않은 정규군 동급의 무장병력을 합하면 그 수는 125만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는 북한 총인구로 추정되는 2,300만의 5.4%이며, 북한의 15세이상 남성인구의 15%정도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또한 여기에 예비 병력을 추가하면 그 수는 750만명이 되어 총인구의 약 1/3, 15세이상 인구의 약1/2에 이른다. 그리고 전시상태를 선포하게 되면, 최고사령관이라는 직책을 통해 김정일은 북한주민 전체를 동원할 수 있다.³⁾

둘째, 군은 체제를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장치인 물리적 폭력을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뿐아니라, 현재 군조직이 북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조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1996년 12월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에서 김정일이 행한 비밀 연설문을 참조할 수 있다. 연설문을 통해 김정일은 “군인들의 사상 정신상태가 매우 좋다”며 군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내는 반면, 당조직과 당일꾼에 대해서는 불신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적 특성은 물론 조직구성원면에서도 북한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군이 북한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노동력과 기술을 가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 비해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50년동안 ‘병영사회화’된 북한에서 군에 대한 처우가 지속적으로 좋았으며, 군에 대한 젊은이의 선호도가 대단히 높은데 기인한다.

요컨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북한체제가 그런 데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로는 김정일로의 후계체제 구축과정이 면밀했다는 점외에 북한군의 체제유지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체제의 작동원리, 북한체제의 향후 전망은 물론 남북관계의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서도 북한군과 군엘리트에 대한 연구는 가장 중요한 연구분야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이 군부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나 향후 북한전로를 결정하는데 군부를 주목해야한다는 점은 많은 사람이 강조하지만 군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분석연구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⁴⁾ 이에 본 연구는 첫째, 북한에서 군이 갖는 위상을 제도적 측면

3) 실제로 김정일은 1993년 3월 안시적이나마 준전시체제를 선포했었던 적이 있다.

면에서 살펴봄으로써 군이 북한체제에서 점하고 있는 비중을 밝히고, 둘째, 김정일이 군을 어떻게 관리·통제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김정일과 군과의 관계양상을 분석하고, 셋째, 북한체제 유지와 관련하여 김정일 체제하에서 군이 수행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넷째, 북한군 엘리트 구조를 구성상 특성, 보직 및 사회적 배경을 분석함으로써 김정일과 군엘리트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결론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군의 향후 입장에 대해서 전망하고자 한다.

2. 북한군의 제도적 위상

2.1 분석을 위한 이론적 전제

사회주의국가에서 군의 위상은 군이 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⁴⁾ 그리고 이론적 모델로는 당과 군이 독립된 행위자로 서로 대립적이라는 가정에 기반한 제도적-갈등모델(Kolkowicz, 1967 등)과 군은 당의 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으며, 당군 간에 밀접한 상호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군이 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참여모델(Colton, 1979)에 의해서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두 모델이 서로 배타적인 가정에 입각해 있지만, 발전론적 또는 변화론적 설명에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활용되기도 한다.⁵⁾ 사회주의로의 체제전환(transformation)이나 체제공고화(consolidation)단계에서는 갈등모델적 속성이 두드러진데 반해, 체제유지(system maintenance)단계에서는 참여모델적 속성이 점진적으로 강화된다는 것이다(이준형, 1995:489-490).

그러나, 발전모델도 북한에서 군이 차지하는 제도적 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4) 김정일체제하 북한군 또는 군엘리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는 정영태(1994, 1995), 이민룡(1995), 이준형(1995), 전현준(1995), 김구섭(1996) 등이 있다.

5) 따라서 민군관계라는 용어대신에 당군 관계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민군관계란 정치권과 군부와의 관계,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군대와 국가발전, 군대와 사회의 상호관계 등 다양한 문제영역을 포괄하지만,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당군 관계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이민룡, 1995:115).

6) 갈등이론, 참여이론이 브레즈네프시대 구소련을 바탕으로 발전된 연구라면, 발전모형은 기존이론을 동구에 적용하는 데서 나왔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당과 군 이외에도 수령이라는 의인화된 독특한 권력기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로서 당, 군은 물론 국가 위에 수령이라는 영도자가 군림하고 있다.⁷⁾ 1960년대 중반부터 구축되기 시작한 북한의 수령체제는 1972년 헌법에서 '주석'제가 채택되면서 법제화되었고, 1990년도 들어서에는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로 규정되면서 이론적으로 완결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 군을 포함하여 물론 권력기구가 수령에 봉사하는 하위기구로 전락하였다.

수령에 봉사하는 하위기구라는 특징은 행정기관인 정부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북한에서 정부원은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행정집행기관으로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상의 최고주권기관이고, 중앙인민위원회 수위가 주석이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정부원은 오로지 주석 지도하에 존재하는 기구가 된다.⁸⁾ 결국 북한에서 당, 정, 군은 어디까지나 수령의 권력행사를 뒷받침하는 기구로 수령의 권한 밑에 존재하는 3각체제이다.

한편 당, 군, 정 3자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당 지도체계 하에 군과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에서 정과 군은 기본적으로 당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정과 군의 엘리트는 정, 군의 엘리트이기에 앞서 당원이요 당의 엘리트이다.

그러나, 당, 군, 정을 구분해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당의 역할에서 군의 역할이나 정의 역할을 분석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업무의 수행 주체에 따라 구분하고자 한다. 즉, 북한에서 특정 집단이 '무력'에 기반한 역할을 수행할 때는 비록 당의 지시나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를 군의 역할로 간주하고, 마찬가지로 행정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정의 역할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이 직접 나서서 수행하는 잔여역할에 대해서만 당의 역할로 한정 시키고자 한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전제하에서 북한체제에서 군이 차지하는 위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당과 군, 정과 군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북한군이라고 했을 때, 포괄되는 북한의 무력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도 제시하고자 한다.

7) 수령의 위상과 권한에 대해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조선노동당, 1974)참조.

8) 주석은 '필요에 따라 정부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1994헌법, 107조 2항).

2.2 당군 관계의 변화

모든 사회주의사회는 당이 국가내 모든 기구와 집단을 지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공산당 지도하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또한 혁명이후에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이론에 입각하여 공산당 일당독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혁명과정에서 무력충돌을 심하게 겪는 경우나 혁명후 전쟁을 경험하는 경우 군 역시 핵심적인 국가 권력기관, 권력집단으로 부상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경우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당이 군을 제도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조치가 매우 면밀하게 취해진다.

예컨대 구소련의 경우 당의 국방회의와 중앙군사위원회가 조직상으로 군을 통제하며, 군총정치국내에 당과 직접 연계된 정치위원, 정치장교가 배치되어 인적인 통제를 실시한다. 또한 중국의 경우도 군내 당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당중앙위원회 직속의 총정치부·정치부·정치위원이 군에 직접 파견되어 군을 통제·지도하고 있다.⁹⁾

한편, 북한은 정권수립과정에서 수행한 당의 기여도가 소련이나 중국에 비해 적었기 때문에, 인민군이 창설될 당시에는 군내 당조직과 정치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6.25전쟁중 중국군사제도를 모방하면서 군내 정치기구를 두게 된다. 1950년 10월 2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인민군대에서 당조직과 정치기구제도에 관한 결정’을 통해 군내 정치기구 결성을 촉구하였으며, 동년 12월 21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장병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민군에 당조직과 정치기구를 설치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1961년 9월에 개최된 제4차 조선노동당 당대회에서 당군 관계가 공식적으로 규정된다. 즉, 당규약 제8장에 북한군은 ‘당의 무장력’으로 명문화되고, 군내에 각급 당조직을 망라한 ‘군당위원회’를 조직하고, 군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에 직속하여 그 지도를 받아 사업을 하며 (1961년 조선노동당규약 66조), 또한 군내 당사업을 조직, 집행하기 위해 ‘총정치국’이 설치된다(1961년 조선노동당규약 67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에 대한 당의 우선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당속에서 군의 자율성이 점차 증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보여진다. 이를

9) 당의 군통제정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구소련군은 정치국이 제기능을 못하여 군사령관이 군정권과 군령권 모두를 행사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중국군은 군정과 군령이 명확히 분리되어 군에 대한 당의 통제가 보다 확고하였다.

사례를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첫째, 앞서 언급한 1961년의 당규약 개정직후인 1962년 12월 북한은 노동당 4기 5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결정으로 ‘4대군사노선’을 채택한다. 그 내용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전군의 현대화’, ‘전군의 간부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이다. 현재까지도 유효한 4대군사노선은 내용상 앞의 두 가지가 순수하게 군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뒤의 두 가지는 군인만이 아니라 전체 북한주민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리고 4대군사노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군이 북한사회에서 여타기관 보다 우월한 제도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3년 시작된 ‘3대혁명소조’운동에서 나타난 ‘속도전, 전격전, 섬멸전’이라던가 ‘생산도 생활도 학습도 항일유격대식으로’ 등의 구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병영국가적 특성은 지속되는 한, 제도로써 군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 둘째, 북한은 1978년부터 인민군 창설기념일을 종래의 2월 8일에서 김일성이 1932년 조직했다는 ‘조선인민혁명군’ 결성일 4월 25일로 변경하고, 1980년에 6차당대회의 당규약 개정에서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력(1980년 조선노동당규약 46조)’으로 재규정한다. 물론 제3장 당중앙조직에서 ‘당중앙위원회는 --- 혁명적 무력을 조직, 그들의 전투능력을 높이고(1980년 조선노동당규약 24조)’라고 되어있고,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 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 무력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지도하며, --- 군대를 지휘한다(1980년 조선노동당규약 27조)’고 되어 있어 당이 북한에 존재하는 무력 전체를 통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당의 군에 대한 우선성은 여전히 유지된다.

그러나 정권 정통성을 항일빨치산 투쟁경력에서 찾고 있는 김일성이 당 규약개정을 통해 북한군 창설의 정통성과 노동당 창설의 정통성을 동일시했다는 점에서 군이 당에 매급가는 위상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1967)도 “우리 인민군대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성은 이 군대가 과거 일제의 가혹한 탄압 밑에서 조국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에 모든 것을 바쳐온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들을 골간으로 창건되었다는 데 있다”며, 북한의 군대가 “항일 유격투쟁의 혁명전통과 고귀한 투쟁 경험과 불굴의 애국정신을 계승한 영광스런 군대”임을 강조하고 있다.

1980년 당규약 개정 내용 중에는 그밖에도 군의 위상이 강화됐음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다. 1961년 당조약에서는 각급 당조직이 군당위원회 위원 또는 간부를 주둔지역 각급 당위원회에 ‘위원, 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었으나(1961년 조선노동당규약 68조), 1980년 당규약개정에서 ‘군대의 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얻어 정치 및 군사간부를 주둔지역 각급 당위원회 및 공장 기업소의 초급당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1980년 조선노동당규약, 50조)’로 바뀐다. 즉 1961년 규약에는 당이 주체가 되어 군당위원을 주둔지 각급 당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으나, 1980년 개정으로 군에 속해 있는 군당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군당위원을 주둔지 각급 당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 당은 비준을 하는 역할에 한정된 것이다.¹⁰⁾

셋째, 1983년에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가 당군사위원회로 개칭되고, 당중앙위원회의 하부조직에서 동격조직으로 승격된 점이다(로동신문. 1983.4.26).¹¹⁾ 비록 노동당 내부조직의 변화에 불과하지만 당내 군관련 조직이 여타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당중앙위원회와 분리·독립되었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당에 대한 군의 자율성이 강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인물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제외하면 모두 군인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넷째, 김일성의 권력을 실질적으로 승계했다고 할 수 있는 김정일의 권력행사 행태와 관련된 것이다. 김정일은 1973년 9월 노동당 제5기 7차 전원회의에서 당비서국의 조직 및 선동담당비서로 선임되었다. 즉 북한 권력기관중 당을 장악하면서 김정일은 권력의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김정일은 ‘당중앙’으로 호칭되었는데, 이는 당시 북한에서 당이 명실공히 권력창출의 핵심부였음을 시사한다.

이후 김정일은 1991년 12월 당중앙위 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선출되고, 1992년 4월 20일에는 ‘원수’로 추대된다.¹²⁾ 그리고 김정일은 1992년 4월 23일 ‘최고사령관명령 제0024호’를 통해 영웅칭호 수여와 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승진인사를 발령한다. 군사칭호 수여나 훈장, 명예칭호수여 등은 명령을 내리기 2주전

10) 당중앙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단서는 형식적인 절차로 보아야 할 것이다.

11)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1962년 노동당 제4기 5차회의에서 신설되었으며, 1970년 제5차 당대회 시 당규약 24조에 그 기능과 임무가 명시되었다(북한연구소 편, 1978:315). 1983년의 개편은 다시금 1990년 조선중앙연감을 통해 확인된다.

12) 최고사령부에 대해서는 비상설기구라는 의견이 있으나(최주할 등), 김정일이 현재 지속적으로 최고사령관 명의로 명령을 내린다는 점에서, 이 조치를 뒷받침하는 기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 1992년 4월 9일의 헌법개정으로 그 권한이 '국방위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일성이 아닌 김정일이 명령을 내렸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최고사령관 명의로 군승진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은, 군의 독자적 자율성이 매우 커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요약하면 북한은 군에 대한 당의 우위체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내 군의 자율성이 늘어나서, 김일성, 김정일을 제외하면 다른 어떤 기구도 군을 간섭할 수 없는 독립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2.3 정군 관계의 변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군이 북한의 핵심 권력집단으로 부상하였으나, 당시 군은 어디까지나 정부원 소속 일개 부처였다. 그리고 1972년 헌법 개정시까지도 인민부력부나 사회안전부는 여전히 정부원 소속이었다. 그러나 군은 점차 정부원산하를 떠나게 된다.

먼저 1973년 5월 김일성의 교시로 사회안전부에서 국가안전보위부(당시는 국가정치보위부)가 분리, 정부원 관할에서 독립하게 된다. 그리고 인민부력부는 198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1차회의에서 정부원 산하에서 떨어져나와 국방위원회 직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현재도 인민부력부는 국방위원회 직속기관으로 간주된다(통일원, 1995:480).

13) 결국 정부원은 경제·문화업무만을 관장하는 기구로 축소된 것이다. 더구나 경제업무 중에서도 군수산업을 담당하는 중공업부(이전의 당기계공업부) 직속의 제2경제위원회는 사실상 정부원과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군은 정부원에 대해 독립적인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1992년 헌법개정에서 국방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과거 정부조직인 주석이나 중앙인민위원회가 가졌던 군에 대한 권한이 국방위원회로 이양된다. 개정된 1972년 헌법에서는 국가주석이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1972년 헌법 93조)'로 규정되었었다.¹⁴⁾ 따라서 1992년 헌법

13) 혹자는 북한 조선중앙년감을 근거로 1994년경부터는 인민부력부가 국방위원회 산하에서 다시금 정부원산하로 변경되었다고도 하나, 1996년판에 보면 정부원 소속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설령 인민부력부가 정부원 산하라 할지라도 이는 외형적, 행정적으로만 인민부력부가 정부원소속으로 된 것이지, 그 자체의 제정경제권까지 정부원으로 이전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산진, 1996:150).

개정 전에는 국가주석이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자동 겸직하였다. 그러나 1992년 개정에서 국가주석이 보유하고 있던 군사권한이 신설된 국가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 이관된다. 즉,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1992년 헌법 111조), 국방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한다(1992년 헌법 113조)로 바뀐 것이다. 당시 김일성이 국방위원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주석이 국방위원장직을 동시에 맡고 있는 것이 되어, 인적구성에서는 헌법개정전과 다름이 없지만 제도적으로는 이전의 자동 겸직과 크게 다르다고 보아야한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김정일에 정권을 이양하는 단계에서 나타난 수순으로 볼 수 있지만, 어쨌건 군에 대한 국가주석의 권한이 축소되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972년 헌법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가 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권한을 갖고 있었다(1972년 헌법 103조, 105조). 1)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사업을 지도한다. 2) 주요 군사간부를 임명 및 해임하고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3)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4) 중앙인민위원회에는 --- 국방위원회 --- 등 중앙인민위원회의 사업을 도와주는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 각 위원회의 성원은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 및 해임한다. 그러나 1992년 헌법개정에서 중앙인민위원회에 속해 있던 국방위원회가 국가국방위원회로 승격되었을 뿐아니라, 중앙인민위원회가 갖고 있던 국방관련 권한이 모두 국가국방위원회로 위임되고, 국가국방위원회는 중앙인민위원회보다 상위기관으로 명시된다. 그리고 이상과 같이 권한이 강화된 국방위원회가 군수산업을 맡고 있는 전병호를 제외하면 김일성, 김정일 부자와 현역 군인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결국 군의 자율성이 커지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그리고 김일성 사망 후에는 북한의 행정자체가 군을 중심으로 실행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무원이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워야(1992년 헌법 126조)’함에도 1995년이후 국가예산이 정식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음이 주목된다. 김정일이 최고사령관 명의로 교량·터널 건설과업에 대한 명령을 내리면서 그 대상으로 군뿐 아니라 정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보아, 현재 군이 정무원 기능을 사실상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⁵⁾

14) 국방위원회는 1972년 헌법에서 중앙인민위원회산하 부문별 위원회로 신설되었다.

15) 김정일이 군관련 인사를 비교적 빈번하게 단행하는데 비해, 정무원의 경우는 3명의 부총리가 오랫동안

특히 북한 정규군내에는 10만여명의 특수전 병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보교도지도국과 총참모부 참모부서의 하나인 정찰국이 바로 특수전부대이다. 그 중에서 정보교도지도국은 게릴라전을 임무로 하는 특수부대로 그 기원은 1968년에 청와대를 기습하고 울진 삼척에 침투했던 124부대에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정찰국은 대남 공작을 주로 하는 특수부대로 1996년 동해안을 침투했던 부대이다.¹⁷⁾

이상과 같은 북한 정규군 조직은 지상군, 해군, 공군이라는 3군 외에 전략로켓군과 방공군을 포함하여 5군제를 수용하고있는 구소련 군사조직의 영향을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내용상에 있어서는 정규전 외에도 비정규전, 유격전을 매우 중시하는 조직구조라 할 수 있다.

2.4.2 북한군 준군사조직

북한 무력의 특성은 인민부력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정규군이 존재하고, 또한 정규군은 아니지만 유사시 정규부대와 통합전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동원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해 놓은 준군사조직이 광범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주요 준군사조직과 그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안전보위부내 군사조직이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 내에서 위상이 변하면서 명칭 또한 자주 바뀐 부서이다. 처음에는 1948년 9월 내무성 특수정보처로 시작하였으나, 1962년 12월 사회안전성으로 임무가 이관되고, 1972년 헌법에서는 사회안전부 정치보위국으로 유지되다가, 1973년 국가정치보위부라는 독립 부서로 승격된다. 이후 1982년 국가보위부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93년에 현재의 명칭인 국가안전보위부가 되었는데, 인민무력부와 마찬가지로 정무원 관할이 아니라 국방위원회 직속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판 구소련의 KGB라 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위부는 정보조직이기 때문에 전체를 군사조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자체 내에 상당한 무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국가안전보위부 제5국(경비총국)은 구소련의 KGB와 마찬가지로 국경, 해안, 철도 경비를 맡고 있는데, 거기에 소속된 국경경비대는 5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정규군과 동일한 병기를 보

17) 이 두 부대 구성원은 정예군 의식을 갖고 있으며 모두 '정찰병'으로 불리고 있다.

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호위사령부가 있다. 호위사령부는 김부자 안전을 비롯한 고급간부의 경호, 호위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일종의 경호실이다. 그러나 그 성격과 규모는 군단급 무력과 후방 경리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정도로 방대한 것이다. 그 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1993년 7월 귀순한 전북한 호위사령부원 김명철(1994:127)은 1976년 당시 1개군단규모(약 4만명)가 그가 제대하던 1985년경에는 약 3개군단 규모로 확장되었다고 한다.

호위사령부의 조직상 편제도 여러 번 바뀌었다. 국가안전보위부가 국가정치보위부로 불렸을 시절에는, 국가정치보위부 제2부(호위국)에 속해 있었으나, 1983년에 호위사령부로 독립 승격하였다. 현재의 편제는 인민무력부 산하라는 설과 국방위원회 산하라는 설이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김정일 개인 지시만을 따르는 독자적인 무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사회안전부내 무력이다. 경찰역할을 하는 사회안전부는 국내치안을 맡는 것을 주임무로 하지만, 사회안전부 공병국 산하에는 정규군과 마찬가지로 무장을 한 9만여명의 인민경비대가 존재한다. 이들은 김부자 특각(별장), 교량, 발전소 등 주요 시설이나 국가안전보위부가 관리하는 강제수용소의 경비를 맡는 등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한편, 때로는 김부자 관련 비밀시설공사나 북한의 국가기간산업 시설 공사(핵시설, 발전소 댐공사 등)에 동원되고 있다.

넷째, 연령에 따라 조직되는 민간군사조직이 있다. 만17세이상 45세까지의 주민(여자 17세-30세)을 대상으로 한 교도대, 46세이상 60세까지의 남자를 주 대상으로한 노농적위대, 15-16세 남녀학생으로 조직된 붉은 청년근위대가 바로 그것이다. 그중 160만명에 달하는 교도대는 민간 준군사조직의 핵심으로 직장단위에서 정규보병사단과 여단에 준하는 편제로 조직되어 정규군 70-80%수준의 화기를 보유하고 있다. 평시에는 노동당 비서국 민방위부 산하이지만, 전시에는 인민무력부의 직접 지휘를 받아, 후방 방어 및 예비대로 투입된다(통일원, 1995:496). 그리고 직장 및 지역을 단위로 편성된 노농적위대는 1958년 창설된 북한 최초의 민간군사조직으로 민방위업무와 함께 주요시설의 경계, 지역방어와 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며, 1970년 창설된 붉은 청년근위대는 학교단위로 편성되어 노동당 비서국 군사부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유사시 군대하급간부 보완을

위한 후비대, 결사대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2.4.3 노동당내 대남군사조직

한편 노동당내에도 군사조직이 포함되어있다. 노동당 비서국내 22개전문부서중 대남 공작을 주된 임무로 하는 4개부서가 독자적인 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4개부서는 사회문화부, 통일전선부, 대외정보조사부, 작전부인데 이들 부서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내외통신 종합판63. 1997:446-447참조).

4개부서중 가장 군사적 특징이 강한 조직이 작전부이다. 작전부는 특수임무를 띤 대남공작원을 지정된 지점까지 호송, 안내하면서 유사시 '남조선에 침투'하여 개펄라 활동을 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임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작전부는 '전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전투원은 1천여명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대외정보조사부는 대남적화 통일수행을 위한 해외혁명역량 강화를 목표로 해외에서 한국공관의 활동 동향이나 공관원의 인적구성 등 각종 대남정보수집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필요시 해외에서 한국공관 및 공관원을 대상으로한 테러를 자행하기도 한다.¹⁸⁾

그리고 사회문화부는 대남 사업을 전담하던 '연락부'를 80년대말 흡수하면서 대남 공작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는데, '남조선내 통일혁명분위기 조성'과 지하당 및 지하간첩망 구축, 요인암살 등 대남 공작에서 비합법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전선부는 남북대화와 같은 공개적 활동과 더불어 해외동포 침투를 통한 통일전선 구축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군은 그 조직이 매우 방대하다. 정규군 조직인 인민 무력부 외에도 당과 정 그리고 민간인에 이르기까지 군사조직이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조직망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에서는 군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할 것이다.¹⁹⁾

18) 1987년 KAL기 폭파범 김현희가 바로 대외정보조사부 소속이었다.

19) 부력이 다양한 조직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이들간에는 서로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

3. 김정일의 군권 공고화 정책

3.1 김정일의 군권 장악과정

앞서 제도적인 면에서 군의 자율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지만, 김일성 생존시 북한군은 어디까지나 철저한 수령의 군이었다. 따라서 김일성-김정일은 김정일 후계체제구축과정에서 북한군을 김일성의 군대, '수령의 군대'에서 김정일의 군대, '후계자의 군대'로 변모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다. <표1>에서 김정일이 북한체제 내에서 권력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을 제시하였지만, 김정일의 군권장악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²⁰⁾

1단계는 김일성이 당권을 김정일에게 이양하는 시기인 1960년대 중반에서 1974년까지의 시기로 군권을 장악하기 위한 기반조성단계에 해당된다. 김일성은 김정일로 하여금 선전선동과 관련된 실무경험을 쌓게 한 후 비서국 조직·선전 담당 비서로서 당의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장악케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1972년 10월의 당중교환사업을 통해 당원에 대한 사상 및 자격검사와 대대적인 숙청을 실시하고, 1973년이후의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해 전사회적으로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분위기를 만든다. 결국 시기에는 김정일이 군권장악을 시도하지 못하고, 군권을 장악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2단계는 김정일이 1974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후계자로 결정된 이후부터 후계자 지위를 확립한 1980년까지의 시기로 군에 대해 간접통제단계이다. 이때 북한군이 김일성의 군대, '수령의 군대'에서 김정일의 군대, '후계자의 군대'로 변모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구체적으로 김정일은 당조직지도부와 당선전선동부의 직접 지휘를 받는 총정치국을 통해 군부의 김정일화를 시도했는데, 특히 자신이 주도한 3대혁명소조 요원을 군부내 침투시켜 군부 사상동향감시와 지지기반 확충을 꾀한다.²¹⁾

그리고 그 결과 1976년 5월에는 김정일 후계체제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오진

20) 정영태(1994)는 1960-1970년대를 조성기, 1980년대를 강화기, 1990년대를 완료기로 3단계로 구분하고, 손광주(1997)는 1단계 73-79년 당조직을 통한 영향력행사, 2단계 80-86년 당중앙군사위원으로 공식적인 영향력 확대, 3단계 87-93년 군통수권장악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21) 최주환(1996)은 1970년대 후반부터 인민무력부가 김정일에 문서를 보고하는 경우 반드시 김정일을 정유토록 했다는 증언을 한다.

우가 인민부력부장으로 임명되고, 1979년 5월에는 당시 48세로 중장이었던 김정일 측근 오극렬을 총참모장에 발탁하는 파격적인 인사조치를 단행할 수 있었다.²²⁾

<표1> 김정일의 주요 정치경력

연 도	직	책
1964년-현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배속(후계수업 시작)
1967년-69년	당 문학예술 부부장	
1970년	당 문학예술부장	
1972년	당 선전선동부장	
1973년	당 비서국 조직·선전담당 비서	
1974년	정치위원회 위원(후계자로 공인)	
1980년	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 비서국 총괄비서, 중앙군사위원회위원, 최고인민회의 제7기 대의원(후계자 지휘 확립)	
1986년	김일성 후계문제 해결 선언, 최고인민회의 제8기 대의원	
1990년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1991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1992년	군 ‘원수’ 칭호 부여	
1993년	국방위원회 위원장(후계체제 완성)	

자료: 동아일보사(1995:206).

또한 부분적으로는 김정일이 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도 행사하는데, 1977년 11월 30일 인민군 선동원대회를 소집하고 군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 것이나, 1979년 2월 14일 “인민군대안의 선전선동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1979년 5월 5일 “전군의 김일성주의화 방침 철저히 관철에 대한 지시,” 등을 발표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3단계는 김정일이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정일이 서열2위인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총괄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1993년 국방

22) 이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1976년 6월 김동규 등이 반김정일 세력을 형성하던 과정에서 숙청된다(김구섭, 1996:43). 또한 당시 오진우와 김정일간의 관계는 갈등관계였다는 논의도 있다(송광주, 1997:223-240참조).

위원회 위원장이 되기까지로 군에 대한 직접통제시기이다. 김정일은 1980년 10월의 제6차 당대회를 통해 김일성, 오진우에 이어 군사위원회를 지도하는 위치에 올라섬으로써 군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자로 부상하게 된다.²³⁾

김정일은 1980년부터 ‘오중흡과 김혁의 모범학습’을 제창하는데, 이는 선전선동에 능한 김정일이 군내의 당조직과 정치기관, 그리고 선전선동기관에 자신의 지휘가 관철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해석된다. 그 결과 1983년경부터는 김정일이 군내 동향감시 및 보고체계를 직접 장악하는 ‘3일 3선 감시보고체계’가 확립된다. 즉 대대장 급이상 지휘관 등에 대한 일일동향을 3선(참모부, 정치부, 보위부)계통으로 보고 받고, 중대급 이상의 병력이동과 포, 탱크 등 중화기부대 이동 및 소대급이상의 비상동원훈련 등은 3일 이전에 김정일에게 보고토록 하는 것이다(최주환, 1996).

또한 김정일은 1985년의 대대적인 군인사를 통해 군 원로의 지지를 강화시키고, 1990년 5월에는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와 동격으로 개편, 격상시키면서 자신은 제1부위원장자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1991년 12월 당중앙위 6기 19차 대회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선출·추대됨으로써 전시 군령권을 장악한다. 이어서 1992년에는 군 원수칭호를 부여받고, 1993년 4월에는 헌법개정으로 위상이 강화된 국방위원장에 선출되어 김일성으로부터 무력통수권을 완전히 이양 받음으로써 군권장악을 완료한다.

4단계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 취임한 1993년 4월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 김정일이 군권을 토대로 국가전체를 통치하는 시기이다. 김일성 사망후 김정일은 당을 대표하는 비서국 총비서는 물론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에도 취임하지 않고 군직위인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장의 자격, 그 중에서도 주로 최고사령관명령을 통해 크고 작은 지시를 내리고 있다.²⁴⁾ 또한 김정일 스스로 ‘장군’이라는 칭호로 불리기를 즐겨하고, 반대로 ‘정치국상무위원’, ‘서기’, ‘당중앙군사위원’과 같은 당관련 직위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김정일이 김일성과 같은 유격대 경험도, 군복무 경력도 전혀 없기 때문에 김정일의 군권장악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일부 존재하지만, 김정일이 지난 3년이상 북한군 최고지도자직위를 이용해서 북한을 통치하는 것은 김정일의 군권장악이 확실함을

23) 당시에 김정일이 지도하는 당비서국 아래 ‘군사부’가 설치됨으로써 김정일의 군에 대한 통제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

24) 최고사령관이라는 칭호는 1983년 처음 등장한다. 그러나 상징적 의미가 강했고, 경애하는 지도자, 인민의 지도자라는 용어가 보다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의미한다.

그러나 제도적인 장치만으로 김정일의 군권 장악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김정일은 군으로부터 적극적인 충성과 지지를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김정일이 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첫째, 빈번한 승진인사를 통한 군 엘리트의 지지확보, 둘째, 군 중시 활동을 통한 군부 사기증진, 셋째, 군사능력 및 업적 과시를 통한 군권 장악의 정당화를 들 수 있다.

3.2 승진인사를 통한 군 엘리트 장악

김정일이 군권을 행사하는데 가장 큰 유의점은 군 원로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고비마다 군엘리트에 대한 승진인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당, 정에서의 인사가 문책인사이거나, 사망에 따른 보충인사에 국한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²⁵⁾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으로 선출된 이듬해 1992년 4월 20일 원수로 추대되면서, 당시 군 원로에 대한 승진인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원수였던 김일성은 대원수가 되었고, 차수였던 오진우는 김정일과 같은 계급인 원수로 그리고 대장중 원로 적인 최광, 백학림, 김광진, 이을설, 이두익, 최인덕, 주도일(사망), 김봉률(사망) 등 8명은 차수로 승진한다. 승진인사를 ‘당중앙위원회·당중앙위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중앙인민위원회 공동결정’으로 발표한 것은, 이는 김정일 스스로 원수계급을 부여받는 인사라는 점과 당시까지는 김정일이 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직후 4월 23일, 인민군 창설이후 최대규모 승진인사인 동시에 김정일 최고사령관 명의로 단행한 최초의 승진인사가 실시된다. 이 때 대장 16명, 상장 28명, 중장 96명, 소장 524명 등 총 664명의 장령(장성)급에 대한 승진인사가 이루어졌는데, 김정일이 자신의 직책인 최고사령관 명의로 승진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군권확보를 과시하는 동시에 군내 친김정일 세력 구축을 가속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25) 1995년의 경우 북한내 주요인물의 직위 및 직책변동자는 33명으로 조사되었는데, 당1, 정3, 군27, 기타 2명이었다. 전체 변동자의 약 82%가 군이었을 뿐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당은 사망(황남도 당책점 인민위원장)에 따른 보충인사, 정은 경질인사(외교부부부장, 임업부부장, 해운부 부장)이지만, 군은 사망으로 인한 보충인사는 3명뿐이고, 나머지는 승진인사이다(내외통신 주간판984. 1995.12.21참조).

이후에도 김정일은 계기만 있으면 원로예우와 세력구축이라는 2중적 목적을 갖는 군 승진인사를 최고사령관명의로 실시한다. 1993년 4월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다음 7월 19일에는 6.25전쟁 참전원로 군관 및 장성 99명 (중장 14명, 소장 85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1995년 10월 8일에는 당창건 50주년을 맞아 당중앙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공동명의 결정으로 최광 및 이을설을 원수로, 조명록, 김영춘, 김철만을 차수로 승진시키고, 최고사령관명의로 김하규, 현철해, 김병률 3명을 대장으로, 전기련, 이명수, 오금철, 윤정린, 김희관 5명을 상장으로, 김형룡, 신동균, 최부일, 이주을 4명을 중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총 14명을 승진 인사한다. 그리고 동시에 국방위원장 겸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오진우사망이후 공석이었던 인민무력부장에 최광을 임명한다.

1997년에 들어와서는 자신의 생일을 며칠 앞둔 2월 9일에 김격식, 주장성, 김성규, 박재경 등 4명의 상장을 대장으로 박영하, 이창한 등 두명의 소장을 중장으로 승진시켰으며, 4월 13일에는 김일철, 전재선, 박기서, 이종산 4명의 대장을 차수로 승진시키면서 그 중 김일철을 2월사망한 김광진(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자리에 임명하고, 그밖에 상장 1명을 대장으로, 중앙 8명을 상장으로, 소장 37명을 중장으로, 대좌 71명을 소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다시금 123명에 달하는 대대적인 승진인사를 감행한다.²⁶⁾ 이번에도 사망에 따른 보충인사를 계기로 군 원로를 예우하는 동시에 군내 친김정일 세력을 부상시키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 북한군 차수급이상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김정일이 승진시킨 사람이다.²⁷⁾ 그리고 19명의 대장 중에서는 4명을 제외한 16명이 1992년 4월이후 대장으로 승진한 사람이다.²⁸⁾ 결국 김정일은 군인사를 통해 군엘리트로 하여금 자신에게 충성토록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⁹⁾

26) 한편으로 이상과 같은 대규모 승진인사는 북한주민들에게 소위 김정일의 ‘광복정치,’ ‘대담하고 통이 큰 지도자상’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갖고 있다.

27) 같은 원수이지만, 김정일은 공화국원수이고 나머지는 인민군 원수로 구분된다(조선일보.1996.2.8). 김정일을 여타 군원수와 차별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28)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표9>참조.

29) 실제로 김정일은 승진인사에서 “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인민군대를 혁명적 무장력으로 강화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담보함으로써 당의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언급하고 있다(로동신문. 1997.4.14).

<표2> 차수급이상 북한군 인사

계급	이름	현직	승진일자
대원수	공석		94. 7김일성 사망
	김정일	최고사령관, 국방위 위원장	92. 4.20 추대
차수	오진우	사망	92. 4.20 승진
	최광	사망	95.10. 8 승진
	이을설	호위사령관, 국방위 위원	95.10. 8 승진
	김광진	사망	92. 4.23 승진
	백학립	사회안전부장, 당군사위원	92. 4.23 승진
	최인덕	김일성군사종합대학총장	92. 4.23 승진
	이두익	당군사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	92. 4.23 승진
	김익현	당민방위부장, 당군사위원,	94. 4.15 승진
	조명록	인민군 총정치국장, 당군사위원	95.10. 8 승진
	김영춘	인민군 총참모장	95.10. 8 승진
	김철만	국방위 위원, 제2경제위원장	95.10. 8 승진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97. 4.13 승진
	전재선	인민무력부 부부장	97. 4.13 승진
	박기서	인민무력부 부부장, 평양방이사령관	97. 4.13 승진
	이종산	인민무력부 부부장	97. 4.13 승진

자료: 내외통신 주간판974(1995.10.12), 주간판1053(1997.4.17).

3.3 군 중시 활동으로 군 사기 증진

김정일이 군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은 장령급 군엘리트, 군관급 중간간부 그리고 하전사와 같은 하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군엘리트에 대한 사기증진책은 앞서 제시한 승진인사가 기본이지만, 그와 더불어 군 지휘관의 지휘권확립과 군엘리트에 대한 특권확대를 들 수 있다. 김정일은 1993년 '당 세포들이 세도를 너무 부린다'는 일선 지휘관들의 불만을 받아 들어 부대지휘관에 대한 정치장교의 간섭을 줄이고 군지휘관의 권한을 확대시켰다. 군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는 군대내 당기관인 총정치국 간부부를 분리시켜 조선인민군 간부부로 독립시키고, 간부추천문건에 해당 단위 정치위원이나 정치부장이 '수표(사인)'하던 것을, 군지휘관이

먼저 수포하고 정치간부들은 부서만 하도록 바꾼 것이다. 그 결과 일선 지휘관들이 종전처럼 당과 연계된 정치장교들에게 야침을 하거나 부탁을 하지 않고 간부인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조선일보, 1996.2.7).

군엘리트에 대한 특권확대조치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1993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때 정무원 부부장급(차관)이상에게만 주던 북한내 어느 지역, 어느 기관이나 출입할 수 있는 '신임장'을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인민무력부국장, 군단장, 훈련소장 등 군엘리트 수백명에 준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1994년 10월에는 군단장과 군단정치위원급에게 은백색의 소형 권총을 선물했으며, 1994년말과 1995년초에 걸쳐서는 군단장 직무 차를 벤츠230으로 바꿔주는 동시에 수은중착유리(선팅)를 허용함으로써 권위를 높여주었다(조선일보, 1996.2.6).

한편 군관급 중간간부에 대한 사기증진책으로는 빈번한 군부대방문을 비롯하여, 70년대 중반 폐지했던 장기복무자에 대한 훈장과 메달 수여제도 부활,³⁰⁾ 당군이나 행정일꾼을 동용할 때 군복무자를 우선 동용토록 하는 조치 등을 들 수 있다.³¹⁾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정일의 군부대 현지지도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후반기에 김정일은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5년이 들어서면서 부대방문을 빈번히 실시하기 시작한다.³²⁾ 1995년에 실시한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 및 군관련행사 참여는 <표3>과 같다. 김정일은 1995년 1월 1일 제214군부대방문을 시작으로 군부대방문 6차례를 포함 총 15회의 군관련행사에 직접 참여하였다. 김정일이 주요 군인사를 대동하고 실시하는 부대방문은 방문시 의례적으로 격려와 선물이 있다는 점에서 군중간간부를 포함 부대 구성원에 사기증진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8차 군선동원대회(1983.4.18-4.20)이래 12년만에 개최한 제9차 군선동원대회에 김정일이 연 3일 참석한 것이나 3월달에 개최한 군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는 참가자 인적사항으로 비추어 볼 때, 중간간부에 대한 사기증진책으로 보여진다.

30) 1993년 9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군복무기간별 국가표창제도'를 발표하였다.

이 제도는 휴전후 1954년 생겼으나, 표창혜택 양산을 이유로 1975년경 폐지되었었다.

31) 34세이하의 군관제대자에 대해서는 고급당학교, 인민경제대학, 각도의 공산대학등의 재교육기관에 입교시켜 졸업후에 간부로 동용토록 했다(조선일보,1996.2.7).

32)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이 1960-70년대도 존재했다는 것이 최근 '김정일 선집' 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으나, 당시는 비공개였다.

<표3> 김정일 군부대 방문 및 군 관련 참여(1995년)

일 시	방문 부대 및 군행사	비 고
1995. 1. 1	제214군부대,	12년만에 개최
1995. 1.28	군선동원대회 참가자 면담	
1995. 2. 5	제291군부대, 여성해안포 중대	
1995. 2. 5	군협주단에술인 '장군님 반들어 군민은 한마음' 관람	
1995. 2. 6	제155군부대, 해군	
1995. 3. 5	군집단체조 '영원히 모시리' 관람	
1995. 3.15-16	군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진행 정치지도원 대회 참가자 기념촬영 및	
1995. 3.17	군협주단 노래공연관람	
1995. 4.25	제1017군부대 방문	
1995. 6.15	제853군부대 방문, 해병	
1995. 7.18	급수산기념궁전 성역화 참여 군장병과 기념촬영	
1995. 8. 6	군훈련일꾼대회 참가자 면담	
1995. 8.28	여군해상훈련장 시찰 및 공연관람, 기념촬영	
1995. 9.13	제893군부대, 휴전선 최전방초소	당창건일 최초 열병식
1995.10.10	당창건 50주년기념 열병식 진행	

자료: 내외통신 종합판55, 56, 57, 58(1995)에서 정리.

김정일의 부대방문은 군 하층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기능도 동시에 수행한다. 김정일은 군부대 박사 등을 직접 찾아가 애로를 듣고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1995년 1월 1일 214부대를 방문해서는 하전사들이 비누와 발싸게가 부족한 것을 시정토록 하였으며, 1995년 2월 5일 9군단 소속 여성해안포중대 방문에서는 여성들의 피부가 타지 않도록 약크림을 보내기도 하고(조선일보, 1996.2.9), 1996년 첫 군부대 방문지인 제291군부대에서는 중대의 식당과 침실, 교양실, 온실 등을 둘러보고 이 중대의 모

범을 전군이 따라 배울 것을 강조한다(내외통신 보급판9924. 1996.2.21).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은 1996년들어 보다 빈번해져서 공식활동 50회중 군관련행사가 32여회나 된다(내외통신 주간판1047. 1997.3.6).³³⁾

<표4> 김정일 군부대 방문(1996년)

일 . 시	방문 부대 및 군 행사
1996. 2.20	제963군부대 여성중대방문
1996. 2.27	동부전선 최전방부대(531고지)방문
1996. 2.29	동부전선 제436비행군부대 방문
1996. 3.18	서부전선 대덕산 초소 방문
1996. 3.20	중부전선 오성산일대군부대(5군단)방문 및
1996. 3.20	제512군부대(1군단) 방문
1996. 4. 2.	4.25국방체육선수단 방문
1996. 4.25	서부전선 대연합부대 지휘부 방문
1996. 6. 4	동해안 군부대 방문
1996. 6.11	제853군부대 방문, 해군
1996. 6.24	제770군부대 후방기지 방문
1996.10.14	제963부대(호위사령부 경비여단)방문
1996.10.15.	군부대 건설현장 방문, 구월산 문화휴양지
1996.10.20.	서해안 전방부대 제765부대 방문
1966.10.28	군부대가 건설한 월비산 발전소 방문
1996.11. 1	차광수 비행군관학교 방문
1996.11.18	제185군부대방문
1996.11.23	제154군부대(해군), 서해안 방문
1996.11.24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방문(최초)
1996.12. 1	인민군 105탱크사단 방문
1996.12. 8	강건종합군관학교 방문
1996.12.31	제938군부대 방문

자료: 내외통신 주간판1029(1996.10.31) 및 종합판63(1997).

33) 김정일의 군관련활동은 1997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데, 1997년 7월 현재 전체 공개활동 36회중 23회 (10회 군부대방문, 13회 군행사참석)가 군관련활동이었다.

<표4>는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만을 정리한 것인데, 김정일은 여름기간을 제외하고는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부대를 방문하고 있다. 그리고 군 하층에 대한 세밀한 관심을 표명한다. 예컨대, 3월의 중부전선 오성산일대 부대방문에서는 사병과 마주앉아 사업과 생활에 대한 담화에 이어 야전식사도 함께 나누었으며, 1996년 6월의 제 770부대 방문에서는 “군부대에서 꾸러놓은 온실들의 이용률을 더욱 높여 군인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남새들을 많이 생산하는 한편 영양가 높고 수확량 많은 비섯을 대대적으로 생산해야한다”며 병영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하고 있다(내외통신 주간판 1029, 1996.10.31).³⁴⁾

이상과 같은 김정일의 군 사기증진책은 통치철학으로 ‘애병정신’을 내세우는 데까지 이른다. 애병정신이란 “전사들을 단순히 총을 쏘는 병사들로서가 아니라 사상과 이념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로 믿어주는 위대한 사랑”으로 정의되며, 김정일은 “애병이라는 어휘가 어느 사전에도 오르지 않을 정도로 지난날에는 병사들을 홀대시 해온 것이 군역사” (내외통신 주간판948호, 1995.4.13)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임금수준, 식량배급 뿐아니라 사회적 대우면에서도 군이 여타집단보다 우대받았다는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김정일이 군 사기 증진을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짐작케 한다.³⁵⁾

3.4 군사능력 및 업적 과시

그러나 승전인사나 군우대정책만으로 군권이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김정일의 취약한 군경험이 군권기반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군사적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군통수권 획득의 정당성을 확보하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군사적 모험주의와 유사한 강경책³⁶⁾을 택함으로써 자신의 군사능력을 과시하려 하였다.³⁷⁾

34) 실제와는 무관할지라도 로동신문(1996.4.9)은 “최고사령관 전사들인 인민군 장병들의 전투적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다”며 김정일 부대방문의 성과를 높게 평가 한다.

35) 임금, 주택배정 등에 있어 군이 당, 정보나 높은 경제적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이 석호·입수현(1994:39-41)참조.

36) 긴장고조를 통한 대내 통제강화라는 측면도 존재하다.

37) 김정일의 군사자질과 군사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시도는 여럿 발견된다. 평양방송(1992년 4월 26일)은 “비밀한 군사적 지략으로 인제나 복잡하게 얽힌 정황 속에서도 분제의 본질을 명철하게 꿰뚫어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는 김일성이 아직 살아있었던 1993년에 거슬러 올라간다.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의 핵의혹을 해명하는 최종수단으로 특별사찰을 결정하였으며, 당시 한미양국은 북한에 대한 압력용으로 팀스프리트93을 재개하기로 결정한다. 그러자 김정일은 본격적인 팀스프리트훈련이 개시되기 전날인 3월 8일 최고사령관명령 0034호로 '전국, 전인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한다. 팀스프리트기간중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것은 1983년이래 10년만으로 통상 한 단계 낮은 '전투동원태세'가 취해지곤 했었다. 그리고 3월 12일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에 대항하여 핵확산금지조약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선언한다.³⁸⁾ 이에 대해 당시 미국과의 대화를 모색 중이었던 김일성은 반대하였다고 하나, 미국정부가 군사제재대신 고위급회담을 제의하게 되고, 김정일이 1994년 10월 20일 국방위원장의 권한으로 북미간 기본합의문 서명을 지시함으로써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기본합의문'을 도출하게 된다.

이상의 진행과정을 북한군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일의 강경책이 북한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김정일의 군사능력을 입증한 형상이 된 것이다.³⁹⁾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도 김정일은 군사적 강경책을 내세움으로써 군권을 세우려고 있다. 김일성 사후인 1995년 5월 3일에는 휴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중립국 감시위원회 북측 사무실을 폐쇄하였으며, 또한 국방위원장 명의로 '식량 등의 인민군 우선 배분'이 지시되고 전선지휘관을 강성인물로 교체한다(塚本勝一, 1996:166). 또한 1995년 10월에는 한국 측이 실시한 독수리훈련을 핑계로 동계훈련을 하면서 전투기들을 전방에 증가 배치시켰다.⁴⁰⁾ 또한 1996년에 들어서서는 4월 4일에 휴전선 비무장지대 유지·관리 임무포기 담화를 발표하고는 4월 5일에서 7일까지 연3일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군사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또한 김정일은 군사력 증강을 지속함으로써 군권장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⁴¹⁾

보고 그에 맞는 묘한 수를 써 적들을 수세와 궁지에 몰려 놓곤 한다"면서, 그 예로 1976년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들고 있다(이기택, 1993:189재인용).

38) 탈퇴선언은 김정일과 측근이 결정하고, 김일성에게는 사후에 전해졌다고 한다.

39) 이에 대해 북한은 "김정일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NPT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총포성 없는 15일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평양방송, 1996.1.31)고 선전한다.

40) 일선부대 방문도 군사적 강경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을 예외로 북한군은 매년 1-2만명이 증가되고 있다(국방부, 1996). 각 군별 특성을 보면 김일성 사후 북한 지상군은 전차보다 장갑차와 야포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야포의 경우 김정일은 170mm 지주포와 240mm 방사포의 추진 배치 시킴으로써 전략적 중심이 얇은 서울을 조기에 탈취하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⁴²⁾ 해군의 경우는 전투함보다는 지원함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9척의 소형잠수함을 추가로 실전배치하였다. 또한 50여명의 병력을 태우고 50노트이상으로 고속침투할 수 있는 공기부양 고속상륙전 130여척, 소수(7명)의 승조원을 연근해 침투시킬 수 있는 소형잠수정 48척, 9척의 소형잠수함과 1500-2000톤급 잠수함 26척 등을 보유하여 수중전투력 및 내남기습능력을 증대시켰다.⁴³⁾ 이밖에 북한은 노동1호, 노동2호, 대포동 미사일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핵무기 의혹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다량의 생화학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1990년초까지 8만 8천여명이었던 특수부대원이 10만명으로 증가하였고, 특수전부대내 비행장과 관제탑 등 항공부분 기습능력을 주입부로 하는 “공군저격려단”을 신설하였다(내외통신 종합판60, 1996:474).

군사훈련도 북한 핵문제가 세계적인 현안문제로 등장한 1993년 이후 다시 확대시키고 있다. 1993년부터 화학전에 대비 매년 2회 사단 지휘부 군관들을 사단 갱도진지에 투입하는 갱도 훈련을 시키고 있으며, 과거 특수병종에 실시하던 단도조법, 보병삼을 이용한 육박전, 보병격술 등을 일반 및 기술병종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1994년부터는 한국지역과 비슷한 유형의 지형을 선정하여 사단 및 군단급 군사훈련을 시작하면서, 각 군단장 책임 하에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등 일선 지휘관들을 1회 150-200명씩 소집, 20일간씩 ‘지휘관 맹수훈련’이라는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7년에 들어와서도 4월 17에서 5월 3일 사이 최고사령관명의로 해 군은 물론,

41) 김정일은 “강력한 군대가 없이는 인민도, 사회주의국가도, 당도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 (로동신문, 1997.4.7).

42) 1995년 10월 8일 포병병과인 김광진을 인민부력부 1부부장에, 기계화 군단장 출신 김영춘을 총참모장에 임명한 군인사정책은 당시 속전속결전략이라는 김정일의 군사전략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한용섭, 1996:32-33).

43) 공군의 경우는 수에 있어서는 커다란 변동이 없으나, MIG21/29기의 자체 생산추진과 더불어 노후화된 기종을 신기종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과 일반주민에 이르기까지 전시 담당업무 수행능력을 점검하는 ‘전쟁대비 모의실전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북한문제연구소, 1995.3; 1997.9).

4. 김정일 체제하 북한군 역할분석

김정일은 북한이 당면한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군이 체제유지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 체제하에서 군이 수행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정치적 역할, 경제적 역할, 사회통제역할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1 군의 정치적 역할 강화

북한정권이 수립된 이래 북한군이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권력장치의 하나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은 수령과 노동당의 정치적 치침과 방침을 실행하는 데 중점이 있어 왔다. 그러나 군권을 장악한 김정일이 군사적책을 통해 북한체제를 통치하기 시작하고, 또한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군의 정치적 역할이 급속도로 강화되기 시작한다. 김정일 자체가 군을 강조한다는 점, 국가수준에서 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는 점, 군엘리트의 국가서열 상승, 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 군발언권 강화 등을 통해 군의 정치적 역할이 강화되었음을 예증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에서 군의 정치적 역할이 확대되는 기본적인 동력은 김정일이 군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김일성 사망이후 김정일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서 혁명군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며 군의 역할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김정일:1997). 그리고 김정일의 군중시사상은 1997년 2월 김정일의 55번째 생일을 기념해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이 공동명의로 발표한 축하문 내용에 극적으로 표현된다. 즉, “김정일 동지께서는 혁명군대가 혁명의 주체의 핵심역량, 주력군을 이루며 군대는 곧 인민이고 국가이며 당이라는 독창적인 군중시사상을 내놓으시고 주체적인 군건설위업을 승리로 이끄시어 혁명무력 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치시었으며 우리 인민군대를 충효 일심의 당군으로,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 발전시키시었습니다”라는

식이다(로동신문, 1997.2.16). 여기서 김정일의 군중시사상을 당과 정측에서 인정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군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되었다. 북한은 1946년이래 거의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대내외 정세를 밝히는 신년사를 발표해왔다.⁴⁴⁾ 그러나 1995년 1월 1일 북한은 신년사를 당보(로동신문), 군보(조선인민군보), 청년보(노동청년) 공동사설로 발표하였으며, 이 관행은 1997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로동신문, 조선인민군보, 노동청년이 북한에서 발행부수가 많은 주요 언론매체이기도하지만, 김정일을 비롯해 북한권력층이 체제유지 근간을 당, 군 및 청년조직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⁴⁵⁾

신년사의 내용에 있어서도 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인정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1995년 신년사를 보면 제목은 ‘위대한 당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라고 되어 있어 ‘당’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공동사설의 주어를 살펴보면 ‘인민과 인민군 장병’이 주로 나타나는 반면 ‘당원, 근로자, 인민군대’는 보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군에 대한 강조는 1997년 공동사설에서 보다 강조된다. 1997년 공동사설은 경제제건을 역점과제로 제시하면서도 “인민군대의 총창위에 사회주의의 운명과 부강조국이 있으며 당과 군대를 틀어쥐고 우리식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것이 군최고사령관 김정일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는 식으로 군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군 중시경향은 신년사 관철 집회를 통해서도 감지된다. 과거 주로 기업소 종업원 켈기대회에서 시작하던 신년사 관철집회가 1996년에는 인민무력부 켈기대회가 1월 3일 평양시 군중집회와 같은 날 개최되었으며, 1997년에는 인민무력부 켈기대회가 1월 3일 먼저 개최되고 이어서 1월 5일 평양시 군중대회개최가 된다.⁴⁶⁾

44) 신년사는 신년사, 축하문, 시정연설 등 그 형태를 달리하였지만, 1957년과 1966-70년을 제외하고는 (1987년은 1986년말의 시정연설로 대체) 매년 발표되었다(내외통신 주간판934, 1995.1.5)

45) 따라서 청년조직의 경우 기존의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을 1996년부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한다.

46) 1990년이후 1995년까지 첫 켈기대회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부산광산연합기업소 종업원, 1991년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종업원, 1992년 평양만경대협동농장원, 1993년 평양시민 군중대회, 1994년 신의주신발공장 종업원, 1995년 순천지구 탄광연합 기업소 청년탄광종업원(내외통신 주간판1040, 1996.1.16).

<표5> 북한의 국가적 명절⁴⁷⁾

날 짜	가 념 일	비 고
1. 1-2	신정	
2.16-17	김정일생일	1995년부터 '민족최대의 명절'
3 .8	국제부녀절	
4.15-16	김일성생일	1998년부터 '태양절'로 개칭
4.25	군창건일	1996년부터 국가명절
5. 1	국제노동절	
7.27	전승기념일	1996년부터 국가명절
8.15	해방기념일	
9. 9	정권창건일	
10.10	당창건일	
12.29	헌법절	

자료 : 내외통신 보급판1016(1996.7.26) 참조 작성.

또한 북한은 1996년부터 군관련일을 국가명절로 제정한다. 1996년 4월 23일 북한은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 그리고 7월 25일에는 휴전협정체결일(북한에서는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을 국가적 명절로 제정했다고 발표한다(<표 5>참조).⁴⁸⁾ 북한에서 국가명절이 되면 국가적 휴일이 되고,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 및 일반가정에서 국기를 달게 되어 있으며, 특별배급이 이루어진다. 식량부족이 심화되는

47) 김정일생일은 1995년부터 '민족최대의 명절'로 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1975년 임시휴무일, 1976년 정식휴무일, 1982년 공휴일, 1986년부터 생일다음날까지 휴무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1995년 국가명절로 제정된 것에 대해서는 김일성이 1992년 2월 7일비준했으나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겸손성을 지닌 김정일의 만류'로 그동안 공표가 보류됐다가 이번에 발표했다고 한다(내외통신, 보급판 9351. 1995.2.7).

48) 한편 국가명절과 달리 민족절 명절이 있는데 민족명절은 국가명절과 달리 당일 휴무하되, 전후 일요일에 보충노동을 실시해야한다. 북한의 민족명절은 음력설, 한식, 단오, 추석이 있으며, 이번에 국가명절로 지정된 7월 27일은 휴전 40주년인 1993년 민족명절로 지정되었다가 이번에 승격되었다.

가운데 통상적으로 특별배급이 이루어지는 국가명절로 군창건일과 휴전협정일이 지정되었다는 것은 북한 주민전체가 군의 영향력하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동시에 군의 정치적 영향력이 주민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이다.

세째, 당서열에 있어서 군엘리트의 지위가 김일성사망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김일성사망전에 북한의 대규모 행사시 주석단은 통상 정치국 상무위원>정치국 위원>정치국 후보위원>당중앙위 비서>부총리>당중앙위군사위원>당부장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표6>참조).

그리하여 김일성사망시 장의위원을 보면 정치국 상무위원(김정일, 오진우)에 이어, 당 정치국원을 배치하되 그 순서는 정무원총리(강성산), 부주석(이종욱,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기타직 정치국원(김영남, 최광,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서윤석) 순이며, 다음에 정치국 후보위원(김철만, 최태복, 최영림, 홍성남, 강희원, 양형섭, 홍석형, 연형복, 이선실), 당비서(김기남, 김국태, 황장업, 김중린, 서관희, 김용순),⁴⁹⁾ 부총리(김환, 김신복, 김창주, 김윤혁, 장철, 공진태)의 순이다. 이어서 윤기복(중앙인민위 경제정책위원장), 박남기(평양시 행정경제위원장), 전문섭(중앙검열위원장), 유미영(천도교청우당 위원장), 현준극(로동신문사 책임주필)의 순으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표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당부장과 당중앙군사위원이 나오고, 정무원부장, 지역 당책임비서를 거쳐 국방위원과 군엘리트가 등장한다. 그리고 이상의 순위는 김일성 사망이전인 1993년경의 주석단 서열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김일성사망이후 그 순위에 큰 변화가 존재한다.⁵⁰⁾ 김일성사망 100일 추도식에서는 국방위원회위원이거나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인 이을철, 백하림, 김봉를, 김광진, 김익현이 당정치국 후보위원 다음 서열로 올라서면서 당비서 서열을 앞지른다. 군부 엘리트 서열이 급상승한 것이다.

49) 김철수에 대해서는 그 직책이 알려져있지 않다. 그러나 그 서열로 보아 국가안전보위부 관련이거나 당비서직으로 추정된다.

50) 김일성사망시 주석단에 변화가 없었던 것은 그만큼 김일성 사망이 갑작스러웠다는 것을 반증한다.

<표6> 김일성관련 주요행사 주석단

순위	김일성 사망전 (93.말) (31명)	김일성 장의위원 (94.7.8) (273명)	김일성 사망100일 (94.10.16) (30명)	김일성 1주기 (95.7.8) (28명)	김일성 2주기 (96.7.8) (34명)	김일성 3주기 (97.7.8) (37명)
1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2	오진우*	오진우*	오진우(死)*	강성산	이종옥	이종옥
3	강성산	강성산	강성산	이종옥	박성철	박성철
4	이종옥	이종옥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김영주
5	박성철	박성철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김병식
6	김영주	김영주	김영주	김영주	김영남	김영남
7	김병식	김병식	김병식	김영남	최광*	최광*
8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최광*	계응태	계응태
9	최광*	최광*	최광*	계응태	전한성	전한성
10	계응태	계응태	계응태	전한성	이종명	이종명
11	전한성	전한성	전한성	이종명	조명춘	조명춘
12	한성윤	한성윤	한성애(妻)	김철만*	김영철	김영철
13	서윤석	서윤석	김철만*	최태복	최태복	최태복
14	김철만*	김철만*	최태복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15	최태복	최태복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16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17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18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19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20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21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22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23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24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25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26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27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28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29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30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31	-	김신복	-	-	김백학	김백학
32	-	김창주	-	-	김익현*	김익현*
33	-	김혁철	-	-	김하일*	김하일*
34	-	김장태	-	-	김유미	김유미
35	-	김진기	-	-	김성애(妻)	김성애(妻)
36	-	김윤기	-	-	-	-
37	-	김남기	-	-	-	-
38	-	김문섭*	-	-	-	-
39	-	김유미	-	-	-	-
40	-	김현준	-	-	-	-

자료: 내외통신 보급판8892(1994.4.8), 주간판908(1994.7.11), 주간판1014(1996.7.18), 조선일보(1997.7.8.)

비고: 1993년도의 경우 김일성을 제외하였으며, *은 현역 군계급을 보유자.

이후 김일성 2주기 행사에 이르면 군부엘리트의 최상위직은 정치국 위원 다음으로 격상되는 한편, 여타 군부 엘리트의 서열은 당비서보다 낮아진다.⁵¹⁾ 그러나 비록 낮아졌지만 김일성 사망시 구성되었던 장의위원 순인 당부장이나 정무원부장 다음과 비교해서는 훨씬 상위서열인 것만은 확실하다. 특히 주석단의 하위라고는 하지만 정치국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군부엘리트가 주석단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결국 중앙군사위원회가 김정일체제하 북한에서 당정치국, 당비서국과 버금가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정일체제하에서 군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은 김정일 관련 주요행사의 주석단을 분석해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김정일은 1991년 12월 24일 최고사령관에 추대되었으나, 김일성 생존시인 1992년 1주년시에는 ‘사회안전부 군무자집회’만 열리고, 1993년 2주년시에는 ‘인민무력부 기념보고회’만 열리는 등 매우 간소한 행사였다.

그러나 김일성사망이후 김정일 관련행사를 성대하게 치루면서 군 엘리트의 서열이 동반상승하게 된다.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하반기, 김정일은 상중을 핑계삼아 당창당 기념일 등 주요 정치행사를 별다른 행사없이 지낸다. 그러나 12월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3주년시에는 최고사령관추대 중앙보고회의를 포함해 각종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였다. 즉, 최고사령관추대 3주년기념으로 북한지역내에서 치루어진 행사가 중앙보고대회, 청년전위들의 충성의 노래모임, 사회안전부 청년군무자들의 야회, 농근맹 여맹적맹원들의 충성의 모임, 경축음악회, 인민무력부 경축야회, 전국 풍경화 및 공예 전람회, 각부대별 기념보고회, 경축야회, 예술소조 공연 등이 있었으며 또한, 친북단체를 이용하여 인도, 이탈리아, 몽고, 짐바브웨, 모잠비크 등 해외에서까지 ‘김정일 군최고사령관 추대 3주년 좌담회’를 열기도 한다(내외통신, 종합판54 참조).

그리고 당시 구성된 중앙보고대회 주석석을 보면, 1993년 김정일 생일시와 비교해서 군엘리트의 서열이 매우 높게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7>참조). 물론 김정일이 군최고사령관이라는 군관련 직책을 추대받은 기념일이므로 군엘리트가 주석단의앞에 배치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향이 이후의 김정일 생일시 구성되는 주석단 구성과 유사하다는 것을 보면, 결국 김정일체제하에서 군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었음

51)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으나, 군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진 것에 대한 김정일 자신 또는 당으로부터의 견제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을 보여주는 것이다.⁵²⁾

또한 행사내용에서도 군영향력 강화는 감지된다. 1994년 김정일 최고사령관추대3주년 대회에서 기념보고회에서 최광은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 관철을 강조하는 등 비군사 부문에 대한 언급한다(조선일보, 1995.10.2). 그리고 1997년 4월 25일의 군창건행사는 행사자체를 군이 주도한 것까지는 당연하다 하겠으나, 당, 정, 군 간부들이 거의 동원되어, 군총정치국장인 조명록이 대표로 김정일에 충성을 맹세하는 ‘충성맹세예식’이 처음 등장한다. 그리고 때맞추어 로동신문에서는 ‘군대는 곧 인민이고, 국가이고, 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종래 김일성 생일에 진행시켰던 조선소년단입단식도 이날 진행되었다(내외통신, 주간판1055, 1997.5.1).

이상과 같은 군의 대내적 정치적 영향력 강화는 군과 정간에 의견차이가 드러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⁵³⁾ 왜냐하면 북한군이 당의 철저한 정치적 통제를 받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당의 통제를 받고 있는 정무원과 정책마찰이 표면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군과 정무원간에는 특히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정책마찰이 나타나는데, 김일성사망후 가시화되기 시작한다. 1994년 10월에는 미군 헬리콥터 조종사 홀준위의 석방을 위한 미·북한간의 협상에서 북한 군부는 홀준위의 석방과 미·북한 직접 군사채널의 개설을 통한 대미 평화협정체결의 긴밀한 연계를 끝까지 주장하였으나, 김정일은 대미관계개선을 원하는 외교부의 건의를 수용하여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채널개설을 추후로 미루고 홀준위를 석방하였다(한용섭 1995:28). 그때는 비록 군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군이 독자적인 의사결정체제를 갖게 되었음을 보여준다.⁵⁴⁾

52) 1995년 10월 10일 당창건 50주년기념에 군열병식을 갖고, 인민무력부장 최광이 연설을 했다는 것 또한 당행사와는 결맞지 않은 것이다.

53) 그러나 당, 정, 군의 북한 권력엘리트가 전체적으로 김정일을 중심으로 북한체제를 유지해야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갈등이라고 할 수는 없다.

54) 미군유해송환과 관련해서도 북한군은 정무원 외교부 통로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려하고 있다.

<표7> 김정일관련 주요행사 주석단

순위	김정일 51회생일 (93.2.16) (33명)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3주년 보고대회 (94.12.24) (22명)	김정일 53회생일 (95.2.16) (33명)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4주년 보고대회 (95.12.24) (25명)	김정일 54회생일 (96.2.16) (29명)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5주년 보고대회 (96.12.24) (24명)
1	-	-	-	-	-	-
2	오진우*	강성산	강성산	이종옥	이종옥	이종옥
3	강성산	이종옥	이종옥	박성철	박성철	박성철
4	이종옥	박성철	박성철	최광*	김병식	최광*
5	박성철	김영남	김병식	김영남	최광*	김영남
6	김영남	최광*	김영남	진병호	김영남	개용태
7	최광*	개용태	최광*	김철만*	개용태	진병호
8	개용태	진병호	개용태	최태복	진병호	한성룡
9	진병호	한성룡	진병호	양형섭	김철만*	이윤철*
10	한성룡	김철만*	한성룡	이윤철*	최태복	조명복*
11	서유식	최태복	김철만*	조명복*	최영립	김영춘*
12	김철만*	최영립	최태복	김영춘*	양현섭	김철만*
13	최태복	양형섭	최영립	김광진*	이윤철*	최태복
14	최영립	홍석형	홍성남	백학립*	조명복*	양형섭
15	김달현	김광진*	양현섭	이하일*	김영춘*	김국태
16	홍성남	김봉률*	홍석형	김익현*	김광진*	김기남
17	인형복	김익현*	백학립*	김기남	백학립*	황장업
18	강희원	김기남	김봉률(病)*	김국태	이하일*	김중린
19	이선실	김국태	김광진*	황장업	김익현*	김용순
20	김기남	황장업	김익현*	서관희	김기남	김신복
21	김국태	김중린	김기남	김용순	김국태	장철
22	김중린	서관희	김국태	김신복	황장업	전문섭*
23	윤기복	김용순	황장업	김윤혁	김중린	김광진*
24	서관희	-	김중린	장철	김용순	백학립*
25	황장업	-	서관희	윤기복	김복신	김익현*
26	박기남	-	김용순	전문섭*	김윤혁	-
27	김환	-	김환	-	장철	-
28	김복신	-	김복신	-	윤기복	-
29	김창주	-	김윤혁	-	전문섭*	-
30	김윤혁	-	장철	-	유비영	-
31	장철	-	윤기복	-	-	-
32	양형섭	-	박남기	-	-	-
33	전문섭*	-	전문섭*	-	-	-
34	-	-	유비영	-	-	-

자료: 로동신문(1993.2.17), 내외통신 보급판9289(1994.12.24), 보급판9368(1995.2.17),
보급판9841(1995.12.25), 보급판9923(1996.2.17), 보급판10392(1996.12.24)

또한 1995년 3차 남북한 북경 쌀협상시 한국측의 '86우성호' 송환요구에 대해 북한측 대표단장인 전금철은 “군부에서 안된다고 한다. 우리의 손을 떠난문제”라며 송환을 거부했으며, 1996년 1월 20일에는 세계 각국의 정부와 민간단체가 추진한 식량지원계획에 대해 북한 외교부 부대변인이 최소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외교부부부장 최수현은 “외국의 식량원조가 개혁개방을 부추기려는 적대세력에 이용되는 것을 우려한 군부가 이를 반대하고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신진, 1996:146재인용).

그리고 최근들어서는 4자회담과 관련하여 군과 정간의 의견대립이 표출되고 있다. 4자회담은 1996년 4월 16일 한미양측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초기 거부반응을 보이던 북한은 공동설명회를 요청하게 된다. 그리고 1996년 7월 23일 뉴욕에서의 미북간 접촉을 통해 곡물지원과 추가적인 경제제재조치 완화를 조건으로 공동설명회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불과 2일후인 7월 25일 북한은 군명의로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평화협정 체결전까지의 정전상태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빠른 시일안에 미-북간 합법적인 군사접촉 채널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다시금 주춤해진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김정일체제하에서 군의 정치적 역할이 커졌으나, 그렇다고 군에 대한 당 우위원칙까지 변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군의 정치적 역할 강화는 군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김정일이 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1997:311)이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은 당이 변질되고 당이 군대를 틀어쥐지 못한 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고 언급한 것은 어디까지나 ‘정권은 총대에서 나오지만 그 총대는 당이 장악해야한다’(로동신문. 1992.5.18)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⁵⁵⁾ 결국 군은 김정일의 후원하에 김정일의 통치를 지원하는 강력한 배후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4.2 경제에 대한 군역할 확대

현재 북한체제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위기이다. 북한은 김일성 생존시 개최된 1993년 12월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이 성공하지 못하였음을 시인하였으며, 1994년 7월 6일 김일성이 사망전 마

55) 따라서 김정일이 총서기로 취임하면, 이번에는 당을 중심으로 체제를 정비할 것이 예상된다.

지막으로 주재한 회의도 경제부분 책임일군회의회였다. 그리고 북한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년간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조정기간으로 설정하고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로 나아갈 것을 천명하였으나, 3년간의 조정기간이 지난 1997년 현재 조정기간을 완료치 못하고 연장하고 있다.

사실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라는 3가지 원칙을 유지하려면 군의 경제개입이 축소되어야한다. 그러나 문제는 군의 경제개입 축소가 어렵다는 데 있다. 오히려 김정일 체제하에서 군의 경제적 역할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면 먼저 착수해야할 것이 군사비 지출규모를 줄이는 일이지만, 정치군사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 모두에서 군수산업의 비중을 급격하게 줄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치군사적인 면에서는 김정일이 군사적 긴장을 강조하면서 군중심 통치를 하기 때문에 군사비 증가를 억제할 수는 있어도 군사비를 급격히 축소하지 못할 것이며, 실령 군사비 축소의지가 있다하더라도 군의 거센 반대에 부딪칠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경공업제일주의라는 입장과 군수산업부문의 활성화가 서로 모순되는 방침임에는 틀림없지만, 북한이 내세우는 또 다른 원칙인 무역제일주의와 관련해서, 북한내 산업중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부문이 바로 무기산업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군수산업을 급격하게 축소할 수 없다. 군수산업이 국내에 한정되면 비생산적 투자가 되지만, 무기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이 북한경제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⁵⁶⁾

북한은 1960년대부터 무기수출을 해왔는데, 1960년대는 개인화기를, 1970-80년대는 전자, 장갑차, 자주포, 전투함 등 중화기를 수출해왔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 중동지역에 스킵미사일 등 고정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밀수출길을 개척한다. 1988년 이란에 스킵B미사일 100여기를 밀수출하고, 1991년에는 스킵C미사일 150여기와 관련부품 및 기타무기 1억달러를 시리아에 밀수출한다. 그 결과 1980년대동안 무기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3%였으며(최종철, 1995:352), 1994년의 경우에도

56) 북한에서 제2경제부문, 군수산업은 독자적인 공장과 배급체제를 갖고 있어, 민수산업과 연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북한전체수출액의 약 25%를 군수산업이 차지하고 있다(내외통신 주간판 1024. 1996. 9. 26.).

무기수출은 김일성 사망이후에도 지속되어 1994년 12월 12일 자이르와 스킨드C미사일 18기를 1억달러이상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5년 5월에는 4기이상의 스킨드미사일을 이란에 판매한다. 북한이 꾸준히 추진하는 미사일개발은 정치군사적 목적은 물론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는 관련되며, 그 과정에서 경제에 대한 군의 영향력이 유지된다.

둘째, 무기수출이외에도 무역제일주의와 관련하여 군이 독자적으로 직영하는 무역상사가 증가하고 있다.⁵⁷⁾ 현재 군은 30여개에 이르는 무역회사를 직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표8>은 군에서 직영하는 무역회사로 알려진 것들을 제시한 것이다.⁵⁸⁾

<표8> 북한군 산하 무역회사

소 속	무역회사 명
인민무력부	은파산무역회사
총참모부	매봉무역회사.
후방총국	룡성무역회사.
호위사령부	해금강무역회사
방어사령부	백양무역회사.
해군사령부	삼흥무역회사
군사건설국	단풍무역회사.
군수동원국	건국무역회사.
서해함대사령부	삼해무역회사.
인민무력부체육단.	붉은별 무역회사.
군단산하	전진무역회사. 밀영무역회사 등

자료: 북한문제연구소(1997.9)에서 작성.

57) 원칙적으로는 모든무역상사가 대외경제위원회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외화부족으로 필요한 외화는 자체 조달해 쓰도록한다는 방침에 따라 직영 무역상사가 등장하였다.

58) 북한군의 외화벌이사업은 1960년대말부터 시작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조직화, 체계화되었다(최주환, 1996:177-182).

또한 북한은 1995년에 인민무력부내의 외화벌이 담당기구를 개편하고, 인민무력부대장으로 하여금 외화벌이 담당 부부장에 임명하는 한편, 연간 외화벌이 목표액을 1억달러로 책정하는 등 군의 외화벌이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식량난후 중국과의 국경무역이 활성화되자 1996년 7월이후에는 이전에 국가안전보위부 제5총국에서 관할하던, 국경경비 및 해안경비의 부업조도 인민무력부로 산하로 개편되었다고 한다(북한문제연구소, 1997.9.)

세째, 북한 경제난의 주요 측면인 에너지난을 극복하기 위한 발전소 건설을 비롯 대규모 건설사업에 군이 집중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북한군이 건설부분에 동원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전후복구사업부터이지만,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대적으로 투입된 것은 1970년대말경 소위 기념비적 대건축물 건설을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예를 들어 1991년 신년사를 보면 “---인민군 군인들의 --- 자립적 민족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발전소 건설과 공장, 기업소 건설 확장사업 ---3만세대의 현대적 살림집 --- 2천리의 물길을 새로 건설하여 대동강과 예성강, 압록강과 대동강을 하나의 대언제(大堰堤) 마을로 연결---” 시켰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대규모 건설사업에 북한군이 대대적으로 투입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김정일도 최고사령관 명의를 통해 군을 건설사업에 투입시키고 있으며, 김일성사망후에도 건설사업에 대한 군의 기여를 무척 중시하고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전인 1992년 6월 최고사령관명령으로 “금강산발전소 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명령”을 내린바 있으며, 김일성 사망후 김정일이 최고사령관명의로 내린 최초명령(1994.11.3. 최고사령관명령 제0051호)이 바로 청류다리 및 금룡2동굴 건설이었다.

북한의 에너지난을 반영한 듯, 김정일은 특히 발전소건설에 군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그리하여 1995년 11월에는 금강산발전소 “1단계 공사를 96년 상반기까지 완공할데 대한 국방위원회 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1996년 6월에는 현지방문을, 7월 2일에는 국방위원장겸 군최고사령관 명의로 “전신명령 제001호”를 내려, 공사에 참여했던 장령 3명에 김일성 훈장, 군관 120여명에 김일성청년영예장, 그리고 22개 군부대에 김일성표창장을 수여한다(내외통신 보급판10274, 1996.10.10).⁵⁹⁾

59) 금강산발전소는 현재 안변청년발전소로 개칭되었으며, 1986년 10월에 착공했으며, 90년들어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였고, 1단계 40만KW공사가 완료되어 1996년 9월부터 1단계 조업(20

또한 1996년 10월에는 김정일이 월비산발전소를 방문 군대장 전재선으로부터 발전소 규모와 건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군인들이 “발전소 건설에서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부대의 전투준비와 전투력강화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 나가도록 고무”한다. 이후 11월에는 군대장 전재선에게 영웅칭호 및 국기훈장1급을 수여하고, 군장병들에게는 노동당 주관으로 만경대와 대성산혁명열사능, 주체사상탑 등 평양시내일대 견학 및 각종 공연관람을 시킨다(내외통신 보급판10317, 1996.11.6).⁶⁰⁾

네째, 최근들어서는 군이 농업정책에도 직접 간여하게 되었다. 북한군은 원래 식량자급을 위해 농사도 직접 짓고 있었다. 그러나 농업생산성향상을 이유로 1997년부터 농정 분야에 대한 군부의 관여폭을 크게 늘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정일이 4월초 ‘군대가 책임지고 농사를 지을데 대하여’라는 명령을 내림에 따라, 각 협동농장을 책임진 관리위원장에 현역 군 장교를 앉히고 농삿일에 군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파종에서 수확까지 직접 군이 개입토록 하였다(조선일보, 1997.7.4).⁶¹⁾ 이처럼 모내기, 추수기간에 노동력을 제공하던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군동원이 파종, 비료공급, 탈곡 및 운송에 이르는 전과정에 동원된다는 것은 일부에서 군이 사실상 농정의 주도권을 장악했음을 의미한다.⁶²⁾

그리고 1997년 1월 김정일이 주재한 경제관계회의에서 인민무력부장이 경제부처 부장에게 경제계획달성 실패에 대한 질책을 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데(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7:51), 이는 북한경제를 유지하는데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4.3 군을 통한 주민통제 보완

북한의 심각한 경제위기는 북한주민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었던 조직생활 및 배급체계에 부분적인 마비현상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개인수준에서

만KW)에 들어갔다.

60) 그밖에 통일가 2만호건설, 평양노면전차, 당창건 50주년 기념탑 등에도 군이 건설에 참여하였다.

61) 이와 관련하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일철 차수는 1997년 7월 26일 휴전협정 44주년 기념보고대회에서 “군민이 합심협력하여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의 1211고지인 농업전선에서 일대전환을 가져왔다”며 군의 농장관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로동신문, 1997.7.27).

62) 원조물자 수송에도 군용트럭과 무장군인이 동원된다(중앙일보, 1997.6.4.).

생존전략을 추구하게 된다. 북한주민이 개인수준에서 추구하는 생존전략으로는 지리적 이동을 통한 불자획득, 개인적인 상행위실시, 농민시장 활성화, 비공식적 변경부역증대와 같은 합법적 경제행위, 그리고 관료부정부패나 일반주민의 절취 증대는 물론 전문적인 배추업 같은 비합법적 행위, 그리고 탈북과 같은 초법적 행위가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주민이탈현상의 증대에 대응하여 북한체제는 다양한 주민통제 강화정책을 내놓는다.⁶³⁾

특히 김정일은 군이 북한체제에서 가장 조직화된 집단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군으로 하여금 주민통제 역할을 보완토록 한다. 군이 주민통제기관으로 활용되는 방식으로는 군사적 위기상황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내부적인 단합을 모색하는 사상통제, 군민일치운동을 통한 일반주민의 군밀착화, 군기관에 주민사찰기능부여 등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군사적 위기상황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내부적인 단합을 모색하는 사상통제의 방식은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⁶⁴⁾ 그 예로 1996년 4월에는 비무장지대 부력시위를 하는 시점에서 고등중학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군입대 탄원대회를 평양에서 시작하여 지방으로 확산시켜 나간 것을 들 수 있다(내외통신 주간판1001호 1996.4.18). 또한 1996년 6월 5일 개최된 '조선소년단' 창립 50주년 기념보고대회에서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제1비서 최해룡은 만 7세에서 13세까지 소년 소녀로 구성된 소년단으로 하여금, "3백만의 총폭탄, 6백만개의 수류탄이 되어 당당하게 싸움으로써 정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고 사회주의 조국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내외통신 주간판1009호. 1996.6.13).⁶⁵⁾

둘째, 군민일치운동은 지역주민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된다. 북한은 정권수립이후 시종일관 군민일치를 제창해 왔으나, 김정일이 1992년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⁶⁶⁾ 일반주민을 대상으로한 군민일치운동이 처음에는 건설현장에

63) 주민에 대한 직접적 통제정책으로는 이념교육 강화, 주민인상생활에 대한 감시강화, 범죄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병조·김인렬·추태석(1996:62-70)참조.

64) 1995년에는 일부 사노청 초급단체 위원장을 정치사상적으로 충실한 계대군인으로 교체하였다(내외통신 보급판9654. 1995.8.24).

65) 소년층에서 시작한 '총폭탄론'은 급기야 1996년 12월 김정일 군최고사령관 추대 5주에 이르러, "전군이 총폭탄되고, 전민이 총폭탄되어 김정일을 결사옹위해 나갈 것"으로 확대된다(내외통신 보급판 10389. 1996.12.23).

동원된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인접마을이나 관련되는 행정구역에서 병영생활에 필요한 각종 소품, 위문품 및 부식을 지원해 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시작하였다(정영태, 1995:270). 그러나 이것이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된 4월 9일, 군창건일인 4월 25일, 최고사령관에 취임한 12월 24일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인민군대를 지원하는 운동으로 정착화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군민일치운동은 주민들로 하여금 군과 밀착케 함으로써, 부차적인 기능으로 주민의 체제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왜냐하면, 군민일치운동의 방향이 '군-->민'의 방향이 아니라 '민-->군'의 방향이고, 민의 군에 대한 기여도를 통해 개인의 충성도를 검사하는 격이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북한이 1996년부터 강조하는 '고난의 행군'정신이란 과거 군인들의 내핍생활을 민에게도 연장, 적용하는 것이고, 1997년 신년 공동사설에 등장한 '인민군따라배우기'는 직설적으로 민이 군과 같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이 주민의 체제이탈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사찰기관으로 등장하면서 기존의 주민통제기관을 보강시키고 있다. 그 예를 몇가지 들기로 한다. 첫째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추대를 계기로 대표적인 주민사찰기구인 국가보위부를 국가안전보위부로 개칭하는 한편, 김정일이 관장하는 국방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하였는데, 국방위원회 산하에 국가안전보위부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군의 주민사찰기능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1993년에는 그동안 사회안전부에 위임했던 군인범죄수사권을 인민무력부가 환수했으며, 또한 민간의 범죄도 군사재판에 회부하도록 하였고, 사회안전부가 발급해 오던 평양방문허가증도 1996년부터 호위사령부가 발급하고 있다(조선일보, 1996.5.14). 셋째, 1994년에는 국경경비대를 인민무력부로 편입시켰으며, 1996년에는 회창군(평남) 등 3개군을 정무원 관할에서 인민무력부로 편입시켰다(내외통신 주간판1006호, 1996.5.23).

전통적으로 북한사회에서는 군사적 위기체제의 지속, 장기간 군복무에 따른 군내 정치교육의 영향, 준군사조직에서의 군사훈련 등으로 군이 간접적인 사회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김정일체제에서 군을 직접적으로 주민통제에 활용하면

66) 북한은 1992년 3월 18일 중앙인민위원회 명의의 '군민일치 모범군, 시, 구역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라는 정령을 발표하였다.

서, 기존에 존재하는 주민통제기관에 대한 보완역할을 하게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5. 북한군 엘리트 구조분석

지난 3년간 김정일이 군을 이용해 북한체제를 통치하는 데는 북한군 엘리트의 김정일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북한군 엘리트가 어떠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고, 김정일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구성상 특성, 보직분석, 관계망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⁶⁷⁾

5.1 북한군 엘리트 구성상 특징

현재 북한군 엘리트라 할 수 있는 장성은 김정일이 군권을 장악한 후 계속해서 실시해 온 대폭적인 승진인사로 인해 그 수가 매우 크게 증가하여, 현재 1200-13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⁶⁸⁾ 라디오프레스(Radiopress, 1996:130-160)에서 1996년에 파악한 북한군 장성명부를 보면 총 845명인데, 그 중 3/4에 해당되는 612명이 1992년 4월이후에 장성으로 승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북한군 장성의 수치는 김정일이 군권을 장악한 다음 2배정도 증가한 것이다.

한편 앞의 자료에는 차수이상 11명, 대장 17명, 상장 36명, 중장 142명, 소장 639명의 병단이 파악되어있는 데, 이를 비율로 제시하면 각각 1.3%, 2.0%, 4.3%, 16.8%, 75.6%이다. 이로부터 북한군 엘리트 구조는 계급이 높아질수록 적어지는 피라밋형 구조를 갖고 있지만, 상장과 대장급이상을 비교했을 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군 엘리트 최고위층은 상대적으로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다.⁶⁹⁾ 그리고 현재 북한군 최고위층은 대체

67) 북한과 관련된 연구에서 항상 언급되는 것이 자료의 부족이지만, 특히 군엘리트에 대해서는 개별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여기서 분석되는 북한군 엘리트란 부분적인 자료가 확보된 최고위층에 한정된다.

68) 그러나 북한에서는 현역과 민간인간의 차이 즉 민군간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누구나 하루아침에 군장성이 될 수도 민간인이 될 수도 있다. 김정일이 군경험이 없음에도 '원수'라는 군사인격으로 의인화 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군민의 인사교환성과 이중성을 나타낸다(이기택, 1993:196).

69) 상위계급보다는 하위계급에서 누락된 사람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구조는 보다 뾰족한 삼각형이 될 것이다.

로 세대구분과 일치하는 다음의 3분류로 구분된다(동아일보, 1994.8.18, 이승희·이석호, 1994; 이민룡, 1995).

첫째 부류는 빨치산 1세 혹은 혁명 1세로 불리우는 그룹으로 이들은 1930년대 김일성과 같이 빨치산 운동을 전개한 동료이거나 아니면, 당시 10대 중반의 나이로 김일성의 호위병이나 전령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북한정권 수립이래 군 최고직을 차지해왔으며, 당서열에 있어서도 50위권 이내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적으로 이미 70세를 넘은 사람들로 최근들어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⁷⁰⁾ 따라서 당 및 군계급은 높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북한체제에서 원로대접을 받으면서 김정일 체제를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후 김정일은 아들이 비록 현대적인 군사지식이나 전략에 능통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체제옹호에 대한 사상무장이 철저하다는 점, 김정일이 강조하는 '고난의 행군정신'을 경험한 실제인물이라는 점, 빨치산운동이나 6.25전쟁과 같은 전쟁수행경험이 있다는 점과 같은 사유로 인해 '혁명선배를 존대하자'는 기치하에 군승진인사때마다 이들을 중용하고 있다.⁷¹⁾

둘째 부류는 소위 혁명2세대로서, 직접 빨치산 운동을 직접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후예로서 김일성-김정일에 의해 양성된 사람들이다. 김일성은 북한 실권자가 되면서 1947년 만경대혁명가유자녀학원을 세우고 만주의 빨치산 후예를 데려다 교육을 시키고 이들을 당, 군, 정의 핵심인물로 양성하였다.⁷²⁾ 따라서 이들은 군은 물론 당 및 정에도 배치되어 있으나, 선대가 군인이었고 만경대학원 자체가 인민무력부 산하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많은 수가 군엘리트로 성장하게 된다(동아일보, 1994.8.14).⁷³⁾

이들은 만경대학원을 졸업한 1950년 중반이후 대개 구소련이나 동구지역의 군사학교에 유학을 다녀왔기 때문에 비교적 현대적인 공산주의 군사전략과 전술교리에 밝은 사

70) 최근 오진우(1995, 원수, 인민무력부장), 김봉울(1995, 차수), 최광(1997, 원수, 인민무력부장), 김광진(1997, 차수,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태병렬(1997, 대장)과 같은 군내 혁명1세대가 사망했다.

71) 김정일은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의 숭고한 도덕 의리이다'라는 글을 1995년 12월 25일 발표하였다.

72) 이 학원 재학생들은 모두 군복을 착용한 가숙사생활을 하는데, 교육기간은 유치원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등 모두 11년이다(동아일보, 1994.8.23).

73) 북한에는 만경대학원 외에도 해주·남포혁명유자녀학원이 있는데, 만경대 출신은 군부엘리트로, 해주·남포출신은 정치엘리트로 육성시키려 하였다(전현준, 1995:62).

람들이다. 혁명 1세대의 경우 자연소멸로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군에 한정된 인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 범위가 한정된다. 그러나 60대에 해당하는 혁명 2세대는 혁명 1세대의 빈자리를 이어 북한군 최고위층을 채우고 있으며 또한, 군, 당, 정에 만경대학원출신자 인맥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내 권력엘리트의 핵심을 이룬다.⁷⁴⁾

셋째부류는 북한에서 군사교육체제가 갖추어진 1960년대이후 북한내 주요 군관학교인 강건종합군관학교,⁷⁵⁾ 김책공군대학, 김정숙해군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들이다. 특히 주요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중대장이상 지휘관으로 있으면서 당중앙군사위에 소속된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북한군 3세대 엘리트를 구성한다.⁷⁶⁾

이들은 혁명1세대나 혁명2세대와 같이 김일성-김정일과의 개인차원의 지속적인 인간관계로 맺어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자기식 군사전략과 주체사상하에서 토착군안으로 양성된 사람들이다. 대개 연령적으로 50대인 이들은 김정일이 군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대대적인 군승진인사를 통해 발탁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가 김정일 친위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현재 사단장, 군단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북한의 실병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앞으로 김정일체제가 정착되면, 이들이 군의 중핵으로 떠오를 것이 예상된다.

결국 북한군 엘리트는 70대-60대-50대, 노-장-청의 3대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김정일의 입장에서 보면 각기 후원세력, 보위세력, 친위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4) 만경대학원출신이 1990년현재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정회원 가운데 12.9%를 차지하고 있다(최성, 1997:48).

75) 이는 우리의 육군사관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1946년 군간부양성을 위해 세워진 중앙보안간부학교가 1948년 제1군관학교로 개편되었다가 1960년에 6.25당시 총참모장으로 전서한 강건을 이름을 따서 개명된 것이다.

76)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은 1952년에 설립되었으며 중대장이상 사단참모장이하 지휘관 중에서 당성, 경력발전성, 출신성분, 신체건강 등을 따져 선발되며, 졸업후 주요 보직에 진출하고 있다(동아일보, 1994.8.23).

5.2 북한군 엘리트 계급 및 보직분석

1997년 4월 현재 북한군 최고위층은 원수 2명, 차수 11명, 대장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내외통신 주간판1053, 1997.4.17.),⁷⁷⁾ 이들의 연령, 진급시기 및 보직상황은 <표9> 및 <표10>과 같다.⁷⁸⁾

<표9>에서, 현재 북한군 엘리트는 김정일을 제외하고 혁명 1세대 10명, 혁명 2세대 15명, 혁명 3세대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체로 세대가 빠를수록 1차로 진급하고 또한 높은 계급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⁹⁾ 여기서 김정일이 군의 안정을 위해 연장자 우대 승진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파악된다. 그리고 후속세대를 진급시킬 때, 한두사람의 이전세대를 같이 진급시키고 있는 것 또한 군원로에 대한 예우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군 엘리트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표10>의 북한군 엘리트 보직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국방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등에 포진되어 있으며, 조직구조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구성면에서는 중복되는 중층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⁸⁰⁾

이상과 같은 일반적인 경향외에도 세대별로 진급인사 및 보직현황에 몇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혁명 1세대중에서는 1993년 차수로 진급한 5사람중에서 이을설만이 1995년 원수로 진급함으로써, 유일하게 2계급 진급자가 되었다. 1995년인사 이후에도 1997년에 2번 진급인사가 있었지만, 혁명 1세대중 여타 인물을 진급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혁명 1세의 진급은 더이상 없을 것임을 시사한다. 김정일은 자연적인 감소를 통해 군엘리트로서 혁명 1세대의 세대교체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7) 북한군 원수 및 차수 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편이나, 대장에 대해서 김정민(1997)은 22명으로, 김용현(1997)은 23명으로 달리 파악하고 있다.

78) 북한군 엘리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희소할 뿐만아니라 출처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날 만큼 부정확하다는 특징이 있다. 여러 자료가 서로 상이할 경우 언론기관이 발표한 자료, 최근 자료 등을 기준으로 취사선택하였다.

79) 혁명1세대와 혁명2세대 경계에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혁명 1.5세대로 부류하기도 한다.

80) 이들은 모두 당중앙위원들이다.

<표9> 북한군 엘리트 세대별 구성과 진급시기

	생년	92.4이전	92.4	93-94	95.10	97.2	97.4	세 대	진급단계/시기
김정일	1942	원수(92)						-	-
이을철	1921	대장(85)	차수		원수			1세대	2단계 1차
백학림	1918	대장(85)	차수					1세대	1단계 1차
최인덕	1920	대장(87)	차수					1세대	1단계 1차
이두익	1923	대장(85)	차수					1세대	1단계 1차
김익현	1925	대장(91)	차수					1세대	1단계 1차
조병록	1930	상장(85)	대장		차수			2세대	2단계 1차
이하일	1935	상장(?)	대장		차수			2세대	2단계 1차
김영준	1936	상장(?)	대장		차수			2세대	2단계 1차
김일철	1930	상장(85)	대장				차수	2세대	2단계 2차
이종산	1922	상장(87)	대장				차수	1세대	2단계 2차
전재신	1929	상장(85)	대장				차수	2세대	2단계 2차
박기서	1929	상장(89)	대장				차수	2세대	2단계 2차
김철만	1918	대장(85)						1세대	0단계
전문섭	1920	대장(85)						1세대	0단계
김두남	1930	대장(85)						2세대	0단계
오국렬	1931	대장(85)						2세대	0단계
이병욱	1936	상장(85)	대장					2세대	1단계 1차
이봉원	1929	상장(86)	대장					2세대	1단계 1차
김룡연	1916	상장(86)	대장					1세대	1단계 1차
오룡방	1930	상장(87)	대장					2세대	1단계 1차
장성우	1933	상장(90)	대장					2세대	1단계 1차
원응희	1939	소장(83)	상장?	대장				3세대	2단계 1차
김병국	1940	중장(?)	상장	대장				3세대	2단계 1차
김병률	1925	상장(?)			대장			1세대	1단계 2차
현철해	1934	중장(91)	상장		대장			2세대	2단계 2차
김하규	1939	중장(86)	상장		대장			3세대	2단계 2차
김격식	?	중장(?)	상장			대장		3세대	2단계 3차
주상성	?	중장(?)	상장			대장		3세대	2단계 3차
김성규	?	중장(?)	상장			대장		3세대	2단계 3차
박재경	1933	소장(85)		상장		대장		2세대	2단계 3차
정장별	1931	상장(85)					대장	2세대	1단계 4차

자료: 통일원(1995), 김구섭(1996), 김정민(1997), 김용현(1997), 내외통신 각호 참조.

<표10> 북한군 엘리트 보직현황

계급	국방위원회*	당군사위원회	인민무력부	기타부서
원수 (2)	김정일(위원장) 이을설(위원)	김정일(위원) 이을설(위원)	김정일(최고사령관)	김정일 (당사업총괄) 이을설 (호위사령관)
차수 (11)	이두익(위원) 이하일(위원)	백학림(위원) 이두익(위원) 김익현(위원) 조명록(위원) 이하일(위원) 김일철(위원) 박기서(위원)	김일철(제1부부장) 이두익(부부장) 전재선(부부장, 1군단장) 박기서(부부장, 평양방어사령관) 이종산(부부장, 군수동원총국장) 조명록(총정치국장) 김영춘(총참모장) 최인덕(김일성종합대학장)	김익현 (당민방위부장) 이하일 (당군사부장) 백학림 (사회안전부장)
대장 (19)	김철만(위원)	김두남(위원) 이봉원(위원) 오룡방(위원) 김하규(위원) 김명국(위원)	오룡방(부부장, 병기국장) 이봉원(총정치국 부국장) 장성우(3군단장) 이병욱(부부장) 김명국(작전국장, 5군단장?) 김룡연(만경대혁명학원장) 김병률(?) 현철해(총정치국 조직부국장) 김하규(포병사령관) 원용희(보위사령관) 김격식(후방총국장) 주상성(4군단장) 김성규(8군단장) 박재경(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정창렬(부부장)	전문섭 (국가검열 위원장) 김철만 (제2경제 위원장) 오극렬 (당작전부장) 김두남 (금수산기념 궁정관장)

자료: 통일원(1995), 김구섭(1996), 김정민(1997), 김용현(1997) 등 참고 작성.

* 현재 이두익은 외병을 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며, 국방위원회에는 이상 5명 이외에 민간인으로 군수담당비서인 전병호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혁명 1세대의 보직현황을 보면, 혁명1세대가 더이상 인민무력부에서 핵심보직을 맡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독립된 기타 부서의 장이나 학교기관을 맡고 있다. 따라서 혁명 1세대의 군사적 역할은 제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헌법상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방위원회가 김정일, 이하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혁명1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제도로서의 기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⁸¹⁾

한편 혁명2세대는 15명으로 현재 북한군 엘리트의 대략 1/2을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 6명이 1992년 이후 2단계를 진급하였으며, 그중 2단계를 1차로 진급한 사람이 3사람, 2차로 진급한 사람이 3사람이다. 이들은 <표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이 인민무력부에서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제1부부장, 1군단장, 평양방어사령관을 맡고 있어, 혁명 2세대가 북한 부력의 핵심을 관장하고 있는 세대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혁명 2세대에서 한때 혁명 2세대 대표적으로 간주되었던 오극현, 김두남, 이봉원 등은 1992년 이후 한번도 진급하지 못했거나, 한번밖에 진급하지 못했다. 이는 김정일이 당에 속한 군엘리트보다 야전군 출신 엘리트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과거 오진우가 인민무력부내 주요보직을 독점했던 것과 달리, 여러 사람에게 분산해서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김정일이 군세력이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정일이 특정인이 군권력을 독점하는 현상에 대해 경계한다는 추측은 김정일이 군권을 장악한 이후에 새롭게 부상한 혁명 2세대인 현철해와 박재정의 보직이 총정치국 조직부국장과 선전부국장이라는 것에도 관련된다. 이들의 부상은 김정일이 야전군인을 중시하면서도 자신이 1973년 당 조직지도부장과 선전선동부장에 오르면서 당의 실권을 장악했던 것처럼, 현철해와 박재정을 통해 군내 혁명 2세대 야전군 엘리트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이다.

마지막으로, 김정일 친위세력이라 할 수 있는 혁명 3세대에 대해 살펴보자. 이들은 현재 군엘리트에 모두 6명이 포함되어 있다. 혁명 3세대는 모두 김정일이 군권을 장악한 1993년 이후 하나 둘씩 군엘리트로 진입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원응희, 김명국,

81) 이와 관련하여 황장엽은 “국방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구이며 군사에 관한 실권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가지고 있다”는 언급을 한다(국민일보, 1997.8.1).

박재경 같은 인물은 김정일이 1992년이후 행사한 5번의 통상적인 승진인사와 관계없이 별도로 진급됨으로써, 김정일의 신임이 매우 각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⁸²⁾ 그리고 이들은 현재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에 자주 동참하고 있으며, 일부가 당군사위원회에 진입하고 있다.

결국 현재 김정일은 혁명 1세대에 대해서는 우대하면서도 자연손실을 기대하고, 혁명 2세대에 대해서는 3-6명으로 하여금 군내 주요 보직을 분담케 하되,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자신의 친위세력인 혁명 3세대를 점진적으로 진급시킴으로써 북한군 엘리트 중심부로 새롭게 형성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3 북한군 엘리트 관계망 분석

다음에는 북한군 엘리트의 출신학교, 군별, 출신지, 기타 김정일, 김일성관련 관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군 엘리트의 특성 및 김정일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표11> 참조).

먼저 출신학교를 보면 군엘리트 구성상 특징에서 논했던 바대로,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이 김정일을 포함 14명으로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32명중 노령의 혁명 1세대와 출신학교가 밝혀지지 않은 혁명 3세대를 제외한, 혁명 2세대의 대다수 만경대혁명학원을 나왔다. 혁명 2세대는 만경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는 대부분 혁명 1세대와 마찬가지로 소련에 군사유학을 다녀오는 경우가 많다. 다만, 혁명 1세와 달리 혁명 2세 중 일부는 소련이 아닌 동구지역에 유학을 다녀왔는데, 이 경우는 군사학교가 아닌 공과대학이라는 특성이 있으며, 나머지가 국내에서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나오고 있다.

한편 군엘리트 중 김일성대학을 나온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김정일을 제외하고 4명이다. 이들은 김정일이 군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이전인 1980년대는 매우 중용되었으나, 현재는 이하일을 제외하고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김일성대학 출신자는 군보다 당과 정의 엘리트로 존재하고 있다.⁸³⁾

82) 그중 원용희는 인민군 보위국장시절인 1992년 구소련 군사교육기관에 유학한 장교의 KGB포섭을 적발함으로써 김정일의 신임을 얻었다(손광주, 1997:235-238).

83) 전현준(1955:64-66)에 따르면 1995년 당시 북한 서열 100명중 만경대학원출신은 25명인 반면, 김일성대학출신은 34명이다.

<표11> 북한군 엘리트 관계망

	만경대 혁명 학원	김일성 대 학	김일성 군사총 합대학	기 타	군 별	출신지	김정일, 김일성 등과의 관계망
김정일	○	○				소련	
이을철				소련군사아카데미		함북	김일성 호위병
배하림				소련군사아카데미		만주	김일성 전령
최인덕			현총장	소련군사학교		함북	김정일 키움
이두익				레닌그라드군사대학	보병	연길	김일성 호위병
김익현				미상		황북	
조명복	○			만주비행학교	공군	만주	김일성 전령
이하일	○	○		강건, 소련군사대학	군사정책	양강도	김정일 수행
김영준	○		○		작전	함경도	오극렬 계열
김일철	○			소련해군대학	해군	함남	김정일 친척
이종산				미상	군수	중국	건설공사
진재선	○				보병	미상	94년 제신임
박기서				미상	기갑	미상	김정일 수행
김철만				소련군사아카데미	군수	평남	
진분섭				소련프른제군사대학		함북	김정일 키움
김두남	○			소련군사아카데미	군사정책	평양	김영남 동생
오극렬	○	○		소련 공군대학	공군	길림성	오중휴 조카
이병욱	○				보병?	양강도	혁명유자녀
이봉원	○	○		소련 모스크바대학	인사/조직	평북	김정일 수행
김룡연	현원장					만주	김일성 호위대
오룡방	○			강건, 소련군사대학	특수전	함북	오중화 장남
장성우	○		○		보병?	함북	장성태 큰형
원응희				미상	공군/보위	미상	김정일 정호
김명국			○		작전/기획	함북	김정일 수행
김명철	○	○		체코 프라하 공대	당료출신	평북	김진의 아들
현철해	○			루마니아공과대학	정치장교	연길	김정일 신임
김하규				미상	포병	미상	김정일 수행
김격식				미상	보병?	미상	'97 제병지휘
주상성				미상	보병?	미상	
김성규				미상	보병?	미상	
박재경				미상	선전선동	함북	김정일 수행
정창현				미상	보병?	황해도	
계	14명	5명	3명	미상 9		미상 7	

자료: 서 호(1995), 통일원(1995), 강석승(1996), 김구섭(1996), 김정민(1997),

내외통신 각호, 동아일보(1994.8.17, 1994.8.18, 1994.8.21) 등 참고작성.

이상의 분석결과가 출신학교가 밝혀지지 않은 혁명 3세대에 적용된다고 보면, 혁명 3세대도 만경대혁명학원을 나오고, 그 다음은 김일성대학보다는 북한내 주요 군관학교를 나온 다음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군 엘리트의 출신지로는 함북이 7명, 중국이 6명으로 함경도와 중국출신이 많다. 이는 김일성의 빨치산 경험활동이 만경대혁명학원에 입학자격과 결과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료가 밝혀지지 않은 혁명 3세대 만경대 혁명학원을 나왔다면, 이들 역시 함경도 출신이 많을 것이 예상된다. 함경도 출신이 많은 반면, 평안도출신으로 밝혀진 사람은 평양을 포함하여 3명에 불과하다. 1995년 당시 북한 서열 100위중 출신지가 밝혀진 71명중에서 함경도가 23명, 평안도(평양포함)가 2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전현준, 1995:74-77), 북한 군엘리트는 당, 정엘리트 보다 훨씬 함경도에 편중되어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군 엘리트 관계망은 <표11>의 좌측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김정일 혹은 김일성과의 종적인 개인적인 연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군 엘리트 상호간의 횡적 관계는 김정일과의 종적인 관계를 보완, 강화하는 보조적인 관계로 보여진다.

북한군 엘리트 상호간의 연대감보다는 김정일과의 연대감이 보다 중요한 관계일 것이라는 추론은 북한군 엘리트의 군별 특성에서도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북한군 엘리트는 특정 군에 집중되어 있기보다, 보병, 포병, 기갑, 해군, 공군, 특수전과 같은 전투중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인물에서 군사정책, 작전, 인사/조직, 군수, 선전선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특기를 보이고 있다.⁸⁴⁾

그렇다면 북한군 엘리트가 외형적으로 동질성이 높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응집력을 갖고 있을 것이 예상되지만, 그 응집력의 근원은 엘리트 내부의 관계망에서 비롯된다기보다 김일성, 김정일과의 관계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집단이지만, 지신들의 독자적인 권력기반을 다지거나 정치세력화하기 보다는 김일성, 김정일과의 종적 관계를 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전체로서 김정일에 대한 개별적인 군사참모 및 정책참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집단이다. 결국 북한군 엘리트는 김정일의 사병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는 확실한 ‘김정일의 군대’인 것이다.

84) 이는 북한군의 통합군적 성격을 보다 부각시키는 점이기도 하다.

6. 결론 및 전망

본 연구는 북한군을 분석해야 김정일체제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을 밝힐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북한에서 군은 북한정권의 역사적 경험이나 군구상원의 양적, 질적 수준, 그리고 군사조직의 전사회적인 광범위성 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중요한 권력기구로 존재한다. 그리고 군은 법적, 제도적으로 당의 통제하에 있으나, 그동안 당 및 정에 대한 자율성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물론 군이 당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가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는 당자체의 권위보다 북한에 존재하는 수령이라는 독특한 의인화된 권력기구가 당을 통해서 군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해석된다.

김일성-김정일은 1974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인된 이후 대략 20년동안 ‘수령의 군대’를 ‘후계자의 군대’로 변모시키는 작업 진행시켰다. 김정일은 처음에는 당조직을 통해서, 나중에는 직접 군계급을 통해서 군을 장악해 갔다. 그 결과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북한군은 ‘수령의 군대’라기보다 ‘후계자의 군대’라는 비중이 커졌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군권을 장악한 김정일은 승진인사, 특혜제공, 현지지도, 군사능력과시와 같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에 대한 군의 지지를 확고히 하고, 또한 김일성 사망후 김정일이 군의 최고지도자 자격으로 북한을 통치하면서, 북한군은 ‘후계자의 군대’에서 ‘김정일의 군대’로 변하게 된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자신의 합법적 권력기반인 군대를 활용하여 북한체제를 통치해 왔다. 그 과정에서 북한군은 정치적 역할이나 위상이 보다 강화되었으며, 경제에 대한 군의 개입이 증대하였고, 주변통제에도 군이 직접 나서게 되었다. 군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체제보위집단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군 엘리트는 김정일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향후 북한군의 역할을 어떻게 될 것인가? 이를 위해 비록 제한된 자료를 통해서나마 북한군 엘리트를 분석하였다. 김정일이 북한체제를 통치하는 데는 과거에서의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북한군 엘리트의 자지와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북한군 엘리트는 혁명 1세대, 혁명 2세대, 혁명 3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혁명 1

세대는 자연소멸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김정일은 혁명 2세대 3-6명으로 하여금 군내 주요 보직을 분담케 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들 혁명 2세대 선두그룹에 대한 정치적 통제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점차 자신의 친위세력인 혁명 3세대를 북한군 엘리트 중심부로 진입시키고 있다.

북한군 엘리트간의 관계망을 분석해볼 때, 북한군 엘리트는 동질성이 높은 집단이지만, 자신들의 독자적인 권력기반을 다지거나 정치세력화를 모색하기보다 김정일과의 종적 관계를 보다 중요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은 전체로서 김정일에 대한 개별적인 군사참모 및 정책참모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북한군 엘리트는 확실한 ‘김정일의 군대’인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이 존재하는 한 북한군 엘리트의 김정일에 대한 지지는 확고할 것으로 보인다.

1997년 9월 21일 평남도당대표회의에서 김정일을 당총비서로 추대하기 위한 당대표회의가 개최되었고, 10월 3일 개성직할시 당대표회의를 끝으로 김정일을 당총비서로 추대하기 위한 12개시도 당대표회의가 끝났다. 그리고 북한은 1997년 10월 8일 당중앙위원회·당중앙군사위원회 명의의 특별 보도를 통해 총비서로 추대되었음을 밝혔다. 이제 김정일의 ‘얼굴없는 통치’(정영태, 1995)가 끝난 것이다.

김일성 사망후 김정일체제에 대해서 ‘과도기적 군부의존 위기관리체제(김구섭·고성윤·서주석, 1997)’, ‘군부중심의 위기관리체제(최성, 1997)’, 또는 ‘전시형 국가관리체제(황장엽, 조선일보 1997.7.11)’와 같이 여러 가지로 개념규정되었지만, 그 핵심은 바로 북한군이였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총비서에 추대된 앞으로 북한체제는 어떠한 모습을 띠 것인가? 북한군의 입장은 어떠한가?

김정일이 총비서에 추대된다는 것은, 당이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정일은 총비서로 취임한 이후 당을 정비하고, 당을 중심으로 북한체제를 운영하는 정상적인 사회주의적 통치형태로 돌아갈 것이 예상된다. 이 때, 김정일은 그동안 높아진 군의 영향력을 당으로 흡수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그럴 경우 당의 이익이 군의 이익과 크게 상반되지는 않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설령 군우선정책이 다소 후퇴하더라도 군이 김정일에 반하는 정치개입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 예상된다. 그동안에 나타났던 군대의 자율성이 강화나, 군의 역할 확대가 모두 김정일의 의지와 연관된 것이고, 또한 북한군 엘리트가 군보다 김정일과의 관계를 중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국방백서』. 국방부. 1996.
- 강석승. “김정일시대, 북한군부를 움직이는 사람들,” 『북한』 (1996.2): 46-53.
- 김구섭. 『김정일의 군인백 및 군사정책 결정구조 분석』. 한국국방연구원. 1996.
- 김구섭·고성운·서주석. 『북한 군부의 위상과 대내외 정책전망』. 한국국방연구원. 1997.
- 김병조·김인렬·추태석. 『김일성 사후 북한 사회구조 및 주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6.
- 김용현. “김정일 핵심인맥 대거 전진배치,” 『통일한국』 (1997.1): 86-91.
- 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1』. 평양:조선노동당출판사. 1967.
- 김정민. “북한인민부력부장에 누가 기용될 것인가,” 『북한』 (1997.6): 70-83.
- 김정일. “우리는 지금 식량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있다,” 『월간조선』 (1997.4): 동아일보사. 『김정일 북한대백과』 신동아(95-1) 별책부록.
- 북한연구소 편. 『북한군사론』. 북한연구소. 1978.
-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북한문제연구소. 1995.3, 1997.9.
- 서 호. “북한 주요인물 활동사항분석,” 『북한연구』 (1995 가을): 244-265.
- 손광주. “다큐멘터리 김정일과 군,” 『신동아』 (1997.10):216-239.
- 신 진. “북한정치체제 변혁의역동성,” 통일원 편. 『'96 북한 및 통일 연구 논문집4-북한실태분야』 :107-167.
- 유영구. “김정일 장악력이 안보상황 잠재변수,” 『WIN』 (1996.2): 96-101.
- 이기택. “북한의 정치변동과 군부의 조직적 동태,” 『전략논총』 제1집(1993): 151-227.
- 이민룡. “북한군부의 정치적 성향과 민군관계 발전에 관한 소고,” 『육사논문집』 48(1995): 113-141.
- 이석호·임수현. 『최근 북한의 안보환경변화와 군의 사회적 위치 및 정치적 역할』.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3.
- 이승희·이석호. 『북한의 정치 리더십의 변화전망과 대남정책』.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4.
- 이준형. “북한의 정치상황 변화와 군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안보학술논문집』

6-1(1995): 467-558.

전현준.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5.

_____. “김정일과 북한 군부 밀월관계인가,” 『북한』 (1996.2):38-45.

정영태. 『김정일의 군사권력기반』. 민족통일연구원. 1994.

_____. 『김정일 체제하의 군부역할:지속과 변화』. 민족통일연구원. 1995.

조선노동당. “당의 유일사상확립 10대원칙”. 1974.

중앙통신사편. 『조선중앙년감』. 1994, 1996.

최 성.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와 군부의 위상 및 역할,” 『통일경제』
33(1997.9):38-58.

최주할. “조선인민군3,” 『WIN』 (1996.9):177-183.

최종철. “무거이진 정책:달라, 안보 및 영향력 확보,” 최종철 외. 『북한의 생존정책』.
보성문화사(1995), 329-379.

통일원. 『'95 북한개요』. 통일원. 1995.

한용섭 외. 『김정일체제하의 남북군사관계 변화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안』. 국방대학
원 안보문제연구소. 1995.

한용섭. “김정일체제하 북한 군사정책의 변화 가능성,” 『전략연구』 제7호(1996):
27-45.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김일성 사후 3년과 북한의 정치·경제 전망,” 『통일경제』
32(1997.8):12-64.

Colton Timothy. *Commissars and Civilian Authority*. Cambridge:Harvard Univ.
Press. 1979.

Friedrich and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Cambridge:Harvard Univ. Press. 1965.

Kolkowicz Roman. *The Soviet Military and the Communist Party*.
Princeton:Princeton Univ. Press. 1967.

Radiopress.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組織別人名簿』. 東京. Radiopress. Inc. 1996.

塚本勝一. “亡命將校の 証言から 見た 朝鮮人民軍の 實態,” 關川夏央·惠谷治 編. 『
北朝鮮軍, 動く』. 東京. 文藝春秋, (1996): 154-169.

* 기타자료

일간지.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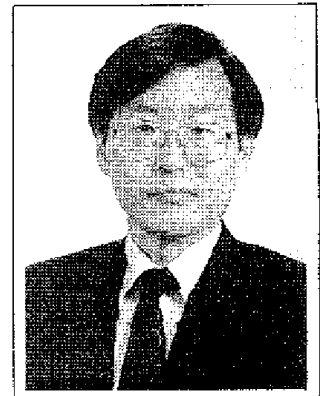
내외통신. 『보급판』. 『주간판』. 『종합판』

북한분현. 『보통신문』. 『북한사회주의헌법』 (1972년, 1992년).

『조선노동당규약』 (1961년, 1980년).

解放直後 北韓의 教育·文化 實態 - 研究

- 蘇聯의 對北韓 文化政策을 中心으로 -



姜 仁 求
(國史編纂委員會)

목 차

<요약문>	145
1. 서론	147
2. 북한주둔 소련군사령부와 소련의 대북한정책	149
3. 민족간부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과 교과과정	153
4. 소련의 대북한 문화정책 기구	158
5. 조소문화협회와 소련문화원의 설립과 소연방 대외문화교류협회	163
6. 결론	181
※참고문헌	183

【요약문】

본 연구는 해방직후 북한내 교육-문화분야의 실태를 통해, 당시 소련의 대북한 문화정책의 메카니즘과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소련의 대북한 정책과 관련된 주제는 국내외 사회과학계 또는 역사학계에 서 생산된 적지 않은 연구성과에 힘입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최근에 와서는 러시아내 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1차 사료들을 활용한 연구성과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연구성과의 대부분이 정치군사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고, 교육-문화 영역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은 형편이다. 이같은 사정은 러시아 학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1) 해방직후 소련의 대북한 정책 변화추이를 추적하고, 2) 당시 소련의 영향력이 북한내 교육-문화 방면의 어떤 기관을 통해 작용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3) 각 기관의 활동내용과 성격 및 그 관계 등을 분석한다. 결국 해방직후 북한의 교육-문화 분야에서 소련의 영향력 즉, '외부적 요소'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러시아내 각 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1차 사료들을 활용하였고, 개별적인 사실에 대한 평가에서 중립을 견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대북한 정책의 노선전환, 즉 한반도내 국제적 후견제의 실시로부터 북한내 독자적인 정치권력의 수립으로 변경되었다. 이같은 변화는 소련 정치권력이 한반도 위에서 자국의 정치적 이익과 그들의 영향력 강화에 무게중심을 실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내 독자적인 권력의 수립계획은 남한에 대한 미군 점령의 상황속에서 분단 징후의 한 요인을 제공한 것에 다름 아니다.

2) 소련군에 의해 점령된 북한에서 소련식 개혁모델에 입각한 국가건설이 급진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사회 각 방면의 전문요원의 양성이 불가피하였다. 북한에서 민족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비제도권의 교육기관 즉, <진남포 정치학교>, <중앙당학교>, <소비에트 학교>, <북조선민족간부양성학교>, 기타 <양성소> 등이 조직되었다. 이같은 북한내 친소적인 새로운 인테리의 형성은 소련의 정치적 영향력을 담보하는 수단이었다.

3) 제2차세계대전 이후 스탈린 전제정권은 지적 창작활동에 대한 탄압책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 당시 소련의 대북한 문화정책기구로써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외국문학 출판부, “국제서적”협회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서적 또는 러시아 고전문학 등을 소련군사령부 정치부와 조소문화협회를 통해 북한에 공급하였다. 이같은 출판물은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와 문화를 선전하기 위한 북한내 정치교육 및 문화교양 사업에 활용되었다.

4) 조소문화협회는 북한내 일본 제국주의 문화를 청산하고, 소련의 문화-과학방면의 달성을 선전하여 문화 저변에서 소련과 북한간의 상호교류를 확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46년 조소문화협회와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공식적인 관계 이후 조소문화협회의 위상이 상승되어 새로운 발전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5) 소련과 북한간의 문화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북한내 소련문화원을 설립하였다.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이같은 소련문화원의 설립에 필요한 물질·인적 지원을 전담하고, 조소문화협회를 지도, 원조하였다. 소련문화원은 북한내 소련의 영향력 강화와 관련해서 소비에트 이데올로기·문화“센터”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상과 같이 소련의 대북한 문화정책의 실행구조는 소연방외무성 하부기구인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를 주축으로 전개되었고, 북한내 조소문화협회는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지부으로써 위치하였다. 또한 소련문화원이 설립된 이후 조소문화협회는 직접 측면에서 소련문화원의 지도, 통제를 받게 되었다. 도식화 하자면, 피라미드식의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 소련문화원 - 조소문화협회 라는 구조가 성립된다.

결국, 이같은 대북한 문화정책의 구조 때문에 하위기관은 상위기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 성격상 문화의 진파라는 측면보다는 이데올로기 선전에 편중된 특징을 보이게 된다.

1. 서론

한반도 위에 남북으로 2개의 정부가 수립된지 반세기에 가까와가고 있다. 20세기 말에 세계사는 변화하고 있다. 소련과 동구유럽에서 사회발전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는 낡은 것이 되어가고 있다.

북한에서 변화의 조짐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오늘날 북한정권의 전체주의적 성격에 대해 논의할 때, 그 기원을 스탈린주의 또는 모택동주의의 차용뿐만 아니라, 일제시대에서 찾는 연구자도 있다. 과거 일본제국주의는 감시기구를 고착시켰고, 탄압을 자행함으로써 사람과 사람사이에 폐쇄성과 고립성을 각인시켰다는 것이다.¹⁾

해방직후 한반도에 미소 양국의 점령군이 진주한 상황 속에서, 남과 북에 이질적인 정부가 수립되었다. 강대국간의 자존심 대결은 냉전의 새로운 국면을 초래했고, 한반도 내 자주적이고 단일한 국가의 형성은 그 가능성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듯이, 과도기 사회에 외부적 요소의 개입은 국가형성과 경제건설을 전개하는데 특정한 발전모델을 선택하도록 강요한다. 그 결과로 자발적인 발전의 길 또는 현대적 시민사회의 형성이 억압받지 않을 수 없다. 대일전의 과정에서 소련군에 의해 점령된 북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1945년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한반도는 일제의 청산과 민중들의 '급진적인 정서'의 양양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당면한 국가형성의 과제도 이같은 상황에서 전개되었다. 북한지역을 점령한 소련군사령부는 북한의 정치권, 경제생활, 교육 또는 문화 등 사회 전체영역을 그들의 통제하에 장악하게 되었다. 또한 소련의 대북한 정책도 이같이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사령부를 매개로 관철되었다.

그 동안 소련의 대북한 정책과 관련된 주제는 국내 사회과학 또는 역사학계에서 생산된 적지 않은 연구성과에 힘입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러시아내 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1차 사료들을 활용한 연구성과도 나오고 있다.²⁾ 하지만 연구성과의 대부분이 정치군사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문화

1) М.Е.Тригубенко, *Азиатский <синдром> социализма(사회주의 아시아증후군)*, М. 1991. с.52

2) 특히 전현수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한국독립운동사연구 9집,1995), 김성보의 <소련의 대한정책과 북한에서의 분단질서 형성, 1945 -1946, 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역사비평사, 1995>, 김광운의<소련의 대북한정책과 공산당 중앙지도기관의 결성>, (역사와 현실, 1996) 등이 주목된다.

영역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은 형편이다.³⁾ 이같은 사정은 러시아학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간 이 방면에 대한 러시아학계의 연구성과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우선 게.에프.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경제와 문화 건설>⁴⁾을 예로 들수 있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1949년에 체결된 “소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및 문화 교류협정”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 주목하였다.

이.페.루킨스키는 <문화친선>⁵⁾이라는 논문에서 1950-1960년대 소련과 북한간의 문화 교류관계를 고찰하였다. 저자는 북한의 상황을 선진적인 정치제도와 후진적인 경제-문화 사이의 모순이라고 특징짓고, 이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에 민족간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했으며, 이런 측면에서 소련의 역할이 의미를 가진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그 후 유.에.바닌, 메.메.모크라크는 공동으로 <전통적 우정>⁶⁾에서 1960 -1970년 북한에서 “조소친선협회”의 조직과 그 활동에 대해 주목하였다. 또한 1985년에 유.에.바닌은 개별적으로 논문⁷⁾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는 처음으로 해방이후 북한에서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와 소련문화원의 활동과 그 의미를 밝히고자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저자는 주로 신문 또는 잡지만을 자료로써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간의 연구성과에 기초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1) 해방직후 소련의 대북한 정책 변화추이를 알아보고 2) 당시 북한내 교육-문화 방면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어떤 기관을 통해 작용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며, 3) 각 집행기관의 성격과 활동내용 및 관계 등을 분석한다. 결국 해방직후 북한의 교육-문화 분야에 서 ‘외부적 요소’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3) <한국현대문화사대계 1>(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75) 김형찬, <북한교육발달사><한백사, 1988) <해방직후의 민족문화운동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김기석, 이향규 <북한 사회주의 교육의 기원: 1945-1950>(한림과학원 단기연구과정 보고서, 1994)

4) Kim G.F.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культур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 КНДР.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6. 1954

5) Лукинский И.В., Дружба культур //Нерушимая дружба.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М. 1971.

6) Вагин Ю.В., Мокляк В.В., Традициям дружбы верны//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Воспоминания и статьи. М. 1976.

7) Вагин Ю.В. Советская и мировая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в борьбе за мир, против 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ой агрессии в Кореи// За мир на земле Кореи. Воспоминания и статьи. М. 1985.

이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가능한 러시아내 각 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1차 사료들을 활용하며, 개별적인 사실에 대한 평가에서 중립을 견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2. 북한주둔 소련군사령부와 소련의 대북한 정책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은 이전에 알타와 포츠담에서 결정된 열강과의 협약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 관동군에게 선전포고를 내렸다. 극동 제1방면군, 제2방면군과 긴밀한 협력하에 태평양함대는 북한 해안지대의 일본 관동군 주요거점과 군사항구를 점령할 목표를 세우고 상륙작전을 개시하여, 8월 12일에 웅기와 나진, 14일에 청진을 점령하였다.⁸⁾ 일본의 항복선언 이후 소련군은 군사작전을 계속해서 전개하여, 포츠담에서 미국과의 협약대로 38선 이북 지역만을 점령하게 되었다. 까.아.메레즈코브 장군의 명령하달로 25군은 38선 이북까지 군사작전을 전개하였다.⁹⁾

1945년 8월 말 종전이후 북한내 각 지역에 54개의 경무사령부¹⁰⁾가 신속하게 설치되었다. 첫번째 경무사령부는 25군 사령부와 참모부가 위치하고 있던 평양에 설치되어, 그 책임자에 까.엠.알베고브 대령이 임명되었다. 각 지역에서 이같은 경무사령부는 소련군사령부에서 파견된 고문단의 통제하에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북한지역에 소비에트 민정청이 설립된 이후에는 그 장관의 직속하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들 고문단은 사령부내 정치부 소속의 장교나 군 정치기관의 전문요원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 사령부내 정치고문기구인 게.엠.발라사노브에 의해 지휘되었다.¹¹⁾

소련군에 의해 북한이 점령된 후 9월 말경에 소련군 최고사령본부는 연해주군관구 군사위원회와 25군 사령부로 북한의 장래와 관련해 중요한 명령서를 하달하게 된다. “침략자들을 일소하기 위해 진주한 붉은군대는 한반도에 소비에트 질서를 도입하거나

8) Освободительная миссия Совет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제2차세계대전에서 해방 사절단인 소련군). M. c.439

9) И.М.Чистяков. Служим отчизне(조국을 위한 봉사). M. 1975. c.302

10) 위수사령부라고도 하는데, 전현수의 해석에 동의함. 위의 논문, 356쪽 참조.

11) СССР и Корея(소련과 조선). M. 1988. c.139

영토획득에 목적이 있지 않다. 북한내 사적 또는 공적 소유물은 소비에트 군사권력의 보호하에 두게 된다.”¹²⁾ 북한에 소련군이 주둔하는 동안에 이같은 소련군 최고사령본부의 명령이 엄격하게 준수되었다고¹³⁾ 일부에서 주장되기도 한다.

해방을 전후해서 전국적으로 인민위원회의 설립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었다. 북한의 경우에 인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각 지역의 권력형태로써 소련군사령부의 승인과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는 행정상의 미숙, 경제 또는 문화 방면에서 지도력 부재, 질서유지를 위한 물리력과 재정의 부족 등으로 해게 모니를 장악하기 곤란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는 자주 소련군사령부에 실무적인 조언과 재정상의 원조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련정부의 정치적인 목적과 관련해서 소련군사령부는 북한주민에게 철저한 일제청산을 전제로 친소 정당조직과 그 정치활동에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알타에서 스탈린이 부즈베타를 만났을 때, 한반도내 후건제 실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유엔 법령이 제정된 이후 제2차세계대전에서 적국으로부터 탈환된 영토에 국제적 후건제(여기서는 신탁통치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필자) 실시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¹⁴⁾ 하지만 그후 소련정치권력의 입장은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는 북한지역만이라도 즉각적으로 독자적인 정치권력을 수립하는 쪽으로 방향전환된 듯하다.

1945년 9월 20일 소련군 최고사령본부는 연해주단관구 군사위원회와 25군사령부에 명령서를 하달하였다. 이 명령서에 자시된 노선에 기초해서 북한내 정당과 사회단체의 폭 넓은 불복을 주축으로 ‘프루쵸야지-민주주의’ 권력형태의 정부수립을 명령하게 되었다.¹⁵⁾ 이리하여 일단 1945년 9월 말에 소련의 대북한 정책에서 노선전환, 즉 한반도내 국제적 후건제의 실시로부터 북한내 독자적인 정치권력의 수립으로 변경되었다. 다시 말해서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상에서 제2차세계대전 종전까지는 국제사회의 여론에 무

12) Отношени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 народной Кореей 1945-1980гг(소련과 조선인민의 관계).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 М. 1981. с.13

13) СССР и Корея М. 1988 с.133

14)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ференциях периода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гг.(위대한 조국전쟁기 국제회의에서 소련) Сб.документов. т.5 М. 1984 с.561

15) АВП РФ(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보관소) Ф.013(문서군 번호) оп.7(소문서군 번호) п.4(문서철 번호) л.11(쪽 번호)

개중심을 두다가, 북한지역 점령이후에 소련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 쪽으로 그 중심이 이동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1945년 9월 20일 소련군최고사령본부의 명령과 관련해, 연해주군관구 군사위원회와 25군 사령부는 북한에서 우선적으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반일적인 정당과 사회단체의 정치블록을 토대로 새로운 중앙정치권력을 확립하려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소련군사령부는 북한내 인민위원회의 조직, 정당과 사회단체의 설립에 깊숙히 개입하게 되었다. 특히 소련군사령부 정치부는 북한내 소련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친소적인 “새로운 민족간부”를 선별하고 양성하는 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¹⁶⁾ 당시에 소련정치권력은 북한내 동구와 유사한 “인민민주주의” 권력의 신속한 수립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1945년 10월 1일 평양에서 북한내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 대표와 공산당 지도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북한내 공산당을 지도하는 조직국(오르그뷰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하부조직임을 선언하였다. 또한 10월 13일에 평양에서 “북조선 공산당대회”가 개최되어 이전의 회의 결정을 확인하고 조직국원 17명을 선출하였다.¹⁷⁾ 평양에 또다른 독립적인 공산당이 건설되는 과정은 한반도의 분할점령에서 야기된 복잡한 상황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실상 당의 중심은 평양 조직국에 위치하고 있었다고¹⁸⁾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련정부의 북한내 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해방후 새로운 국가형성과 관련해 소련의 대북한 정책노선 속에서 분명하게 노정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반도에 대한 오빠까(후견제)의 실시가 결정되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회담이후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로 점령된 지역국가에서 후견제의 실시는 당시 보편적인 추세였고, 강대국 중심의 국제사회 여론도 한국과 같은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국가에서 후견제도의 설치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소련정부의 후견제 문제의 해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자못 다른 것이었다. 삼상회의 의

16) АВР РФ. Ф.013 оп.7 п.4 л.12-13

17) РЦИНДНИ(러시아현대사 문서보관 및 연구센터). Ф.17 оп.128 л.265(문서철 번호) л.195об.

18) 위와 같음

사일정 계획안으로 소련측 대표는 '독립정부수립'의 과제를 제시하게 된다.¹⁹⁾ 소련정부의 대외정책 결정자들은 한국분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시급히 한반도에서 독립국가 수립을 제안하게 되었다. 사실상,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도 한반도내 임시민주정부의 수립과 5년 동안의 4개국 후견제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²⁰⁾ 이리하여, 소련정부는 한편으로 북한내 독자적인 정치권력의 수립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에 후견제도의 실시를 채택함으로써, 그들의 대한반도정책 노선에서 이중성과 모순성을 야기시킨다.

벌써 이 시기에 남북한을 둘러싼 소련과 미국의 정치적 긴장도는 첨예화되고 있었다. 1946년 1월 1일자 소연방 볼셰비키당 중앙위원회에서 발행된 <정보국 회지>를 보면 한반도에서 '냉전' 개전의 상황을 확연히 기술하고 있다. "한국내 양 점령지에서는 사실상 2개의 정제(Режим) - 소련점령지에서는 민주주의적인 인민위원회, 미국점령지에서는 비민주적인 군정청 - 이 확립되었다."²¹⁾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후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후견제 실시의 결정이 대중들의 호응을 얻지 못함으로써, 모스크바 회담의 결과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1946년 3월 20일 서울에서 미소공동위원회 회담이 시작되어, 임시정부 수립에 협조하고 그 수단에 상응하는 준비작업 등을 협의하였다. 4월에 들어 공동위원회는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와의 협의조건과 절차 등에 관한 협의 내용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소련대표인 쉬티꼬브는 이미 소련정부의 지시에 따라 공동위원회에서 삼상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정당, 단체와는 협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공동위원회의 교섭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은 예견되었다.

이 시기에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방면의 통제는 소련군사령부의 수중에 들어 있었고, 인민대중의 일정한 주권이 형성된 지방자치기구에 개입하게 되었다. 인민위원회 실무자들은 조직과 행정 전반에 걸쳐 소련 고분단들과 협조관계를 맺고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 동구유럽 동지에서 성립되고 있던 인민권력기구는 국가별로 구체적인 조건에 근거하지만, 소련자체의 역사 경험을 신중하게 모방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해방된 북한에서 새로운 사회건설이 시작되었고, '외부적 요소'는 소련군 사령부를 통해 국내 상황에 작용하였다.

19) АВР Рф ф 013 оп 7 п 4 л 17

20)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и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документы(소련과 한국분제\분헌) М. 1948. с.6

21) РЦХИДНИ ф 17 оп 128 л 95 л 16

3. 민족간부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과 교과과정

북한지역을 점령한 소련군은 우선 점령지역의 주민생활 안정회복, 주민과의 친선도모, 산업과 농업생산 복구, 일제 청산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시급한 해결과제로 결정하였다. 북한주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문화 방면에 특별한 주의를 집중하였다.

해방이후 북한의 교육분야와 문화영역은 일제 식민지의 잔재를 그대로 안고 있었다. 일제하에서 민족문화는 사실상 일본화를 강요받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고유한 언어에 대한 박해가 그 단적인 실례일 것이다. 한국의 인텔리들은 일본에서 교육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반면에 국내 노동자나 농민들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초-중-고등과정의 교육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다. 물론 교육기관의 책임자들은 대부분 일본인들이었다.

대일전에서 승전하여 북한지역에 진주한 소련군 사령부의 입장에서 이같은 교육분야와 문화방면에 일제잔재의 청산문제는 당면과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소련군 사령부에 의해 제시된 새로운 방안으로 대다수의 근로대중을 위한 모든 교육시설의 개방, 모국어를 통한 단일한 교육프로그램의 도입, 문맹 퇴치운동의 전개, '새로운 민족간부'의 양성, 다양한 민족문화-예술 분야의 부흥 등을 들 수 있다.²²⁾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정치권력의 입장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창립회의 결정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8.민주주의적 개혁에 적응하도록 인민교육제도를 개혁하며 초등, 중등학교를 확장하며 교원양성을 재준비하며 국문교과서를 편성할 것, 9.과거 일본제국주의교육의 노예화사상을 청산하기 위하여 진실한 민주주의적 정신으로 인민을 교양하며 각계층 인민에게 문화계몽사업을 광범히 전개시킬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²³⁾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 북한지역에서 인민위원회와 각 정당, 사회단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조직되었다. 이들 기관이나 단체들에게 원활한 정치-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민족간부들은 필수적이었다. 왜냐하면 이들에 의해서 당시 당면과제였던 사회개혁과 경제부흥도 보장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46년 말에 가서야 북한내

22) АВП РФ. ф.0480 оп.3 д.11 п.4 л.42

23) <북한연구자료집>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47쪽.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북조선의 학교교육제도에 대한 법규>가 기본적인 인민교육체제로써 마련되었다.²⁴⁾ 당시 북한에서는 정규학교 교육을 정비, 강화하는 교육정책보다는 비정규내지는 비제도적 교육기관을 통한 성인정치교육을 강화하는 단기적 교육정책에 비중을 두었다고 한다.²⁵⁾

해방이후 북한에서 경제회복에 필요한 인력이 불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각 분야에서 전문직 요원의 부재가 심각하였다. 이 때문에 북한주민 소련군사령부는 본국으로부터 적지않은 수의 전문가들을 파견하도록 군지휘 계통을 통해 요청하였다.

공산당 지도부는 민족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북한내 각지에 당학교, 정치학교, 양성소 등을 설립하였다. 이들은 공산당, 행정기관, 사회단체 등지에서 종사하게 될 일꾼으로서 양성되었다. 한편, 인해주 군관구 군사위원회에서는 이들 민족간부들을 '민주개혁을 영도하고, 조선에서 소련의 이해관계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²⁶⁾ 이들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을 보면, 불세비키당사, 당건설, 조선사와 민족해방투쟁사, 정치정세, 세계의 정치-경제지리학, 당-정치사업의 경험, 소련, 러시아어 등 정치학습을 중심으로 편성됨으로써 단기간에 선전선동부문의 일꾼들을 연수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우선, 1945년 11월 진남포에 북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의해 1년 과정의 <정치학교>가 설립되었다. 1946년 4월까지 이곳 정치학교에서 50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370명은 보안기관, 50명은 인민위원회, 20명은 공산당 중앙기관, 5명은 철도수송기관, 10명은 청년단체 등에 배치되었다. 이 정치학교는 8개 분과로 구분되어 운영되었다. 4개 분과는 보안기관에 필요한 요원들을 양성했으며, 또다른 4개 분과에서는 공산당, 인민위원회, 사회단체 등지에서 활동할 요원을 교육시켰다. 1946년 6월경에 학생수는 증대되어 1370명에 이르렀다.²⁷⁾

1946년 6월초 설립된 <중앙당학교>는 당 간부양성을 기본업무로 하였다. 초기에는 2개월제로써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도, 강원도 등지에 설립되어 각 지방의 당 간부를 양성하였다.(1948년 말까지 이 학교를 통해 4748명이 배출되었는데, 그들을 사회

24)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наших дней):조선사(고대에서 현재까지) т.2. М. Наук. 1974. с.212

25) 김인희, <한국교육의 역사와 문제> 1994, 159-160쪽

26) АВН РФ Ф.013 оп.7 п.4 л.12

27) РЦХИДНИ. Ф.17 оп.128 л.205 л.70

계층별로 구분해 보면, 노동자 1976, 농민 1397, 부농 29, 사무원 1247, 학생 49, 수공업자 33, 상인 11, 그외 26명이었다) <중앙당학교>에서는 당의 중앙기관에서부터 시,도,군,읍 단위기관에 필요한 간부들을 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출신의 당원들을 상대로 재교육도 실시하였다.²⁸⁾

같은 시기에 <중앙당학교> 이외 평양에 <소비에트학교>가 개설되었다. 1946년 한 해에 두 번 모집으로, 200여명이 입학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소비에트학교>의 수강생들은 대부분 북한의 중앙행정기관, 도, 시, 군 인민위원회, 당 조직, 그외 사회단체 요원들이었다.²⁹⁾ 1947년 초부터 실행된 3차 모집에는 126명이 새롭게 입학하였다. 수강생들을 기관별로 보면, 중앙기관 간부 48명, 도단위 기관 205명, 읍단위 기관 72명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매년 모집 때마다 25명으로 편성된 문화-계몽방면의 요원들이 수강하기도 하였다.³⁰⁾

한편, 소연방볼셰비키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1946년 7월 초부터 평양에 <북조선민족간부양성학교>가 설립되어, 100명 모집에 3개월 과정이 신설되었다. 이 학교의 지도부에는 조선의용군 부사령 출신이며 공산당원인 박효삼을 교장, 고문에 소련군 소령인 이.이.스베레쥬크, 교육주임에 소연방볼셰비키당원인 박영빈이 임명되었다. 또한 소련군 출신으로 소연방볼셰비키당원인 소련계 한인 8명이 교사로 파견되었다.³¹⁾ 행정요원과 수강생에 대한 선발과 지도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전담하였다. 학교운영을 위한 이데올로기 통제는 25군 사령부 정치부의 지휘를 받는 학교 교문인 스베레쥬크에 의해 수행되었다.³²⁾

1차모집때 수강대상으로 170여명이 선발되었으나, 112명이 승인되어 12명이 초과되었다. 재정적인 부담은 전적으로 임시인민위원회에 부과되었다. 정당 소속별로 보면, 112명 가운데 공산당원 64명, 민주당원 7명, 신민당 7명, 청우당 3명, 민주청년동맹 9명, 비당원 22명 등으로 분포되었고, 각 기관별로 구분해 보면, 중앙기관 21명, 도단위 기관 55명, 군단위 기관 36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학력별로는 고등교육 36명, 중등교육 54명,

28) АВР РФ. Ф.0480 оп.4 д.14 п.46 л.298

29) 위와 같음. оп.3 д.11 п.4 л.63-64

30) 위와 같음. оп.3 д.9 п.4 л.38-39

31) РЦХИДНИ Ф.17 оп.128 д.205 л.92

32) ЦАМО РФ(러시아연방 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Ф.397 оп.11034 д.22 л.255

그외 54명으로 분포되었고, 그 중에 14명은 여성이었다.³³⁾

당시 신속한 간부양성을 위해 <양성소>의 형태를 먼 보다 단기과정의 교육프로그램도 개설되었다. 공산당, 민주당, 신민당, 청우당등 각 정당의 중앙과 지방기관 당원들 또는 인민위원회의 중앙, 도, 군에서 활동하던 요원들을 재교육시키기 위해, 자체 단기 과정을 신설하여 50-8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였다.³⁴⁾ 예를 들자면, 북조선공산당은 정치학교 이외에도 2개월 단기과정을 신설하여 당원 80명을 모집하였다.³⁵⁾ 이같은 <양성소>에는 당 중앙기관과 각 지방도시, 도, 군단위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간부 이외에 경제-생산분야에 투입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역할도 주어졌다.

해방적후 북한은 새로운 사회개혁과 국가건설이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지역내 <진남포 정치학교>, <중앙당학교>, <소비에트학교>, <북조선민족간부학교> 등과 단기과정의 <양성소>들이 설립되었다. 이 곳에서는 당시 인민위원회의 중앙과 지방기구, 각 정당과 사회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계획적으로 양성하게 되었다. 이들은 보통 '민족간부'로 명명되던 북한사회내 일종의 새로운 인텔리였다.

다음은 교과과정을 보자. 당시 당면과제였던 북한사회개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던 <진남포 정치학교>의 교과과정을 보면, 총 1550 시간 가운데, 불세비키당사 160 시간, 당건설 600 시간, 조선역사와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 140 시간, 헌정세 150 시간, 세계 정치-경제 지리학 150 시간, 당-정치사업 경험 70 시간, 소련 80 시간, 러시아어 200 시간 등으로 편성되었다.³⁶⁾

<북조선민족간부양성학교>의 교과과정은 25군 사령부내 정치부에서 작성되어 연해주군관구 군사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이같은 교과과정의 작성과 승인은 소연방국방성 총정치국의 교과계획과 명령에 의거하였다.³⁷⁾

연해주군관구 군사위원회 위원인 쉬티코브에 의해 승인된 이 간부양성학교의 교과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사회계급과 국가 20시간, 세계정치요약 16, 조선경제 2, 일제식민

33) РЦХИДНИ. Ф.17 оп.128 д.205 л.92-93

34) АВР РФ. Ф.0480 оп.2 д.7 п.2 л.13

35) РЦХИДНИ. Ф.17 оп.128 д.205 л.70-71

36) 위와 같음. л.70

37) 위와 같음 л.92-93

지의 압제에서 해방된 이후 조선 32, 극동지역에서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주도권 싸움 28, 소련 32, 제2차세계대전과 소련의 대조국전쟁 28, 민주개혁의 경험 20, 대중정치지도 경험 14, 러시아어 32 등으로 편성되었다.³⁸⁾ 이같은 교과과정은 소련계 한인들 교사에 의해 지도되었다.

북조선공산당내 <양성소>의 교과과정은 총 400시간이고, 그 가운데 불세비키당사 116시간, 민주화 도상의 조선 66시간, 당 건설과 당 대중사업 90시간, 조국전쟁에 관한 스탈린의 서적 38시간, 소련 70시간 등으로 편성되었다.³⁹⁾

당시 북한사회에서 민족간부들을 양성하는 사업은 일제시기에 지하활동을 하던 혁명가, 이전에 중국 또는 만주지역에서 활약하던 빨찌산 출신, 당시로 보아 진보적인 사상에 젖어있던 인테리들을 주축으로 전개되었다. 민족간부들가운데 중심축의 역할은 공산주의자들의 몫이었다.

해방직후 북한사회내 민족간부 양성에 요구되던 교사의 충원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 사실상 한계에 놓여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소련내에 거주하던 소련계 한인들의 대거 파견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사실상, 북한 주둔 소련군사령부는 본국으로부터 적지않은 수의 전문가들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였다. 단적인 예로, 1945년 9-11월 사이에 북한으로 소련계 한인 128명이 파견되었다. 그들은 대부분이 소련방불세비키당원 이었다.⁴⁰⁾ 그 후에도 매년 북한으로 소련계 한인들은 순차적으로 파견되었다.

대일전의 승전 결과로 소련군에 의해 점령된 북한지역은 당시 소련군 사령부와 북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권수립이 주도되었다. 이같은 정세하에서 사회개혁과 국가건설의 목표는 소련식의 개혁모델을 유일한 선택의 길로 선전되었다. 당시 북한에서는 사회개혁모델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소련 지향적인 새로운 인테리가 양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38) РЦХИДНИ. Ф.17 оп.128 д.392 л.144-145

39) 위와 같음. оп.128 д.205 л.71

40) 위와 같음. оп.128 д.55 л.5

4. 소련의 대북한 문화정책 기구

1920년대 중반에 모스크바에 설립된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세계 각국의 ‘소련문화친선협회’ 또는 ‘소련문화교류협회’와 관계를 맺어왔다. 처음에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소련문화와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데 외국의 문화교류단체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의 대외적 영향력의 확대와 관련해서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그들의 활동을 훨씬 강화하게 되었다. 1940년에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와 교류관계를 맺고있던 국가는 6개국에 머물렀지만, 1945년에 42개국, 1946년 52개국으로 확장되었다.⁴¹⁾ 종전이후 소련의 대외문화정책은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활동강화와 관련해서, 세계 각국의 관련단체와도 수직적인 관계를 지향하게 되었다.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활동은 소연방 외부성에 의해 승인되는 연간계획에 근거해서 전개되고 있었다.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지위상으로 소연방 외부성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협회의 실행사업과 그 활동에서 직접적으로 지시받거나 또는 사안별로 협조체제를 이루었다. 반면에 협회는 재정, 물자수급, 전문요원과 직원의 선발 등과 같은 부문에서 일정하게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였다.⁴²⁾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소연방 외부성의 하부기관으로써 그 외곽에 위치하면서 소련정부의 대외문화정책을 지원 하는 대외정책기관의 하나였다.

일반적으로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활동은 소련사회, 그 사회보장제도, 소비에트 문화 등을 대외적으로 선전선동하고, 반소비에트 이데올로기에 투쟁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1947년도 활동 보고서를 보면, 협회장인 케메노브는 “대외적으로 우리의 문화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현재의 조건을 이용할 때, 제기된 문제들의 긍정적인 해결이 가능하며, 소련정부의 국제적인 권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하게 될 것”⁴³⁾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지도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같은 과제해결을 위해 모스크

41) РЦХИДНИ. Ф.17 оп.128 л.463 л.35

42) 위와 같음. Ф.17 оп.128 л.463 л.31

43) 위와 같음. Ф.17 оп.125 л.371 л.144об

바에 소재한 협회본부의 조직보강과 세계 각국으로 숙련된 요원의 파견 등을 제안하였다.⁴⁴⁾ 협회 지도부 측에서 중앙기관의 직원수를 800-1200여명까지 증원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판단했지만, 1946년 9월까지 280명을 넘지 못하였다. 1947년 1월경에도 직원수는 285명에 머물렀다. 이들 요원은 볼셰비키당원과 후보당원 76명, 공산청년동맹원 36명, 비당원 173명으로 구성되었고, 여자 172명, 남자 113명으로 구성되었다.⁴⁵⁾

중전 첫해에 소련에서 경제계획 실행에 따른 노동력 동원사업과 함께 이데올로기 통제강화는 정부의 중요과제로 제기되었다. 중앙 정부의 각 부처에서 활동하고 있던 행정관료와 소속 직원들은 모스크바에 소재한 최고당학교에 개설된 연수과정에 의무적으로 입학해야만 했다. 연수과정의 기간은 3년간이었고, 학과 강의는 3개의 학부, 즉 당간부를 위한 학부, 정부의 행정관료를 위한 학부, 언론계 요원을 위한 학부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2년 교육기간의 또다른 당학교가 각 지방에 설립되었다. 또한 독립적인 사회과학원을 설립하여 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선전선동국에서 관할하는 이데올로기 사업에 필요한 간부들을 양성하기도 하였다.⁴⁶⁾

1946년 여름 스탈린 정부는 자유로운 지적 창작활동에 대한 억압정책을 가중시켰다. 이같은 창작활동은 “외국의 영향”, “서구의 퇴폐”, “형이상학적인 경향”, “반러시아 분열주의”, “소시민적인 개인주의”, “예술을 위한 예술” 등의 꼬리표를 매달아 탄압대상으로 삼았다. 이데올로기 통제정책은 당시 이데올로그인 즈나노프에 의해 전적으로 전담되었고, 이 때문에 그 희생자들에게 “즈나노프쉬나”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다.⁴⁷⁾ 이러한 독재정책은 전체적으로 사회, 문화, 예술 영역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 방향성은 당시 소련정치권력의 성격문제와 직접 관련된다. 결국, 당시 상황속에서 스탈린의 선택은 과학-연구분야와 문화-예술분야의 전망을 철저히 제거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46년 초부터 북한으로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에 의해서 문학서적과 대중잡지 또는 사진자료 등이 정기적으로 발송되었다. 이같은 서적과 자료들은 우선 소련군사령부 정치부 또는 한국문제정치고문관실로 우송되었다. 여기서 조소문화협회로 전달된 서적

44) 위와 같음. Ф.17 оп.125 л.371 л.145

45) РЦХИДНИ Ф.17 оп.125 л.463 л.30-31

46) Партийная жизнь(당 생활) No.1 1946. с.53-58

47) Н.Верт. История Сове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소련국가 역사). М. 1994. с.342

이나 자료들은 간행물이나 선전자료로 활용되었다. 예로, 1946년 3월 협회는 “소련농업 경제의 조직”, “레닌과 스탈린 - 소비에트국가의 조직가”, “변증법적 유물론” 등이 책자로 간행되었고, 4월에는 “레닌의 생애와 활동”, “소련에서 소비에트 문화의 발전” 등 15 종류의 팜프렛 출판을 준비하였다. 5월에 조소문화협회는 “조국에 복무하는 소련과학” “5개년계획에서 농업발전” 등 26종류의 논문을 한국어로 번역할 계획을 수립하였다.⁴⁸⁾

그 당시 조소문화협회는 독립적인 인쇄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타기관의 인쇄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협회 지도부는 인민위원회내 별도의 출판기구 설립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당시에 북한에서 소련 고전문학작품의 보급을 위해 “국제서적”협회의 전권대표가 파견되어 있었다.⁴⁹⁾ 그밖에 북한에서 소련 서적과 간행물의 번역과 출판, 보급 등과 관련해 “외국문학 출판부”와 “소비에트 정보국”이 활동하고 있었다.

북한에서 소련으로부터 발송된 자료들 가운데 번역되지 않은 것들은 주로 소련군 사령부 정치부, 조선신문 편집국, 조소문화협회 등지에서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이들 자료 가운데는 “국가와 혁명”, “공산주의 소아병”, “소련의 위대한 조국전쟁에 관하여”, “마르크스주의와 민족-식민주의 문제”, “변증법과 역사유물론에 관하여”, “레닌주의 원칙에 관하여”, “헌법안에 대한 보고”, “1946년 2월 9일 연설” 등 레닌과 스탈린의 저작들도 포함되어 있었다.⁵⁰⁾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부에서 이같은 자료들은 민족간부들과 선전원들의 이데올로기 학습을 위한 선전선동 사업에 활용되었다.

이 시기에 북한에서 이데올로기 사업에 필요한 선전선동간부들이 양성되고 있었으며, 이들을 구심점으로해서 정치-교육사업과 문화-교양사업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25군 정치부 간부들은 선전선동사업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불충분한 요소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가운데 정치적 캠페인을 통해서 선동사업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는 있었으나, 그 내용이 상당히 피상적이고 깊이가 없다는 단점을 지적하였다. 그 원인은 한편으로 사회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과학 출판물이 아직 전량 부족하고, 다른 한편으로 선전선동간부들이 이론학습상의 취약성 등으로 해석되고

48) ГА РФ ф 5283 оп 18 д 212 л 44

49) РЦИДНН Ф 17 оп 128 л 54 л 29

50) 위와 같음. Ф.17 оп.128 д.392 л.111

있다.⁵¹⁾

한편 소연방 외국문학 출판부는 세계 각처에서 소련 서적과 정기간행물을 선전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북한에서 이같은 외국문학 출판부의 원조는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또한 모스크바에 소재한 외국문학 출판부는 당 지도부에 북한내 25군 정치부의 소련계 한인과 민족간부 학교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러시아어에 능숙한 교사들이 협력하여 긴급히 필요한 교재를 발행하도록 제안하였다.⁵²⁾

1946년 6월 6일 외국문학 출판부내 한국어 편집부 소속인 엠.김과 엔.김은 <한국어 편집부 활동강화 수단을 위한 보고서>를 소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들은 보고서에서 지적하기를, “한국에서 조성되고 있는 상황은 이데올로기 투쟁의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조선공산당은 이같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들 가운데 이론적으로 교양된 간부들이 충분하지 못하며, 활동 중인 자들도 경험상 미숙성을 드러내고 있다.”⁵³⁾ 또한 보고서 작성자들은 불세비키당 소속의 한인들이 조선공산당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다.⁵⁴⁾ 특히 필요한 간행물을 한국어로 번역-출판하는 사업에 주목하였다.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팜프렛 또는 이념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하도록 제안되었다: 1)조선과 러시아의 과거와 현재 2)조선에서 농업문제 3)사회주의와 민족문제(러시아에서 민족문제 해결의 경험) 4)조선해방과 민족 부활의 길 5)소련에 관한 진실 - 조선의 위대한 이웃 6)레닌의 농업이론과 러시아에서 농업농민 문제해결의 소비에트 방식 7)스탈린 - 전세계 노동자의 벗이자 스승 8)조선의 국가형성과 일제 청산.⁵⁵⁾

1946년 6월 말에 위의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외국 출판부 대표 엘.베.야꼬블레프, “혁명의 불꽃”출판국 부국장 아.이.미슈스핀, 베.게.사빠지니꼬브 소장, 페.에프.슈미꼬브 중장 등이 참석한 회의가 소집되었다.⁵⁶⁾ 이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논의 확정되었다.

51) 위와 같음. ф.17 по.128 д.392 л112

52) 위와 같음. ф.17 оп.128 д.54 л.43-44

53) 위와 같음. ф.17 оп.128 д.205 л.64

54) 위와 같음. ф.17 оп.128 д.205 л.64

55) 위와 같음. ф.17 оп.128 д.205 л.64-65

56) 위와 같음. ф.17 оп.128 д.205 л.66

첫째, 소연방 외국문학 출판부내 한국어 편집부에 소련 또는 북한에 거주하는 한인으로서 전문적인 기능을 보유한 직원 5명을 보충시키고, 모스크바에서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한다. 둘째, 한국어 출판부의 활동사업에서 창작 서적 및 소책자의 간행 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서적의 번역 출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시한다. 셋째, 외국문학 출판부 대표 야코블레프에게 지시하여, 노동적군 총정치국(국방성 총정치국: 별자)의 주관하에 북한내에 통역관과 인쇄시설 등을 활용해서 독자적인 번역출판부를 조직한다.⁵⁷⁾

엠.김과 엔.김이 제안한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 쉬띠코브는 우선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개급이론서를 번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결국, 외국문학 출판부를 통한 이념서적의 한국어 번역사업은 당 중앙위원회 선동선전국에 의해 승인되었다.⁵⁸⁾ 회의의 결과로 모스크바에 소재한 외국문학 출판부를 통해 아래와 같이 한국어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서적을 간행하기로 결정되었다. 당시 외국문학 출판부내 한국어 편집부는 8명 직원으로 구성되어, 80여 종류의 서적과 소책자 등을 선별, 번역, 교정, 조판, 인쇄하는데 종사하였다.⁵⁹⁾

1946년도 외국문학 출판부 한국어 편집국 사업계획⁶⁰⁾

지 자	제 목	수 량	출판연도
레 닌	자본주의 최고단계로써 제국주의	10	1946
레 닌	국가와 혁명	10	1946
레 닌	불세비키 요약사	28	1947
스탈린	레닌주의 원칙과 레닌주의 문제에 대하여	10	1946
스탈린	레닌주의 문제들	50	1947
스탈린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	6	1946
스탈린	소련의 위대한 조국전쟁에 대하여	11	1946
스탈린	1946년 2월 9일 선거 연설	13	1946
스탈린	소연방 헌법 계획안 보고서와 그 헌법	35	1946

57) 위와 같음. Ф.17 оп.128 л.205 л.67

58) 위와 같음. Ф.17 оп.128 л.205 л.69

59) 위와 같음. л.66

60) 위와 같음. л.68

5. 조소문화협회와 소련문화원의 설립과 소연방대의 문화 교류협회

5.1 조소문화협회의 설립과 발전

소련군 사령부의 과제 가운데 북한 주민들에 대한 대중정치문화사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예를 들자면, 회령에서 소련군사령부 군공연단의 주관으로 음악회와 영화 상영이 있었다. 1945년 9월 한 달만해도 영화 12편, 음악회 8회 등이 상영개최되었다. 또한 공산당 지도자와 그 당원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해서 ‘우리의 해방군인 소련군’, ‘국제정세’, ‘소련’ 등을 주제로 한 강연회, 보고회를 실시하였다.⁶¹⁾

종전후 평상시 생활로 복귀함에 따라, 소련군 병사와 북한주민간의 친선·우호관계는 정치사업과 대중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전개되었다. 1945년 9월 평양에 “붉은군대 친선 위원회”가 조직되었다.⁶²⁾ 이 위원회는 학자, 교사, 예술가, 법률가, 종교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은 교장출신의 지영은(?)(비당원), 부위원장은 김원경(당원)이 선출되었다. 위원회의 설립목적은 대중의 정서에서 일체의 청산, 새로운 민주주의 문화의 확립, 소련인의 생활탐구, 북한과 소련의 친선강화에 두고 있었다.⁶³⁾ 얼마 뒤 이 위원회는 “붉은군대 우정협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지도부의 견해에 의하면, 이 당시 “붉은군대 우정협회”는 그 회원을 선발하는데 심각한 오류를 범하였다고 한다. 이 협회의 회원 일부는 사리사욕을 추종하는 무리들이고, 협회에 가입함으로써 정치적인 기득권과 물질적인 부를 획득하려고 했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협회를 통해 친소경향을 확대시키고 대중조직화하려는 목표는 달성될 수 없었다. 따라서 협회회원 가운데 일부가 제명되었다.⁶⁴⁾

결국, 1945년 11월 12일 평양에 “朝蘇文化協會”가 발족되었다. “이 날 소련군대표로 쿠세프중좌, 김일성장군, 조선민주당대표 오영진씨, 조선공산당평남도위원회대표 윤창섭동무, 중국인대표가 참석하여 동회의 발전을 축복하는 축사가 있었다.”⁶⁵⁾ 본 협의의

61) Освободительная миссия на Востоке(동방에서 해방 사절단). М. 1976 с 200

62) РЦХИДНИ ф 17 оп 128 л 86 л 49

63) 위와 같음. ф 17 оп 128 л 47 л 21

64) 위와 같음. ф 17 оп 128 л 86 л 49

발기총회가 열려 경과보고와 취지문이 낭독되었고, 강령과 규약이 심의 결정되었다. 또한 위원 25명, 감사 3명 참여 13명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황갑영 부위원장에 김봉철이 추대되었다. 조소문화협회의 사업목표는 우리문화로부터 일본제국주의 잔재를 일소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문화를 창건하며, 조선문화와 전세계 각국 특히 소련문화를 연구하여 상호교류 힘을 '일대기치'로 표방하였다.⁶⁶⁾

한편, 북한내 소련의 영향력은 대중정치사업, 친소우호 단체조직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를 통한 '방조'에서도 현저하였다. 1945년 9월 18일 소연방불세비키당 중앙위원회는 연해주군관구 정치부 주도로 평양에서 북한주민들을 위한 조선어 신문 "조선신문"을 발간하도록 결정하였다.⁶⁷⁾ 이에 연해주군관구 정치부의 결정에 따라 편집국의 조직과 인쇄시설 등이 준비되었다. 사실상, "조선신문"은 25군 정치부에서 발간되었다.⁶⁸⁾ 북한 주민들에게 보급된 조선신문을 통해 소련의 상황, 소련인들의 생활과 당활동, 소련군대의 업적 등이 널리 선전선동될 수 있었다. 당시에 북한에서 소련군사령부 통제하에 "정료", "평양인민보"등 12 종류의 일간신문들이 간행되고 있었다.⁶⁹⁾

조소문화협회의 중요한 활동은 북한내 일본 제국주의 문화를 청산하고, 소련의 문화과학방면에서 달성을 대중선전하여 문화 저변에서 소련-북한간의 상호교류를 확대시키는데 집중되었다. 창립 당시부터 조소문화협회 활동의 정치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두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의 자주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족문화를 부활시키야 하는데, 이 민족문화는 다른국가 문화의 비판적인 토대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이야말로 인제의 잔재를 일소할 수 있는 길이다. 따라서 조선문화와 소련문화의 교류의 필연성을 깊이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⁷⁰⁾ 또한 조소문화협회 강령에서도, "一. 우리는 소련문화의 적극적 섭취와 조소문화의 교류를 기함; 二. 우리는 조선인민과 소련인민과의 상호친선을 기함; 三. 우리는 봉건적 제국주의적 팻쇼적 구학을 불소하고 진보적 세계문화를 섭취해야"⁷¹⁾ 라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소련문화의 적극적 섭취

65) <정료> 1945년 11월 14일

66) 위와 같음.

67) РЦХДНИ Ф.17 оп 125 д.426 л 1

68) 위와 같음. Ф 17 оп 125 л 355 л 67

69) 위와 같음. Ф 17 оп 125 л 315 л 68

70) 위와 같음. Ф 17 оп 128 д 86 л 50

라는 대목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조소문화협회 규약에 따르면, 총회에는 전체대회와 중앙위원회 간부회의가 있으며, 이 간부회의에서 주로 사업계획과 보고업무, 예산지출, 전체대회 개최준비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집행기관으로써 조소문화협회 중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부장, 15명의 중앙위원회 회원, 감사위원회으로 편성되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중앙위원회 간부회의에서 선출되었으며, 중앙위원회 위원들은 각 지역의 협회대표들 가운데 선출되었다. 중앙위원의 임기는 2년이였다.⁷²⁾ 뿐만 아니라, 1946년 초부터 협회는 몇몇의 고문들을 두게 되었는데, 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일성을 비롯해 선전선동부부장 허정숙 등이 협회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⁷³⁾ 조소문화협회는 총무과, 조직부, 문화부, 선전부, 대외교섭부 경리부 등 6부로 구성되었다.⁷⁴⁾

초창기 조소문화협회는 몇차례에 걸쳐 그 지도부가 교체되는 것으로 보는데, 조직상으로 안정화 되지 못했던 것 같다. 당시에 협회 사무실 조차도 고정적이지 못하여 몇차례에 걸쳐 옮겨 다닐 처지였다. <조소문화협회 활동보고서>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직상의 혼란이 계속되어, 대지주 출신의 황갑영을 필두로 지주와 기업가등 초창기 협회 중앙본부의 멤버 가운데 일부는 체포되었고, 또다른 일부는 남쪽으로 도피하였다. 그후 협회 중앙위원회 구성원은 새롭게 개편되어 김두봉이 지휘권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김두봉은 또다른 조직사업 때문에 협회활동을 곧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⁷⁵⁾ 김두봉의 이같은 단기간의 재임은 시기적으로 보아 신당 창당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어서 1946년 봄부터 협회사업은 위원장 이기영과 부위원장 한설야에 의해 지도되었다.

이같은 협회 지도부의 정비를 통해, 조소문화협회는 그 사업을 중앙조직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조직까지 확대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동시에 선전선동사업의 대중화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기관지 “조소문화”를 발간함으로써, 한층 발전된 조직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71) <조소문화>. 창간호 1946 1쪽

72) РЦХИДНИ ф 17 оп 128 д 86 л 50

73) РЦХИДНИ ф 17 оп 128 д 86 л 54

74) РЦХИДНИ ф 17 оп 128 д 86 л 52

75) ГА РФ ф 5283 оп 18 д 212 л 51

1946년 봄부터 북한으로 소련방대외문화교류협회에 의해서 서적, 잡지, 포스터, 사진 등의 선전선동물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보내졌다. 1946년 6월에는 평양 함흥 신의주 등지에서 사진 전람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평양 전람회의 경우에 한 달정도의 전시 기간 동안에 약 150,000 명의 관람자들이 다녀 갔다.⁷⁶⁾

조소문화협회는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에 강연회를 개최하여, 불세비키 당역사 등을 포함하는 소련과 관련된 주요 주제들을 선별하여 강연회를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어 단기과정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 달에 2회 정도 북한내 문화예술방면의 활동가들과 소련에서 파견된 전문가들과 면담할 기회를 주선했다.⁷⁷⁾

1946년 7월 당시 조소문화협회의 전체 회원수는 약 5000여명 정도였고, 그 가운데 평양시에 300여명이 집중되어 있었다. 협회 회원들의 사회계층별 분포는 다양한 양상을 보여 주는데, 지주, 기업가, 인테리, 문화계 인사들, 노동자, 농민 등으로 구성되었다. 협회의 영향력은 점진적으로 군단위 소도시까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특히 협회는 인테리층과 청년학생층으로부터 주목받는 단체였다.⁷⁸⁾

당시에 협회의 영향력이 지방 도시까지 확장되어, 지방 각 도시에도 협회의 지부들이 설립되는 상태이었다. 예를 들자면, 함흥, 신의주, 사리원, 선천, 철원, 해주, 진남포, 강계, 정주 등지에 그 지부가 조직되었다. 이 가운데 선천지부는 7월 초에 신설된 경우이다.⁷⁹⁾ 지방 각 협회지부는 조직 편제상 평양의 중앙본부와 유사했지만, 그 구성원이 5-6명을 초과하지 않았다. 소도시 지부의 경우에는 단지 지부장과 비서만으로 조직되기도 하였다.⁸⁰⁾

조소문화협회의 재정기반은 회원비와 주민들의 기부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협회 회원비는 한 달에 5원이었다. 1946년 7월 현재 조소문화협회의 재정상태는 대부분 이전에 “붉은근대 친선협회”에서 이월된 약 200,000원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협회 위원장이 기영의 견해에 따르면,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협회 활동을 위해 간신히 현상유지를

76) РЦХИДНИ Ф.17 оп.128 л.86 л.49

77) ГА РФ. Ф.5283 оп.18 л.213 л.1

78) РЦХИДНИ. Ф.17 оп.128 л.86 л.52

79) <조선신문> 1946. 7. 17

80) РЦХИДНИ Ф.17 оп.128 л.86 л.52

할 정도였다.⁸¹⁾ 결국, 조소문화협회는 재정상의 곤란을 겪게 되었고, 물적 지원이 필요하였다.

이리하여 1945년 11월에 조소문화협회는 외형적으로 일제 청산 또는 북한과 소련의 문화교류와 양자간 친선유대를 위해 설립되었다. 협회의 설립과 조직확대의 과정에서 북한주둔 소련군 사령부와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5.2 조소문화협회와 소연방 대외문화교류협회의 관계

당시 소련정부는 대북한 정책에서 그들의 영향력 확대와 강화를 한층 고조시키는 시기였다. 소연방 대외문화교류협회는 문화영역에서 양자간의 교류증대를 통해 그같은 정책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내부에서도 대외적인 문화교류의 필요성과 요구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자면, 1945년 말경 젊은 배우인 마황원이 소연방 대외문화교류협회 영화과 과장 알렉산드르 타이로프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의 무대예술은 보잘 것 없이 부족합니다. 저주받을 일제통치 이후, 사실상 우리가 보고 알기 원하는 위대한 작품들을 아직 구경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혁명 이전 시기의 예술작품들을 알고 있는데, 하루 빨리 당신들의 위대한 예술작품을 조선의 극장에서 관람하기를 고대합니다”⁸²⁾ 라고 쓰고 있다.

1946년 3월 6일자 소연방 대외문화교류협회 영화과 타이로프는 답신에서, “중요과제는 창작경험의 교류이며, 특히 우리의 힘과 가능성을 수단으로 당신들에게 무언가 유익하다면 다행스러울 것이다”⁸³⁾라고 긍정적인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외에도 영화활동가 주인규, 오영진과 시인 양명문 등이 각각 소연방 대외문화교류협회의 영화분과 위원회와 문학분과 위원회 책임자들과 직접 서신교환을 통해서 북한내 예술문학방면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문화교류를 요청하였다. 그 가운데 주인규의 서신에 대해서 소연방 대외문화교류협회 영화분과위원회 대표인 뿌도브किन은 답변하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활동에 관한 다음과 같은 보고를 정기적으로 전달받기를 바랍니다: 현재 어떠한 영화기

81) 위와 같음. Ф.17 оп.128 д.86 л.53

82) ГА РФ Ф 5283 оп 18 д 210 л 92

83) 위와 같음. Ф 5283 оп 18 д 210 л 82

술자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어떠한 주제의 영화가 있는지?; 현재 작품가운데 대본이나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보낼 수 있는지? 또한 우리는 조선에서 소련영화의 대여, 조선인 관람자들은 어떠한 영화를 재미있어 하고, 어떤 영화에 관심이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⁸⁴⁾라고 하였다. 북한에서 새로운 사회의 건설과 관련해서 예술문화방면의 활동가들이 소연방 대외문화교류협회에 지원을 요청하게 됨으로써, 소련측 입장에서는 북한내 문화영역에 원조를 계획하였으며, 이로써 소련 문화 또는 러시아 고전문화를 전파시킬 계기를 마련하였다.

마침내, 1946년 6월 조소문화협회는 공식적으로 소연방 대외문화교류협회와 관계를 맺게 되었다. 최초로 조소문화협회 위원장 이기영의 명의로 발송된 5월 초 서신에 대한 답신이 도착하였다. 양 협회측 서신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양자간의 문화교류관계는 표면화되었다.

소연방 대외문화교류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인 엘.데.끼슬로바는 서신을 통해 언급하기를, “우리는 북한의 모든 문화생활, 당신의 조소문화협회 조직과 그 활동 등에 관해 자세한 정보를 우리 협회측에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당신들의 요구에 대해 우리측에서 가능한 한도내에서 원조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영광일 것이다.”⁸⁵⁾

끼슬로바는 서신을 통해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내에 조직되어 있던 분과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주었다. 이 분과위원회의 회원들은 소련의 과학과 문화 영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로서 구성되었고, 분과위원회 활동목표는 소련의 과학과 문화계 인사들과 그 방면의 세계 각국 인사들간의 학술문화교류, 소련인민과 다른국가 인민의 문화교류 확대 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었다.

또한 그녀는, “이같이 양 단체의 공식적인 서신교환으로 말미암아 소련인민과 북한인민간에 긴밀한 문화관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⁸⁶⁾ 이리하여, 조소문화협회와 소연방 대외문화교류협회의 관계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도달했으며, 그 활동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었다.

1946년 최초로 조소문화협회와 소연방 대외문화교류협회의 공식적인 서신교환이 이

84) 위와 같음. Ф 5283 оп 18 л 210 л 64

85) ГА РФ Ф 5283 оп 18 л 210 л 54

86) 위와 같음. Ф.5283 оп.18 л.210 л.54

루어진 뒤에 양 협회의 교류는 한층 활기를 띠게 되었다. 사실상, 이전까지는 북한주둔 소련군사령부내 정치담당부서를 통해 양 협회간 교류관계가 유지되어 왔었다. 북한에서 소연방 대외문화교류협회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무엇보다도 조소문화협회의 위상이 상승되었다.

1946년 초부터 소연방 대외문화교류협회는 북한으로 서적, 잡지, 사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발송하기 시작하였다. 발송된 책자와 자료들은 소련군사령부 정치담당부서, 즉 한국문제 정치고문기구로 보내지기도 했지만, 공식관계 이후 직접 조소문화협회로 발송되기도 하였다. 대체적으로 이들 자료들은 조소문화협회를 통해 북한내 문화예술방면의 활동가들 또는 일반대중을 상대로 활용되었다.

5.3 북한에 소련문화원의 설립계획

해방직후 그간 일제에 의해 억제되고 금지되어 왔던 외부세계와의 교류관계가 재개됨으로써, 우선 북한과 소련은 다양한 측면에서 교류 공간을 개방하였다.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북한내 평양, 함흥, 원산에 소련문화원을 설립하고 영화상영과 전람회 개최 등의 활동에 필수적인 전문요원들을 파견할 계획이었다.

1946년 1월 27일 소연방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북한지역내 평양, 함흥, 원산에 문화원 개관을 계획하게 되었다.⁸⁷⁾ 이 결정안 실행을 위해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측에서 부담하게 될 비용과 시설장비 등에 관한 예산이 책정되었다.

1947년 7월말 소련정부의 북한내 소련문화원 설립을 위한 예산지출이 책정됨에 따라,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극동국은 북한에 문화원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소련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1947년 8월 14일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중앙위원회 주재로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에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중앙위원회 위원들인 극동국장 에로페예브, 보고담당자 쿠르라에바, 베제제에바, 경리부

87) 위와 같음. оп.23 л.8 л.55

장 마카르레브, 출판국장 바긴, 음악국장 다니코, 사무국장 바슈힌 등이 참석하였다.⁸⁸⁾ 북한에 문화원을 시급히 개관하기 위해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지도부는 하부 부서인 사무국, 소비에트문화국, 출판국, 음악국, 전람회국, 경리국 등에 필요한 물자와 자재, 자료, 자금 지원을 계획하여 지시하였다.⁸⁹⁾

1947년 8월 17일 극동국의 주재하에 회의가 소집되었다. 극동국 국장에 의해 사업 활동의 필수적인 수단과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내 각 부서간 사업 범위의 조정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지도부는 북한내 소련문화원 설립 사업에 모든 부서가 적극적으로 가담하도록 지시하였다.⁹⁰⁾ 특히, 극동국에서 모든 조직사업을 총괄하도록 결정하였다. 소비에트 문화국은 조각상, 초상화, 소품 등의 재료준비에 관계하게 되었으며, 출판국은 필요한 서적을 수집하고, 경리부는 그 문화원 직원의 급여문제를 심의하고, 인사국은 직원 선발에 착수, 사무국에서는 물자수송 등 그 밖의 부수적인 모든 문제를 담당하였다. 이같이 필요한 물자들의 청구서는 소연방각료회의에 이미 제출되었고, 당 지도부와 대외 무역성으로부터 북한으로의 수송을 인가받았다.⁹¹⁾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요청에 의해서, 소연방각료회의 영화위원회는 고정식 영사기 3대, 휴대용 3대, 가느다란 필립식 휴대용 1대를 할당하였고, 소련영화수출공사는 북한내 자신의 대표에게 지시하여 상업적으로 영화를 대여하기 이전에 모든 영화필름을 소련문화원에 제공하도록 하였다.⁹²⁾ 그 후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지도부에 의해 지시된 소련문화원의 설립 계획안의 추진과정을 검토할 목적으로 제차 간부회의가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그 실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한 점들이 지적되어, 발가피한 방안과 조치가 지시되었다.

88) 위와 같음. ㄱ.97

89) 위와 같음.

90) 위와 같음. ㄱ.55

91) 위와 같음. ㄱ.56

92) 위와 같음. ㄱ.57

북한내 소련문화원 설립을 위해 소련방각료회의에 청구된 장비와 자재 목록⁹³⁾

장비 및 자재	수 량
양탄자	30개
복도용 깔개	800 m
깔개용 천	200 m
면직물	600 m
식탁보	300 개
견직물	300 m
견직물 레프스	200 m
실내장식재료 "Макег"	1500 m
라디오 유선 방송장치	3 대
무선라디오 수신기	15 대
라디오겸용 전기축음기 "Москва "	5 대
확성기 "Рекорд"	30 대
타자기(러시아어 자판용)	5 대
타자기(라틴어 자판용)	3 대
오토바이	4 대
피아노	4 대
심포니 오케스트라용 악기들	1 세트
현악 오케스트라용 악기들	3 세트
대형 손풍금	6 대
아코디온	3 대
축음기	10 대
당구대	5 대
고정식 영사기	8 대
휴대용 영사기	4 대
가느다란 필립 휴대용 영사기	2 대
마크의 사진기	6 대
실내용 사진기	3 대
가구	200,000 루블

93) 위와 같음. п.60

5.4 북한에 소연방 대외문화교류협회 대표의 파견

1947년 10월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북한에 소련문화원을 설립하는데 실무^{*}작업을 전달하게 될 협회의 대표 베.아.베로브를 파견하였다. 우선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대표는 평양, 함흥, 원산 등지에서 소련문화원 건물부지를 물색하였다.⁹⁴⁾

그런데 이 시기에 북한에서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대표의 활동이 원만하지만은 않았다. 일찍이 1947년 초부터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전권대표로서 소련군사령부 한국문제 정치고문실 보좌관인 프레더마일로가 임명되어 협회의 북한내 사업활동을 통제해 왔었다. 그러던 중에, 10월에 모스크바로부터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대표 베로브가 파견됨에 따라 명령개통에 혼선을 빚게 되었다. 10월 말에 베로브는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극동국장 에로페예브에게 송부한 문서에서, 1947년 초에 25군 정보부에 일곱 번째 영사기가 문화원에서 사용될 용도로 전달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에 의하면 “나는(베로브) 무엇이 언제 발송되었는지에 관한 그 어떠한 서류도 없다고”⁹⁵⁾ 지적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에로페예브는 베로브에게 보낸 답장에서, 1946년에 북한내 문화원에서 사용될 고정식 영사기 6대가 발송되었으며, 임시로 조소문화협회에서 영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시되었음을 밝히고 있다.⁹⁶⁾ 그러나 사실상 베로브의 문서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모스크바로부터 고정식 6대와 이동식 영사기 1대가 전달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동식 6대만이 전달되었다. 또한 이 가운데 4대만이 조소문화협회에 전달되었을 뿐이다. 결국, 모스크바 중앙본부와 북한지역 사이의 업무수행의 불일치와 그 과정에서 착오 또는 부조리의 가능성을 엿보게 된다. 북한내 소련문화원 설립과정에서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지원체계의 미비점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지도부는 대표의 파견 이후에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것을 예견이라도 했듯이,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사령부내 유관기관의 협력을 요청하는 공식문서를 발송하게 된다. 1947년 10월 30일자 소련군사령부 한국문제정치고문실장 발

94) 위와 같음. ㄱ.18 ㄷ.216 ㄹ.19

95) 위와 같음. ㄷ.219 ㄹ.20

96) 위와 같음. ㄷ.212 ㄹ.96

라사노브에게 보낸 문서에서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위원장 케메노브는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하였다. “평양, 함흥, 원산 등지 문화원 설립을 목적으로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중앙위원회는 북한으로 그 책임자를 파견하게 되었다. 극히 단시일 내에 그 문화원 설립을 조직해야함을 고려해서 베로브에게 그 과제 수행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이고 실질적인 원조와 협력이 있기를 바랍니다.”⁹⁷⁾ 또한 북한내 소련군사령부 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는 문서가 당시 실력자인 쉬티코브에게도 발송되었다.⁹⁸⁾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지도부가 북한내 문화원 개관을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추진은 지체될 수 밖에 없었다.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중앙위원회는 10월혁명 30주년 기념일까지 평양 소련문화원을 개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같은 단기간의 개관은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지도부는 북한의 새로운 대표에게 다양한 과제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자면, 문화원에서 사용될 물자를 어떠한 통로로 전송해야하며, 누구 앞으로 배달되어야하며, 어떠한 세관수속이 필요하며, 물자수송에 얼마만한 기간이 필요한지 등의 정보를 전보통신을 통해 긴급히 모스크바로 전달하도록 명령했고, 북한내에 그 문화원 개관의 준비과정, 즉 건물부지 선별, 설비시설, 직원 선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공식적인 전권대표에게 이 협회에서 제공된 자재, 물자 등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정기간행물, 자재와 물자 등의 입수일자를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하달되었다.⁹⁹⁾

5.5 소연방 대외문화교류협회의 물적·인적 지원

사실상, 소련문화원 설립을 위한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구체적인 활동은 소련 정부의 북한내 문화원 설립을 결정한지 1년반이상 지난 1947년 말에야 시작되었다. 우선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다량의 선전자료를 수집하여 발송하였다. 북한에 소

97) 위와 같음. оп.23 д.8 л.90

98) 위와 같음. л.91

99) 위와 같음. л.82

련문화원 기관과 관련해서, 서적 또는 정기간행물, 전시회 자료 등이 블라지보스토크를 통해 북한으로 급증하였다. 이때 보통 한 달에 2-3톤의 수송물이 운송되었다.¹⁰⁰⁾ 예를 들자면, 1947년 11월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전람회국은 소련공산당 정치국원 사진(35×50) 10쌍, 레닌과 스탈린의 초상화 10종류 2장씩과 “30년간의 소비에트 국가” 전람회 자료를 준비 발송하였다.¹⁰¹⁾ 1947년 12월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극동국은 “맹세”, “1918년에 레닌”, “체육행렬”, “돌짓”, “투시노의 행렬”, “5주년” 등 일련의 영화필름과 “스탈린 일대기”, “스탈린 저작집 1-6”, “붉은 수건”, “소련의 국립볼쇼이 극장”, “승리의 날에 모스크바”, “고도 모스크바” 등 5000여점의 정치, 문화서적을 선별하였고, 2000여장의 노래와 음악 악보, 700여장의 축음기 음반¹⁰²⁾ 등을 수집하였다. 심지어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대표 베로브의 요청에 따라, 상드리에와 전구까지도 지원되었다.

1947년 12월초에 소련문화원 기관과 사업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극동국장 에로페에브는 몇 가지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사국에서는 소련문화원에서 근무하게 될 요원을 선별하여, 1948년 2월 1일까지 북한으로 파견시킬 것; 둘째,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부위원장 이바노브는 문화원 기관에 필수적인 자재와 물자 등을 유관기관으로부터 지급받아, 그 물품들이 1948년 1월 15일까지 발송되도록 지시할 것; 셋째,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극동국에서는 서적, 사진, 영화필름 등을 준비하여 발송하고, 강연단과 정연극단을 선별하여 1948년 3월 1일까지 파견하도록 추진하고, 또한 문화원 기관과 관련한 모든 사업활동의 추진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매 10일마다 협회 중앙위원회에 발송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었다.¹⁰³⁾

100) АВП РФ. ф.102 оп.7 л.5 л.3-4

101) ГА РФ. ф.5283 оп.18 д.216 л.18

102) 위와 같음. оп.23 д.8 л.56

103) 위와 같음. л.58

1948년도 북한의 소련문화원 요원 선발에 관한 참고자료¹⁰⁴⁾

	필요한 인원수	선발 인원수
원장	3	3
부원장	3	1
강사	4	1
전문교관	6	1
화가	3	1
도서관장	3	1
러시아 어학부장	3	1
영화 상영기사	6	4
경리부장	1	1
타이프리스트	1	1
회계원	3	2
운전원	4	4
통역관	7	북한내 선발
수위 청소부	7	북한내 선발
계	52	21

1947년 12월 12일에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극동국에서 1948년도 극동지역 국가들의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이전의 연간 계획안과 다르게 분기별로 계획안을 작성하기로 결정하고, 문화원의 분기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¹⁰⁵⁾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지도부는 북한내 그 협회의 활동을 보다 더 세부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데올로기 통제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극동국 실무자회의 의사록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는데, 즉 “대외적으로 우리의 선동선전사업이 단지 문화 영역에 한정되어 전개될 것이 아니며, 또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대외적으로 실현되어야만 할 과업이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즈다노브, 말렌코브, 몰로도브 등의 연설 내용에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¹⁰⁶⁾고 언급되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소련에서 유명한 즈다노브의 <국제정세에 관한 연설문>이 출간되

104) 위와 같음. л.59

105) 위와 같음. оп.18 л.1 л.30

106) 위와 같음.

있다. 1947년 9월에 개최된 코민포름 1차대회에서 즈다노프는 대외정책에서의 이데올로기적 강령을 제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 그는 강조하길, “2차세계대전은 국제적인 정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정치적인 힘의 배치를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으며, 결국 모순적이고 투쟁적인 양대전영 -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진영과 민주주의적, 반제국주의적 진영 -으로 분할 통합하게 되었다.”¹⁰⁷⁾ 국제정세에 관한 연설문에서 즈다노프는 세계를 모순된 양“진영”으로 분할하는 스탈린식의 논리를 “유성화”하였다. 냉전은 새국면으로 들어섰다.¹⁰⁸⁾

북한의 소련문화원을 위한 예산책정의 지연으로 발미압아 이전에 확정되었던 문화원 건물 부지는 다른 용도로 이용되었고, 새로운 건물을 양도받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모되었다. 결국 1948년 초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문화원으로 사용될 건물을 양도하기로 결정하였다.

1948년 1월 베로프는 김일성의 명의로 된 문서를 번역하여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깨메노브에게 발송하였다. 이 문서가 문화원 건물부지 양도문제와 관련한 북조선인민위원회의 명령서이었다. 1948년 1월 6일자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문화원개관에 관한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명령서>에는 조선인민과 소련인민 사이의 문화관계 발전, 그 교류 증대와 인민간의 친선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북한내 문화원 설립을 위해 늦어도 1948년 2월 10일까지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측으로 다음과 같은 건물부지를 무상으로 영구히 양도하도록 지시되었다 : 평양에서 북조선통신사 건물, 원산에서 조소문화협회건물; 함흥에서 전기국 건물. 그리고 평양시 인민위원회, 강원도 인민위원회, 함경도 인민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그 문화원 건물을 수리하는데, 물질 지원을 부담해야만 하였다.¹⁰⁹⁾ 어리하이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그 문화원 설립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였다.

1948년 초에 북한의 정치권력은 문화원 건물부지를 양도하였다. 하지만 문화원 사용용도의 건물은 많은 수리와 새로운 시설을 필요로 했으며, 이것을 위해 나라의 건축자재와 재정적인 지원이 요청되었다. 사실상 이같은 물자지원을 북한 내에서 기대할 수는

107) Жданов А.А.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положении>(국제정세에 관하여) М, 1947, с.16-17

108) Алибеков Г.М. <Коминформ и послевоенная Европа>(코민포름과 전후 유럽) М. 1994, с.17

109) ГА РФ. ф.5283 оп.18 л.214 л.150-151

없었고 결국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그것들을 모스크바로부터 충당해야만 하였다. 이 당시에 3곳 소련문화원의 보수와 수리를 위해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페인트, 거울, 못, 와리스, 전기조명기구 등 건축자재, 소형자동차 2대와 화물자동차 1대, 영화상영 장비, 스포츠용구, 무선장치 등을 포함하는 기차 화물차량 5동 가량을 북한지역으로 수송하였다. 그밖에 정치선전 자료로써 12,000여권의 출판서적, 2000여장의 축음기용 음반, 2,500여 악보, 15종 700여장의 전람회용 사진자료 등이 포함되었다.¹¹⁰⁾

그러나 당시에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측은 북한에 소련문화원 개관을 보다 더 앞당기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 문화원에 사용될 자재와 장비의 수송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1948년 2월 초 극동국 주재로 소집된 회의에서 이 협회의 활동사업가운데 미비한 점들이 지적되었다. 특히, 회의에서는 1948년 1월 15일까지 북한으로 소련문화원에서 사용될 물자와 장비 수송에 관한 중앙위원회의 지시가 사무국에 의해 이행되지 않았음이 중앙위원회 위원인 키슬로바에게 보고되었고, 북한에 소련문화원 설립과 관련해 초래되는 문제점을 토론했기 위해서 협회 중앙위원회 임시회의 개최가 요청되기도 하였다.¹¹¹⁾

1947년말에서 1948년초에 걸쳐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모스크바로부터 소련문화원 원장 자격인 아.에스. 카잔스키를 포함하는 14명의 요원을 선발 교육시켜 파견하였다.¹¹²⁾ 카잔스키는 소련 볼셰비키당 산하의 고급 당학교 출신으로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하부기관 또는 소련공산당의 하부조직, 특히 “국제주의 클럽”에서 활동하도록 교육시켰다.¹¹³⁾ 북한으로 파견되기 이전인 1948년 2월말 경에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극동국에서는 카잔스키에게 북한에서 정치적 대중문화적 사업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훈련과 학습을 시키기 위해, 그를 스탈린 공장 문화원(모스크바에 소재)에 위탁하였다.¹¹⁴⁾ 마침내, 1948년 3월에 그는 원산 소련문화원 원장 자격으로 북한으로 파견되었다. 그밖에 소련문화원 활동사업을 위해 베랴코브(부원장), 레빈(강사), 제물랴크브(대중문화 교관) 레베제브(지방조직사업교관) 등이 파견되었다.¹¹⁵⁾

110) 위와 같음. д.223 л.54

111) 위와 같음. оп.18 д.1 л.25

112) 위와 같음. д.223 л.54

113) 위와 같음. оп.1 д.403 л.131

114) 위와 같음. оп.18 д.214 л.156

1948년 2월 말에 개최된 극동국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다음분기 사업계획에 관한 에로페에브의 보고서를 청취하였다. 에로페에브는 보고에서 각 부처의 간부들에게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세계 각국의 문화교류협회 지부사업과 관련한 정보와 각 부처가 각국 지부로 발송한 불자의 활용에 관한 결과보고 등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지시하였다. 국가별 보고담당자는 국외로 발송되는 자료선발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항상 소비에트 문화선전에 관한 정치적 방향성을 고려하도록 지시하였다.¹¹⁶⁾ 이와 관련하여, 제차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 키스로바는 “우리가 보낸 자료들이 반동세력과의 투쟁에서 각국 인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각국 보고담당자들은 자신의 업무 향상에 노력해야 하며, 그들은 해당국기에 대한 예리한 정세 분석을 소유해야”¹¹⁷⁾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지도부는 3월 월례회의에서 이전에 브이썬스끼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의 사업계획은 악랄한 전쟁 선동자에 반대하는 투쟁에 동원되지 못할 정도로 진부하고 흥미없는 것”이라는 자기 비판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우리 사업의 주요 과제는 전쟁 방화자들에 반대하여, 날카로운 정치성과 영웅적인 투쟁성으로 무장하는데 필요한 물질 인적 자원을 창조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엇보다도 먼저 새로운 전쟁에 자신의 세력을 동원하고 있는 앵글로색슨 반동세력의 본질을 폭로해야만 한다. 예를 들자면, 한국, 중국 등지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폭로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소재자를 준비하는 것이다.”¹¹⁸⁾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지도부는 국외로 소비에트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반미선전을 강화하기 위한 자료의 개발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5.6 조소문화협회와 소련문화원의 관계

북한에 소련문화원이 개관되기 이전까지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측에서 파견된 요원들은 주로 조소문화협회를 지원하면서 자신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115) 위와 같음. on.1 п.417 п.91

116) 위와 같음. п.1 п.19

117) 위와 같음. п.13

118) 위와 같음. п.12

1948년 3월에 연주자 사칼로브의 순회공연이 개최되었는데, 그는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요청과 소연방각료회의 예술분과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북한으로 파견되었다.¹¹⁹⁾ 조소문화협회와 문화원 요원들의 협력하에 그는 몇 차례에 걸쳐 예술가, 작곡가, 음악학교의 교사 학생들과 면담을 가졌다. 그는 평양, 함흥, 원산 등지에서 연주회를 개최하여,¹²⁰⁾ 북한 예술가들과 주민들 사이에 러시아의 고전 음악과 소비에트 음악을 대중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당시에 문화원의 보수작업이 예정대로 시행되지 않아 개관 시기가 연기됨으로써, 소련문화원의 주된 사업은 조소문화협회 지부를 통한 영화상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48년 3월에 11번의 이동 영화상영이 있었고, 4월에는 13번, 그리고 5, 6, 7월에는 각각 15번씩 도시, 농촌지역 등지에서 상영되었고, 관람자 총수는 약 25,000여명에 이르렀다. 그 영화상영에서 “차빠에브”, “대급전”, “베를린” 등이 제공되었다.¹²¹⁾

또한 조소문화협회의 요청에 따라 38선 주변의 주민들 대상으로 전개될 대중 선동선전사업을 위해 문화공연단이 구성되었다. 소련문화원 요원들은 조소문화협회 문화선전부와 공동으로 이 문화공연단의 순회공연을 조직하였다. 공연단은 소련의 현실에 관한 보고회를 준비하였고, 서적전람회 또는 사진전람회의 개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공연단장에 조소문화협회 부위원장 이 찬, 선동담당관에 조소문화협회 문화선전부 조승호, 영화상영책임에 오봉산 등이 각각 임명되었다. 문화공연단은 “베를린”, “타지키스탄” 등의 영화상영과 레닌의 삶과 혁명 또는 소련 농촌사회를 주제로 한 사진전람회, 이동도서관과 판매 서적 등을 준비하였다. 이 문화공연단은 5월초부터 1달 반가량 38선 부근을 횡단하였다. 농민, 노동자를 위한 15번의 보고회와 30차례에 걸친 영화상영이 있었는데, 총동원 주민수는 대략 25,000여명이 훨씬 넘었다.¹²²⁾

소련문화원 측은 조소문화협회와 공동으로 아.엔. 오스트로브스키의 탄생 125주년을 기념하는 야회를 준비하여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 오스트로브스키의 삶과 업적에 관한 강연회와 “남의 잘못에 책임을 지다”라는 영화상영이 있었다. 이 강연회와 영화상영

119) 위와 같음. ㄱ.223 ㄴ.56

120) 위와 같음. ㄱ.214 ㄴ.91

121) 위와 같음. ㄴ.37

122) 위와 같음. ㄴ.38

은 평양시의 영화종사자를 위해 평양시 연극회관에서 개최되었고, 학생들을 위해 김일성대학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평양 라디오방송은 오스트로브스키의 삶과 그 업적에 관한 좌담회도 편성하여 방송하였다.¹²³⁾ 또한 성대한 야회를 개최하여 레닌의 생일도 경축하였다. 그 야회에 소련군사령부 정보부 소속의 장교가 파견되어 레닌의 삶과 그 업적에 관한 보고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1918년 레닌”이라는 사진전람회와 영화상영도 있었다. 문화원 주관으로 막심 고리끼 탄생 60주년과 관련해서 개최된 야회에서는 그의 삶과 업적에 관한 보고회, “나의 대학생활”이라는 사진전람회와 영화상영이 있었고, 조소문화협회 주최로 평양 시민을 위한 사진 전람회도 개최되었다.¹²⁴⁾

소련 문화원은 조소문화협회 조직사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였다. 1948년 초에 마카로브의 책임하에 조소문화협회내 예술분과가 조직되었다. 이 예술분과는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그들의 발표회 등을 지도하고 지원하였다. 3~4월에 걸쳐 소련문화원 주관으로 마카로브가 지도하는 각 예술분야의 35개 공동작업반이 참가하는 가운데, 20여 차례의 발표회가 열려 총인원 1000여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조소문화협회 예술분과에서 영화 종사자들을 위해 “소련영화 30년”이라는 강연회를 개최하여, 북한에 주재하고 있던 소련영화수출공사의 전권대표 구바체브를 강연자로 초청하였다. 그밖에 좌담회 방식을 통해 음악분야에서 연주곡이나 연주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가 있었으며, 소비에트 연주작품의 악보가 선별되어 북한 연주자에게 전달되어 활용되었다.¹²⁵⁾

1948년 5월 중순에 소련문화원의 전문교관 카로레브에 의해 조소문화협회내 체육분과가 조직되었다. 체육분과 구성원 수는 54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37명이 노동당원 소속이었다.¹²⁶⁾ 뿐만 아니라, 카로레브는 소련문화원내 합창단 조직을 계획하여, 합창단원, 작곡가, 지휘자 그리고 통역자 등을 선발하였다.¹²⁷⁾ 이리하여 평양의 소련문화원 주도하에 조소문화협회에 예술분과, 체육분과가 조직되었다. 결국 소련문화원의 개관 이전까지 그 활동은 주로 조소문화협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당시에 소련문화원의 요원들은 그 개관 활동사업도 조소문화협회의 각 분과조직을 주축으로 전개하였다.

123) 위와 같음. ㄱ.38-39

124) 위와 같음. ㄱ.39

125) 위와 같음. ㄱ.39-40

126) 위와 같음. ㄱ.215 ㄱ.28

127) 위와 같음. ㄱ.214 ㄱ.42

1948년 7월 25일 시급한 건물 보수작업을 마친이후 평양의 소련문화원이 최초로 개관되었다. 문화원 개관에 즈음하여 축전과 서신이 도착하였다.¹²⁸⁾ 한편, 평양의 소련문화원 개관을 자축하기 위해 조소문화협회 위원장 이기영은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위원장 케메노브에게 메시지를 발송했다. 그의 메시지에서 “문화원을 통해 소련의 선진적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은 조선과 소련의 문화교류를 촉진할 것이고, 또한 조선민족 문화의 발전이 훨씬 강화될 것이다”¹²⁹⁾라고 강조하였다. 그 후 함흥, 원산에서 소련문화원의 개관은 보다 지연되어, 1948년 12월말 함흥, 1949년 8월말 원산에 문화원의 설립을 완료하게 된다.

6.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사실을 간단히 요약하고 몇가지 결함을 언급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한다.

1)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대북한 정책의 노선전환, 즉 한반도내 국제적 후견제의 실시로부터 북한내 독자적인 정치권력의 수립으로 변경되었다. 이같은 변화는 소련 정치권력이 한반도 위에서 자국의 정치적 이익과 그들의 영향력 강화에 무게중심을 실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내 독자적인 권력의 수립계획은 남한에 대한 미군 점령의 상황속에서 분단 징후의 한 요인을 제공한 것에 다름 아니다.

2) 소련군에 의해 점령된 북한에서 소련식 개혁모델에 입각한 국가건설이 급진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사회 각 방면의 전문요원의 양성이 불가피하였다. 북한에서 민족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비제도권의 교육기관 즉, <진남포 정치학교>, <중앙당학교>, <소비에트 학교>, <북조선민족간부양성학교>, 기타 <양성소> 등이 조직되었다. 이같은 북한내 친소적인 새로운 인테리의 형성은 소련의 정치적 영향력을 담보하는 수단이었다.

3) 제2차세계대전 이후 스탈린 전체정권은 지적 창작활동에 대한 탄압책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 당시 소련의 대북한 문화정책기구로써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외국문

128) 위와 같음. op.18 д.217 л.1

129) 위와 같음. д.214 л.33

학 출판부, “국제서적”협회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서적 또는 러시아 고전문학 등을 소련군사령부 정치부와 조소문화협회를 통해 북한에 공급하였다. 이같은 출판물은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와 문화를 선전하기 위한 북한내 정치교육 및 문화교양 사업에 활용되었다.

4) 조소문화협회는 북한내 일본 제국주의 문화를 청산하고, 소련의 문화-과학방면의 달성을 선전하여 문화 지변에서 소련과 북한간의 상호교류를 확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46년 조소문화협회와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공식적인 관계 이후 조소문화협회의 위상이 상승되어 새로운 발전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5) 소련과 북한간의 문화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북한내 소련문화원을 설립하였다.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이같은 소련문화원의 설립에 필요한 물질·인적 지원을 전담하고, 조소문화협회를 지도, 원조하였다. 소련문화원은 북한내 소련의 영향력 강화와 관련해서 소비에트 이데올로기·문화“센터”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해방직후 북한내 교육·문화분야의 실태를 통해, 당시 소련의 대북한 문화정책의 메카니즘과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대북한 문화정책의 실행구조는 소연방외무성 하부기구인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를 주축으로 전개되었고, 북한내 조소문화협회는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지부로서 위치하게 되었다. 또한 소련문화원이 설립된 이후 조소문화협회는 직접 측면에서 문화원의 지도, 통제를 받게 되었다. 도식화 하자면, 피라미드식의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 소련문화원 - 조소문화협회 라는 구조가 성립된다.

결국, 이같은 대북한 문화정책의 구조 때문에 하위기관은 상위기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 성격상 문화의 전파라는 측면보다는 이데올로기 선전에 편중된 특징을 보이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소련의 문화정책구조, 즉 ‘외부적 요소’에 주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함을 드러낸다. 첫째, 내부적 요소의 하나인 북한 정치권력의 대응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 둘째, 북한내 인민대중의 실상을 확인하는데 적지 않은 한계를 보인다. 셋째, 자료의 한계로 과학·기술 분야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이다.

참고문헌

- 『북한관계사료집』. 국사편찬위원회. 1982.
- 『북한연구자료집』.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 권영민, 『해방직후의 민족문학운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 김광운, 「소련의 대북한정책과 공산당 중앙지도기관의 결성」. 『역사와 현실』, 1996.
- 김기석, 이향규, 「북한 사회주의 교육의 기원(1945-1950)」. 한림과학원 단기연구과정 보고서. 1994.
- 김성보, 「소련의 대한정책과 북한에서의 분단질서 형성, 1945-1946」. 『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역사비평사. 1995.
- 김인회, 『한국교육의 역사와 문제』. 1994.
- 김형찬, 『북한교육발달사』. 한백사. 1988.
-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집』. 1995.
- 『한국현대문화사대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75.
- 『정로』
- 『조선신문』
- 『조소문화』

АВП РФ (Архив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013. - Секретариат А.Я. Вышинский

Ф.102 - Референтур по Корее Перво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отдела

РЦХИИДНИ (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Хранения и Изучения Документов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Ф.17 - Центральный Комитет КПСС

оп.125 - Управление пропаганды и агитации ЦК : 1939-1948гг.

оп.128 - Отдел международной информации : 1944-1950гг.

ГА РФ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5283 - Всесоюзное общество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с заграницей

оп.18 - Отдел восточных народных республик

оп.23 - Отдел печати

Адибеков Г.М. «Коминформ и послевоенная Европа» М. 1994.

Ванин Ю.В. «Советская и мировая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в борьбе за мир, против 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ой агрессии в Корее», «За мир на земле Кореи. Воспоминания и статьи», М. 1985.

Ванин Ю.В., Мокляк В.В. «Традициям дружбы верны»,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Воспоминания и статьи», М. 1976.

Верт Н. «История Сове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М. 1994.

Жданов А.А.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положении», М. 1947.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наших дней)», т.2. М. 1974.

Ким Г.Ф.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культур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 КНДР»,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6 1954.

Лукинский И.В. «Дружба культур», «Нерушимая дружба.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М. 1971.

«Освободительная миссия на Востоке», М. 1976.

«Освободительная миссия Совет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М. 1985.

«Отношени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 народной Кореей 1945-1980гг.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 М. 1981.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и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документы\», М. 1948.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ференциях периода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гг. Сб. документов», т.5. М.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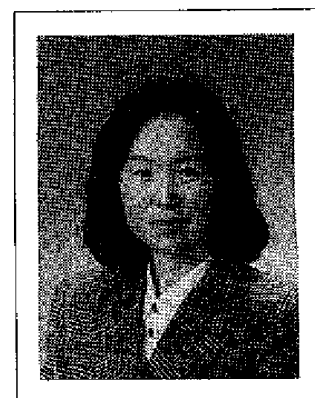
«СССР и Корея», М. 1988.

Тригубенко М.Е. «Азиатский синдром социализма», М. 1991.

Чистяков И.М. «Служим отчизне», М. 1975.

«Партийная жизнь», №1 1946.

北韓 住民의 이미지에 대한 社會心理學的 研究



鄭 基 仙(成均館大)

목 차

<요약문>	187
1. 문제 제기	189
2. 이론적 논의 및 기존연구	190
3. 연구방법	194
4. 결과분석	197
5. 결 론	216
※참고문헌	220

【요약문】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 사람들이 현재 형성하고 있는 북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사회심리학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는데 있다. 사회심리학에서 집단간의 관계, 특히 갈등적 관계에 대한 분석은 고정관념과 편견, 호오도,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등의 개념들을 통하여 많이 접근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 연구를 위하여 그들에 대한 고정관념, 그들에 대해 남한 사람들이 느끼는 사회문화적 이질감,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남한 사람들간에도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다단계집락표본추출방식을 통하여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18세이상 성인남녀 493명을 선정, 설문조사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밝혀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고정관념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었다. 전자로 인내심이 강하다, 명령이나 권위에 순종적이다, 조직에 잘 적응한다, 순박하다, 근면성실하다등을 지적하였으며, 후자로 획일적인 사고, 창의성과 융통성 부족, 의심이 많다등을 지적하였다.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중 반항적이고 도전적일 것이다와 사고가 획일적이고 융통성이 없다, 순박하고 인정이 많다등의 성격특성에는 남한 사람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반면, 기회주의적, 이기적, 적당주의적이다와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성실하고 조직에 잘 적응할 것이다등의 성격특성을 지각하는 데에는 남한 사람들간에도 성별, 연령별, 직업별, 그리고 교육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에 대해 느끼는 이질감의 정도는 절대적인 수준에서 상당히 높았다. 사회문화의 8개하위영역(가치관, 사고방식,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자녀교육방식, 이웃관계, 직장상사관계, 직장동료관계) 모두에서 최소한 60%이상의 응답자가 북한 사람이 우리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특히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전체응답자의 90%이상이 우리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가족관계에 대한 이질감 지각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세제, 북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북한 사람을 이웃이나 직장동료 그리고 알고 지내는 친구정도로 받아들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체응답자중 50-60%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별로 호의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북한 사람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를 남한내 지역간의 사회적 거리감정도와 비교하여 보았을때, 외집단에 의한 사회적 거리감을 준거로 한다면, 북한 사람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은 호남과 비호남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 사람을 비호남 사람보다는 멀게 느끼지만 호남 사람보다는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 사람에 대해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는 성과 교육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한 사람들중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이 북한 사람들을 더 멀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결과가 앞으로 남북통일후에 남북한간의 내적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며, 이를 근거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지를 논의하였다.

1. 문제제기

최근 들어 탈북자의 급격한 증가와 거의 매일 마스크를 통해 밝혀지는 북한의 식량난과 그로 인한 사회불안은 북한 사회의 붕괴가 머지않았으며, 이제 통일문제가 우리가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민족의 과업이 아니라 조만간 우리에게 들여다칠 당면현실로 등장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해준다. 따라서 통일에 대비한 우리의 준비도 과거 어느 때보다 현실적이어야 하며, 우리의 현실상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속에서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후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겪게 될 사회·문화적, 심리적 적응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 전개될 지를 현재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에 대해서 형성하고 여러 가지 태도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예측해 보고자 한다.

장기간 동안 서로간의 접촉이 단절되었던 두 집단이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은 비록 그 두 집단이 동일민족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절의 기간동안 형성된 이질성 때문에 상당한 진통과 갈등이 따를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가능한한 최소화하고 적응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취할수 있는 조처중 하나는 두 집단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일 것이다.

사회심리학적 분석에 따르면 집단간의 적응과 통합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해당 두 집단사이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異質의 정도라기 보다는 이들 집단이 서로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이질감의 정도이다 (Stephan and Stephan, 1990; Ashmore and Boca, 1981). 다시 말하자면 해당 두 집단이 서로가 어느 만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얼마만큼 받아들이려고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남북한간의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민족통일 연구원, 1992, 최수영·김성철·김병로·이우영, 1994; 최수영·이우영·조민·최진욱, 1995; 남현욱, 1995; 조민, 1995). 그러나 어떤 연구도 아직 이러한 이질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 지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작업으로 우선 남한 사람들은 40년 이상의 사회주의체제하에서의 생활이 북한 사람

들을 성격적으로 어떻게 변질시켰을 것이라고 인지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둘째로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남한 사람들이 느끼는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세번째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살펴볼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및 기존연구

우리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접촉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대학을 졸업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고향이 어디인지, 기독교인인지, 또는 외국 사람이라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등과 같이 그 사람이 속한 사회적 집단(또는 범주)을 찾아내고, 그가 속한 사회적 범주에 대한 우리의 과거 직·간접 경험을 통해 얻어진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그의 성격, 태도와 행동들을 예측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그와의 관계형성 뿐 아니라 관계의 성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찬가지로 지난 반세기동안 거의 교류하지 못한 남·북한 사람들이 다시 만나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될 때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갈지는 현재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전적 지식, 감정 및 태도에 따라 사뭇 달라질 수 있다. 현재와 같은 분단상황에서 북한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우선 남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북한(사람)에 대한 태도를 알아봄은 남북통일후 우리가 겪게된 내적 통합의 문제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현재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중 하나일 것이다.

남북한 두 집단간의 내적 통합의 어려움이 왜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게 될 지는 각 학문 영역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하게 조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체계의 차이에서 파생하는 문제들은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문화인류학등에서 적절히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남북의 내적 통합문제에 대한 거시적 접근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두 집단간의 화합과 갈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사회심리학적 분석에 따르면 집단간의 화합과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는 인지적, 감정적, 그리고 행동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Stephan, 1985). 우선 집단간의

갈등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요소로 고정관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감정적 요소는 편견으로 내집단에 대한 호의적 태도와 외집단에 대한 비호의적 태도로 볼 수 있으며, 행동적 요소는 내집단을 선호하고 외집단을 배척하는 차별적 행동을 말한다 (Ashmore, R.D. & Del Boca, F.K. 1976; 이수원, 1988).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북한 사람에 대해 남한 사람들이 인지한 고정관념이므로 이에 관한 이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고정관념(stereotypes)은 사회적으로 정의된 집단 또는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속성에 대한 과장된 신념이다 (Allport, 1954; Ashmore & Del Boca, 1981). 특정 사회적 범주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으나, 집단간 차별 및 갈등과 관련하여 주로 연구되어온 것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다. 고정관념은 본질적으로 집단간의 차이를 과대 평가하고 집단내 성원들간의 차이를 과소 평가하며,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외집단의 행동을 내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을 보이며,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이나 차별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D. Campbell, 1967; 김혜숙, 1988). 이러한 고정관념의 오류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상대방에 대해 빨리 파악하고 적절히 상호작용하기 위해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고정관념이 널리 활용된다 (Allport, 1954; Wilder & Allen, 1978). 부정적 고정관념은 실제 대인관계에서 이를 재확인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 편파적으로 지각·기억하게 하며 (Snyder and Swann, 1978), 그 결과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 집단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거나 거부하는등 차별적 행동을 유도하므로써 집단간 갈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그 대상이 되는 집단의 태도와 행동에도 영향을 주는데, 즉 부정적 고정관념의 대상집단은 자집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평가를 반영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reflected appraisal) 낮은 집단정체감을 갖기도 하고, 부정적 평가에 맞도록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자기예언적 효과”(self-fulfilling prophecy effect)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Rosenthal & Jacobson, 1968). 고정관념은 역사적 원인, 집단간의 지나친 경쟁, 사회화과정에서의 학습·전수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 권위주의적 성격과 같은 개인들의 인성적 영향으로 생겨날 수 있다(Barton, 1974).

한국에서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지역집단간의 갈등과 관련하여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 80년대 후반 대통령선거이후 부터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감정과 지역갈등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병폐의 하나로 등장하면서, 이를 파악하기 위한 주요 분석틀로 고정관념, 편견 및 차별등의 개념이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영호남간 또는 기타 지역과 영호남간 서로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내용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행해졌으며 (김진국, 1984, 1987; 이진숙, 1959; 이진환, 1988; 김혜숙, 1988), 특정 지역민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어떻게 형성·강화되는 지의 심리적 과정을 보이려는 시도들도 있었다 (김혜숙, 1988, 1993; 민경환, 1989; 홍성일, 1993).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지역별 고정관념을 보면, 서울사람은 각쟁이고 사교적이며 경우가 밝고 (이진숙, 1959; 고흥화·김현섭, 1976), 충청도사람은 온순하고 예의있고 보수적이고 인정이 많으며 (이진숙, 1959; 김혜숙, 1988), 경상도사람은 무뚝뚝하고 생활력이 강하고 결단성이 있으며 고집이 세고(김진국, 1987; 이진숙, 1959; 김혜숙, 1988), 전라도사람은 생활력이 강하고 타산적이며 단결성이 강하고 신뢰성이 없다(고흥화·김현섭, 1976; 김진국, 1987)고 한다. 이러한 고정관념도 자집단(내집단)은 타집단(외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평가자가 자집단이나 타집단이나에 따라 동일 지역민에 대한 고정관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경상도사람이나 전라도사람이나 자집단을 모두 의리가 강하고 인정많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반면, 경상도사람은 전라도사람을 생활력과 단결력이 강하고 약삭바르며 뒤끝이 나쁘다고 보고, 전라도사람은 경상도사람을 생활력이 강하고 악착같고 고집이 세며 실리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김혜숙, 1988). 김혜숙(1988)은 주성장지가 서울인 대학생들도 그들 부모의 출신지역에 따라 그 지역출신 학생들과 유사한 지역고정관념을 가진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부모의 고정관념은 자녀의 고정관념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영호남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행동을 보인 영호남사람들의 행동동기를 어떻게 귀인하는지를 시험한 한 연구에 따르면(김혜숙, 1993), 지역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행동의 원인을 내적·안정적 요인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역고정관념은 더욱 강화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대학생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서 편견적 지역고정관념의 집단내 차이유발요인을 찾아내는데는 소홀한 면이 있다. 예외적으로 장근승(1981)

은 30-45세 서울거주 남녀성인 445명을 대상으로 편견적 지역고정관념을 조사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직업직위는 편견성향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반면, 학력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즉 학력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편견성향이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연구로 고흥화·김현섭(1976)에 따르면, 대학생보다는 직업인이, 20대보다는 40대가 편견적 고정관념의 강도가 더 높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경우 분단 이전에는 각도별로 지역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진숙(1959)에 따르면, 황해도사람은 온순하고 의지가 굳고, 평안도사람은 사납고 생활력이 강하고 단결심이 세며, 함경도 사람은 거칠고 생활력이 강하고 의지가 굳다고 한다. 그러나 분단후 북한지역 사람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갖지 못한채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남한에 살고 있는 이북지역 출신 사람들도 도별로 인식되기 보다는 전체로 “이북사람”으로 뭉뚱그려져서 생활력이 강하다는 인상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진숙, 1959). 물론 현재도 북한사람들간에는 출신도별로 고정관념이 세분화되어 있겠지만, 세분화된 고정관념을 형성할 만큼 직·간접적인 접촉경험이 없는 남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북한사람들은 폐쇄적인 사회주의체제하에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한 집단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북한사람들을 도별로 구분해서 그들에 대한 지역고정관념을 보기보다는 출신도를 무시한채 “북한사람”이라는 한 집단으로 묶어서 그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살펴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다음으로 집단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많이 활용된 사회심리학적 개념으로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이 있다. 인종차별을 연구하면서 Bogardus가 처음 학계에 소개했던 개념으로 사회적 거리감은 특정 집단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거리감을 말한다 (Bogardus, 1925). 다시 말해, 특정 집단의 사람들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맺을 용의가 있는 지를 묻는 일종의 태도변수이다.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한 사용된 집단범주로는 인종, 직업, 계층, 출신지역, 출신국가등이 포함된다. 한국에서 이 개념을 활용한 연구는 고정관념이나 편견만큼 많지는 않으나 출신지역, 직업계층 및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속성(예: 장애인)을 지닌 집단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등이 행해졌다 (고흥화·김창주, 1989; 고흥화·김현섭, 1976; 나간채·정근식, 1988; 나간채, 1988; 김혜숙, 1988, 송관재 등, 1997). 지역민들간의 사회적 거리감 지각을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호남지역민을 영남지역은 물론이고 기타 다른 지역민들도 상대적으로 멀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해당지역민을 결혼상대자, 친구 및 동업자로 선택할 지를 묻는 형태로 측정된 사회적 거리감 연구에서 비호남사람들이 호남사람은 선택하고 싶지 않다는 비율이 타지역민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고홍화·김현섭, 1976; 고홍화·김창주, 1989, 고홍화, 1989에서 재인용). 영·호남출신 대학생과 영·호남출신 부모를 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혼이라도 하겠다부터 아는 척도 하지 않겠다의 11개 항목을 통해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한 연구에서도 호남지역민이 타지역에 비해 사회적 거리감을 멀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혜숙, 1988).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한내 지역간의 갈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는 주로 고정관념, 호오도, 편견 및 사회적 거리감을 통하여 행해졌다. 그러나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북한과 남한이라는 두 집단의 관계는 남한내의 지역간의 관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두 집단은 분단기간 동안 전혀 다른 사회환경속에서 생활했으며, 서로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접촉의 기회가 거의 박탈된 상태에서, 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상당히 “각색된” 제한된 정보를 통해서만 서로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선 가치와 사고에서 뿐 아니라 여러 다른 사회생활의 면에서 서로를 얼마나 이질적으로 지각하는 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회적 거리감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이질감에 대한 지각도 분석하려고 한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18세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표본은 안산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단계집락표본추출(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식을 통해서 선정하였다. 우선 표본내 직업계층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안산지역을 공단지역, 상업지역, 관공서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내에서 표본을 추출할 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공단지역과 관공서지역내의 기업체명단과 관공서 및 금융기관명단을

작성하고 거기서 다시 단순무작위 표본추출하여 설문지를 배포할 기업체와 관공서 및 금융기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업체나 관공서 및 금융기관내에 직원이 10명미만일 경우는 전수조사를 하고 그 이상일 때는 그들중 10명을 무작위선정하여 설문을 배포하였다.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먼저 표본을 추출할 상가지역 한 곳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상가지역내의 모든 상점주인과 점원, 그리고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그 결과, 공단지역에서는 약20개 기업체가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관공서지역은 시청, 경찰서, 보건소, 세무서, 전화국, 우체국, 교육청, 동사무소등 9개 관공서와 10개 시중은행이 설문에 응하였다. 설문지는 약590부가 배포되어 이중 493부가 수거되어서 83.5%의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기간은 1997년 5월 중순부터 6월 첫째 주까지 3주간이었다.

3.2 변수의 조작화와 측정

3.2.1 고정관념

북한 사람의 성격적 특성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 지를 알기 위하여 19개의 형용사를 제시하고, 각 형용사에 대해 북한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3점척도--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1점; 다소 그럴 것이다 2점; 매우 그럴 것이다 3점--로 표시하게 했다. 성격적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구성함에 있어서 북한의 폐쇄적 사회주의가 발전시켰을 수 있는 성격특성을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되도록 안배하였다. 예를 들어, 사고가 확일적이다, 적당주의적이다, 융통성이 없다, 도전적이다 같은 형용사가 전자에 해당되며, 조직에 잘 적응한다, 인내심이 강하다등이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문항의 지시문에는 응답자가 북한 사람의 성격을 생각할 때 북한사람이 처해 있는 사회적 상황을 먼저 생각해보고 질문에 답하도록, “북한체제하에서 40년간 살아온 북한 사람들은 어떤 독특한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는 설명을 실었다. 설문에 포함된 형용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3.2.2 사회적 이질감

본 연구에서 사회적 이질감의 개념은 “어떤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이 가치관이나 사

고방식 그리고 사회생활방식에서 얼마나 나 또는 우리(집단)와 다르다고 지각하는 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설문에서 북한 사람들이 8개의 하위영역에서 우리와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하는지를 3점척도 (전혀 다르지 않다 1점; 다소 다를 것이다 2점; 매우 다를 것이다 3점)로 측정하였다. 8개의 하위영역은 ①생각하는 방식 (사고방식), ②가치관, ③부부관계, ④부모-자녀관계, ⑤자녀교육방식, ⑥이웃관계, ⑦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⑧직장상사와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3.2.3 사회적 거리감

본 연구에서는 남한내 지역간 사회적 거리감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활용했던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가 사용한 사회적 거리감척도는 김혜숙(1988)이 영호남지역 고정관념과 편견을 연구하면서 사용했던 척도이다. 이 척도는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를 달리하는 11개의 행동의사 진술문을 제시하고 자신의 의사와 일치하는 문항들을 모두 고르게 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표1 참조). 이 척도에 포함된 11개 문항은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가 다른 36개 문항들을 11점척도 (거리감이 전혀 없을 경우 1점, 거리감이 아주 클 경우 11점)로 대학생 45명에게 평가하게 한다음, 각 문항의 사회적 거리감척도치와 에베도를 산출하여 그 중에서 고른 것이다 (김혜숙, 1988).

<표 1> 사회적 거리감척도 문항들

문	항	척도치	에베도
1.	길혼이라도 하겠다	0.85	0.65
2.	연인으로도 환영하겠다	1.80	2.24
3.	내가 속한 친목 모임에 같은 멤버로 받아들여겠다	2.80	2.05
4.	같은 직장의 동료로 고용하겠다	3.44	1.69
5.	기회가 닿으면 친구로도 삼겠다	4.15	1.80
6.	약수정도는 하겠다	5.97	2.79
7.	옆집에 와서 살면 인사정도는 하겠다	6.29	1.60
8.	단짝 친구로 삼지 않겠다	7.50	3.33
9.	우리 가족의 일원과 결혼해서 인척이 되는 것은 거부하겠다	9.28	1.56
10.	우리집 아이나 동생들과 같이 놀지 못하게 하겠다	9.90	1.36
11.	아는 척도 하지 않겠다	10.9	1.60

주. 1) 원래 척도는 친목모임인데, 본 설문에서는 친족모임으로 誤記되어 붙었다.
출처: 김혜숙(1988), p.138. 표 3.

3.2.4 독립변수들

북한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사회문화적 이질감,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을 지각하는 정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 독립변수로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개인수입, 응답자 자신의 고향과 부모의 고향, 그리고 북한에 친인척이 있는지의 여부를 포함시켰다. 연령은 5년 단위로 범주화하여 사용하였으며, 직업은 기업체의 임원이상, 중간관리, 일반사원, 생산직은 생산감독, 숙련공, 단순노동자, 그리고 판매·서비스직은 상점주인, 점원, 노점상으로 세분하여 물었으나 분석에서는 기업체 직원을 관리·사무직으로, 그리고 생산직, 판매·서비스직 및 공무원으로 크게 4개의 직업범주로 묶어서 사용하였다. 교육수준도 무학, 국민학교, 그리고 중학교졸업까지를 한 범주로 묶고, 대학원도 4년제대학 졸업자와 함께 크게 4범주로 나누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4. 결과분석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설문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중 남자가 355명(72.3%), 여자는 136명(27.7%)이었다. 연령 분포를 보면, 20대가 38.2%(1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30대가 35.9%(176명), 40대가 16.5%(81명)이었다. 따라서 응답자중 4분의 3이 20-30대 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교육수준을 보면, 과반수를 조금 넘는 응답자들이 고등학교를 나왔으며, 응답자의 약40%는 전문대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체 응답자의 학력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분포를 보면, 기업체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46.6%(226명)이었으며, 이들중 중간관리직 이상(과장이상)에 속하는 사람들도 12%(58명)나 되었다. 공무원이 15.5%(75명),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6.9%(82명), 그리고 판매서비스직이 21%(102명)이었다. 판매서비스직중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 24명(4.9%)이며, 상점주인은 46명(9.5%), 점원은 32명(6.6%)이다.

전체 응답자중 64.3%(314명)가 결혼을 했으며, 가게를 체임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64.7%(319명)이었다. 응답자 개인소득을 보면, 약33%(135명)의 응답자들이 100만원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100-150만원대 소득자는 35%(156명), 150-200만원대 소득자는 21.1%(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자신의 고향이라고 말한 지역을 보면, 서울·경기도가 40%, 충청도가 20.5%, 전라도 경상도가 각각 19.9%, 12.4%였다. 응답자 부모의 고향은 서울·경기도가 28%, 충청도 25%, 전라도 22.5%, 경상도 14%로 나타났다.

4.2 북한 사람의 성격특성에 대한 고정관념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19개의 형용사를 제시하고 북한 사람들이 그러한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를 물었다. 그 결과, 북한 사람들의 성격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하는 성격특성들을 순서대로 셋만 지적하면, 인내심이 강하다(평균 2.36), 명령이나 권위에 순종적이다(평균 2.32), 그리고 조직에 잘 적응한다(평균 2.26)였다(표 3 참조). 이들 성격특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0%이상이 매우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명령이나 권위에 순종적이다와 인내심이 강하다는 전체응답자의 90%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체 응답자의 80%이상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북한 사람의 성격특성으로 순박하다(84.6%), 사고가 획일적이다(84.3%), 의심이 많다(82.9%), 창의적이지 못하다(82.5%), 조직에 적응을 잘한다(82.4%), 근면성실하다(81.7%), 융통성이 없다(80.4%)등이 지적되었다. 반면에 개방적이다는 성격특성은 응답자중 76.8%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1) 이 척도는 3점이 매우 그럴 것이다, 2점이 다소 그럴 것이다, 그리고 1점이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점수화 되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성별	남자	72.3% (355)
	여자	27.7 (136)
	총계	100.0 (491)
연령	18-19세	2.0% (10)
	20-24세	13.5 (66)
	25-29세	24.7 (121)
	30-34세	19.6 (96)
	35-39세	16.3 (80)
	40-44세	10.2 (50)
	45-49세	6.3 (31)
	50-54세	5.1 (25)
	55세이상	2.2 (11)
	총계	100.0 (490)
교육 수준	무학	0.8% (4)
	국민학교	1.8 (9)
	중학교	5.1 (25)
	고등학교	52.3 (258)
	전문대학	14.5 (71)
	4년제대학이상	25.2 (124)
	총계	100.0 (491)
직업	(기업체)경영주, 중역, 임원	3.5% (17)
	(기업체)중간관리직(부장,차장,과장)	8.5 (41)
	(기업체)사무직 (대리, 계장, 평사원)	34.6 (168)
	공무원	15.5 (75)
	(생산직)생산감독 (주임, 반장)	4.7 (23)
	(생산직)숙련공	6.6 (32)
	(생산직)단순노동자	5.6 (27)
	(판매/서비스직)상점주인	9.5 (46)
	(판매/서비스직)점원	6.6 (32)
	(판매/서비스직)노점상	4.9 (24)
	총계	100.0 (485)
혼인 상태	미혼	35.0% (171)
	기혼	64.3 (314)
	이혼, 사별	0.6 (3)
	총계	100.0 (488)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계속)

	50만원이하	3.4% (15)
	50만원 ~ 100만원	26.9 (120)
	100만원 ~ 150만원	35.0 (156)
개인	150만원 ~ 200만원	21.1 (94)
	200만원 ~ 250만원	7.0 (31)
수입	250만원 ~ 300만원	4.0 (18)
	300만원 ~ 350만원	1.1 (5)
	350만원 ~ 400만원	1.1 (5)
	400만원이상	0.4 (2)
	총계	100.0 (446)
	서울	16.0% (79)
	경기도	24.5 (121)
	강원도	5.9 (29)
고향	충청도	20.5 (101)
	경상도	12.4 (61)
	전라도	19.9 (98)
	기타 (제주도, 이북, 외국)	0.8 (4)
	총계	100.0 (493)
	서울	6.4% (31)
	경기도	21.3 (103)
	강원도	6.0 (29)
부모	충청도	25.0 (121)
고향	경상도	14.0 (68)
	전라도	22.5 (109)
	제주도	0.4 (2)
	이북(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4.3 (23)
	총계	100.0 (484)

남한내의 지역간의 고정관념과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교하기 위하여, 전자와 후자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된 성격특성을 보면 인정이 많다, 인내심이 강하다, 책임감이 강하다, 근면성실하다등을 들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내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정이 많다, 근면성실하다, 인내심이 강하다등을 많이 지적하지만²⁾, 외집

2) 김혜숙(1988)의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는 자기 집단을 평가할 때 경상도출신은 71.7%, 전라도

단 고정관념으로는 충청도 사람에 대해서만 응답자들의 60-70%가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한다(김혜숙, 1988; 이진환, 1988). 그런데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인식할 때 90% 이상이 인내심이 강하다, 82%가 근면성실하다, 68%가 정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현재 북한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남한내의 타지역간의 고정관념보다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시에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 전적으로 긍정적인 면만을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고가 획일적이고, 창의적이지 못하며, 융통성이 없고 의심이 많을 것이라도 북한 사람의 성격특성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성격특성은 그 형성원인을 개인적 특성에서보다는 사회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체제하에서 장기간 적응하여 살면서 갖게 되었을 법한 성격특성들이라는 것이다.

<표 3> 북한 사람들의 성격 특성에 대한 지각

성격특성	① 전혀 않을 것	② 그렇 다소 그럴 것	③ 매우 그럴 것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기회주의적이다	38.2%	49.3%	12.5%	479	1.74 (.67)
이기적이다	31.9%	53.0%	15.1%	477	1.83 (.67)
명령이나 권위에 순종적이다	9.6%	49.0%	41.5%	480	2.32 (.64)
의심이 많다	17.1%	54.9%	28.0%	475	2.11 (.66)
적당주의적이다	32.7%	49.5%	17.8%	477	1.85 (.70)
책임감이 강하다	24.4%	49.5%	26.1%	479	2.02 (.71)
근면성실하다	18.3%	56.7%	25.0%	480	2.07 (.66)
인내심이 강하다	8.5%	46.8%	44.7%	493	2.36 (.63)
조직에 잘 적응한다	17.6%	39.0%	43.4%	477	2.26 (.74)
창의적이지 못하다	17.5%	55.9%	26.5%	479	2.09 (.66)
소극적이다	25.2%	52.3%	22.5%	493	1.97 (.69)
융통성이 없다	19.6%	53.7%	26.7%	484	2.07 (.68)
사고가 획일적이다	15.7%	55.8%	28.5%	477	2.13 (.65)

출신은 73.8%, 충청도출신은 75.9%가 내집단을 정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비슷하게 이진환(1988)의 연구에서도 부산대학생들중 92%가 내집단이 정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특성	① 전혀 않을 것	② 그렇 다소 그런 것	③ 매우 그런 것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반항적이다	28.8%	61.2%	10.0%	479	1.81 (.59)
도전적이다	27.3%	46.8%	26.0%	493	1.99 (.73)
비판적이다	20.4%	53.2%	26.4%	485	2.06 (.68)
순박하다	15.4%	59.0%	25.6%	493	2.10 (.63)
인정이 많다	31.8%	57.5%	10.7%	493	1.79 (.62)
개방적이다	76.8%	17.5%	5.6%	493	1.29 (.56)

전체적으로 보면, 19개의 성격특성들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보아³⁾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에 대해 남한내의 어떤 지역민보다 복합적인 성격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남한 지역간 타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어떤 지역도 60%이상 합의율을 보인 성격특성이 19개나 되지는 않았다.

19개의 성격특성이 어떤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6개의 요인이 고유가(eigenvalue)가 1이상이었으며, 이들 요인은 전체 변량(variation)의 57.3%를 설명하고 있다 (표4 참조). 제1요인에 기회주의적이다, 이기적이다, 의심이 많다, 명령과 권위에 순종적이다, 적당주의적이다가 포함되어있으며 (고정관념I이라 칭함), 제2요인에 책임감이 강하다, 끈면성실하다, 인내심이 강하다, 조직에 잘 적응한다가 포함되어있다 (고정관념II).

3) 개방적이다는 그렇지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76.8%로 나타났는데, 이는 바꾸어 말하자면 개방적이지 않다는 전술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 만큼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북한 사람들의 성격특성에 대한 요인 분석결과

성격특성 /요인부하량	고정 관념I	고정 관념II	고정 관념III	고정 관념VI	고정 관념V	고정 관념VI
기회주의적이다	0.72					
이기적이다	0.70					
명령이나 권위에 순종적이다	0.60					
의심이 많다	0.50					
적당주의적이다	0.44					
신뢰도계수	$\alpha = .68$					
책임감이 강하다		0.74				
근면성실하다		0.68				
인내심이 강하다		0.65				
조직에 잘 적응한다		0.52				
신뢰도 계수	$\alpha = .62$					
창의적이지 못하다			0.70			
소극적이다			0.70			
융통성이 없다			0.63			
사고가 획일적이다			0.57			
신뢰도 계수	$\alpha = .61$					
반항적이다				0.80		
도전적이다				0.64		
비판적이다				0.54		
신뢰도 계수	$\alpha = .68$					
순박하다					0.81	
인정이 많다					0.74	
신뢰도 계수	$\alpha = .51$					
개방적이다						0.81

제3요인에는 창의적이지 못하다, 소극적이다, 융통성이 없다, 사고가 획일적이다 (고정관념III), 제4요인에 반항적이다, 도전적이다, 비판적이다 (고정관념IV), 그리고 제5요인에 순박하다와 인정이 있다가 포함되었다 (고정관념V). 제6요인은 개방적이다는 한 문항만으로 구성되었다. 복수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각 요인들에 대해 신뢰도검증을 한 결과 크론바하 알파(Cronbach α)가 0.51-0.68수준으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을 통해 밝혀진 성격특성의 차원중 고정관념II와 고정관념V

는 대인관계나 조직생활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격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외의 고정관념들은 사회주의체제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흔하게 붙쳐질 수 있는 편견이다. 특히 사고가 획일적이고 창의적이지 못하며 융통성이 없다는 고정관념Ⅲ의 성격특성은 “창의성과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자기변신”을 요구하는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에 적응하여 사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성격특성이다.

다음은 같은 남한 사람이라고 하여 모두 북한사람에 대해 같은 내용과 같은 정도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같은 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특성에 따라 북한 사람을 다르게 지각하고 다른 고정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집단에 고정관념을 형성하는데 외집단 구성원간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정관념의 지각에 차이를 유발시키는 요인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나 사람의 속성으로 예를 들면 같은 영남사람이라도 젊은 사람이나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않은 사람들보다 영남사람 특유의 성격특성을 적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고정관념을 갖는 주체자의 속성으로 권위주의적 인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편견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든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덜 편견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세번째는 상황적 요인이다. 집단(집단의식)이 두드러지는 사회적 상황으로 예를 들어 두 집단이 극단적인 경쟁이나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졌을때는 평상시보다 고정관념적 사고가 더 현저하게 돌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번째 요인에 초점을 두어 고정관념을 지각하는 주체자의 속성에 따라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적 사고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고향, 부모의 고향, 북애 친척유무, 개인수입등과 같은 고정관념 인지자의 속성을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일원변량분석을 통하여 집단간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표5 참조).

우선 성별에 따라 북한 사람을 다르게 지각하는 지를 보면, 6가지 고정관념중 두 고정관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남녀차이를 나타냈다 (표5 참조). 여성이 남성보다 북한 사람들을 더 책임감있고, 근면성실하며, 인내심이 강하고 조직에 잘 적응할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고정관념Ⅱ 여성평균=2.33; 남성평균=2.13). 반면에 남성은 여성보

다 북한 사람들을 더 개방적이라고 생각한다 (고정관념VI 여성평균=1.21; 남성평균=1.32).

연령대별로는 세 고정관념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50-54세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고정관념I 과 II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반면에 고정관념V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다.

<표 5>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지각에 있어 집단간 평균차이 검증

성격특성 설명변인	고정관념 I	고정관념 II	고정관념 III	고정관념 IV	고정관념 V	고정관념 VI
성	not sig.	F=17.95 p<.001	not sig.	not sig.	not sig.	F=3.24 p<.08
연령	F=3.25 p<.001	F=1.96 p<.06	not sig.	not sig.	F=1.88 p<.08	not sig.
교육수준	F=10.05 p<.001	F=7.15 p<.001	not sig.	F=5.20 p<.01	F=2.38 p<.07	not sig.
직업	F=11.72 p<.001	F=4.75 p<.01	not sig.	F=7.26 p<.001	not sig.	not sig.
응답자의고향 (출신지역)	not sig.	not sig.	not sig.	not sig.	not sig.	not sig.
부모의 고향	not sig.	F=6.24 p<.05	F=3.34 p<.07	not sig.	not sig.	not sig.
북에 친척유무	not sig.	F=4.38 p<.05	not sig.	not sig.	not sig.	not sig.
응답자 수입	not sig.	not sig.	not sig.	not sig.	not sig.	not sig.

주) not sig.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를 풀어서 말하자면 50-54세 연령대가 다른 사람들보다 북한 사람들을 보다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적당주의적이며, 의심이 많고, 명령이나 권위에 순종적이라고 보며, 동시에 책임감과 인내심이 있고 근면성실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순박하고 인정이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연령대보다 덜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고정관념IV는 전체 연령집단간 차이에서는 통계적 유의도를 못얻었지만, Duncan의 Multi-range test에서는 50-54세 연령집단이 20대 연령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북한 사람을 도전적이고 반항적·비판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수준별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인지도를 보면 (표6 참조), 중학교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북한 사람들을 보다 더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으로(고정관념I), 그리고 더 비판적이고 도전적으로(고정관념IV) 인지하며, 또한 동시에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성실할 것(고정관념II)이라고 생각한다. 대학교육이상 을 받은 사람들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북한 사람을 더 순박하고 인정이 많다고 생각한다 (고정관념V).

북한 사람의 성격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직업별로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고정관념I, 고정관념II, 고정관념IV에서 직업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7 참조).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비해 북한 사람을 보다 더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이며, 명령이나 권위에 순종적이고, 의심 많고, 적당주의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고정관념I). 동시에 이들은 관리및 사무직이나 생산직에 비해 책임감, 근면성실, 인내심에서 보다 긍정적이라고 지각한다 (고정관념II). 이들은 또한 북한 사람들이 반항적, 도전적, 비판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향도 다른 직업집단에 비해 높다(고정관념IV). 반면,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직업집단에 비해서 북한 사람이 도전적, 비판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낮다.

<표 6> 교육수준별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차이검증

성격특성	교육수준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Duncan range test ¹⁾	
					①	②
고정관념I	①중학교이하	2.23	.47	32		
	②고등학교	2.02	.43	249	*	
	③2년제대학	1.91	.45	67	*	
	④4년제대학이상	1.83	.40	116	*	*
고정관념II	①중학교이하	2.52	.46	34		
	②고등학교	2.17	.47	248	*	
	③2년제대학	2.17	.49	69	*	
	④4년제대학이상	2.11	.42	119	*	
고정관념IV	①중학교이하	2.26	.50	32		
	②고등학교	1.96	.47	253	*	
	③2년제대학	1.91	.54	68	*	
	④4년제대학이상	1.89	.44	118	*	
고정관념V	①중학교이하	1.97	.57	33		
	②고등학교	1.89	.50	252		
	③2년제대학	1.99	.47	69		
	④4년제대학이상	2.03	.54	121	*	

주)1) *은 유의도 $\alpha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표 7> 직업별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차이검증

성격특성	직업	평균	표준편 차	사례수	Duncan Range Test		
					①	②	③
고정관념I	①관리및 사무직	1.90	.42	214			
	②공무원	1.91	.44	72			
	③생산직	1.93	.42	78			
	④서비스직	2.20	.44	95	*	*	*
고정관념II	①관리및 사무직	2.15	.43	215			
	②공무원	2.20	.47	73			
	③생산직	2.08	.51	79			
	④서비스직	2.32	.48	97	*		*
고정관념IV	①관리및 사무직	1.95	.48	218			
	②공무원	1.96	.48	75			
	③생산직	1.79	.42	79	*	*	
	④서비스직	2.12	.50	94	*	*	*

부모의 고향이 이북이거나 북에 친척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북한 사람들이 책임감있고 근면성실하고 조직에 잘 적응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응답자의 출신 지역이 북한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적 지각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본 결과, 남한내의 지역간의 반목적 고정관념과는 달리, 남한내의 출신지역이 북한 사람들의 성격특성을 지각하는데 어떤 유의미한 차이도 보이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남한의 어느 지역출신 사람이건 북한 사람의 성격특성을 지각할 때는 유사한 성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응답자의 수입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북한 사람의 성격특성을 지각하는데 어떤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 고정관념을 지각하는 사람의 여러 특성에 따라 북한 사람들의 성격특성을 지각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고정관념III, 고정관념V, 그리고 고정관념VI에 대해서는 남한사람들이 대체로 유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 사람이 소극적이고 확실적인 사고를 할 것이며, 융통성과 창의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점, 순박하고 인정이 많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개방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이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4.3 사회문화적 이질감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 전혀 다른 사회체제하에서 지나온 기간이 거의 반세기가 된다. 남북분단 즈음에 태어난 사람이 이제는 장성해서 한 가정을 꾸리고 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할 정도의 세월인 것이다. 그동안 남·북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및 사상속에서 매우 다른 방식의 사회화를 경험하였으며, 따라서 생각하는 방식, 삶에 있어 의미를 추구하는 방식,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 및 기타 여러 생활에서 서로간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문제는 이런 차이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나이다. 즉 이러한 차이가 장기간의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에서 결과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도록 인성자체가 변화되었다고 보느냐 아니면 체제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체제가 바뀌고 재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능한 것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알아보기 위한 첫 단계로서 남북한 사람들간의 차이가 감지될 영역들이 어디이며, 또 어느 만큼의 차

이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관계를 맺어나가는데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이 처음에는 서로에 대해 흥미를 끌기에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지만, 같이 살아가는 데에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있다. 특히 가치나 사고방식의 차이는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형성·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간의 실제적인 차이라기 보다는 지각된 차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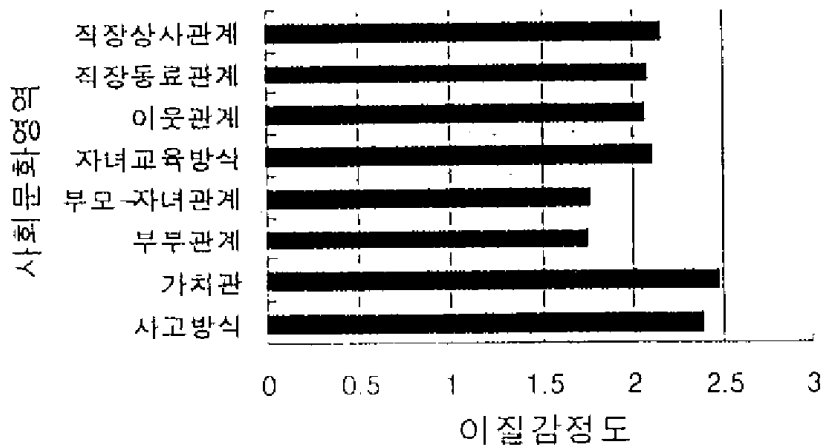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8개의 모든 영역에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는 이질감의 정도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가치관과 사고방식에서의 차이를 가장 심하게 지각하였다. 북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우리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97%, 93%로 나타났으며, 이들중 매우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각각 전체응답자의 51%, 44%나 되었다.

공적인 관계인 직장동료나 상사와의 관계가 사적인 관계인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보다 훨씬 더 이질적일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인간관계중 가장 일차적인 관계인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는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35.6%, 34.9%로 8개의 영역중 차이를 가장 적게 느끼는 영역이었다 (그림 1 참조).

<표 8> 북한 사람과의 사회문화적 이질감 정도에 대한 지각

사회문화적 영역	① 전혀 다르지 않을 것	② 다소 다를 것	③ 매우 다를 것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고방식	6.6%	47.7%	44.2%	485	2.38 (.61)
가치관	3.1%	46.3%	50.6%	484	2.48 (.56)
부부관계	35.6%	55.9%	8.5%	481	1.74 (.61)
부모-자녀관계	34.9%	54.4%	10.8%	482	1.76 (.63)
자녀교육방식	19.0%	51.6%	29.4%	483	2.10 (.68)
이웃관계	18.5%	56.2%	25.3%	482	2.06 (.66)
직장동료관계	15.9%	59.8%	24.2%	483	2.08 (.63)
직장상사관계	15.1%	54.5%	30.4%	483	2.15 (.65)

<그림 1> 사회문화영역별 이질감정도 비교



본 연구에 포함된 8개의 사회문화적 이질감의 영역들이 어떻게 상호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9 참조). 그 결과 세 요인이 고유가(eigenvalue)가 1.0를 넘었다. 추출된 세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을 고려하여 각각을 가치요인, 가족관계요인, 대인관계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가치요인에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가족관계요인에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자녀양육방식이, 대인관계요인에는 이웃관계, 직장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가 포함되었다. 이들 세 요인은 전체 사회문화적 이질감의 변이중 75.3%를 설명하고 있다. 각 요인에 대해 신뢰도를 분석할 결과 모두 신뢰도계수인 크론바흐 알파(Cronbach α)가 .70을 넘어서 양호한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각 요인이 신뢰할 만한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입증되었으므로, 각 요인의 항목들을 합산하여 평균을 구한 다음, 이를 각 요인의 대표 점수로 삼았다. 그리고 이들 세요인에서의 차이를 유발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우선 가치요인은 성파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이질감 지각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표10 참조). 여성이 남성보다 북한 사람들이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서 우리와 더 다르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여성평균 2.55, 표준편차 0.50; 남성평균 2.38, 표준편차 0.54). 연령집단별 가치요인에 대한 이질감 차이를 보면, 20대연

령층이 30대, 40대 후반의 연령층보다 북한 사람을 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11 참조). 비록 통계적 유의도는 얻지 못했지만, 55세 이상의 연령집단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북한 사람이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있어서 우리와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북한 사람들과의 사회문화적 이질감 요인분석

사회문화적 영역	요인부하량			신뢰도 계수
	가치요인	가족관계요인	대인관계요인	
사고방식	.90			$\alpha = .80$
가치관	.89			
부부관계		.86		$\alpha = .71$
부모-자녀관계		.85		
자녀교육방식		.46		
이웃관계			.79	$\alpha = .85$
직장동료관계			.88	
직장상사관계			.87	

<표 10> 북한 사람과의 사회문화적 이질감정도 지각에 있어서 집단차이 일원변량
분석결과

이질감영역 설명변인	가치요인	가족관계요인	대인관계요인
성	F=9.45 p<.001	F=3.97 p<.05	not sig.
연령	F=2.44 p<.05	not sig.	not sig.
교육수준	not sig.	F=2.78 p<.05	F=3.31 p<.05
직업	not sig.	F=3.62 p<.05	F=2.34 p<.08
결혼여부	not sig.	not sig.	not sig.
개인수입	not sig.	not sig.	not sig.

<표 11> 북한 사람과의 가치요인 이질감 지각에 있어서 연령차이검증

이질감영역	연령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Duncan Range Test	
					①	②
가치요인	① 18-24세	2.56	.55	75		
	② 25-29세	2.50	.52	119		
	③ 30-34세	2.38	.53	95		
	④ 35-39세	2.31	.52	78	*	*
	⑤ 40-44세	2.41	.52	47		
	⑥ 45-49세	2.22	.52	29	*	*
	⑦ 50-54세	2.44	.54	24		
	⑧ 55세 이상	2.62	.50	11		

가족관계요인은 성, 교육수준, 그리고 직업에 따라 북한 사람에 대한 이질감을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0 참조). 여성이 남성보다 (여성평균 1.94 표준편차 .51; 남성평균 1.83, 표준편차 .51),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보다 북한 사람이 부부<표 11> 북한 사람과의 가족관계 요인 이질감 지각에서의 교육수준, 관계,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자녀교육방식에서 우러와는 다를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표12 참조).

<표 12> 북한사람과의 가족관계요인 이질감 지각에서의 교육수준, 직업별 차이 검증

이질감영역	독립변인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Duncan Range Test	
					①	②
가족 관계 요인	교육수준					
	① 중학교이하	1.91	.61	33		
	② 고등학교	1.92	.51	250		
	③ 2년제 대학	1.80	.46	70		
	④ 4년제 대학이상	1.78	.50	123		*
	직업					
	① 관리·사무직	1.85	.51	222		
	② 공무원	1.72	.52	73		
③ 생산직	1.99	.47	82	*	*	
④ 판매·서비스직	1.88	.50	94			

<표 13> 북한 사람과의 대인관계요인 이질감 지각에서의 교육수준, 직업별 차이 검증

이질감 영역	독립변인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Duncan Range Test		
					①	②	
대인 관계 요인	교육수준				①	②	
	① 중학교이하	1.21	.23	29			
	② 고등학교	1.23	.21	237			
	③ 2년제 대학	1.27	.21	65	*	*	
	④ 4년제 대학이상	1.30	.19	114			
	직업					①	②
	① 관리·사무직	1.24	.20	208			
	② 공무원	1.30	.21	72			
③ 생산직	1.27	.23	75				
④ 판매·서비스직	1.22	.18	85		*		

대인관계요인에서는 교육수준과 직업만이 이질감 지각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2년제이상 대학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직장내 대인관계나 이웃관계에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와는 다를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13 참조).

독립변인별로 요약해보면, 성별은 가치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가족관계에서의 이질감 지각에 차이를 가져오며, 교육수준과 직업간 차이는 가족관계와 대인관계에서의 남북한간의 이질감정도를 인지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개인간 수입의 차이나 기혼여부가 가치나 가족관계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와 어느 정도 다를 것인지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사회적 거리감

북한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가까운 정도가 서로 다른 11개의 문항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과 응답자의 생각이 일치하면 그렇다, 일치하지 않으면 아니다에 응답하게 한 다음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을 퍼센트로 계산하였다. <표 14>에서 보듯이, 옆집에 와서 살면 인사정도하겠다, 악수 정도는 하겠다, 그리고 아는 척은 하겠다는 문항에 전체응답자의 94%이상이 동의하였다. 전체응답자중 약80%이상이 북한 사람을 친구나 같은 직장동료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였다. 매우 가까운 사회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문항에 찬성한 사람은 약34%이었으며, 연인으로 환영하겠다는 48%이었다. 이러한 비율은 같은 문항으로 남한내 지역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연구한 김혜숙(1988)의 연구와 비교하면,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김혜숙의 연구에서 조사대상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의 본 연구와 동격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제한점을 염두에 두고라도 그 비교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한 번 되새겨볼 만하다. 본 연구가 남한 사람이라는 외집단이 북한 사람이라는 내집단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혜숙의 연구에서도 외집단이 서울, 경상, 충청,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을 발췌하여 <표 14>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결혼배우자나 연인과 같이 매우 가까운 관계에서는 북한 사람은 비호남권 사람들보다는 멀게 느껴지지만, 호남사람보다는 가깝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직장동료로 고용하겠다는 문항에서는 호남사람<표 13> 북한 사람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은 물론이고 기타 다른 지역사람들보다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기회가 닿으면 친구로 삼겠다는 문항에서는 충청도나 경상도출신 만큼은 아니지만 서울출신과 유사한 비율의 동의를 얻었으며, 호남사람보다도 높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북한 사람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을 남한 지역민에 대한 거리감과 함께 비교하여 보았을때 대체로 호남권 사람보다는 가깝게 그리고 비호남권 사람보다는 멀게 느껴져서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는 11개의 각 문항에 <표 1>에 나타난 척도치를 부여하고 이를 평균내어 얻는 사회적 거리감 태도점수의 비교에서도 확인 되는데, 김혜숙(198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외집단의 사회적 거리감 평균척도치가 서울은 4.05, 경상도 4.03, 충청도 4.07, 그리고 전라도는 5.29였다⁴⁾. 그런데 북한 사람에 대한 평균척도치는 4.91로 호남권과 비호남권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다.

4) 11점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한 값으로 1이면 거리감이 전혀 없나이고 11이면 거리감이 아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4> 북한사람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	그렇다 (사례수)	외집단이 평가한 사회적 거리감 평균 ¹⁾			
		서울	경상	충청	전라
1. 결혼이라도 하겠다	33.9%(457)	75%	63%	64%	20%
2. 연인으로도 환영하겠다	48.1 (455)	75	75	67	27
3. 내가 속한 친족모임에 같은 멤버로 받아들이겠다	57.4 (460)				
4. 같은 직장의 동료로 고용하겠다	83.7 (460)	80	75	80	50
5. 기회가 닿으면 친구로도 삼겠다	88.0 (482)	87	96	95	71
6. 악수 정도는 하겠다	94.0 (464)				
7. 옆집에 와서 살면 인사정도는 하겠다	95.8 (476)				
8. 단짝 친구로 삼지 않겠다	35.0 (457)				
9. 우리 가족의 일원과 결혼해서 인척이 되는 것은 거부하겠다	29.9 (461)				
10. 우리집 아이나 동생들과 같이 놀지 못하게 하겠다.	11.0 (472)				
11. 아는 척도 하지 않겠다	6.0 (468)				

주 1) 각 문항에 찬성한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원자료: 김혜숙, 1988, p.138)

사회적 거리감의 태도점수를 사용하여 북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인지하는데 있어서 남한 사람들간에 차이가 있는 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고창, 개인수입별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과 교육수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표 15>에서 보듯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북한 사람들에게서 더 큰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통계적 유의도는 얻지 못했지만, 50대이상의 연령층이 그보다 젊은 연령층보다 북한 사람을 멀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⁵⁾

5) 50대 연령층의 사회적 거리감 평균점수는 약 5.37정도이었는데 반해, 그외 연령층은 4.87정도이었다.

<표 15> 북한 사람과의 사회적 거리감에서의 성별, 교육수준별 차이 검증

독립변인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Duncan Test	ANOVA	
교육수준				①		
사회적 거리감 태도 접수	① 중학교이하	5.41	1.28	24		
	② 고등학교	4.99	1.15	224		F=3.37
	③ 2년제 대학	4.70	.95	61	*	p<.05
	④ 4년제 대학이상	4.75	1.13	109	*	
성						
	① 남성	4.79	1.11	300		F=13.99
	② 여성	5.24	1.13	116		p<.001

5. 결 론

본 연구는 북한 사람들이 우리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다르며, 이러한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개인 또는 집단의 수준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물론 남북한 간의 정치, 경제 및 사회체제에 얼마 만큼의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여기서는 바로 그러한 사회구조적 차이때문에 개인의 인성, 가치관, 그리고 개인대 개인의 대인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을 두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적 인지와 감정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회심리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북한 사람에 대해 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고정관념, 사회문화적 이질감,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을 분석함으로써 알아보았다. 분석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며, 고정관념의 強度를 보면, 전자가 더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사람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은 직장생활이나 기타 단체활동에 적응하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성적 특성으로, 인내심이 강하다, 조직에 잘 적응한다, 근면성실하다, 명령이나 권위에 순종적이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 그들이 획일

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또한 창의성이나 융통성 등에서 상당히 뒤떨어질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성격특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북한체제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고, 개인적 자율성보다는 조직과 국가에 대한 전면적인 충성과 복종을 강조하는 체제이고 그런 체제 하에서 장기간 살아온 사람들은 창의력, 융통성, 개방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론에서 나온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특성은 남북통일후 북한 사람들이 급변하는 자본주의체제에 적응하는데 장애가 될 소지가 많으며, 이를 극복하도록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배려가 요구된다.

둘째,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중 기회주의·적당주의적이고 야기적이라는 고정관념과 근면성실하고 책임감과 인내심이 강하다는 고정관념은 남한 사람들간에도 지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나타났는데, 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 및 직업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교육수준에 따라 그리고 직업에 따라 북한 사람에 대해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후 민족화합의 방안을 논하는 과정에서도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모두 같은 인식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단순하고 천편일률적인 통일홍보나 교육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 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이 후속연구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 사람에 대해 느끼는 사회문화적 이질감의 정도를 8개의 영역별로 조사한 결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영역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부부관계와 자녀관계는 이질감을 가장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영역에서도 60%이상의 응답자들이 북한 사람이 우리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율로 보아 결코 이질감이 작다고 할 수는 없다. 북한 사람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느끼는 정도는 성, 직업,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성이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이질감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높은 이질감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

넷째, 북한 사람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북한 사람을 이웃이나 직장동료 그리고 알고 지내는 친구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50-60%의 응

답자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별로 호의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남한내 지역간에도 상당한 사회적 거리감이 존재하며, 사실 북한 사람에 대해 남한 사람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은 비호남사람이 호남사람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보다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느 측면에서는 남북한의 통합후 갈등은 현재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이나 갈등만큼 고질화되지 않았으며,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나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통일후 남북간의 보다 빠른 내적 통합을 위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대안들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선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통일후 남북간 권력이나 경제적 부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개인과 집단의 차원에서 갈등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아무리 개인적 수준에서 편견적 고정관념을 없애고 한 민족으로 화합을 이루어야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사회제도적 수준에서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조장한다면 북적하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과의 내적 화합은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현재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양면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통일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는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어 통합에 기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면이 강화되어 현재의 부정적 고정관념을 북한 사람들의 인성적 요인으로 고착화시킬 수도 있다. 현재로서 다행인 점은 북한 사람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남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원인제공자는 개인이 아니라 체제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부정적 고정관념이 내적인 원인에 의해 형성될 경우 이는 원만한 대인관계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지만, 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에 대해 훨씬 관용적으로 되고 이를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합되었을때, 남한 사람들은 현재 그들이 북한 사람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부정적 고정관념을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북한 사람이 새로운 체제에 잘 적응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격특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재확인되고 내적 성향으로 고착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나 사회는 여러 가지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기개발과 자기변신의 의지가 있는 북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배려해

야할 것이다. 또한 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북한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또 그들의 고정관념과 부합하는 사람들도 새로운 체제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어렵지않게 변화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교육시켜야한다.

집단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 대등하면서도 상호협동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속에서 직접적인 접촉의 기회를 늘여야한다는 것을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은 제안하고 있다(Stephan, 1985; 한국심리학회, 1988). 그런데 그런 접촉의 기회는 남북한 통일이 된다고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접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차원에서의 남북한간의 불평등을 완화시켜보려는 제도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북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통해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차원에서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남북간 직접적인 접촉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탈북자들이 성공적으로 남한 체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이들의 성공사례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북한 사람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부정적 이미지는 약화 또는 수정하도록 간접적 접촉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고홍화. 『자료로 읽은 한국인의 지역감정』. 서울: 성원사. 1989.
- 고홍화·김창주. 『군생활이 지역감정에 미치는 영향』. 1989.
- 고홍화·김현섭. 『한국인의 지역적 편견』. 미출판. 1976.
- 김진국. “지역민간의 편견적 태도연구.”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6. 1984.
- 김진국. “영·호남 대학생들의 상호간 차이지각연구.” 『사회심리학연구』 3(2). 1987.
- 김혜숙.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 세대간 전이가 존재하는가.”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서울: 성원사. 1988.
- 김혜숙. “지역고정관념이 귀인판단과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993.
- 나간채·정근식. “직업계층간의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2 (여
 름호). 1988.
- 나간채. “지역(민)간의 사회적 거리감”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
 등』. 서울: 성원사. 1990.
- 남현욱. “통일이후의 지역갈등 양상과 대비책.” 1995년 정평위세미나 『통일시대의
 지역갈등』. 서울: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1995.
- 민경환. “권위주의성격과 상호적 편견-대학생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2). 1989.
-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대방안
 중심』.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2-14. 1992.
- 송관재·김범준·홍영오·이훈구.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관
 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1). 1997.
- 이수원. “집단 고정관념의 변화”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서울:
 성원사. 1988.
- 이진숙. “8도인의 성격특성에 대한 선입관념.” 『사상계』 12. 1959.
- 이진환. “부산지역인의 타지역인에 대한 인상 및 태도.” 한국심리학회편, 『심리학에
 서 본 지역감정』. 서울: 성원사.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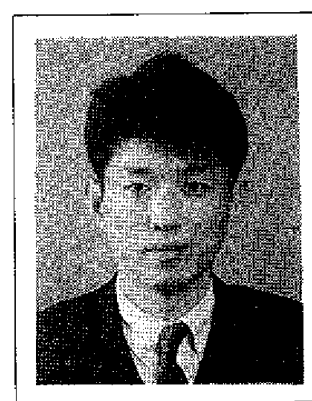
- 장근승. "지역편견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조민.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민족통일연구원보고서 95-24. 1995.
- 최수영 · 김성철 · 김병로 · 아우영. 『1994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4-19. 1994.
- 최수영 · 이우영 · 조민 · 최진욱. 『199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5-26. 1995.
-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서울: 성원사. 1990.
-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서울: 성원사. 1988.
- 홍성열. "영 · 호남인에 대한 타지역인의 인상형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2). 1993.
- Allport G.W.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ss: Addison-Wesley. 1954.
- Ashmore R.D. & Del Boca, F.K. "Conceptual approaches to stereotypes and stereotyping." In D.L. Hamilton (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 Hillsdale, N.J.: LEA. 1981.
- Ashmore R.D. & Del Boca, F.K. "Psychological approaches to understanding intergroup conflict." In P.A. Katz (ed.), *Towards the elimination of racism*. New York: Pergamon Press. 1976.
- Bogardus E.S. "Measuring social distances." In K. Thomas (ed.), *Attitudes and behavior*. London: Penguin Books Ltd. 1925.
- Barton W. et al. *Social Psychology*. N.Y.:Random House. 1974.
- Campbell D.T. "Stereotypes and the perception of group dif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s*, 22. 1967.
- Rosenthal R. & Jacobson L.F. *Pygmalion in the classroom*.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8.
- Snyder M. and Swann W.B. Jr. "Hypothesis testing processes in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978.

Stephan W.G. "Intergroup relation." In G. Lindzey & E. Aronson(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 New York: Random House. 1985.

Stephan C.W. and Stephan, W.G. *Two social psychologies*. 2nd edition.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0.

Wilder D.A. and Allen V.L. "Group membership and preference for information about othe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 1978.

北韓 社會主義體系의 轉換과 構造的 制約



盧 炳 喆(서울大)

목 차

<요약문>	225
1. 머리말	229
2. 분석모델의 구성	231
3. 북한 사회주의체제 존속의 위기	238
4.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전환유형 분석	248
5. 맺는말	264
※참고문헌	268

【요약문】

본 연구는 北韓社會主義體制 轉換(transformation)의 문제를 체계이론의 한 분야인 非平衡熱力學的 接近을 통해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 있어서 분석방법으로 體系分析(systems analysis)을 채택한 이유는 체계가 빈번한 긴장과 끊임없는 위기속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존속시켜 나가게 되는가를 연구하는 데 가장 적절한 이론적 분석방법이기 때문이다. 체계분석의 풍부한 이론적 개념들은 정치체계의 안정이나 유지와 같은 정태적인 사실을 분석할 수 있는 이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동요사태, 중압, 통제 등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정치체계가 이에 어떻게 적용해나가며 이를 규제하는가를 동태적이고 繼期的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특정 정치체계의 불안정 혹은 붕괴과정까지도 분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엔트로피(entropy) 개념은 과거 평형개념에 기초한 분석이 지니고 있는 딜레마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분석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 있어서 분석수준은 정치체계의 하위개념인 體制(regime)이며,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북한사회주의 체제이다.

본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假說은 비평형열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개방체계로서의 북한사회주의체제는 체계 엔트로피가 극대상태로 나아가고 있으며 따라서 적정 수준으로 엔트로피를 감소시키지 않는 한 체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토대로 첫째, 舊 사회주의체제와 유사한 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구조를 지닌 북한체제가 내외적 중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메카니즘은 무엇인가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전환이 불가피한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체제전환이 불가피하다면 전환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北韓社會主義體制는 1948년 수립이후 한국전쟁과 일련의 동요사태를 극복하면서 195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전체주의적 통치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이는 非平衡熱力學的 觀點에서 볼 때, 최소 엔트로피 생산에 상응하는 안정된 상태, 즉 熱力學的 停滯狀態를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舊 소련의 해체와 舊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김일성의 사망, 경제난의 가중, 한

반도를 둘러싼 역학구도의 변화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중압에 직면한 최근의 북한체제는 평형상태에서 점차 극대 엔트로피 상태로 접근하고 있으며,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행동과 반응의 기복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북한체제의 엔트로피가 증대함으로써 새로운 질서의 구축을 통한 체제존속이나 혹은 체제소멸이라는 분기상태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평형열역학에서 分岐(bifurcation)는 평형상태로부터 멀리 벗어난 상태와 조건에 놓인 複合的 開放體系의 행동을 의미한다. 비평형상태하의 체계의 행위는 평형상태나 그 근처에서의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비평형상태하에서의 체계의 행위는 非線形性(nonlinearity)을 나타낸다. 북한사회주의체제의 轉換方向에 대한 전망이 어려운 것은 바로 平衡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체계행동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반면에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전환이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또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공통적 시각은 궁극적으로는 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이 동구의 변화와 같은 급격하고 근본적인 체제전환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북한체제가 체계 엔트로피의 증가에 대해 負 엔트로피(negative entropy)를 산출해내거나 혹은 내부 엔트로피의 증가를 억제하는 메카니즘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체제가 각종 대내외적 위기에 봉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유지시켜 나가고 있는 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舊 사회주의체제와 유사한 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구조를 지닌 북한체제가 내외적 중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메카니즘은 무엇이며, 이러한 메카니즘이 체제의 엔트로피와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북한체제가 지닌 특수한 체제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구조로는 남북분단과 주변4강이라는 狀況構造, 체제작동의 기본원리가 되고 있는 주체사상을 중심으로하는 理念構造, 유인지배의 權力構造, 자력생성의 經濟構造, 그리고 정보통제의 還流構造 등이 있다. 이 구조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북한사회주의체제 내부의 負 엔트로피 산출 메카니즘으로서 기능함으로써 북한체제를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체제구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체제전환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엔트로피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방체계로서의 북한체제에 있어 체계 엔트로피를 증대시키는 주요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負 엔트로피 산출을 통한 북한체

제의 적응이 어떠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가를 밝힘으로써, 기존 체제의 유지가 한계상황에 있으며 따라서 체제구조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체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舊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전환을 분석한 후,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을 모형화시켜 이를 북한체제의 전환에 적용시키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전환모형에 있어서는 먼저 체제전환의 성격을 크게 體系的(system) 전환과 體系內的(systemic) 전환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체제전환의 주체와 양상에 따라 위로부터의 전환, 아래로부터의 전환, 급진적 전환, 점진적 전환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 主要語 : 適應, 分岐, 엔트로피, 負엔트로피, 振動, 體制構造,
體系的, 體系內的, 轉換, 非線形性

1. 머리말

북한 정치체제는 1948년 수립이후 한국전쟁과 그 후 일련의 동요사태를 극복하면서 195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전체주의적 통치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이는 非平衡熱力學(nonequilibrium thermodynamics)적 관점에서 볼 때, 최소 엔트로피 생산에 상응하는 안정된 상태, 즉 열역학적 停滯狀態를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외적으로 심각한 중압에 직면한 최근의 북한체제는 평형상태에서 벗어나 점차 극대 엔트로피 상태로 접근하고 있으며,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행동과 반응의 기복과정을 보여주고 있다.¹⁾ 이는 북한 정치체제의 엔트로피²⁾가 증대함으로써 새로운 질서의 구축을 통한 체계존속이나 혹은 체계소멸이라는 분기상태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평형열역학에서 分岐(bifurcation)는 평형상태³⁾로부터 멀리 벗어난 상태와 조건에 놓인 복합적 개방체계의 행동을 의미한다. 비평형상태하의 체계의 행위는 평형상태나 그 근처에서의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비평형상태하에서의 체계의 행위는 非線形性(nonlinearity)을 나타낸다.⁴⁾ 북한사회주의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어려운 것은 바로 평형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체계행동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1) Yong-Pil Rhee, "Nonequilibrium Thermodynamics Approach to Korean Unification Process : A Search for New Paradigm," in *Complex Systems Model of South-North Korean Integration : Systems Perspective*, Keynote Speech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by Korean Society for Systems Science Research &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ystems Science, May 17-18, Seoul Nat'l University, 1996, pp. 3-6.

2) 엔트로피(entropy)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en'과 變化 혹은 轉化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tropy'의 합성어로 '變化의 內包量'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것이 엔트로피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나, 物理量의 변화가 있는 곳에는 엔트로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엔트로피는 변화의 함수로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변화를 내포하고 있으며, 엔트로피의 증가는 사용가능한 에너지의 감소와 이에 따른 무질서의 증가를 의미한다. 사회체계를 포함한 모든 체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변화의 개념이 있다면 바로 엔트로피 개념이다.

3) 여기서 平衡(equilibrium)이 의미하는 것은 체계가 무작위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내적인 힘이 작용하는 역학적 안정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폐쇄체계에 적용되는 靜態狀態(static state)가 아니라 개방체계에 적용되는 停滯狀態(steady state)를 말한다.

4) 개방체계에 있어서의 非線形性과 平衡으로부터의 거리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평형상태에 근접한(near-equilibrium) 상태에서의 체계작동은 선형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데 비해, 평형상태에서 멀리 떨어진(far from equilibrium) 상태에서의 체계작동은 비선형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이는 체계의 진동이 증폭되고 이에 따라 체계상태의 불안정이 증대될 때 체계작동과정은 그만큼 예측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I. Prigogine, "Foreword," in *New Evolutionary Paradigm*, Laszlo (ed.), (New York : Gordon and Breach Science Publisher, 1991), pp. xiii-xvii

본 논문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존속가능성의 문제를 체제 전환⁵⁾의 가능성과 유형에 초점을 맞춰 체계론적 시각에서 거시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현 북한체제는 여러 면에서 독특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체제의 特殊性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북한체제에 대한 올바른 認識과 糾明이 어렵다. 지금까지의 많은 노력⁶⁾에도 불구하고 北韓政治體系를 모델화하는 작업이 부분적인 성과에 그치고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모델의 구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분석대상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조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체계이론은 방법론적으로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學際的(interdisciplinary) 접근법이며⁷⁾ 따라서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한 모델을 통해 북한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지닌 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론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정치생활은 일종의 체계로 간주되며, 정치생활의 가장 포괄적인 표현이 정치체계이며, 이는 분석의 수준(level of analysis)에 따라 정치적 권위당국자(political authorities), 체제(regime), 그리고 정치공동체(political community)로 나누어 진다. 그러므로 분석의 수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냐에 따라 체제전환의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⁸⁾ 본 연구에서 분석

5) 여기서 轉換(transformation)은 政治體系의 하위 개념인 體制의 구성요소에 있어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즉, 社會主義體制가 지니는 가치, 규범, 게임의 규칙, 권위구조 등에 있어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轉換이라는 용어는 체제의 구성요소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변화에서부터 모든 구성요소의 변화, 예를 들어 단순한 하위구조의 변형에서부터 체계의 붕괴와 나아가 해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개념으로는 轉移(transfer)나 移行(transition)의 개념이 있으나, 개방체계로서의 정치체계는 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수단으로서 자체전환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轉換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6)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북한체제를 분석하기 위해 적용된 접근법의 종류는 10여가지가 넘는다. 1)진체주의적 접근, 2)역사-문화론적 접근, 3)정치문화적 접근, 4)근대화-발전론적 접근, 5)자유화 접근, 6)조직론적 접근, 7) 기능주의적 접근, 8)내재론적 접근, 9)엘리트 접근, 10) 집단갈등 접근, 11) 정당성 위기이론적 접근, 12)세계체계이론적 접근, 13)계급이론적 접근 등이 그 예이다. 각각의 접근법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서재진, "북한연구의 현황과 과제", (민족통일연구원 제 1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1991, 10, 28) 참조.

7) Kenneth D. Bailey, *Social Entropy Thoer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0) p. 16.

8) 예를 들어 현재 북한에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가의 논의에 있어서, UN 동시가입이나 핵문제의 타결, 자유무역지대의 설정 등의 조치를 늘어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시각은 권위당국자의 수준에서의 전환을 의미한다. 반면에 이데올로기, 통치유형, 사회주의적 행동양식의 고수 등을 늘어 전환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시각은 체제 수준에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이 정치체계의 분석, 특히 북한체제에 대한 분석에서 흔히 간과되고 있는 점이다.

의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적 가치와 규범 그리고 권위구조를 지니고 있는 體制 수준에서의 정치체계이며,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북한사회주의체제이다. 체제는 세 가지 구성요소들, 즉 정치체계의 가치(목표와 원칙), 게임의 규칙 또는 규범 그리고 권위구조들로 구성되며,⁹⁾ 따라서 체제전환이란 구성요소들에 있어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2. 분석모델의 구성

2.1 체제전환모델의 구성

2.1.1 체제전환의 이론적 기초

일반체계이론의 핵심개념인 '體系'라는 개념을 정치학연구에 본격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학자는 이스튼(David Easton)으로, 그는 정치체계를 "환경과 관계를 갖는 개방체계이며,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끊임없이 대처하는 適應的 反應體系(adaptive responding system)"로 규정하고 있다.¹⁰⁾ 이스튼은 "특정한 혹은 모든 정치체계들이 안정된 혹은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어떻게 존속하여나가는가?"하는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어떤 체계도 그 근본적인 기능없이는 지속할 수 없는 정치체계의 生命過程(life process)과 이를 존속시키는 反應樣式을 밝히고 있다.¹¹⁾ 정치체계는 '諸 가치들이 사회에 대해 權威的으로 배분되어지는 상호작용'이며, 이러한 점은 정치체계를 동일한 환경내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체계들과 구분하여 주는 특징이다.¹²⁾ 정치체계가 그 스스로를 존속해

9) David Easton,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 Willy, 1966), p.193.

또한 체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정치체도간의 관계, 통치자와 시민간의 연결유형, 정부구성의 방법, 이익대표체계의 양식, 통치의 행태 등에 관한 공식적 규칙"을 의미하기도 한다. F. H. Cardoso, "On the Characterization of Authoritarian Regimes in Latin America," in *The New Authoritarianism in Latin America*, David Collier (ed.),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p. 38.

10)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op. cit., pp. 17-18.

11) Open Systems Group (ed.), *Systems Behavior*, 3rd Ed., (London: Harper and Row, Publisher, 1981), p. 246.

12)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op. cit., p.21.

나가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대하여 가치를 배분할 수 있어야 하며, 체계구성원들이 이러한 배분을 구속력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本質變數들(essential variables)이라고 하며, 체계에 가해지는 동요사태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체계에 重壓으로 작용하는가를 함축하고 있다. 본질변수가 체계가 존속해 나갈 수 있는 臨界範圍(critical range)를 벗어났을 때 중압은 발생하며, 본질변수의 기능이 원활하게 충족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정치체제도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체계의 붕괴가 혼란의 일은 아니며, 체계가 존재해 나가는 한 중압도 항상 존재하게 된다. 위기가 심각해지면 권위당국자들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이 결정들이 최소한의 반대로 수용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본질변수의 작동여부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권위당국자들이 부분적으로 정책결정을 하지 못할 때, 혹은 그러한 결정들이 권위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질변수들은 대치될 수도 있다.¹³⁾ 따라서 모든 정치체계의 특징적 요소의 하나는 체계의 본질변수에 가해지는 중압에 대처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치체계는 압박한 중압에 대처하는 데 적절한 수단을 취하는 데 실패할 경우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체계가 중압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그 대응양식의 종류나 성질을 고찰해 봄으로써 체계가 중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연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체계론적 접근법은 세계를 환원불가능한 통합체계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하나의 체계는 구조적으로는 분할가능한 전체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창발적(emergent) 특성을 지닌 분할불가능한 통합체이다. 창발적 특성은 분리된 구성요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체의 수준에서 보여지는 새로운 특징의 출현에 의해 나타나며, 이는 체계는 부분들의 합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시너지(synergy)의 개념으로 나아간다.¹⁴⁾ 창발적 특성에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다. 첫째, 이들은 체계가 구성요소들로 분해되면 상실된다. 예를 들어, 생명의 특성은 일단 신체로부터 생명이 제거되면 기타 기관들에는 내재되어

13) *ibid.*, p. 24.

14) 흔히 시너지는 "전체는 부분들의 합 이상이다"라는 문구와 연관지어지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너지는 부분들이 혼자서는 성취할 수 없는 효과 즉, 상호의존적인 효과를 의미한다. 전체가 반드시 부분들의 합 이상일 필요는 없다. 다만 다를 뿐이다. Peter Corning, "Synergy and Self-organizing in the Evolution of Complex System", *Systems Research*, Vol. 12, No. 2, 1995, pp. 89-121.

있지 않는다. 둘째, 어떤 구성요소가 전체로부터 분리되면, 이 구성요소 그 자체는 그것이 지닌 창발적 특성을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손은 신체로부터 절단되게 되면 기록을 할 수 없으며, 눈의 경우도 볼 수가 없게 된다. 또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시너지가 더 많은 시너지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새롭게 출현한 전체는 그 자신 스스로가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시너지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너지는 자기구성(self-organization) 현상의 핵심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사회주의 정치체계에 있어 체제전환의 문제를 체계론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몇 가지 理論的 假定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첫째, 북한 정치체제는 제한적 범위내에서 환경과 교류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開放體系이다. 둘째, 제한적 개방체계로서의 북한정치체제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適應的 反應體系이다. 셋째, 적응적 반응체계로서의 북한정치체제는 자체 변혁과 자기구성을 포함한 다양한 適應메카니즘을 지니고 있다. 넷째, 이러한 적응메카니즘은 그 범위에 있어서 制約을 받는다. 다섯째, 이러한 제약은 체계구조의 보다 높은 위계적 수준에 있는 체계구조들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에서 오는 構造的 制約이다. 여섯째, 따라서 이러한 제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체계구조에 있어서 어떠한 형식이든지 간에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엔트로피 법칙과 소산구조의 이론에 의하면, 어떤 체계의 위기가 곧 그 체계 자체의 위기는 아니며 상위체계의 수준에서 볼 때 그 위기는 보다 높은 질서의 체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진화과정이다. 즉, 위기가 체계자체의 위기가 되기보다는 보다 높은 질서를 위한 하나의 過程으로 본다.¹⁵⁾ 보다 높은 질서로의 진화는 당연히 하위체계의 비평형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체계는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유입하고 엔트로피를 방출함으로써 變化되어 나가는 것이다.¹⁶⁾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정치체계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변화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假定을 전제할 수 있다. 1) 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수단을 지니고 있는 정치체계가 자신에게 주어진 행동범위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이를 臨界點(Critical Point)에 도달했다고 假定한다. 2) 임계점에 도달한 체계는

15) 프리고진은 이를 “搖動을 통한 秩序(order through fluctuation)”로 개념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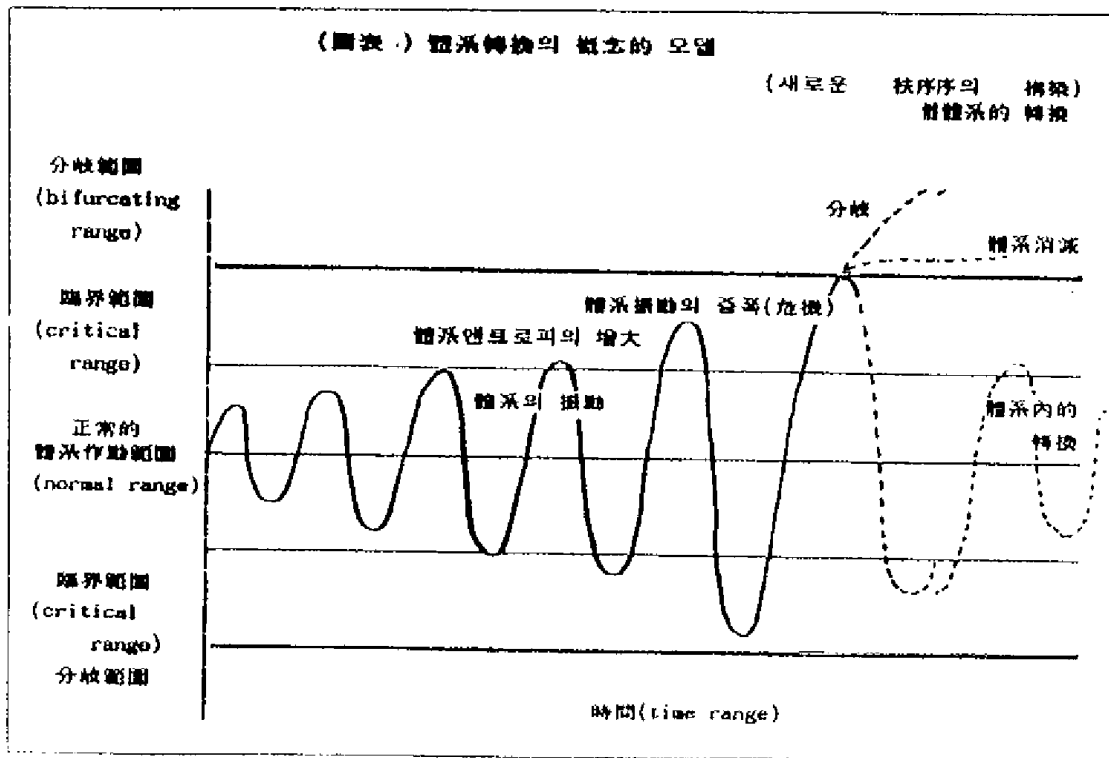
16) B. H. Weber, D. Depew, and J. D. Smith, *Entropy, Information and Evolution*, (Boston : The MIT Press, 1988), p. 231.

이를 벗어나려는 힘과 이를 억제하려는 힘의 충돌로 심한 振動을 겪게 된다. 3) 만일 체계가 임계점을 벗어나게 되면 混沌狀態에 놓이게 되고, 전혀 새로운 질서의 구축을 통한 체계의 존속이나 체계의 소멸이라는 分岐狀態에 놓이게 된다. 이 때의 체계는 평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체계행동은 비선형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따라서 체계진행방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며 단지 확률적 진술만이 가능하다.

2.2 체제전환모델의 구성

2.2.1 체제전환의 개념적 모델

본 연구에서는 북한 사회주의체제 전환의 동태적인 측면을 분석하기 위한 정치체제 전환의 개념적 모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다.



(圖表1)은 엔트로피와 관련하여 특정 체계의 작동유형을 체계진동의 측면에서 개념화한 것이다. 체계의 정상적 작동범위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체계작동을 나타내지만 체계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압에 직면하게 되면 진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진동이 임계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진동은 증폭되고 상당한 중압하에서 작동함으로써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 경우 체계는 자체변혁을 포함한 다양한 적응메카니즘을 통해서 위기에 반응하게 되는데, 만일 체계진동이 分岐範圍를 벗어나게 되면 기존의 체계가 지닌 속성과는 전혀다른 상태의 체계로 전환되거나 소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⁷⁾

2.2.2 사회주의체제 전환의 경험적 모델

변화의 개념적 정의에 나타나는 모호성과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 변화개념에 대한 操作的 定義가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존슨(C. Johnson)은 전체주의 모델이 변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변화의 내용을 1) 정치체제의 변화: 독재자에 의한 일당통치로부터 집단지도체제와 당 중심의 다두체제로의 이행, 2) 사회체제의 변화: 정치테러의 높은 의존수준에서 낮은 의존수준으로의 이행, 3) 경제체제의 변화: 고도의 중앙집권적 명령체제로부터 분권적 경제관리체제 내지 시장사회주의로의 이행, 4) 외부로부터 강요된 공산정권의 경우 : 위성국가의 지위로부터 고 객국가의 지위 확보와 민족적 공산국가로서 독립국가로의 이행¹⁸⁾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체계(전체 체계)의 변화와 체계내적 변화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특정 사회체제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된다.¹⁹⁾ 코저(L. A. Coser)에 의하

17) (도표1)은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시간에 따른 진폭변화의 함수를 응용하여 구성한 것이다. 진동함수는 $T(t) = \sqrt{\frac{L(\text{init})}{L(t)}} * T_{\text{max}} * \cos[\sqrt{\frac{g}{L(t)}} t + \phi]$ 이다. T(t)는 주어진 시간에 있어서의 변위(진폭), Limit은 최초 추의 길이, L(t)는 주어진 시간에 있어서의 추의길이, T_{max}는 최대 각도(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 진폭), G는 중력의 가속도, 그리고 Phi는 각도를 의미한다.

$$\theta(t) = \sqrt{\frac{L(\text{init})}{L(t)}} * \theta_{\text{max}} * \cos \left[\sqrt{\frac{g}{L(t)}} t + \phi \right]$$

18) Char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in C.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19) Talcott Parsons, "A Functional Theory of Change," in Amitai Etzioni and Eva

변 체계의 변화는 체계내 하위체계의 변화가 누적됨으로써 발생하며, 특정 사회체계가 갈등의 자체조절기능을 상실함으로써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할 때 기존체계가 붕괴되고 새로운 체계가 대두된다.²⁰⁾ 대체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점진적인 체계내적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변화가 갈등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혁명적 변화를 초래했던 것이다. 즉, 체제수준에서 體系內的 전환이 전체 체계의 전환 즉, 體系的 전환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 전환유형을 體制構造의 변화와 관련하여 단순화시켜 보면 크게 政治構造의 변화과 經濟構造의 변화라는 두 개의 범주를 추려낼 수 있다. 정치체계의 변화에 있어서 정치구조와 경제구조의 동시적 변화를 가져온 경우 즉, 체계 전체의 변화를 '體系的 變化(system change)'로, 정치구조의 변화없이 경제구조의 변화만을 가져온 경우 즉, 체계 일부의 변화를 '體系內的 變化(systemic change)'로 정의할 경우,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는 체계내적 변화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코르나이(J. Kornai)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고전적 사회주의의 형태, 또는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로부터의 이탈현상²¹⁾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소련 및 동구 제국은 체계적 변화를 가져온 경우로, 체계내적 변화를 추진하다가 사회주의체제 자체를 폐기한 체제붕괴라고도 할 수 있다. 반면에 북한과 쿠바의 경우는 아무런 체계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圖表2) 政治構造와 經濟構造의 變化에 따른 體系轉換의 概念的 模型

		經濟構造	
		不變化	變化
政治構造	不變化	類型 I (現 狀態의 維持)	類型 III (體系內的 轉換)
	變 化	類型 II (體系內的 轉換)	類型 IV (體系的 轉換)

Etzioni-Halevy (eds.), *Social Change: Sources, Patterns, and Consequences*, (New York: Basic Books, Inc., 1973), p. 3.

20) Lewis A. Coser, "Social Conflict and the Theory of Social Change," in Etzioni (eds.), *Social Change: Sources, Patterns, and Consequences*, (New York: Basic Books, Inc., 1973), pp.114-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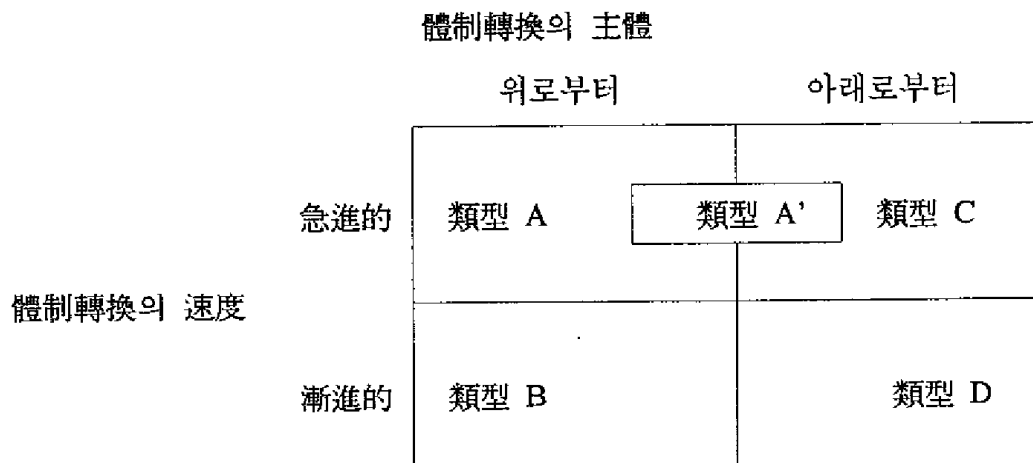
21)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 383.

(圖表2)는 體制의 수준에서 政治構造와 經濟構造의 변화에 따른 사회주의 정치체계의 전환유형을 개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치구조와 경제구조 모두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를 체계적 전환으로 보고 있으며, 어느 한 구조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를 체계내적 전환으로 보고 있다. 이 모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특정 구조에 있어서 변화의 정도에 대한 문제이지 시간의 우선성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아래 모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변화의 根本性에 관한 문제이지 시기의 優先性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한편 구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체계의 전환을 분석해 보면, 체계전환의 주체와 속도에 관한 모형은 기본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類型 A는 위로부터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으로 대변되는 舊 소련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舊 소련의 경우는 고르바초프를 중심으로 한 공산당 지도부의 위기인식에서 개혁이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경직된 관료조직을 변화시키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체계전환압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混合型의 특징도 나타내고 있다. 類型 B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처럼 집단지도체계의 확립과 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해 정치안정을 유지하는 경우로,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과감한 경제개혁조치를 통한 체계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한 경우이다. 類型 C는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동독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민대중의 압력에 의한 체계전환의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類型 D는 정치적 대안세력이 존재하고 그들 세력간의 妥協을 통한 체계의 전환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圖表3 참조).

(圖表3) 體制轉換의 主體와 速度에 關한 模型



3. 북한 사회주의체제 존속의 위기

3.1 체제의 진동 : 환경여건의 급격한 변화

3.1.1 구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舊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 개방은 북한정치체제의 작동에 중대한 환경적 증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舊 소련의 체제전환과 중국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의 대결이라는 기존의 한반도 분단의 상황 구조가 北韓 대 資本主義(한국과 미국) 대결이라는 상황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형제 사회주의국가였던 舊 소련과 동구 제국의 변화는 북한에게 있어서는 이념적인 측면에서 사회주의의 이념을 공유하는 우방국의 消滅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사회주의의 포기라는 점에서 아직도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正當性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교류의 주 대상국들이 소멸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경제난의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3.1.2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역학관계의 변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강대국간 세력관계 변화의 특징적인 측면은 미국과 러시아의 독점적 영향력 감소와 일본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 현상이다. 주변4국은 한반도가 다른 세력의 영향력하에 들어가는 것을 견제하면서 한반도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4국 모두에 있어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 긴장완화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며, 따라서 주변4국은 한반도 현상유지 차원에서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긴장증대의 주요 요소로 간주되는 북한의 체제변화를 통한 체제안정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개혁과 개방의 압력과 수준을 조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2 체제의 적응 : 부(負) 엔트로피 산출노력

3.2.1 분단구조를 통한 적응 : 긴장완화와 고조정책의 병행

북한은 1988년에 남한과의 '共存'을 최초로 표명²²⁾하는 한편, 12월에는 미국과 북경

에서 참사관급 외교관 접촉을 시작하는 등 대외정책상의 변화를 나타냈다. 이후 북한은 1990년 9월 일본과 국교정상화 추진 합의 및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1991년 9월 남북한 UN 동시가입,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의 자유무역지대 지정 등에서 나타나듯이 대미, 대일 관계정상화 추진, 남북공존 모색, 새로운 단계의 대외개방 추진 등 대외정책상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핵문제와 최근에 나타난 판문점 무력시위와 같은 일련의 군사적 긴장고조정책은 한반도 긴장의 고조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무력충돌도 불사한다는 것을 경고함으로써 북한체제에 가해지는 중압을 어느정도 완화시키려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다. 특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대북, 대일 관계정상화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현재 내부 엔트로피 증대에 대한 負 엔트로피 산출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그러한 負 엔트로피 산출을 대미, 대일 관계정상화에 따른 경제원조를 통해 이루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원조를 수용함에 있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주민에게 있어서는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아직 건재함을 과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체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외부적으로도 일방적으로 무기력하게 침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舊 소련 및 동구의 붕괴와 이에 따른 한반도 세력관계의 변화라는 급격한 환경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중압으로 체계진동을 겪고 있는 북한체제가 남북분단이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심분 활용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긴장완화를 통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변화된 환경으로부터 북한체제에 가해지는 중압의 수준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22) 김일성은 1988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중립적이며 팽팽불가담적인 하나의 련방국가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로동신문, 1989, 1.1.)라고 언급하여 해방후 최초로 南北韓 競爭體制를 共存體制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를 표명하였다. 유세희, 이정식 편, 전환기의 북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p. 245.

3.2.2 이념구조를 통한 적응 : 통합의 강화

1980년대 들어오면서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체제변화의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의 상황에서 북한은 인민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상통제와 체제단속에 돌입하였다. 현실에 모순이 키질수록 이데올로기 강화는 필연적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주체사상의 내용도 사상과 체제의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하여 갔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주체사상은 體制守護와 社會統合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변화하였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체제변화의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변화의 압력은 외부에서 먼저 왔는데, 중국이 1979년에 덩소평이 집권하면서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전환한 것과 소련에서 1985년부터 고르바초프가 주도가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사회주의체제 개혁정책은 북한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더욱이 1989년에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밑으로부터의 저항에 의하여 차례로 붕괴되고, 소련에서 사회주의 강경 보수파가 주도한 쿠데타에 시민들이 전면적으로 저항하고 나선 점은 북한 지배층에게 대단한 충격이었다. 대내적으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경제문제가 위기국면에 이르렀다. 북한경제는 사회주의체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었고, 특히 ‘형제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는 북한의 대외경제협력관계를 와해시켰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한 북한지배층의 인식은 먼저 내부적 차원에서 동구 및 소련의 변혁의 원인을 특권층의 부패하고 관료주의가 만연하여 정권과 인민대중의 괴리된 것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1991년 5월 5일 김정일과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인원들과의 담화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문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²³⁾외부적으로는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전략과 그 결과적 영향을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의 중대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²⁴⁾

대내외적 중압에 직면하여 먼저 이념적인 측면에서 수령-당-대중은 결코 분리될 수

23) 로동신문, 1991년 5월 27일

24)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을 견지하면서 사회주의를 와해시키기 위한 이른바 [평화적 이행전략]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상분화적으로 침투하여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원조를 미끼로하여 경제적으로 배수하여 반사회주의분자들을 부추켜 사회정치적 혼란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나라들을 자본주의에로 되돌려 세우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비할바 없는 우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1990.5.24.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 연설)

없는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어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등장하였다. 사상강화에 있어 또 하나의 특징은 동구 사회주의체계가 붕괴한 시기인 1989년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강조로, 중국, 동구, 소련에서 개혁을 해도 그것은 북한에게는 무관하며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에 있어서 사회관계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북한사회의 전통적인 전체주의 또는 집단주의 개념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전체주의적 사회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통합의 강조는 결국 중국, 舊 소련 및 동구에서의 개혁바람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의 동요를 방지하고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확인시킴으로써 내적 통합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다.

3.2.3 경제구조를 통한 적응 : 제한적 개방의 모색

북한은 지난 8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사회주의국가 가운데 가장 중앙집권적인 폐쇄경제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와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에 따른 환경적 중압에 대처하고, 심각한 경제난에서 증대된 체계 엔트로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경제개방의 정책을 모색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 대서방 무역확대, 합영법제정, 독립채산제 확대실시, 그리고 최근의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개발’ 등이다.

북한이 뒤늦게나마 합영·합작기업 유치를 위한 법적인 기초를 마련한 것은 북한내의 심각한 경제난에서 비롯되는 엔트로피증대와 이에 따른 체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체계안정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외경제개방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개방의 바람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엄격히 統制하고 있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개방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기존 체계질서의 변화는 용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구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경제체계의 개혁이나 중국의 개혁 개방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즉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도내에서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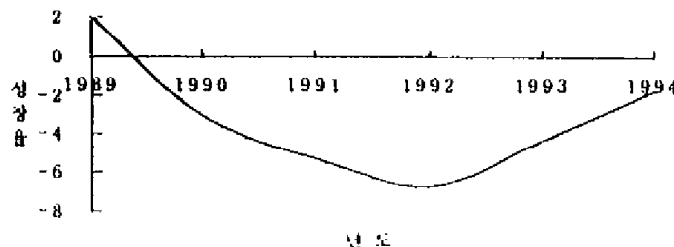
3.3 체제적응의 실패와 체제진동의 증폭

3.3.1 산출실패의 누적 : 경제적 침체의 가중

북한경제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계속적으로 침체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식량 및 소비재, 생산원자재, 투자재원, 기술력과 인적 자원 등 경제전반의 부족현상에 직면하고 있다.²⁵⁾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은 경제성장률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1989년을 기점으로해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며(圖表4 참조), 국민총생산(GNP)과 이에 따른 일인당 국민소득도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다(圖表5 참조).

80년대말부터 본격화된 사회주의체제의 전환에 따른 경제교류의 장애가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 자체의 체제가동력의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북한정치체제의 경제구조가 지난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최근 수출-입 상황과 외채 상황도 악화일로에 있다(圖表6 참조). 북한은 계속되는 무역적자와 이에 따른 외채누적으로 인하여 경제침체가 가중되고 있다. 외채상황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대외무역에 있어 신용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으며 이는 북한당국이 기존의 체제구조내에서의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배경적 요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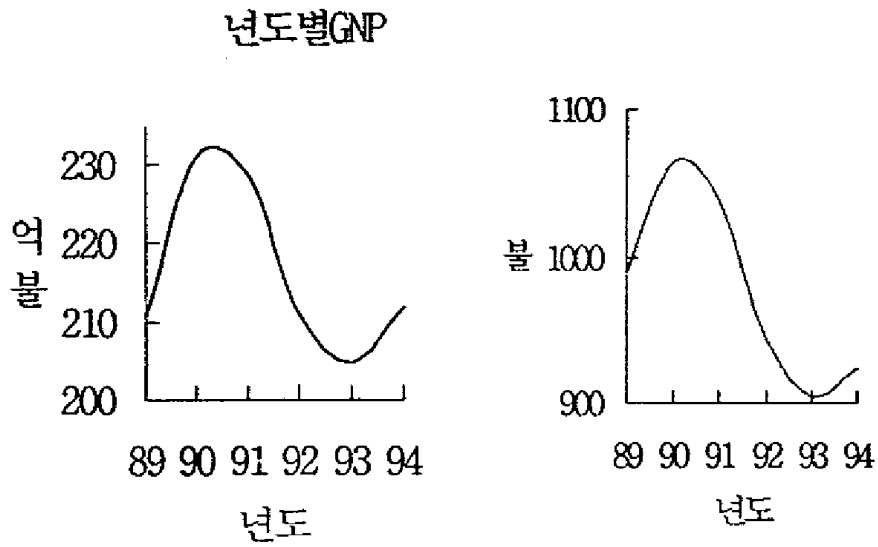
(圖表4) 북한의 연도별 경제성장률(1989-1994)



資料 : 韓國銀行 “북한 GNP 추정결과” 1992, 1993, 1994, 1995

25) 북한은 1993년 12월 9일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회의에서 1987-1993년의 제3차 7개년 계획이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와 방위력 강화”로 인해 실패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로동신문, 1993년 12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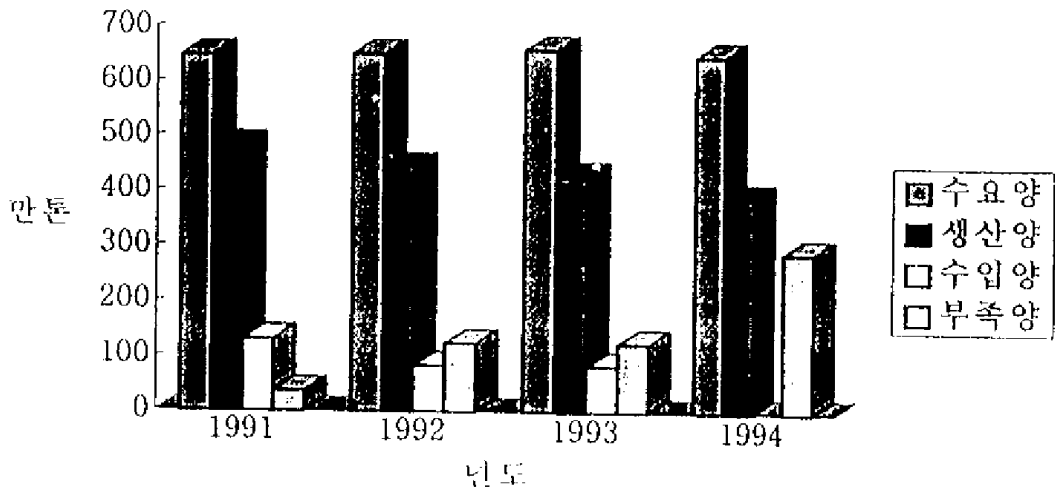
(圖表5) 북한의 연도별 GNP와 1인당 GNP(1989-1994)



資料：韓國銀行 “북한 GNP 추정결과” 1992, 1993, 1994, 1995

북한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식량부족현상이다(圖表7 참조). 북한은 곡물생산에 부적합한 지리적 여건때문에 식량의 자급자족이 어려웠으며, 최근에는 이상저온현상, 병충해 확산 및 농약부족, 경작방식 실패등으로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²⁶⁾ 더우기 95년에 발생한 최악의 홍수로 인하여 세계각국에 식량원조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²⁷⁾

(도표6) 북한의 연도별 식량수급상황(1991-1994)



資料 : 統一院, “95년 상반기 북한경제동향” 1995.

26) 북한의 강성산 총리는 노동당 중앙위원회보고를 통해 제3차 경제개발7개년계획의 실패를 시인하고, 제4차 경제개발7개년계획을 시작하기에 앞서 앞으로 2, 3년간을 완충기로 삼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또한 이 기간동안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그리고 ‘무역제일주의’를 추구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 보고, 1993년 12월 8일 (매일경제신문, 1994년 1월 12일)

27) 유엔평가단 보고서는 북한의 수해피해정도를 약 10만 가구의 이재민발생, 약 190만톤의 곡물유실, 상당수의 생산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파괴로 추계하고 수해에 따른 장기적인 경제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U.N. Department of Humanitarian Affairs, *DPRK: Assessment of Damage and Immediate Relief Requirements following Floods*, (Sep. 12, 1995)

3.3.2 권위구조의 정당성 저하 : 지지중압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후에 제일차적 관심사는 과연 김정일이 권력을 承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모아졌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1996년 4월 현재 김정일은 국가주석 및 당 총비서직에 공식취임하지는 않고 있지만, 10여차례의 각급 군부대 방문 및 군관련 행사 참여, 국가과학원 현지지도 등 공식행사에 참가, 최고 사령관으로성 명령 하달 및 군인사 단행, 4편의 논문 발표 등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정일 권력승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김일성과는 달리 김정일에게는 정통성의 근거가 薄弱하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대하여 북한이 내세우는 명분으로는 革命承繼論, 世代交替論, 血統承繼論, 準備段階論, 化身論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론 만으로는 권력승계의 정통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권력승계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있어 제기되는 正統性의 문제는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오고 있다. 립셋(Lipset)에 의하면, 效率性이 특정 정치체계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실제로 만족시키는 수행능력으로서 도구적인 것이라면, 正統性은 현존하는 정치체도가 그 사회를 위해서 가장 적합하다는 믿음을 만들어 내고 유지하는 체계의 능력으로 감정적이며 평가적인 것이다.²⁸⁾ 정치체계의 효율성이 유지되어도 정통성은 문제될 수 있고, 정통성이 있는 정치체제도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상실되면 동요한다. 그러나 립셋에게 있어서 효율성은 정통성보다 우위에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이스튼에게 있어서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스튼 역시 正統性을 정치생활의 체계에 대한 지지의 근원으로 파악하고 있다.²⁹⁾ 그러나 정통성만이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반이 아니며, 체계의 구성원들은 관습, 공포, 편의 등에 의해서도 체계에 순응한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정당화의 메카니즘이 무시되면서도 존재하는 체계의 유형이 발견되며, 체계의 행위가 구성원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거나 순응에 대해서 물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다면 지지를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⁰⁾

이러한 정통성과 효율성의 개념은 북한사회주의체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북한체제

28) S. M. Lipset, *Political Man*, (New York: Doubleday, 1960), p. 77.

29)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op. cit., p. 282.

30) *ibid.*, pp. 282-284.

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은 권력의 승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상실한 경제구조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이다. 계속적인 경제적 침체의 증대는 궁극적으로 체제에 대한 지지의 침식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곧 김정일정권의 정당성 위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일 유일체제가 공식 출범한다 할지라도 김정일의 카리스마 및 업적 부족, 폐쇄체제 유지에 따른 경제난 해소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김정일의 정통성 및 체제 안정성은 취약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김일성 사후 외형적으로는 김정일 유일체제가 공고화되는 양상을 보이나, 실질적으로 군부의 영향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당 중심의 集團指導體制 성격을 띠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³¹⁾ 이 경우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타락 권력장악, 정책노선 등을 둘러싸고 권력상충부내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경제난에 따른 지지의 침식이다. 동구 사회주의 제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침체에 따른 지지의 침식은 어느 때고 체제 정통성의 위기로 나아갈 潛在力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북한경제의 효율성 저하는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점차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이미 구소련이나 동구사회주의체제에서 나타났던 것과 유사한 것이었다. 김정일이 통치권력의 전면에 나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제적 궁핍이 계속된다면, 이는 김정일체제에 대한 지지의 쇠퇴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이 경우 김정일 체제의 정통성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의 전체적인 정당성에 대한 위협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노동당에 의한 장기적 경제정책은 주민들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하였고, 사회의 모든 부분은 치밀한 감시하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표면적인 저항은 큰 규모로 표출될 수 없었지만, 김일성 사후 북한 사회에서는 잠재되었던 주민들의 불만, 엘리트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체제에 대한 저항이 어떤 계기에 증폭될 수 있다. 이러한 유동적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서 북한 주민들에게 주체사상을 주입시켰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들이 느껴왔던 경제적 궁핍의 지속은 체제에 대한 신뢰를 사라지게 할 것이며, 체제의 효율성은 더욱 위협스러운 수준으로 저하될 것이다.

31) 군부의 영향력 증대의 한 예로 김일성 사후 북한의 권력서열에서 백학림, 김광진, 김익현 등 군부원로인 차수들이 김기남 당비서에 앞서 18-21위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3.3.3 내적 균열의 확산 : 일탈행위의 증가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고도의 凝集性을 지닌 單一的 체계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계속적인 사상교육과 통제정책을 통해 체제의 통합을 지속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북한에서는 체계내적인 龜裂이 확산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료들의 일탈행위와 불법적인 暗市場의 擴大 및 이에 따른 정보의 陰性的 流通, 그리고 脫北者의 증가 등이다. 모든 사회에 있어서 관료의 부정과 암시장의 존재는 필요악으로 간주되지만 북한체제와 같은 통합체제에 있어서의 관료부정과 암시장의 확대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즉, 당면한 체제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관료의 부정행위는 관료기구외의 대 주민통제가 이완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약화시킨다. 또한 관료의 부정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다른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증대시켜 사회주의체제 자체에 대한 회의와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다.³²⁾ 한편 암시장의 확산은 중앙집중식 계획경제에서 오는 구조적 결과로, 사회주의 경제작동의 기본원리에서 벗어난 비공식적 경제영역의 확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암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제2경제의 발달은 경제의 실질적인 분권화라는 점에서 집중화된 경제구조를 지닌 북한체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암시장을 통한 정보의 유통이 음성화됨으로써 중앙 정부의 정보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특히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전파속도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며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과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클랩(Klapp)은 체계내로 유입되는 정보가 항상 負 엔트로피로 작용하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에서 생산되는 엔트로피 축적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입된 엔트로피도 체계를 위협한다고 보았다.³³⁾ 그러므로 체계내로 유입되는 정보의 過負荷는 경우에 따라 체계엔트로피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32) Sung Chull Kim, "Systemic Change in North Korea and Development of South-North Relationship, in *Complex Systems Model of South-North Korean Integration : Systems Perspective*, op. cit., 1996. p. 93.

33) Orrin E. Klapp, "Opening and Closing in Open System," *Behavioral Science* 20, 1975, pp. 251-257.

4.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전환유형 분석

4.1 체계전환의 임계성 : 구조적 모순의 시너지

북한체제는 현재 환경여건의 급격한 변화, 체계내적 갈등, 그리고 심화된 경제 위기로 인해 平衡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 결과 최대 엔트로피 상태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더 많은 엔트로피 생산으로 나아가며 이러한 움직임은 불안정을 더욱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³⁴⁾ 이는 이제까지 비교적 효과적으로 부 엔트로피를 산출해 온 북한체제의 제 구조들이 한계를 드러내고, 이러한 구조적 한계들이 복합적으로 시너지 현상을 통해 구조적 모순을 격화시킴으로써 체계의 불안정을 극대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엔트로피이론에서 볼 때 북한 정치체계가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북한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고 있고, 에너지의 증대가 요구되는데 비해 舊 소련 및 동구 舊 사회주의국가의 붕괴로 인해 무역과 원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체계의 閉鎖性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서 있다.³⁵⁾ 개방체계로서의 정치체계는 비록 내부 엔트로피가 증가할지라도 체계 밖으로부터 정보, 에너지 또는 물질의 교환을 통해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일 북한이 충분한 식량과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엔트로피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폐쇄적인 체계구조를 유지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체계 엔트로피 증대의 원인은 바로 경제적 침체에 기인하는 것이고, 현재의 북한상황으로 볼 때 정치구조의 변화를 통한 負 엔트로피 산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므로 북한의 식량과 에너지 수준이 더욱 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체계가 폐쇄성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문제는 체계구조의 변화없이 즉, 다시말해 체계의 구조적 전환을 통한 負 엔트로피의 유입이 없는 엔트로피 극대상태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엔트로피이론에서 본다면, 현 상태의 유지 즉, 폐쇄적 사회주의체제의 유지

34) Yong-Pil Rhee, "Nonequilibrium Thermodynamics Approach to Korean Unification Process : A Search for New Paradigm," op. cit., pp.14-15.

35) Kenneth D. Bailey, "Social Entropy Analysis of the Unification Process in the Korean Peninsula," in *Complex Systems Model of South-North Korean Integration*, op. cit., p. 78.

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이 처한 내외적 상황으로 볼 때 어떠한 형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체제위기의 주요인인 경제난은 사회주의경제의 구조적 모순의 심화에 따른 것으로 체제 엔트로피의 증대를 초래하고 있으며, 엔트로피의 증대는 정치체계를 정상적인 작동상태에서 이탈시켜 振動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북한체제로서는 정상적인 체제작동을 위해서 체제 엔트로피 증대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負엔트로피 産出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체제 내부적인 負 엔트로피 산출은 한계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결국 대외교류를 통한 에너지의 유입이 불가피하다. 또한 북한체제를 둘러싼 환경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중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북한체제가 외부환경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결국 북한이 변화된 국제환경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간에 적응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기존 상태의 유지는 한계가 있으며 기존 체제 구조의 전환은 시기상의 문제로 받아 들여진다.

4.2 사회주의체제 전환유형의 분석

4.2.1 체제 전환의 특징

사회주의로부터의 체제전환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70년대 중반과 80년대 중반에 일어난 남부유럽, 남미 그리고 동아시아의 권위주의체제로부터의 체제전환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체제로부터의 체제전환과는 달리 사회주의체제로부터의 체제전환은 二元的 體制轉換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동구 및 舊 소련 사회주의체제와 비교해 볼 때, 다양한 형태의 舊 권위주의체제는 시민사회를 통제할 근본수단과 제도적 능력을 결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권위주의체제도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처럼 국가의 모든 제도에 완전히 침투한 견고하게 조직된 지배정당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으며, 자율적인 시민, 노동, 종교, 직업 결사체를 통해 알 수 있는 시민사회의 범위가 폴란드의 카톨릭교회를 제외하고는 사회주의국가보다 권위주의국가에서 훨씬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모든 권위주의체제는 비교적 잘 정의된 사적 소유권을 지닌 시장에 근거한 체제였는데 비해, 사회주의체제는 시장경제구조나 사적 소유의 체제를 전

히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제도적 차이로 인해 舊 사회주의체제는 二元的 閉鎖體系(사회주의독재+계획경제)에서 二元的 開放體系(완전한 시장경제+다당제)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복잡성과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 하면 경쟁적 정치과정을 도입하고 민주적 제도를 확립하고 공고화하는 것은 계획경제체계를 타파하고 시장경제체계를 확립하는 것과 병행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³⁶⁾ 그러므로 비사회주의적 권위주의체제로부터의 체제전환은 一元的(one-dimensional)인 체제전환 혹은 민주화로의 체제전환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민주화란 경쟁과 포용이라는 多頭制(polyarchy)의 두 범주를 통합한 의미이다. 사회주의에 있어서 체제전환은 民主化와 市場經濟化 모두를 포함하는 二元的 體制轉換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달(Dahl)과 오도넬(O'Donnell)은 체제전환에 있어서 정치체계와 경제체계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³⁷⁾

4.2.2 체제 전환의 유형

동구 및 舊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전환을 살펴보면, 타협에 의한 평화적 전환에서부터 급진적이고 폭력적 전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구 및 舊 소련 사회주의체제전환에 있어서 나타나는 유형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체제형성과정과 경제발전 수준이라는 2개의 變數들이 체제전환유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舊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정과 관련해 볼 때, 舊 소련에 의해 이식된 사회주의체제들은 체제전환시기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사회주의체제보다 상대적으로 내분의 정도가 약했으며, 이들 국가들에 있어서 체제전환은 자생적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안에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자생적 사회주의국가들은 舊 소련이나,

36) Grzegorz Ekiert, "Democratization Process in East Central Europe: A Theoretical Reconsideratio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21, July 1991, pp.285-313.

37) 달은 다당제로의 전환을 경쟁과 포용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다. Robert Dahl, *Polyarchy*, (New Haven: Yale Univ. Press, 1971), p. 34. 오도넬도 권위주의로부터의 체제전환의 두 범주로 '자유화'와 '민주화'를 들고 있다. O'Donnell and Schmitter,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 Rule: Som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1986), p.13.

유고 그리고 알바니아에서 처럼 체제가 추진한 개혁과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에 따른 전체적인 체제붕괴를 경험했다. 한편 舊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 경제적 발전수준은 체제전환의 결과와 밀접한 관련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적 형태의 정부로 전환한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은 GNP가 \$1,000-\$6,000사이에 위치한 “移行地帶(transition zone)”에 위치하고 있었다.³⁸⁾ 반면에 낮은 수준의 발전상태에 있었던 舊 사회주의국가들은 체제전환 이후에 권위주의적인 형태로 변화하였다.

사회주의체제 형성과정에 있어서의 차이는 권력엘리트의 정통성, 스탈린식 모델 변용 및 응용능력, 군부의 일체성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주의체제의 정치적 變化類型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사회주의국가들은 체제형성과정에 있어 외부 세력의 개입여부에 따라 舊 소련의 군사적 개입에 의한 外生的 체제형성과 토착세력에 의한 自生的 체제형성으로 나누어진다. 자생적 사회주의체제로서는 舊 소련을 비롯하여 유고, 알바니아, 중국, 베트남등이 해당된다. 2차대전 이후 舊 소련의 점령에 의해 형성된 외생적 사회주의체제로는 헝가리,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동독 등을 들 수 있다.

舊 소련의 물리적 힘에 사회주의체제 형성배경을 가진 국가들의 지배엘리트는 자생적 사회주의체제의 민족주의적 지배엘리트에 비해 자신들이 통치하는 체제에 대한 자부심이나 신념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는 이들 국가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체제 건설이 결과적으로 소련의 한 부분으로 편입된 것에 다름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체제가 확립된 이후에도 지배엘리트들은 인민대중의 직접적인 동의나 정통성 부여없이 소련식 사회주의 모델이 제시하는 목표달성만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官僚主義가 강화되었다. 지배엘리트의 관료화로 인해 소련식 모델을 벗어난 독자적인 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행동반경은 매우 제한되었으며, 일정 한계를 넘은 개혁정책은 곧바로 소련의 개입으로 인해 저지되었던 것이다.

반면 자생적 사회주의체제의 지배엘리트는 식민지 치하 및 점령지하에서 民族解放鬪爭을 주도함으로써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正統性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사회주의체제 형성이후에도 사회주의적 경제발전전략을 통한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에 주력함으로써

38) Samuel Huntington, "Democracy's Third Wave" The Journal of Democracy, Vol.2, No.2, Spring 1991, pp. 31-32.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支持를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정통성에 힘입어 체제형성 초기의 소련형 사회주의 모델을 각각의 실정에 맞게 變容, 적용함으로써 정책선택을 위한 행동영역을 넓힐 수 있었다. 이들은 민족해방 투쟁과정에서 독립과 근대화의 이중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급투쟁의 이념적 목표를 어느정도 절충하는 변용의 전통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책노선의 유연성에 의해 인민대중이나 노선을 달리하는 정파의 불만을 체제 내부에서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생적 사회주의체제의 경우 스탈린식 체제의 변용과정에 있어서 체제형성 직후의 일인지도체제가 점차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집단지도체제화 되어 가는 것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들 국가에 있어 자생적 사회주의체제 지배엘리트는 지속적으로 舊 소련체제를 자국의 실정에 맞는 체제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 경우 집단화된 지도체제는 정권경쟁적 파벌로서가 아니라 정책노선을 기준으로 한 파벌로 나뉘어으로써, 공산당을 정점으로 한 권력엘리트는 사회주의체제 건설을 위한 정책적 柔軟性を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모두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며, 때로는 중국의 대약진운동이나 문화혁명과 같이 참담한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반면에 지배엘리트의 정통성에 대한 신념은 이러한 실험적 적응과정을 통해 세계체제 혹은 체제내부로부터의 도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이를 통해 근대적 사회주의 민족국가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에 초기의 일인지도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개인숭배를 통한 권위주의적 체제를 형성해 나가는 경우로, 알바니아와 북한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이들 국가는 사회주의체제 형성초기의 지도자가 지속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정치적 대안세력의 성장을 철저히 봉쇄함으로써 체제의 변용 및 적응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체제는 자생적 사회주의체제로서 민족적 정통성의 기반을 기초로 출발하지만, 결국 억압적인 정치행태와 정책선택상의 경직성 및 비효율성으로 말미암아 인민대중의 지지를 상실하게 되고, 자체의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세계체제로부터 철저히 고립됨으로써 체제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한편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정에 따른 지배엘리트 간의 입지는 각 체제에 있어서 정권담당세력과 군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치적 안정의 가제로서의 軍部の

역할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舊 소련에 의해 사회주의체제가 형성된 동구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의 군사력은 소련군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조약기구에 속함으로써 서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한 戰略的 對峙勢力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舊 소련은 사회주의 위성국가들에 대한 체제적 통제수단으로서 소련군과 이들 국가의 군사부문을 밀접한 연계를 가진 조직체로 체계화함으로써 각국 정권의 완전한 군부장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식적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의 지배엘리트의 취약한 정통성은 정권담당세력과 군부의 일체성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정치적 체제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자생적 사회주의체제의 지배엘리트는 민족해방투쟁 및 근대적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정에서 인민대중이 부여한 정통성에 입각하여 군부를 철저히 장악할 수 있었으며, 사회주의체제 건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련과 정치적, 군사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체제위기 발생시 政治的 安定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군부의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요인을 분석해보면 經濟的 危機로 인해 政治的 正當性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⁹⁾ 기술발전의 침체는 대외적으로 군사력 균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 정치적 정당성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였다.⁴⁰⁾ 그러나 일단 대중적인 운동이 시작되면 모든 종류의 경제적 불만이 표면화되지만 체제전환의 진정한 동인은 心性的 變化에서 온다.⁴¹⁾ 심성의 변화란 반사회주의적 또는 반체제 성향을 의미하는 데, 동구의 경우 이러한 심성의 변화가 존재하였다. 특히 시민사회의 경험은 이러한 심성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市民社會란 “국가통제의 완화와 이데올로기적 억압의 쇠퇴의 결과로서 야기된 후기전체주의적 질서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인민들의 자발적인 주도, 즉 비정부차원의 주도에 의해서 밑으로부터 형성되는 자율적 구성체이다.”⁴²⁾ 또한 정치적 代案勢力의 등장은 권력엘리트의 자신감 상실과 균열을 초래하였는데, 舊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제

39) David Manson, *Revolution in East-Central Europe: The Rise and Fall of Communism and the Cold War*, (Oxford: Westview Press, 1992), p.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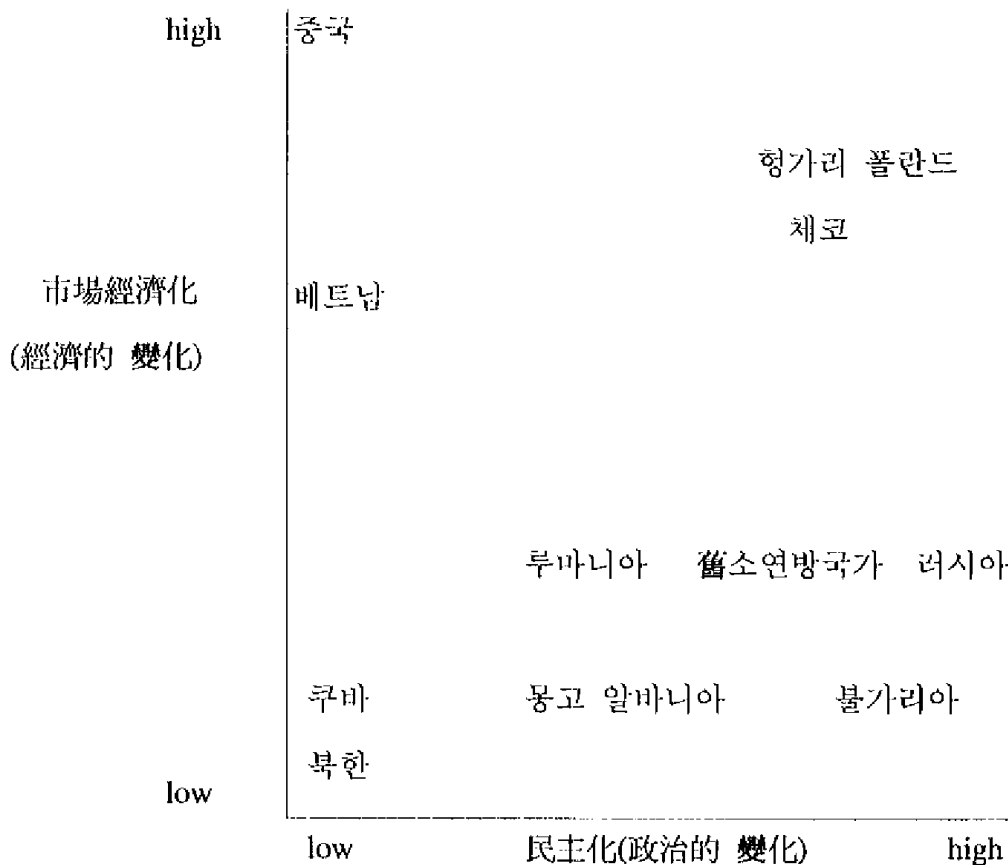
40) W. Brus and K. Laski, *From Marx to the Marke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 34.

41) Kazimierz Poznanski (ed.), *Constructing Capitalism: The Reemergence of Civil Society and Liberal Economy in the Post-Communist World*, (Oxford: Westview Press, 1992), p.11.

42) Vladimir Tismaneanu, *Reinventing Politics: Eastern Europe from Stalin to Havel*, (New York: Free Press, 1992), p.170.

국의 경우 공통적인 특징은 경제위기 극복을 둘러싸고 엘리트들 간에 路線葛藤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지도체제가 통합되지 못하고 균열이 발생하여 밑으로부터의 체제도 전에 취약했다는 점이다.

(圖表 7) 민주화와 시장경제화 수준에 따른 체제전환의 유형



(出處 : Maxim PEI, "Dual Transition," 미국정치학회 발표논문에서 차용, 재구성)

민주화와 市場經濟化의 수준에 따라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을 분류해 보면 유형별 특징이 나타난다. (圖表7)는 사회주의국가들을 민주화와 시장경제화의 수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폴란드(1988-89), 동독(1989-90), 헝가리(1988-90), 체코(1989-90)의 경우는 평화적 혁명 또는 선거에 의해 반대세력이 집권함으로써 多頭政治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불가리아(1989-91)는 두 번의 선거를 통해 반대세력이 집권함으로써 다두 정치로의 전환되었고, 루마니아(1989-90)는 舊 공산주의자 집권한 상태에서 폭력적 혁명을 통해 체제전환이 이루어졌다. 몽고(1989-90)는 舊 공산주의자들이 집권한 상태에

서 선거를 통해 다두정치로 전환되었고 소련(1985-91)과 유고(1989-91)는 舊 체제의 붕괴와 이에 따른 민족적 분열을 통해 체제해체가 이루어졌다. 알바니아(1990-92)의 경우는 두 번의 선거 이후 반대세력의 집권을 통해 과두제로 전환하였으나, 경제의 파탄과 법 질서의 붕괴로 과도적 상태에 놓여있다. 중국(1978-92)과 베트남(1986-92)의 경우는 정치적 변화없이 즉, 정치적 민주화없이 시장경제로 전환중이며, 북한과 쿠바는 정치와 경제영역에서 아직까지는 뚜렷한 체제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동구 6개 국가에서 일어난 체제전환의 결과를 비교연구한 칠튼(Chilton)도 공산주의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우연적인 시간적 요소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국내적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⁴³⁾ 동구의 사회주의국가의 전환과정은 대개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⁴⁴⁾ 첫 번째 유형은 폴란드의 경우에서와 같은 대항세력과 지배엘리트 간의 제반 문제에 대한 역사적 大妥協을 통해 폭력사태 없이 비사회주의 정부로의 전환이다. 두 번째 유형은 進化的인 과정을 밟은 것으로 헝가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사회주의 정치적 엘리트와 비사회주의 전문적 엘리트 간의 오랜 기간의 협조에 의한 점진적 체제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동독과 체코의 경우에서와 같이 체제전환이 정치체계의 崩壞로 귀결된 것이다. 네 번째 유형은 穩健한 暴力革命에 의한 전환으로 루마니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보수군과 대항엘리트에 의해 주도된 민중 간의 단기적 내란은 군부가 개혁자들의 편에 섰을 때 종결되었다. 다섯 번째 유형은 舊 소련의 경우에서 나타난 위로부터의 체제전환이다. 고르바초프를 중심으로한 지배 엘리트들에 의한 개혁, 개방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체제전환인 것이다. 여섯 번째 유형은 인종적 갈등과 영토분리에 의한 暴力的 轉換으로 유고의 경우에 있어서 경쟁적 엘리트들 간의 갈등이 내란, 인종청소와 영토분리의 결과로 나타난 경우이다.

43) Patricia Chilton, "Mechanics of Change : Social Movement, Transformational Coalitions, and the Transformation Process in Eastern Europe," *Democratization*, Vol. 1., No. 1. (Spring, 1994), p. 153. 이용필, 양성철 (공저), 북한변화와 협상전략연구, (서울: 박영사, 1996) p. 184에서 再引用.

44) Ibid., pp. 181-184.

4.3 북한 사회주의체제에의 적용

4.3.1 체계적 전환과 체계내적 전환

앞에서 제시된 체제전환모델에 근거하여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전환유형을 분석해 본다면, (도표8)과 같은 가능한 전환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

(圖表6) 북한체제의 가능한 전환유형

現 狀況의 維持			
體系內的 轉換		體系的 轉換	
위로부터 급진적	아래로부터 급진적	위로부터 급진적	아래로부터 급진적
위로부터 점진적	아래로부터 점진적	위로부터 점진적	위로부터 점진적

먼저 전환의 성격과 관련하여 정치구조와 경제구조의 측면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체제전환은 크게 體系內的 전환과 體系的 전환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체계내적 전환에는 정치구조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경제구조의 변화를 통한 전환(類型III)과 경제구조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정치구조의 변화를 통한 전환(類型 II)이 가능하다. 체계적 전환의 유형으로는 이원적 전환과 일원적 전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원적 전환은 정치구조의 변화를 가져온 후 경제구조의 변화로 나아가는 전환(類型 I→類型 II→類型 IV)과 경제구조의 변화를 먼저 수반한 후 정치구조의 변화로 서서히 나아가는 전환(類型I→類型III→類型 IV)으로, 이는 모두 체계내적 전환에서 시작하여 체계적 전환으로 나아가는 전환을 의미한다. 반면에 일원적 전환은 경제구조와 정치구조의 동시적 변화에 의한 전환(類型 I→類型 IV)으로 이는 체계의 급격한 전환 혹은 붕괴를 의미한다(圖表2 참조).

그러나 경제구조의 변화없이 정치구조만을 변화시킨 체계내적 전환(유형III)이나, 경제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정치구조의 변화라는 이원적인 체계적 전환(類型I→類型III→類型 IV)은 아직 경험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모형을 북한체제에

적용시켜 볼 때, 크게 3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類型I에서 類型 III로 나아가는 체계내적 전환은 현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치구조의 근본적 변화없이 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한 변화유형으로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중국식 漸進主義的 經濟改革은 기존의 사회주의식 통제경제를 와해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부문에 새로운 시장경제를 도입시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현재 북한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는 것으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는 북한경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의 유입이 없이는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하다. 또한 권력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없이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중국의 경험은 북한 권위당국가에게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정치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동반되는 경제구조의 변화로 나아가는 이원적 전환인 類型I에서 類型II를 거쳐 類型IV로 나아가는 체계적 전환의 대표적인 예는 동구의 경우이다. 이러한 체계전환의 특징은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앞서 정치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선행했다는 점이다. 즉, 이미 사회주의 정치구조가 와해된 후에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電擊的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우에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김정일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다양한 통제수단을 통해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동요사태의 가능성은 있으나 조직적인 반체제 저항운동이 생겨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경제적 궁핍에 한계를 느낀 주민들의 폭동이나 혹은 지도부내의 노선갈등으로 인한 내부 균열과 이에 따른 권력투쟁이 발생할 경우 동요사태를 유발하여 현 지도체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權威構造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다. 새로이 구축된 정치구조하에서 현재의 사회주의 체 구조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잠재성은 있다고 분석된다.

끝으로 類型 I에서 직접 類型 IV로 나아가는 급진적이고 突發的인 체계전환으로 북한체계의 급격한 붕괴와 이에 따른 새로운 체계의 형성이나 혹은 한국에의 흡수통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舊 동독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으며, 현 북한상황에 적용시켜 볼 때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나 현실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舊 동독의 경우 1970년대의 舊 동-서독 데탕트이후 꾸준히 진행되어온 문화, 통신, 인적 교류에 의하여

舊 동독 주민들이 舊 서독과 주변국의 실상에 대하여 상세히 알게 되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택하여 정권의 붕괴를 가져왔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지극히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가 극도로 차단되어 있으며, 또한 나름대로의 환경변화에 대한 適應能力을 신장시켜 왔다는 점에서 동서독의 경우와는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체계관계가 단일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또한 견고하게 凝集되어 있는 북한체계는 견고한 體系關係에 비례하여 그만큼 구조적 제약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돌발사태에 의한 체계붕괴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체계관계가 견고하게 구조화되어 있으면 있을 수록 사소한 돌발사태라도 체계 전체에 가해지는 충격과 반향이 순간적으로 전체 체계에 파급될 수 있다는 점⁴⁵⁾에서 급격한 체계전환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북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경제구조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 정치구조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체계가 직면한 경제난의 타개를 위한 경제개방으로의 전환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북한의 권력구조에 대한 어떠한 변화의 징후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 데 비해,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70년대 후반이후 상대적으로 신축적인 운용을 보여 왔다는 점도 이러한 시각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여기서 관심이 되는 문제는 경제구조의 변화를 통한 체계전환에서 나타나는 유일지배적 정치구조와 시장경제적 다원화와의 相衡問題이다. 시장경제적 요인들을 수용하는 정책의 추진에 있어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競爭과 多元化的의 요소들이 체계내로 유입될 것이며, 이는 정치구조와의 또 다른 緊張關係를 형성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북한체계가 경제구조의 변화를 통한 체계전환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 국한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 전면적인 경제구조의 변화를 추구한다면 이에 따른 정치구조의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중국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로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정치구조와의 마찰을 최소화하

45) (하위체계간 혹은 하위체계와 상위체계간의)體系關係의 凝集性(coherence)에 따라 체계에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체계의 반응 형태가 달라진다. 즉, 體系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견고하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따라 體系에 가해지는 外部的 衝擊이 全體로서의 體系에 미치는 影響의 程度가 달라지며, 또한 이에 대한 體系의 反應樣式이나 反應速度도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턴은 “體系關係는 계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당구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엉켜진 스파게티 덩어리와도 같다”고 말한다. David Easton, *The Analysis of Political Structure*, (New York: Routledge, 1990), p. 237.

기 위해 권력구조에 있어서 집단지도체제로의 변화가 수반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를 경제구조의 전환과 이에 따른 정치구조의 전환이라는 이원적 체제전환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우 이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권력구조에 있어서 집단지도체제로의 변화가 있었으나 사회주의체제가 지닌 체제가치나 규범, 계급의 규칙, 권위구조 등이 本質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그러하다. 북한에 있어 권력구조의 변화라는 것은 김정일지배체제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결국 경제개방이라 할지라도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3.2 체제전환의 주체와 속도

전환의 양상과 관련지어 볼 때는 전환의 주체와 속도에 따라 위로부터의 급진적 전환(類型 A)과 점진적 전환(類型 B),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전환(類型 C)과 점진적 전환(類型 D)의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圖表3 참조).

먼저 북한체제에 있어서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체제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인민대중의 압력에 의한 급진적 체제전환을 수행한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동독 등의 경우와 비교해서 살펴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일인지배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권력이 극소수 지배엘리트에게 집중되어 정치적 대안세력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과 교조적인 통치이데올로기에 의한 경직된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들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인민들의 불만이 어떤 계기로 인해 표출될 경우, 북한의 체제구조는 전일적으로 견고하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소한 돌발사태라도 체제 전체에 가해지는 충격과 반향이 순간적으로 전체 체제에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불만은 순식간에 증폭되어 폭동이나 혁명적 상태로까지 나아가 급격한 체제전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항상 잠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점진적인 체제전환은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북한에서 이러한 유형의 체제전환이 나타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전환유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사회주의체제가 수립되기 이전에 이미 다원적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정치적 대안세력으로서의 시민사회가 조직화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사회주의체제가 형성되기 이전에 유교적 권위주의 정치문화의 전통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동구의 舊 사회주의체제와는 달리 자생적 사회주의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인지배체제의 강화과정에서 현실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제가 말소되어 버렸다. 또한 지배엘리트 내의 정책노선 조정기제가 결여되어 있으며, 권력세습체제의 확립과정에 있어서 집권세력에 대한 경쟁적 파벌이나 시민사회의 형성이 불가능했으므로 정치적 대안세력이 전무한 상태이다. 물론 분단관리체제로서 동서독 관계의 경합에 비추어 볼 때, 남한정부의 역할에 따라서는 남한의 체제 및 정치력이 북한의 정치적 대안세력화할 수 있으나,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상태 및 남한의 경제력으로 보아 짧은 기간 내에 이의 기정사실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볼 수 있다. 대안세력의 부재와 더불어 강력하고 광범위한 통제와 감시체계가 현재까지 작동되고 있으며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정보의 유통이 철저히 통제되고 특히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층이 기득권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한, 밑으로부터의 점진적 전환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위로부터의 급진적 체제전환은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으로 대변되는 舊 소련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북한에서 위로부터의 급진적 체제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위로부터의 급진적 전환은 북한지도층이 정치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개혁만이 체제존속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는 현재 북한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여지껏 누리온 기득권을 순순히 포기하고 비판 또는 보복을 감수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舊 소련의 경우 위로부터의 급진적인 체제전환의 추진은 결과적으로 경직된 관료조직을 변화시키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체제전환 압력의 가중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기득권의 상실을 가장 두려워하는 북한지도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보여진다. 특히 북한체제는 출범시부터 철저한 동원체제로 조직화되었으며, 이러한 동원체제하에서 전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동원과 통제, 관리를 위해 노동당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적 체제로 조직화되었다.⁴⁶⁾ 이러한 관료체제는 매우 경직화되어 있어 관료조직의 변화에 실패한 舊 소련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지도부가 예상치 못한 밑으로부터의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와 같은 모험을 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46) 이용필, 양성철 共著, 북한체제변화와 힘상전략, op. cit., p. 165.

끝으로 위로부터의 점진적 전환은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처럼 집단지도체계의 확립과 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해 정치안정을 유지하는 경우이다. 동구와 舊 소련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체제의 전환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큰 유형은 위로부터의 점진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밑으로부터의 전환은 그 특성상 과격하고 근본적인 체제전환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체제내적 전환보다는 체계적 전환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우가 위로부터의 점진적 개혁을 통한 체제내적 전환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의 사회주의식 통제경제체제를 와해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부문에 새로운 시장경제를 도입시키는 점진주의적 경제개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정치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없이 경제개혁을 통해 負 엔트로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려는 북한의 권위당국자들의 이해관계와도 가장 잘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직후 경제적 어려움과 혼란을 겪어야 했던 동구 제국의 경험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의 경우는 1978년 개혁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 성과를 통해 인민대중으로부터의 정치체계변화 압력의 발생요인을 극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체제존속의 최대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지도부에게는 하나의 代案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한 북한에는 폴란드의 바웬사나 러시아의 가이다르와 같은 시장경제 신봉자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⁴⁷⁾도 중국식 점진주의적 전환을 추구할 가능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북한 지도부가 남북분단에 따른 대립구도하에서 성급한 체제전환에 따른 혼란과 이에 따른 남한으로의 흡수통합이라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급진적 전환보다는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추구하고자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4.4 북한 사회주의체제 전환에 대한 구조적 제약

4.4.1 상황구조적 제약

북한이 현재 직면한 체제 위기하에서 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적응방식에 있어서 가장

47) 이두원, "북한의 경제 현황: 위기와 전환점," 북한체제의 내구력과 변화전망, 한국정치경제학회 주최 통일관련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1995. 11.10 서울. p. 68.

중요한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남북분단이라는 상황구조이다. 분단이라는 상황은 북한정치체계가 조직화되는 방식을 결정하였고 북한 사회주의체제 출범의 토대였다. 또한 통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과 정치-권력구조의 형성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분단은 북한정치체계의 변화를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자 동시에 변화의 필요성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에 남북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성은 북한체제가 분단관리체제로서 강력한 군사적 동원체제 유지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분단구조는 군부의 입지를 강화시키게 되었고, 가장 보수적인 군부의 특성상 기존 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정책의 산출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한 긴장의 완화도 군부의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축소와 입지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치체계의 행동반경에 제약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분단구조는 또한 일사분란할 전시동원체제 유지를 위한 유일지배권력구조와 중공업우선의 경제구조를 합리화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체계의 근본적 작동원리로서의 주체사상의 정당화에 기여하고 있다.

4.4.2 이념구조적 제약

자주노선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은 체계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이념구조적 제약이 된다.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에서 드러나는 가장 특징적인 측면은 극단적인 반외세적 논리이다. 이는 북한의 효율적인 대외정책의 추진에 대한 주요한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일지배라는 권력구조는 정치체계의 적응메카니즘의 범위를 한계지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 유일체제의 기본적인 특징은 단일성이다. 이러한 특성은 다원주의적인 성향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유일지배체제의 문제점은 정치적 다원주의나 다당제 문제 이전에 근본적으로 사회 내 모든 사유가 최고지도자 1인의 교시로부터 나오고 또 그를 중심으로 전체 사회가 동심원적으로 편제되면서 이 공동체 내에서의 통합력을 전제로 한 다원성마저도 봉쇄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⁴⁸⁾ 유일지배체제의 이러한 특성은 개방정책의 추진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될 다원적 요소의 유입과 이에 따른 유일지배체제와의 마찰을 방지하는데 일차적 노력이 경

48)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사상, 체제, 지도자 (서울: 역사비평사, 1995), p. 156.

주될 것이고, 이는 곧 개방정책의 추진방향이나 범위, 속도에 중요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유일지배체계의 고수는 결국 개방정책의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과 사회주의시장경제정책 성공적 실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유일적 지배라는 일원성과 시장경제원리의 다원성은 융합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4.3 경제구조적 제약

북한 정치체계의 적응메카니즘에 있어서 또 하나의 구조적 제약은 폐쇄적 경제구조에서 오는 것으로, 이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정책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는 극단적인 폐쇄적 자립경제정책을 기조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폐쇄적 계획경제에 따른 시장경제원리에의 부적응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80년대 추진했던 대서방무역과 합영법이 왜 성공할 수 없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자력갱생을 기본으로 하는 북한의 경제구조에서 오는 구조적 모순의 심화가 현재 북한의 체제위기를 초래한 주요인이며 따라서 체제전환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극단적인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구조는 데, 이러한 폐쇄적인 성격으로 인해 외부와의 정보흐름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북한체계의 유지에 상당한 기능을 하여 왔다. 북한이 쉽게 경제개방을 할 수 없는 주된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개방을 통해 체제내로 유입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개방정책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도 바로 이러한 정보유통의 확산에 대한 우려때문이었다. 특히 동구의 사회주의체계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붕괴한 데에는 각종 정보매체의 개방과 이에 따른 정보통제의 실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통한 에너지의 유입을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개방을 통해 유입되는 정보로 인한 주민들의 각성, 그리고 그에 따른 밑으로부터의 압력의 증가와 이로 인해 정치구조의 불안정이 높아질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5. 맺는말

1980년대 중반이후 농구 및 舊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목격하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유사한 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구조를 지닌 북한체제도 이와 동일한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북한체제는 심각한 내외적 重壓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사회주의체제를 유지시켜 오고 있다.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舊 사회주의체제와는 다른 독특한 體制構造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내외적 중압에 의한 체제 엔트로피 증대에 대처하여 적절한 負 엔트로피를 산출시켜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체제구조로는 남북분단과 주변4강이라는 상황구조, 체제작동의 기본원리가 되고 있는 주체사상을 중심으로하는 이념구조, 유일지배의 권력구조, 자력갱생의 경제구조, 그리고 정보통제의 환류구조 등이 있다. 이 구조들은 상호작용하면서 북한사회주의체제 내부의 負 엔트로피 산출 메카니즘으로서 기능함으로써 북한체제를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전환이 불가피한 이유로는 개방체제로서의 북한사회주의체제는 내부 엔트로피의 증대가 한계수준에 다가가고 있으며, 특히 그러한 엔트로피의 증대가 체제의 구조적 모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非平衡熱力學的 觀點에서 볼 때, 개방체제는 엔트로피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다양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는 엔트로피의 증가에 대처해서 체제를 유지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에 適應해야만 한다. 체제 엔트로피 증가에 대한 적용은 엔트로피의 증가를 억제하고, 내적 負 엔트로피의 산출을 통해 엔트로피의 감소시키는 것과 외부에서의 에너지 유입을 통해 負 엔트로피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북한체제의 경우 엔트로피 증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적 침체가 가중됨에 따른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체제구조적인 모순에서 오는 문제이다. 따라서 내적인 負 엔트로피 산출노력은 한계를 지니게 된다. 내부에서 부엔트로피의 산출을 이끌어낼 수 없다면, 체제가 취할 수 있는 방도는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통해 엔트로피 수준을 낮추거나 아니면 스스로 체제의 해체를 받아들이는 것 중 그 어느 하나를 택하는 수 밖에 없다.

체제전환에 가해지는 체제구조적 제약은 負 엔트로피 산출 메카니즘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負 엔트로피 산출 메카니즘의 작동은 북한체제의 전환에 대한 구조적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체제의 경우는 단일적 체제구조를 지니고 있고, 또한 체계관계의 응집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사소한 변화에도 전체 체제에 가해지는 충격이 그 만큼 심각하며, 따라서 전환에 대한 구조적 제약도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엔트로피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체제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북한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은 체계 엔트로피의 증대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엔트로피의 증대는 체계를 정상적인 작동상태에서 이탈시켜 振動하게 한다. 그러므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북한체제로서는 정상적인 체계작동을 위해서 체계 엔트로피 增大에 대해서 어떠한 형식으로도 負 엔트로피 産出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체계 内部的인 負 엔트로피 산출 메카니즘인 남북분단, 주체사상, 폐쇄적 경제구조 등은 이미 그 한계점을 노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對外交流를 통한 에너지의 流入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기존 상태의 유지에는 한계가 있으며 체제의 전환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면 어떠한 方向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체제전환의 방향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비평형 열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 비평형상태하의 체계의 작동은 평형상태나 그 근처의 체계작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비평형상태하에서의 체계의 작동은 非線形性을 나타낸다. 즉, 체계의 진동이 증폭되고 이에 따라 체계상태의 불안정이 증대될 때 체계작동이 나타내는 軌跡은 혼돈적 유인자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기 때문에, 체계작동과정은 그 만큼 예측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확실적인 진술만이 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북한체제의 전환유형에 대해 전환의 성격에 따라 체계내적 전환과 체계 전체적 전환으로 구분하고, 전환의 양상에 따라서는 위로부터의 급진적 전환과 점진적 전환,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전환과 점진적 전환으로 나누어 각각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해 보면 경제구조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 정치구조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체계가 직면한 경제난의 타개를 위한 경제개방으로의 전환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북한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러한 변화의 징후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 데 비해,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70년대 후반 이후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운용을 보여 왔다는 점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여기서 관심이 되는 문제는 경제구조의 변화를 통한 체제전환에서 나타나는 唯一支配的 政治構造와 市場經濟的 多元化와의 相衝問題이다. 시장경제적 요인들을 수용하는 정책의 추진에 있어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競爭과 多元化의 요소들이 체제내로 유입될 것이며, 이는 정치구조와의 또 다른 緊張關係를 형성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점에서 보다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구조의 변화를 통한 체제전환은 하나의 過渡期로서 일정기간 존속할 가능성이 높다. 궁극적으로는 類型 I에서 類型 III로 나아간 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政治構造의 轉換인 類型 IV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類型 I에서 類型 II로 진행된 후 類型 IV로 나아간 동구의 경우와는 다른 경우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類型 I에서 類型 III를 거쳐 類型 IV로 나아간 경우는 없었다. 中國의 경우가 이에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권력구조에 있어서 集團指導體制로의 변화가 있었으나 社會主義體制가 지닌 체제가치나 규범, 게임의 규칙, 권위구조 등이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부분적 정치구조의 변화를 통해 시장경제로의 전환에서 비롯된 정치구조와 경제구조 간의 矛盾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의 進行이 展望된다. 다시 말해서 중단기적으로는 경제개발과 시장경제구조의 도입을 통한 체제내적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구조에 상응하는 정치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경제구조에 상응하는 정치구조의 변화란 김정일 유일지배체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김정일을 중심으로하는 집단지도체제나 권력엘리트 내부의 쿠데타에 의한 김정일을 배제한 기존 집권세력들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 나아가 극단적으로는 밑으로부터의 대규모 민중봉기를 통해 새로운 세력이 기존 집권세력을 완전히 배제한 새로운 지도체제의 구축등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 상황하에서는 김정일을 완전히 배제하기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김정일을 정점으로 권력의 분산을 도모하는 集團指導體制로의 전환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통한 북한체제의 전환에 대한 분석은 남북통합과 관련하여 중요한 含意를 지닌다. 즉, 북한체제의 급격한 붕괴나 해체가 남북한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엔트로피의 극대로 인한 북한체제의 급격한 해체는 남북통합을

신속하게 이룰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이는 또한 한국체제의 엔트로피를 급격하게 상승시켜 또 다른 위기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완전히 소진된 북한체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투입이 필수적이며 이때 에너지 투입의 주 당사자는 한국이 될 수 밖에 없다. 체계내의 에너지의 과도한 放出은 그 자체가 엔트로피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불안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통합에 대비하는 한국으로서는 북한체제의 전환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單行本>

1. 國內書

- 고성준 外, 『전환기의 북한사회주의』. 서울: 대왕사, 1992.
- 고승효, 『북한경제의 이해』. 서울: 평민사, 1993
- 국토통일원,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II)』. 서울: 국토통일원, 1980.
- , 『조선의 해방』. 서울: 국토통일원, 1987.
- ,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IV)』. 서울 : 국토통일원, 1988.
- ,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종합평가』. 서울 : 국토통일원, 1994.
- 김갑철, 고성준 共著, 『주체사상과 북한사회주의』. 서울: 문우사, 1988.
- 김광린 譯, Andrei N. Lankov 著,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 서울: 오름, 1995.
- 김남석 外, 『해방전후사의 인식 5』. 서울: 한길사, 1989.
- 김일평 外, 『북한체계의 수립과정 : 1945-1948』.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 김준엽 外, 『북한연구자료집, 제2집』.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4.
- 김학준, 『한국전쟁: 원인, 과정, 휴전, 영향』. 서울: 박영사, 1989.
- 민족통일연구원, 『김정일 정권의 대외정책 변화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12.
- ,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 사례 비교연구』.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12.
- 박재규 編, 『북한의 김정일승계체계: 문제점과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1986.
- 서울대 정치연구소 編,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서울: 이문각, 1990.
- 양성철, 강성학 共編, 『북한외교정책』, 서울: 서울프레스, 1995.
- 유세희, 이정식 編, 『전환기의 북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 이용필, 『정치분석 -이데올로기와 발전』, 서울: 대왕사, 1981.
- , The Breakdown of Authority Structure in Korea in 1960 : A Systems Approach,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2.
- 編, 『북한정치 : 이데올로기와 변화』. 서울 : 대왕사, 1984.
- , 『공산주의이데올로기 : 이론과 실제』. 서울 : 華學社, 1985.
- , 『북한정치체계』. 서울: 교육과학사, 1985.
- , 『정치체계 : 기능과 구조』. 서울: 교육과학사, 1985.
- , 『정치현상의 체계적 이해』. 서울 : 서울대출판부, 1995.
- , 양성철 (共著), 『북한변화와 협상전략연구』. 서울 : 박영사, 1996.
- 이정식, 스칼라피노 共著, 한홍구 譯,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 서울: 돌베개, 1986.
- ,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서울: 돌베개, 1986.
- ,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 서울: 돌베개, 1986.
-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사상, 체제, 지도자』. 서울: 역사비평사, 1995.
- 이홍구, 스칼라피노 共著, 『북한과 오늘의 세계 - 80년대의 대외적응』. 서울 : 범문사, 1986.
- 전인영 編, 『북한의 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정규섭 外, 『동북아 신국제질서하에서의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정현수 外, 『북한정치경제론』, 서울: 新英社, 1995.
- 주체사상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세계혁명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하)』. 서울: 중앙일보사, 1993.
- 최명 編, 『북한 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하용출 역, Moshe Lewin 著, 『고르바초프 현상』. 서울: 인간사랑, 1990.
- 한국무역협회, 『북한의 합작투자제도 - 북한의 합영법규』. 서울: 한국무역협회, 199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編, 『북한통치이데올로기 연구: 그 현황과 방향』.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한국정치연구회 編, 『북한정치론』. 서울: 백산서당, 1990.
- 허동찬, 『김일성평전』. 서울: 북한연구소, 1987.

2. 國外書

Almond Gabriel A. and Bingham Powell Jr., Comp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al Approach,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66.

—————, and Sidney Verba,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Boston: Little Brown & Co., 1965.

Apter David E., 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 Choice and Politics of Allocation,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71.

Bailey Kenneth D., Social Entropy Theor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0.

—————, Sociology and the New Systems Theory;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4.

Barghoon Frederick C. (ed.), Politics in the USSR,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72.

Berrien Kenneth F., General and Social System,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68.

Black Max (ed.), The Social Theories of Talcott Parson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1961.

Brus W. and K. Laski, From Marx to the Marke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Buckley Walter, Sociology and Modern Systems Theor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1967.

Collier David (ed.), The New Authoritarianism in Latin America,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Cornell Richard (ed.), The Soviet Political System,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 Hall Inc., 1970.

Dahl Robert, Polyarch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1.

Davies Morton R., and Vaughan A. Lewis, Models of Political Systems, London: Paul

- Mall Press, 1971.
- DeGreene Kenyon B. (ed.), A Systems-based Approach to Policymaking,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3.
- Djilas Milovan, The New Class: An Analysis of the Communist System, New York: Praeger, 1975.
- Easton David,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1965.
- ,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Willy, 1966.
- , The Analysis of Political Structure, New York: Routledge, 1990.
- (ed.), Divided Knowledge : Across Disciplines, Across Culture, Newbury, CA: Sage Pub. Co., 1991.
- Etzioni Amitai, The Active Society : A Theory of Societal and Political Processes, New York : Free Press, 1968.
- and Eva Etzioni-Halevy (eds.), Social Change: Sources, Patterns, and Consequences, New York: Basic Books, Inc., 1973.
- Friedrich Carl, Man and His Government, New York: McGraw Hill, 1963.
- Friedrich Carl J.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 Gerth H. H. and C. E. Mills (eds.),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ore Al, Earth in the Balance : Ecology and the Human Spirit,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92.
- Gruchy Allan G., Comparative Economic System, 2nd ed., Houghton Mifflin Company, 1977.
- Hollander Paul, Decline and Discontent: Communism and the West Today, New Brunswick: Transaction, 1992.
- Holms Leslie, The End of Communist Power : Anti-Corruption Campaigns and Legitimation Crisis, Cambridge : Polity Press, 1993.

- Huggett Richard J., Modeling the Human Impact on Nature : Systems Analysis of Environmental Problem,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Johnson Charmers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 Jowitt Kenneth, A Comparative Analysis of Leninist and Nationalist Elite : Ideologies and Nation Building Strategies,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 Kaminski Barttomeiej, The Collapse of State Soci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 Klir G. J., An Approach to General Systems Theory, New York: Van Nostrand, 1969.
- Knorr-Cetina K. and A. V. Cicourel (eds.), Advance in Social Theory and Methodolog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81.
-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Laszlo Ervin, The Age of Bifurcation: Understanding the Changing World, Philadelphia: Gordon and Breach Pub., 1991.
- (ed.), The New Evolutionary Paradigm, New York: Gordon and Breach Science Publishers, 1991.
- , Introduction to Systems Philosophy: Toward a New Paradigm of Contemporary Thought, New York: Gordon and Breach.
- Lewin K., Field Theory in Social Science, New York: Harper and Row, 1951.
- Lewis John Wilson, Leadership in Communist China,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63.
- Lilienfeld Robert, The Rise of Systems Theory: An Ideological Analysi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8.
- Lipset Samuel M., Political Man, New York: Doubleday, 1960.
- Manson David, Revolution in East-Central Europe: The Rise and Fall of Communism and the Cold War, Oxford: Westview Press, 1992.
- Mason David S., Revolution in East-Central Europe: The Rise and Fall of Communist and

- the Cold War, Boulder: Westview Press, 1992.
- Miller James G., Living System,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78.
- Mills Gerth (eds.), From Max Web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6.
- O'Donnell and Schmitter,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 Rule: Som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 Open Systems Group (ed.), Systems Behavior, 3rd Ed., London: Harper and Row, Publisher, 1981.
- Parsons Talcott (eds.), Theories of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1961.
- and E. A. Shils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New York: Harper and Row, 1951.
- Poznanski Kazimierz (ed.), Constructing Capitalism: The Reemergence of Civil Society and Liberal Economy in the Post-Communist World, Oxford: Westview Press, 1992.
- Prigogine Ilya, Introduction To Thermodynamics of Irreversible Process, Springfield, Ill.: Charles C. Thomas, 1955.
- and I. Stengers, Order Out of Chaos, New York: Bantam Books, 1984.
- Resnick Robert and David Halliday, Physics for Students of Science and Engineering. Part I,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60.
- Schopf (eds.), Models in Paleobiology, San Francisco: Freeman, 1972.
- Schroedinger E., What is Lif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 Spencer Herbert, First Principle, New York: Appleton, 1892.
- Suh Dae-Sook,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 Thom René, Structural Stability and Morphogenesis, Mass. : Benjamin, 1972.
- Tismaneanu Vladimir, Reinventing Politics: Eastern Europe from Stalin to Havel, New York: Free Press, 1992.
- Turner Jonathan H.,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Belmont, CA. : Wadsworth, 1991.

- U.N. Department of Humanitarian Affairs, DPRK: Assessment of Damage and Immediate Relief Requirements following Floods, (Sep. 12, 1995)
- Weber B. H., D. Depew and J. D. Smith, Entropy, Information and Evolution, Boston : The MIT Press, 1988.
- Weber Max,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Parsons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7.
- ,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eds.), Economy and Society, Vol.1. , New York: Bendminister Press, 1968.
- Zeeman, C., Catastrophe Theory, Reading, Mass. : Addison-Wesley, 1977.

< 論 文 >

I. 國內 論文

- 강정구,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 건설,” 『한국과 국제정치』 제6권 2호,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0 가을.
- 김국진, “북한, 베트남, 쿠바의 앞날,” 『민족지성』 1990, 2월호.
- 김동원, “북한의 경제개발정책의 성격과 경제개혁 전망,” 『아세아연구』 32권 1호, 1989.
- 김일성,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북한 조선로동당대회 주요 문헌집』. 서울: 돌베개, 1988.
- ,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에 대하여,” 『안보통일문제 기본자료집』. 서울 : 동아일보사, 1972.
-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북한자료집 : 김정일 저작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 서재진, “북한연구의 현황과 과제”, (민족통일연구원 제 1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1991, 10, 28)
- 오승렬, “북한의 경제정책 전망,” 『김정일 정권의 항방』 (민족통일연구원 주최 제 18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5. 11. 8.)

- 이두원, “北韓의 經濟 現況 : 危機와 轉換點,” 『북한체계의 내구력과 변화전망』 한국정치경제학회 주최 통일관련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1995년 11월 10일, 서울
- 이용필, “정치권위구조붕괴의 체계론적 접근,” 한국정치학회 합동학술대회발표논문집, 1976
- 이종석,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 임현진, “세계체제와 종속발전: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교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3권 1호, 1991, 10
- 전인영, “동구 및 북한의 사회주의건설 비교: 공산화 과정을 중심으로,”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 , “북한의 대내외 환경과 개방전망,” 『외교』 11, 1989년 9월호
- , “북한체제의 변화시 가능한 유형 전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6년 3월 26일.
- 한배호, “남·북한 정치이데올로기와 제도화 비교,” 『통일을 위한 민족화합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한배호, “북한정치체제의 구조와 과정,” 『아세아 연구』 통권 제71호, 서울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4.

2. 國外 論文

- Bailey Kenneth D., "Social Entropy Analysis of the Unification Process in the Korean Peninsula," in Complex Systems Model of South-North Korean Integration, The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by KSSSR & ISSR, May 17-18,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6
- Bertalanffy Ludwig von, "General Systems Theory," General Systems 1, 1956
- Boulding E., "The Dynamics of Imaging Futures," World Future Society Bulletin, 7, 1978
- Cardoso Fernando H., "On the Characterization of Authoritarian Regimes in Latin America," in The New Authoritarianism in Latin America, David Collier (ed.),

-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 Chilton Patricia, "Mechanics of Change: Social Movement, Transformational Coalitions, and the Transformation Process in Eastern Europe," *Democratization*, Vol. 1, No. 1.
- Conning Peter, "Synergy and Self-organizing in the Evolution of Complex System", *Systems Research*, Vol. 12, No. 2, 1995
- Deutsch Karl, "Social Mobiliz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No. 3. Sep. 1961
- Easton David, "Limit of the Equilibrium Model in Social Science", *Behavioral Science* 1, 1956
- , "An Approach to the Analysis of Political System", *World Politics*, Vol. 9, 1956-1957
- Elkier Grzegorz, "Democratization Process in East Central Europe: A Theoretical Reconsideratio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1, July 1991
- Hall A. D. and R. E. Fagen, "Definition of System," *General Systems* 1, 1956
- Huntington Samuel, "Democracy's Third Wave" *The Journal of Democracy*, Vol. 2, No. 2, Spring, 1991
- Kiel Douglas L., "The Nonlinear Paradigm : Advancing Paradigmatic Process in Policy Science," in *Systems Research*, Vol. 9, No. 2, 1992
- Klapp Orrin E., "Opening and Closing in Open System," *Behavioral Science* 20, 1975
- Laszlo E., "Cybernetics in an Evolving Social System," *Kybernetes*, 13, 1984
- Lipset S. M.,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
- Nye Joseph S.,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 A Cost-Benefit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1., 1967
- Nye Joseph S. Jr., "What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 Vol. 71, No. 2, Spring, 1992
- Rhee Yong-Pil, "Nonequilibrium Thermodynamics Approach to Korean Unification Process : A Search for New Paradigm," in *Complex Systems Model of South-North Korean*

Integration : Systems Perspective, Keynote Speech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by Korean Society for Systems Science Research &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ystems Science, May 17-18,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6

Teune H and K. Ostrowski, "Political Systems as Residual Variabl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6, 1973

Tucker Robert C., "On the Comparative Study of Communism," World Politics, Vol. XIX, No. 2, Jan., 1967

* 北韓 文獻

1. 單行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編, 『백과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 『현대조선말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조선문출판사, 1982.

박승덕, 『주체사상의 심화발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제1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경제사전』 제2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사회과학출판사 編,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선집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 『김일성저작선집 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 『김일성저작집, 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조선로동당 력사교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 論文

김일성, "사회주의건설에서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데 대하여," 『사회주의경제

관리문제에 대하여 3』.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0.

김일성, “사회주의 건설에서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1956. 12.13) 『김일성저작집 10권』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 1987년 7호

김학봉, “수령, 당, 대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 『근로자』 1987년 12호

최근식,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 『근로자』 1990년 1호

北韓社會의 風姿的·隱語的 談論分析을 통해 본 體制安定度 問題



吳 有 錫(全南大)

목 차

<요약문>	281
1. 서 론	285
2. 연구의 방법	288
3. 정치영역의 은어·풍자어와 정치적 의식의 이원화	293
4. 경제영역의 은어·풍자어와 사적 경제활동의 확대	301
5. 사회영역의 은어·풍자어와 일탈행위의 자기정당화	309
6. 결론	316
※참고 문헌	319

【요 약 문】

이 연구는 북한의 체제안정도 문제를 현재 북한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은어·풍자어 분석을 통해서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은어·풍자어는 일반 주민의 수준에서 그들이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반영해 주고, 행위지향성을 예견하게 해준다. 따라서 은어·풍자어 분석은 기존의 지배적인 북한사회 연구들에서와는 달리 밑으로부터 북한사회를 현지 주민들이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자료들로부터 수집한 북한사회의 은어·풍자어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귀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 차례의 심층인터뷰(구두로 직접 질문하고 답함)와 한 차례의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영역(정치·경제·사회)별로 여기서 추출한 은어·풍자어의 인적 재생산범위(공간), 재생산 빈도 등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의 체제안정도와 관련된 함의를 검토하고자 했다.

면접설문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북한사회의 정치·경제·사회영역과 관련된 은어·풍자어는 북한체제 안정도와 관련하여 본문에서 설정한 세 가지 범주들중 대체로 범주 [1]에 해당되었다.

정치영역의 경우 말단 주민통제기구의 ‘끄나블조직원’들에 비어와 풍자어가 가장 많았다. 경제영역의 경우 식량난과 국가식량배급체계에 관한 것들이 수위를 차지했다. 사회영역의 경우 출신성분(토대)에 따른 사회적 상승이동 기회의 원천적인 박탈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처럼 사회 각영역에서 범주 [1]에 해당되는 지배적인 은어·풍자어에는 해당 영역에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재생산과정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적·물적 대상에 대한 자기비하, 원망, 증오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를 북한체제의 안정도 문제와 관련시켜 볼 때, 가장 높은 빈도수와 확장된 재생산 집단을 갖는 은어나 풍자어들이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의식 속에서 북한체제의 탈정당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범주 [2]에 해당되는 은어·풍자어는 범주 [1]의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한의 체

제 안정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치영역의 경우 당·정간부의 권력남용과 관료주의적 행태에 관한 직설적 비어와 풍자어가 다수를 차지한다. 경제영역의 경우 주민들에 의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불법적(반합법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양식에 관련된 것들로, 공장이나 농장에서의 사적 절취와 암시장이 비유와 풍자의 주된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회영역의 경우 일상화되다시피한 뇌물수수와 더불어 그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대인관계망의 신뢰 붕괴 등에 관한 것들로 되어 있다.

여기서 특히 경제영역에서의 화폐물신주의의 확산 추세와, 사회영역에서의 집단적 ‘공모’차원의 일탈적 행위의 급증과 그에 따른 ‘아노미적’ 상태 (기존의 규범적인 사회적 가치관의 이완 내지 완만한 해체 조짐이 엿보이는 객관적 현실 속에서 주민들이 체합하는 상대적 무규범상태)가 북한의 체제안정에 일정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범주 [3]에 해당하는 은어·풍자어들의 재생산 빈도와 재생산집단이 여타 범주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이 범주의 은어·풍자어의 재생산과정 추이의 분석은 북한체제의 안정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경제영역과 사회영역의 범주 [3]에 해당하는 은어·풍자어의 함축적 의미 분석에서 좀더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경제영역의 경우 북한경제의 개방과 주체농법에 대한 은유적 언설에서, 그리고 사회영역의 경우 강도높은 일탈적 행위를 자기정당화하는 직설적 언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존체제의 근본적인 조작 및 작동원칙에 대한 비판과 부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은어·풍자어가 주민들의 집합적인 사회적 의식의 재구성과 행위지향을 매개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이들 영역에서 범주 [1], [2]를 대신하여 범주 [3]의 은어·풍자어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경우 북한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잠재력이 현실적인 정치적 저항력으로 전화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정치영역에 관련된 범주 [3]의 은어·풍자어는 극히 제한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제한과 억제의 정도가 경제·사회영역의 그것들에 비해 현격하게 강력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체제안정도는, 정치영역과 경제·사회영역

사이에 전개되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상호길항력을 발휘하는 북한체제의 탈정당화 정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은어·풍자어의 재생산집단의 특성과 관련하여 특정 은어·풍자어의 시기적 변화 추세와 더불어 피면접자들의 출신성분, 직업, 거주지, 학력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검토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체제안정도와 관련하여 볼 때,

범주 [3]과 범주[1], [2]의 은어나 풍자어의 재생산 집단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체제에 대한 높은 비판적 인식을 보여주는 범주 [3]의 은어나 풍자어에 대한 응답 빈도수가 높은 피면접자들은 출신성분상으로 대개 동요계층에 속했고, 정치범 경력이나 도시에서 오지로 강제추방당한 경험이 있었으며, 직업적으로는 해외경력자들이 많았다. 반면에 범주 [1]의 은어나 풍자어에 대한 응답 빈도수가 높은 피면접자들의 경우 대체로 출신성분상 핵심군중이나 기본군중에 속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1. 서론

1.1 문제제기

본 연구는 최근 망명자·탈북자들의 증언에 토대한 북한사회의 풍자적·은어적 담론 분석을 통해, 현재 심각한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북한체제하의 일반 주민의 집합적인 사회정치적 의식의 정형화 문제와 언어적 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사회적 저항의 관점에서 체제안정성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즉 지난 수년 동안 북한의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지배적으로 생산·유포된 북한의 지배체제와 관련된 풍자적·은어적 담론 분석을 통해 그들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경제체제의 위기상황을 사회의 어느 부문에서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해명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북한체제의 안정도 판별과 관련된 주요한 정치적 함의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풍자적·은어적 담론 분석을 통해 현시기 북한 지배체제의 안정성과 그 내용적 특질을 북한사회의 향후 정치경제적 변동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될 몇 가지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파악해 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수준에서의 체제비판적인 풍자적·은어적 담론의 생성과 유포 또는 확대재생산은 ‘전체주의’ 국가의 사회통제기제의 이완 내지 비효율적인 작동과 그러한 억압적인 통제기제에 대한 일상적인 형태의 저항의 규율로서, ‘위로부터’ 부과된 획일화된 공적 영역의 지배적 규율을 상대적으로 해체시켜 나가면서 자율적인 사적 생활영역이 확장되는 경향을 반영하게 된다(R. W. Thurston, 1991).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도 북한사회의 은어·풍자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밝혀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사회의 은어·풍자어에 반영되어 있는 자율적인 사적 생활영역의 확장 경향의 정치적 특질을 북한의 지배체제에 대한 일반대중의 사회적 저항과 연관시켜 해명하고자 한다. 예컨대 지배적인 특정한 은어·풍자어가 북한체제작동의 구조적 근간에 관계된 것인가, 아니면 기술적이거나 도구적인 차원에서의 체제운용의 비효율성과 무능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표출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밝혀 보려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사회 각 영역에서 재생산되는 지배적인 은어·풍자어에 관한 분석은 일반주민들에 의한 정당성의 철회가 체제 수준의 위기와 체제변혁을 초래할 수도

있는 강력한 정치적 잠재력의 편제를 시사해 주는지, 아니면 체제내적 개혁에 대한 대중적 원망의 표출에 근접해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 유효한 지시자로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작업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규명과 연결되어 있다. 즉 일반대중 사이에 유포되는 은어적·풍자적 담론들을 내용별로 정치·경제·사회부문의 유형적인 분류작업을 통해서 특정한 유형의 담론이 사회 내의 피지배계층의 특정 부분(이를테면 사회적 지위나 직업 또는 연령 및 학력과 같은)과 보다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특정한 유형의 담론이 지배적으로 재생산되는 집단이 그러한 풍자와 은어적 비판 대상(인적 요소·불적 요소)과 어떠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일반 주민들간에 목적의식적인 집합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기적 연대의식이 어느 정도로 잠재되어 있는가 또는 가시화될 수 있는 추세를 보여주는가를 판별하기 위함이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심각한 정치적·경제적 위기상황 속에서 북한의 일반대중이 그들의 일상적인 살아있는 체험 (lived experiences) 속에서 기존 지배체제의 정당성 문제에 관해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보다 가시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 위에서 현 북한체제의 상대적인 안정도 및 향후 구조적 변동의 가능성에 대한 단서를 밝히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1.2 연구의 의의

본 연구자들이 시도하고 있는 풍자적·은어적 담론 분석작업이 지니는 유용성을 기존의 북한사회 연구방법론(분석틀)들에 견주어 간략히 언급해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일반대중이 포지하고 있는 사회정치적 의식을 실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점에서 북한사회 분석에서 점차 그 유용성이 폭넓게 인식되고 있는 일상생활 수준에서의 일반대중의 사회정치적 의식과 행위양태의 변화 추이를 포착하고자 하는 이른바 ‘사회학적’ 접근(이은숙, 1988; 1993)과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장치로서 최근의 북한사회 분석에 실험력있게 적용된 ‘제2사회론’(서제진, 1995)의 분석기법과 문제의식을 일정하게 공유한다. 이들 접근법, 특히 후자의 핵심적 문제

의식은 전체주의사회에 특징적인 국가에 의한 사회 전영역의 포섭과 통제라는 공적 영역의 전일적 지배를 침식하는 '사사화' 또는 '사적 자율화' (privitization) 영역의 점진적인 확산과 그에 따른 경직된 체제작동원칙의 해체 내지 이완현상과 그 정치경제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접근법들은 북한사회 연구에 적용되어 온 기존의 정치체제론, 엘리트분석, 공식적인 당·정부관련 문건분석에 터한 정책 변화와 정치경제적 변이를 추출하고자 한 정치학적·비교정치론적 패러다임 등(최완규, 1996)에서 대체로 간과될 수밖에 없었던 '아래로부터의' 체제변화의 내재적 동인을 규명하려는 한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그렇지만 '사회학적 접근'법과 '제2사회론'의 분석틀이 지닌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분석틀은 몇 가지 측면에서 보완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우선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이들 연구에서 주된 분석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식적으로 생산된 대중매체, 대중소설 등과 같은 원자료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들 분석대상 자료들은 지배권력의 공식적인 내부검열을 거친 '방역처리된' 생산물이라는 점에서 일상생활에 터한 대중의 사회정치적 의식 및 행위양식의 변모를 반영함과 더불어 대중 '계도'를 목적으로 한 당국의 의도적인 정책적·선전적 고려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대중이 현재의 지배체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순응적 또는 도전적(비판적) 의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이 자료들로부터 엄밀하게 판별해 내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곤란이 야기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석틀에서 주요하게 활용되는 귀순자들의 증언도 특정한 사안과 관련하여 귀순자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에 의거한 과도한 인지적 평가가 개입되거나, 현재 자신의 처지와 관련한 정치적 고려하에서 증언 내용이 자기검열과정을 거쳐 일정하게 굴절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북한의 일반대중을 주체로 설정하여 보다 실제적으로 북한사회에 내재하는 거대한 잠재적인 변동의 동학을 전망하려는 이러한 접근들은 그 유용성과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분석적 수준에서 보완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적 접근방식의 유용성을 재고하고, 작업의 결과로부터 도출될 북한의 체제변동의 전망과 관련된 예시(豫示)적 함의들을 현실적합적으로 세련화시키기 위해 최근 북한에서 유통되는 풍자적·은어적 담론을 분석적 수준에서 유형화하고, 계량적 기법을 활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사회주의사회에서 지배권력의 일반대중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언론 자유의 부재는 정치적 유머나 풍자의 유포 및 확산 정도와 일반적으로 정비례하게 되고, 그러한 담론의 익명적 생산주체인 대중은 특정시기의 '가장 심각한' 사회적 저항을 언론적 수준에서 재생산하게 된다는 지적(A. Dundes, 1987)은 북한사회에도 온전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특정 사회의 공적 영역으로부터 끊기시되고 은폐될 수밖에 없는 풍자적·은어적 담론은 그 사회의 지배체제의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사안들을 주된 소재로 삼아 구성되기 마련이고, 또 그러한 담론의 존재는 일반대중 자신의 관점에서 그들을 지배하는 정치체제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 심각성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간주하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집합적 체험의 살아있는 지표임을 뜻한다.¹⁾

2. 연구의 방법

2.1 분석 대상과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목적과 관련하여 먼저 시기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이래, 최근 까지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 사이에 생성·유포된 풍자어 및 은어들을 구체적인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시켰다.

- ① 1980년대 이후 출간된 문헌자료 및 보도자료들의 검토를 통해 현재 한국에 알려져 있는 은어와 풍자어의 수집과 정리
- ② 1990년대 초반의 귀순자 16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은어와 풍자어의 추가

1) 이러한 분석대상과 분석기법을 활용할 경우, 현재의 경제적 위기와 관련한 북한의 일반대중의 사회 정치적 의식의 집합적인 차원의 정형화 양태 - 특히 기존의 지배체제의 재생산과 직결된 사회적 의식의 정치적 특질 -을 보다 심층적으로 헤명할 수 있다고 보는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위로부터의' 사회통제기제의 매개체로서 언어의 '계급성'을 헤명하고자 한 기존의 언어사회학적 분석방법론들(전수태·최호철, 1989; 이성인, 1993 등)과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수집과 정리

③ 최근 2~3년 동안의 귀순자 19명에 대한 면접설문조사 및 자유질의

위 ②의 작업은 1994년 12월 ~ 1995년 1월 사이에 행한 일종의 비지시적 면접(nondirective interview)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작업의 목적은 단지 은어·풍자어의 추가적인 수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한사회에서 특징한 은어와 풍자어의 유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한 데에도 있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③의 조사작업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최근 2-3년 동안 급속하게 악화되어 온 북한의 식량사정과 그에 따른 사회 제부문에서의 일탈행위의 급증 등은 이런 위기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은어와 풍자어를 생성시켰을 것이라는 추론 때문이었다. 이 작업은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연구 목적을 고려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필자들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③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우선 면접대상자들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²⁾

<표 1> 피면접자들의 인적 사항

피면접자	연령	성별	직업	당원 경력	학력	거주지	탈북시기	귀순동기
1	36	남	사업소 운전수		고	함북 온성군	90. 10	정치적, 경제적
2	38	남	광부	O	고	함북 청진시	91. 06	정치적
3	34	남	광부		고	강원 원주시	91. 08	정치적
4	50	여	미상사	O	고	함남 함흥시	94. 00	경제적
5	31	남	농장원		대	함북 온성시	94. 01	정치적

2) 여기서 한 가지 밝혀둘 것은 연구자들은 구체적인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연령, 학력, 직업, 성별, 당원여부, 북한에서의 거주지 분포 등을 고려하되 특수한 정치적 전력(예컨대 정치범으로서 강제수용소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경우이거나 추방된 경우와 같은) 등을 지닌 대상자의 면접조사 결과가 초래할 수 있는 편기를 최소화하려고 했으나, 이 점은 거의 전적으로 본 연구자들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불어 본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서 성심껏 협조를 해 주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피면접자	연령	성별	직업	당원 경력	학력	거주지	탈북시기	귀순동기
6	35	남	소방대원		전문대	강원 원산시	94. 10	정치적
7	39	남	지도원	O	대	황북 사리원군	94. 11	정치적
8	24	남	수산조합 외화별이		전문대	함북 김책시	94. 12	정치적
9	29	남	광부	O	중	함북 회령시	95. 10	경제적
10	31	남	군관리소 부역과장	O	대	함북 청진시	95. 11	정치적
11	47	여	지도원	O	전문대	평남 문덕군	96. 03	정치적, 경제적
12	39	남	광부		전문대	평남 은산군	96. 05	정치적
13	40	남	철광노동자	O	고	함북 회령시	96. 10	정치적
14	29	남	안전부 관리원		고	평양시	96. 11	정치적
15	38	남	어부		중	함북 청진시	97. 04	정치적
16	30	남	교사		대	평북 신의주시	97. 05	정치적
17	21	남	군인		고	평남 은천군	97. 06	정치적
18	30	여	광장노동자		중	함북 회령시	96. 12	정치적
19	59	여	주부		고	평북 신의주시	96. (?)	경제적

면접은 일종의 집단면접조사(group interview) 방식을 택하여 1997년 10월 11일에서 10월 25일까지 5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1회에 3-6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대상자의 익명성 보장에 대한 사전 주지와 더불어 기본 설문항목으로 피면접자의 당원 경력 유무(평당원, 간부당원 여부)와 북한 거주 당시의 직업, 연령, 학력, 동기 가족 유무, 망명·탈북시기를 일차적으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풍자적·은어적 담론의 수집과 관련해서는 크게 담론의 내용관련 문항을 유형화하고, 해당 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 은어와 풍자어 및 그 뜻풀이를 괄호 속에부기하여 나열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어서 특정한 은어나 풍자어의 재생산과정에 대상자 자신이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와, 참여했을 경우 구체적인 재생산집단과 그것들을 듣거나 사용한 빈도를 확인하는 문항을 제시했다.

이처럼 일단 연구자들이 사전에 작성해 놓은 은어와 풍자어들을 문항식으로 나열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지형을 각 설문항목마다 제시한 뒤에, 그러한 선택지에서 배제되어 있으나 대상자 자신이 훨씬 더 빈번하게 접했던 은어나 풍자어가 있을 경우에는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방형 설문을 추가한 혼합형 설문지를 작성

했다. 이는 새로운 은어나 풍자어를 확인·수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설문지 작성이 끝난 뒤에는 피면접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직접면접방식을 통해 검토하면서, 보조질문을 통해 특정한 은어나 풍자어의 쓰임새에 관계된 구체적인 사정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설문지의 선택지형 은어·풍자어 항목의 작성에는 북한의 은어·풍자어 실상에 대해 최근에 출간된 『북한실상 종합자료집』(내외통신사, 1995; 이하 『자료집』으로 약기함)에 수록된 ‘은어·풍자어’ 모음집을 기본 자료로 삼고, 근래에 출간되었거나 채록된 여타의 증언들을 통해 새로이 전해진 것들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또 1차면접시에 확인된 새로운 은어나 풍자어를 2차 면접 설문지에 추가시키는 방식으로 은어나 풍자어의 재생산집단 및 빈도를 체크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총 5회에 걸쳐 확인된 새로운 은어나 풍자어에 대해서는 1-4회 면접자들에게 다시 전화면접을 통해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본 연구에서는 위 <표 1>에서 1-17번에 해당하는 귀순자들에 대한 면접결과를 분석하였고, 18-19번에 해당하는 귀순자들의 면접자료는 예비조사로서 활용하였다.

2.2 분석 대상의 유형화 및 분석범주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북한체제의 안정도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사회를 크게 정치·경제·사회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과 연관된 최근 수년 동안의 은어와 풍자어 실태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북한사회에서 최근 재생산되고 있는 은어와 풍자어들을 크게 정치·경제·사회영역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구분하고서, 각 영역에 관계되는 은어와 풍자어에 각기 세 가지의 범주를 설정하여 유형적으로 연결시키고자 한다. 여기서 각 범주는 북한체제의 안정도에 미치고 있거나 향후 미칠 수 있는 차등화된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각 영역의 범주 [1]에는 해당 영역에서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일상적인 관심사로 부각되는 사안에 대한 행위자 수준에서의 소극적이고 자기방어적인 대응방식에 관련된 은어와 풍자어를 포함시킬 수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대응방식은 현실세계에서 묵종, 체념, 자기비하, 즉자적인 적대감의 표출, 냉소주의 등을 드러내는 은어와 풍자어로 표

상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기존의 제도적 기제나 수단에 편승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려는 기회주의적 태도나 원망(願望) 등을 드러내는 은어와 풍자어로 표상된다. 따라서 이 범주에 속하는 은어나 풍자어는 체제안정도와 관련하여 별다른 부정적인 효과를 산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 영역의 범주 [2]에는 일상생활 속의 그러한 심각한 사안과 관련하여 기술적(technical)이고 도구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보여주거나 시사해 주는 은어와 풍자어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범주의 은어와 풍자어는 기존의 정치·경제·사회체제의 근본적인 운용원칙에 의식적으로 도전하거나, 그것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지배적인 규범체제와 이태올로기를 침식해 나가는 의도치 않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주민들의 행위지향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주의 은어나 풍자어의 재생산집단의 확대 정도와 빈도가 높아질수록 체제의 내적 변용에의 부하(負荷)가 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체제안정도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산출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효과 그 자체로는 사회구조적인 수준에서 체제안정도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범주 [3]에 포함될 수 있는 은어와 풍자어는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조직원리 자체를 의문시하거나, 비난하고 비판하거나, 적대적으로 묘사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들은 각 영역에 있어서 위기관리능력의 취약성과 정채상의 비효율성을 북한정권의 무능함이나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한계로 인식하려는 은어적·풍자적 담론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주 [3]의 은어와 풍자어의 확대재생산 과정은 기존 북한체제의 안정적 존립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이 범주의 은어와 풍자어는 체제안정도와 관련하여 지배체제의 변화나 체제의 구조적 변동을 초래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를 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각 영역과 관련된 범주 [3]의 은어나 풍자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상(객과적 실제)을 어떤 맥락으로 형상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과 비판을 함축하는 범주 [3]의 은어나 풍자어가 대안적인 체제조직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기대나 열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또는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의 정당성을 승인한 위에서 기존의 지배권력에 대한 강렬한 혐오

갑과 저항의식을 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안적인 전망이 부재한 상태에서 범주 [2]의 은어와 풍자어에서 예시(豫示)될 수 있는 무규범적인 행위지향성의 극단적인 추구와 그에 따른 부정형화된 대중적 집합행동으로 귀결될 것인지의 여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은어·풍자어의 유형적 분석범주 설정에 입각하여 아래에서는 북한사회의 각 영역별로 최근의 은어와 풍자어의 실태 및 그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3. 정치영역의 은어·풍자어와 정치적 의식의 이원화

북한사회의 정치영역을 그 대상으로 하여 비유하거나 풍자하는 말들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사회영역을 대상으로 한 은어나 풍자어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망(願望)이나 비애 또는 사회적 불평등구조를 집약적으로 표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상은 주민들의 사회생활이 일상화된 정치영역에 침윤되어 있는 데에서 비롯된다.

여기에서는 북한 정치체제의 안정성과 관련된 은어와 풍자어를 앞에서 제시한 3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재생산집단의 유형 및 재생산 빈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정치체제의 탈정당화라는 맥락에서 잠재적이거나 현실적인 위협수준이 가장 낮은 범주 [1]에는 일상화된 주민통제기제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은어와 풍자어를 포함시켰다. 범주 [2]에는 그보다 위협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당·정간부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그리고 범주 [3]에는 정치체제의 근본조직원리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하거나 의문시하고 회의하는 말들을 포함시켰다. 다음 <표 2> - <표 4>는 각 범주에 해당하는 은어와 풍자어들과 해당 재생산집단 및 재생산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각 <표>에서 응답자 수 항목의 A는 전체 응답자 수를 뜻하는데, 각 범주의 은어와 풍자어들은 A의 빈도수가 높은 순서로 배열하였다. B는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해당 은어나 풍자어를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일상적인(‘비정치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수를 뜻한다. 따라서 재생산빈도가 높은 은어나 풍자어 가운데에는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정치적 뉘앙스가 배제된 채 일반적인 풍자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³⁾

<표 2> 일상화된 주민통제기제에 관련된 은어·풍자어 (정치영역의 범주 [I])

	은어·풍자어	응답자 수		재생산집단			재생산빈도	
		A	B	I	II	III	낮음	높음
1	헛바닥 주의해라[코 밭을 조심해라]	17			2	15		17
2	택간이	17			4	13	2	15
3	강냉이 영양단지[학생단지]	14				14	1	13
4	짧은 혀 때문에 긴 목이 날아간다	13				13		13
5	창세끼	13			3	10	1	12
6	젊어서 피병은 늙어서 보약	13	III-3		3	7	1	12
7	시범개입	13	III-4			9	2	11
8	먼저 보고하는 놈이 행이다[먼저 말하는 것이 이긴다]	13	III-1		3	9	4	9
9	물어먹기	12		1	1	10	4	8
10	안전사업	11	III-4			7	2	9
11	바른 소리하면 가는 세상	10		4		6	5	5
12	창	9				9		9
13	권동무[전동부]	9	II,III-1			7		9
14	죽은 양반 산 개보다 못하다	8	III-3	1	1	3	2	6
15	몰낸다	7			2	5	1	6
16	부억간다	7		2		5	4	3
17	마지기	6	III-2	1		3	3	3
18	민탄구지	6		4	1	1	3	2
19	찰거머리	5	III-1			4		5
20	똥탄다	5	III-1		1	3		5
21	닭대가리	5	III-2, III-1, II-1			1		4
22	뼈다귀 파낸다	4	III-1			3		4
23	용광로[아궁이]	4			1	3	1	3
24	말뼌똥은 반동 아니다	4		1		3	2	2
25	제사 3만 반장이오?	4	III-1			3	2	2
26	오늘의 휴식은 내일의 증산이다	4			1	3	2	2
27	민대탄다	3		1		2	1	2
28	권동무	2				2		2
29	소년단 베타이는 정치 올라버	2				2		2
30	백암간다	2				2	1	1
31	지또	2			1	1	1	1
32	삼포대	2	III-1			1	1	

주 1) 재생산집단 항목의 I은 (가족·친인척·친구), II는 (이웃·직장동료), III은 (일반주민들)을 지칭함
 2) 응답자 수 B항목의 I, II, III은 주 1)의 재생산집단을 지칭하고, 1, 2, 3은 전체 응답자 수 A 중 B에 해당하는 응답자 수를 뜻함.

3) 이러한 이중성은 은어나 풍자어 그 자체의 속성에 기인한 바도 적지 아니한 데, 북한처럼 억압적인 주민통제기제가 비교적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러한 이중성은 보다 빈번하게 드러난다. 당의 공식적인 선전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유포된 구호에서 따온 풍자어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한데, 이는 역설적으로 그러한 풍자어가 재생산 주체의 비판적인 의도의 노출에 대한 보호막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예컨대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 ‘사회주의를 지키는 자’, ‘위대한 장군님이 계시는데 웃으며 극복합시다’와 같은 풍자어가 이에 해당한다.

먼저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북한에서 주민통제기구의 최선단에 위치해 있는 ‘끄나블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해당지역의 국가보위부원과 사회안전원을 지칭하는 ‘택간이’, ‘창새끼’, ‘찰거머리’, ‘끈동무’ 등과 같은 은어가 빈번하게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들에 대한 주민들의 원망과 증오가 매우 직설적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뜻한다.⁴⁾ 이 점은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메뚜기’, ‘깡사’, ‘부지깡이’와 같은 은어들을 면접조사에 응한 귀순자들이 거의 들어보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은어나 풍자어가 특정한 시기적 상황의 반영물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러한 표현의 현저한 변화는 말단 끄나블조직의 권력 남용이 주민들의 일상사에서 더욱 버거운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직설적인 적대감은 ‘바른 소리하면 가는 세상’이라거나 ‘헛바닥 주의 해라’, ‘짧은 혀 때문에 간목 날아간다’와 같은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이들에 대한 두려움과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처럼 증오와 두려움으로 혼재되어 있는 일상적인 정치영역의 삶은 상반되는 정치적 태도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는 <표 2>에서 보듯이 ‘먼저 보고하는 놈이 땡’이라거나 ‘물어먹기’와 같은 식의 풍자어가 널리 유포되어 있는 데에서 시사되는 것처럼 대체로 현실추수적이면서 적극적으로 기회주의적 태도를 견지하는 태로 나아간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반대로 ‘짧어서 꺾병은 늙어서 보약’, ‘빈달구지’, ‘부역간다’, ‘똥탄다’, ‘오늘의 휴식은 내일의 증산이다’, ‘빈대탄다’ 등과 같이 노력동원이나 교양집회 또는 생활총화 등과 관련해서 냉소적이면서 체념적인 현실순응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또 출신성분에 기초하여 차별대우를 하는 현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33단계’라는 당의 분류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비꼬던 것에서 ‘빼다귀 파낸다’와 같은 노골적인 표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비록 재생산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이는 북한 체제가 성립된지 50년이 지났지만 변함없이 계속되는 과거 조상의 출신성분에 의한 주민통제⁵⁾정책으로 인해 이른바 ‘적대계층’ 출신 주민들의 반감이 더욱 누적되고 있다는

4) 본 연구자들이 면접조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한에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가장 적대적인 표현은 ‘택간이’와 ‘스파이’와 ‘지주’였다.

5) 아직도 북한에서는 조부나 부모의 출신성분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의 면접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북한에서 지위상승의 전제는 당원이 되는 것인데 출신성분이 나쁘면 아무리 당원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피면접자들은

것을 시사해 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범주 [1]에 속하는 은어와 풍자어들은 그 재생산집단이 대체로 일반주민들이고 재생산빈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억압적인 주민감시기제에 대한 적대감이나 노력동원에 대한 형식적 참여태도와 심리적 반발이 팽배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면접적인 정치영역에 대한 이러한 잠재적인 비판의식은 위에서 본 것처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북종적인 보신주의적이거나 기회주의적인 태도와 혼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이와 같이 일반주민들이 이 영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비판적인 은어나 풍자어를 재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은 부분적으로 가중된 식량난 등 경제위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증대한 것파도 관계가 있다. 이를테면 ‘말반동은 반동 아니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말반동’썸은 당간부들이나 기관원들도 크게 문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위로부터의 일상적인 주민통제 역시 상대적으로 느슨해졌다고 최근에 북한을 떠난 여러 귀순자들은 증언하였다.

<표 3> 당·정·군간부 비판에 관련된 은어·풍자어 (정치영역의 범주 [2])

	은어·풍자어	응답자 수		재생산집단			재생산빈도	
		A	B	I	II	III	낮음	높음
1	사단장이 노부라면 노부지	16			1	15		16
2	뿔구멍치기[뿔치기, 뿔문치기]	16		1	1	14	2	14
3	마슴놈이 지주되니 너 악독하냐	16		1	5	10	3	13
4	주먹치기	12				12	1	11
5	당 일꾼들은 당당하게 인민들의 똥을 치며, 행정일꾼들은 행세하며 인민들의 똥을 치며, 안전부는 안전하게 인민들의 똥을 치며, 보위부는 보이지 않게 인민들의 똥을 치며, 군간부는 군대군대에서 인민들의 똥을 친다	12		1	1	10	1	11
6	부러부에서는 무조건 때어먹고, 군단에서는 군발없이 때어먹고, 사단에서는 사정없이 때어먹고, 연대에서는 연속적으로 때어먹고, 대대에서는 대대적으로 때어먹고, 중대에서는 중간중간 때어먹고, 소대에서는 소리없이 [소소하게] 때어먹고, 분대에서는 분별없이 때어먹는다	12		1	1	10	2	10

강조했다.

	은어·풍자어	응답자 수		재생산집단			재생산빈도	
		A	B	I	II	III	낮음	높음
7	한랭전선이 와도 모두 간부 뭉이다	8	III-1	1		6		8
8	저주	6		1		5	2	4
9	취포수	6	III-1		1	4	2	4
10	갯도속에는 못들어가는 벤츠가 좁은 무지개의 차마속으로 잘도 들어간다	5				5		5
11	당간부가 여비서 두번만 부르면 벌써 일난 것이다	5				5	1	4
12	소배때기다	3		1		2	1	2
13	먹세 중위	3			1	2	1	2
14	까투리 새끼들	3	II-1	1	1		1	2
15	3체주의	2			1	1	1	1
16	도깨비 인사	2	외-1			1	1	1
17	늑대	2		1		1	1	1
18	쪽제비	2	III-1		1		1	1
19	호미망치 [낫자루망치]	2				2	2	
20	아프리카메뚜기	1			1		1	
21	개똥모자	1		1			1	
22	공타동무	1			1		1	
23	간부절단기	1				1	1	
24	돈갈보	1		1			1	
25	가이나나를 짚어봐라	1		1			1	

주 1) <표 2>의 주 1), 2) 참조

2) B항목의 '외'는 러시아의 벌목장이나 중국 등지와 같은 북한 이외 지역에서 해당 은어나 풍자어의 재생산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 수임.

현실적으로 수령과 당에 의해 일방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처지는 대면적인 정치역학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표 3>에 나오는 범주 [2]의 당·정간부들에 대한 비판적 말들과 <표 1>에서 꼬나블조직 기관원들에 관한 말들을 재생산집단(주체)이라는 면에서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전자에 비해 후자의 경우 가족·친인척·친구와 같은 친밀한 소규모집단 내에서

유포되는 비율이 상대적 높다는 점이다. 이 점은 부분적으로 ‘주먹치기’와 같은 당·정간부들의 관료주의적 행태가 주민들에게 훨씬 큰 고통을 가져온다는 인식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면접적 관계에서의 피의압과 처벌 가능성이 주민들의 의식 속에서 보다 일차적으로 형상화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그렇지만 당·정간부를 ‘지주’라는 가장 적대적인 계급적 존재에 빗대어 비난하는 은어가 가장 널리 퍼져 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의 중추적 지배세력인 당·정(·군)간부들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저항이 뻣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범주 [2]의 은어나 풍자어와 관련해서 유의할 점이 있다. 범주 [1]에 못지않게 범주 [2]의 은어나 풍자어 역시 널리 유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범주 [1]에 속하는 은어와 풍자와는 달리 주민들 수준에서 자기검열과정을 거쳐 나온다는 것이다. 면접조사에서 확인된 다수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당·정간부들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은 결코 ‘당적으로’ 행해져서는 안되고, 일 자연인으로서의 특정 개인에 대한 것이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즉 인민의 지도기관이자 국가조직의 핵심체라고 할 수 있는 당의 직위나 직책과 결부된 간부당원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은 당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정치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재생산 정도면에서 범주 [2]의 은어나 풍자어가 범주 [1]의 그것에 못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상화된 정치영역과 관련된 주민들의 비유나 풍자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당·정간부들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당적 주체와 자연인으로서의 분리 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내부적인 자기검열의 반복학습은 당의 무오류성이라는 공식적인 정치영역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를 실체로서 승인하면서, 국가정책의 오류나 실패를 자연인으로서의 당·정간부들에게 귀속시키게 되는 정치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마도 주민들의 이러한 자기분열적이고 이분법적인 정치적 사고방식이 <표 4>에 나와 있는 범주 [3]의 은어나 풍자어가 상대적으로 매우 희소한 현상과 그 이유에 대해 부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지만 범주 [2]의 은어나 풍자어가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비의도적인 정치적 차단효과 역시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는 곤란하다. <표 4>에서 범주 [3]에 속하는 것들 가운데 재생산 정도가 가장 높은 ‘우리식 사회주의는 간부식 사회주의다’⁶⁾라는 풍자가 잘

보여주듯이, 위에서 언급한 일반주민들의 누적된 불만과 심리적 저항의식은 부분적으로 북한 정치체제의 근간을 관통하는 체제비판적인 인식의 지평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표 4> 정치체제의 탈정당화를 함축하는 은어·풍자어 (정치영역의 범주 [3])

	은어·풍자어	응답자 수		재생산집단			재생산빈도	
		A	B	I	II	III	낮음	높음
1	우리식 사회주의는 간부식 사회주의다	9		5		4	5	4
2	아버지가 아들을 칭찬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칭찬하다	9	외-1	5	1	2	5	4
3	군대도 못나갔다 온 게 최고사령관 뺏다	6	외-2	3	1		4	2
4	폐쇄해야만 통치할 수 있는 세상	5		2		3	2	3
5	고도	4	외-1	3			3	1
6	10센치	4	I-1	3			4	
7	햇네기	4		4			4	
8	표딱지	3			1	2	1	2
9	추세머리	3		1		2	2	1
10	잇분	3	I-1	1		1	3	
11	남풍[이 불어야 단비가 온다]	3		3			3	
12	돌망치	2		1	1		2	
13	올챙이	2		2			2	
14	살아서도 백성들 단련시키더니 죽어서도 단련시킨다	2		1	1		2	
15	손바닥 하나로 감히 태양빛을 가릴 수 있느냐	2		2			2	
16	번덕번덕 유물론	2		1	1		2	
17	재양당	2		2			2	
18	가축돈사	1				1		1
19	짜바카동무[미친 짜바카]	1		1			1	
20	번지없는 주막	1			1		1	
21	김대지주	1		1			1	
22	정일의 법칙	1		1			1	

- 6) 우리식 사회주의는 간부식사회주의다라는 은어와 관련하여 응답자 중 1명은 이말이 간부와 일반주민들 사이의 차별대우를 비난하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일반주민들의 사회적 품성이나 당적 교양수준을 간부들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은어·풍자어	응답자 수		재생산집단			재생산빈도	
		A	B	I	II	III	낮음	높음
23	위대한 죽장군	1			1		1	
24	다마네기 정책	1		1			1	
25	벽그림	1			1		1	
26	4대 양성소	1			1		1	
27	크라이 막스	1		1			1	

주) <표 3>의 주 1), 2) 참조

북한 정치체제에서 지도자의 교체나 대중의 지도자 평가에 대한 인식은 남한과 상당한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북한의 공식논리에서 최고지도자는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의 통일체를 이루는 대가정의 가장으로 인식된다(이종석). 그러므로 <표 4>의 은어나 풍자어들, 특히 김부자에 관한 것들은 최고의 금기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금기사항은 일차적으로 대중이 가장인 지도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로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차적으로 그 위반에 대해 가혹한 처벌이 필연적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은어나 풍자어의 재생산이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실제로 김부자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은어들의 경우 면접조사과정에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이 범주의 은어에 대해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 이유는 적발되었을 때의 혹독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그것과 무관하게 이러한 유형의 은어나 풍자에 대한 발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즉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피면접자의 응답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그러한 발상 자체의 부재현상의 저변에는 빙주 [2]와 관련된 자기검열과정이 세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고 지도자는 당위에 위치하는, 따라서 정치영역에서의 은어나 풍자와는 거의 절대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버지가 아들을 칭찬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칭찬한다’, ‘군대도 못갔다 온게 최고사령관이 됐다’는 김부자 권력세습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이러한 풍자와 관련하여 3명의 응답자들은 북한에 살고 있을 때에는 이러한 말을 상상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 중 2명은 제러시아 벌목공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들은 출신성분은 기본군중이지만 해외생활경험자라는 특별한 사회적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며, 나머지 1명은 군복무 시절 남한의 대북방송을 통해 들었다고 했다.

아마도 이러한 연유 때문에 <표 4>에 나와 있는, 김정일에 관계된 많은 은어들이 주로 그의 외모나 퍼스널리티에 관련되어 있지 않나 싶다. 그러나 신체적 외형을 빗대어 풍자하는 이러한 말들이 다른 은어나 풍자에 비하여 정치체제에 대한 구조적 비판의 정도는 낮을지 모르지만 북한 정치체제의 특수성에 비취 볼 때 그 정치적 함의를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예컨대 권력세습에 관한 위의 풍자들과 더불어 ‘햇내기’와 같이 최고지도자로서 김정일의 자질을 의문시하는 은어들을 1990년부터 1997년 중반에 걸쳐 북한을 빠져나온 본 조사의 피면접자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북한체제의 위기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공식적인 지배영역의 담론에 순응하지만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추론적 시사점이 과대평가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은어나 풍자의 재생산집단이 가족·친인척·친구와 같은 협소한 집단으로 거의 대체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생산 빈도 역시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 점은 범주 [3]에 관련된 은어나 풍자어들 가운데 다수가 ‘약간은 특수한’ 정치적 전력을 갖고 있는 피면접자들에 의해 중첩적으로 체크된 사실에서도 재확인된다.⁷⁾

4. 경제영역의 은어·풍자어와 사적 경제활동의 확대

현재 북한체제의 위기가 직접적으로는 심각한 식량난에 의해 촉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북한 특유의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경직성이라는 구조적 원인(遠因)에서 기인한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국가소유제나 국가계획하의 배급제도 운용 등 경제영역에 관련된 은어와 풍자어는 정치·사회영역에 비해 그 빈도수가 낮다. 이러한 사실은 대체로 1980년대까지는 북한경제가 여러 가지 곤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운용 차원에서 사회정치적으로 심각할 정도의 문제에 직면하지는 않았다는 사실과도 관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 2-3년 동안의 극심한 식량수급 위기는 공

7) 이들은 모두 성분별로 보면 동요계층에 속하고, 직업별로 보면 노동자가 2명, 농민이 1명이다

식적인 국가경제영역을 크게 위축시켰다. 이에 따라 주요 생필품의 현물거래방식의 암시장 유통이 급격하게 확대되었고, 이와 관련된 은어와 풍자어가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⁸⁾

대체로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사회들에서 암시장의 활성화는 기존의 통제경제체제를 보완하는 일종의 순기능을 수행하면서, 이와 더불어 개인이 상업적 거래를 통해 사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경제영역의 확대를 의미하였다. 그렇지만 암시장의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핵심원리에 해당하는 국가소유제와 통제경제의 근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들 사회에서 국가에 의한 사적 소유의 제한적 허용과 시장경제원리의 부분적 도입과 같은 조치들은 암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상쇄시키기보다는 사적 소유와 이익 추구를 지배적인 경제원리로 등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점진적 변화는 개인이기주의의 추구하고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화폐물산주의를 지배적인 가치로 격상시켰다. 이는 암시장의 활성화나 사적 소유제의 제한적 허용이 해당사회 주민들의 의식 수준에서 기존 가치체계의 변화 욕구를 반영하였고, 또 그러한 욕구를 새로운 사회적 가치체계로 수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서재진:제8장).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경제영역과 관련된 은어와 풍자어의 재생산은 주민들이 체휼하는 물질적 삶에 대한 부단한 (재)형상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상화과정은 경제영역의 변화에 대해 그들의 눈으로 인식하는 실태에 관한 조망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체계 및 행위지향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 경제영역과 관련하여 재생산되는 은어와 풍자어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경제체계에 대한 주민들의 정당성 부여나 철회 등과 사회적 의식의 집단적인 변화 여부와 그 질적 수준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그러한 상관관계의 내용이 질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 세 가지 범주를 통해 각 범주에 해당하는 은어·풍자어의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8) 198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북한당국이 외화벌이를 국책사업으로 제기하고,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자유교역을 허용하고, 합영회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시행에 옮긴 부수적 결과로서 암시장과 장사꾼이 국지적으로 생겨나기는 했지만, 1989년 평양축전 이후 식량과 기타 생필품 구독난이 좀더 심각해지면서 암시장, 특히 농촌의 장마당이 점차 확대되어 나갔다. 이 점은 1994년 12월 ~ 1995년 1월에 진행된 귀순자 15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먼저 경제체제의 탈정당화 수준과 관련하여 최저위(最低位)를 차지하는 범주 [I]의 은어와 풍자어는 내용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식량을 비롯한 기초 생필품의 태부족으로 겪게 되는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 비애와 원망 등을 표출하는 말들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공급품의 부족이나 조악한 질에 대한 불만과 외제상품에 대한 선호와 관련되어 있다.

다음 <표 5>는 범주 [I]에 포함되는 은어·풍자어의 재생산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표 5> 주민들의 빈곤상을 자조적으로 반영하는 은어·풍자어 (경제영역의 범주 [I])

	은어·풍자어	응답자 수		재생산집단			재생산빈도	
		A	B	I	II	III	낮음	높음
1	배도 사람밀고 산다	16	III-1	2	2	11		16
2	물 건너온 것[거야?]	14	III-1, I II-1			12		14
3	모이(쫓는) 시간	12	III-3	1	2	6	1	11
4	내 입에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지 못 믿겠다 [내 입에 들어와야 떡이다]	12				12	1	11
5	잭키 [짜끼]	12	III-2			10	1	11
6	이론식사	11		1		10		11
7	조선돈은 휴지(똥돈, 북데기돈)와 같다, 조선 돈은 있으나 마나다	11		2	2	7	3	8
8	돈이 날개다	11	III-2	1	1	7	1	10
9	조선돈은 개도 안 먹는다	10	외-1		2	7	2	8
10	조선혁명도 식후혁명이다	10	III-1	3		6	4	6
11	황금밥	9		1		8		9
12	허약조직 [허약3단]	9	III-1		1	7		9
13	꼴짜[골짜, 필짜]	8				8		8
14	먹성이 당성·혁명성이다	8			2	6	1	7
15	우리돈, 돈이야?	6				6		6
16	사회주의를 지키는 자	5		1	1	3	3	2
17	갯바윗돌	4	III-1			3		4
18	영실군대	4			1	3		4
19	삼백그람 벌었다	4	III-1	1		2	1	3
20	해방떠났다	3				3		3
21	강냉이는 국제화폐	3				3		3
22	한번 도둑 맞으면 10년 서기 바쁘다	3				3	1	2

주) <표 3>의 주 1), 2) 참조

<표 5>에서 보듯이 설문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배도 사람 믿고 산다’, ‘내 입에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지 못믿겠다’와 같은 풍자어는 현재 북한 분배체계의 기본인 배급제가 식량난으로 인해 붕괴되어 버린 현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스런 처지를 직설적으로 나타낸다. 그런데 ‘조선혁명으로 식후혁명이다’, ‘떡성이 당성·혁명성’이라는 풍자어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위에서 지적한 말보다는 유포빈도와 재생산빈도가 낮으며, 재생산 집단이라는 번에서 볼 때에도 일반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되어도 조심스럽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범주 [1]에 똑같이 속하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은어나 풍자이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비유대상에 따라 주된 재생산집단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당 이나 당성’이라는 체제 유지와 관련된 절대적인 명제에 빚댄 궁핍한 생활상이나 낙후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비난을 암시하는 은어나 풍자어의 재생산과정에서의 참여는 해당 개인의 일신의 안위와 관련하여 좀더 신중한 처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설문에서 중간 정도의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는 ‘사회주의를 지키는 자’(고지식하게 노임만으로 생활하다가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 ‘허약조직[허약 3단]’, ‘영실군대’라는 은어들은 모두 배급체제 마비로 인한 주민들의 영양실조상태를 빚댄 풍자어들이다. 여기에서도 ‘사회주의’라는 명제에 빚대 은근히 체제에 대한 비난을 암시하는 풍자의 경우, 허약조직이나 영실군대라는 풍자보다 낮이 익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럽게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각한 식량난을 반영하는 은어나 풍자어와는 별도로 생필품 부족에 따른 대응물자의 절대적인 공급부족 사태를 보여주는 ‘갯바위돌’이라는 은어도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재생산 정도가 높은 은어가 ‘물건너 온기야?’ 라든지 ‘짤짜’ 같은 것들이다. 이는 국영상점에 거의 물건이 비치되어 있지 않는 현실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갯바위돌’ 같은 은어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퇴조하고, 그 대신에 ‘외제’상품에 대한 관심과 구득기회의 확보가 일반주민들의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로 자리잡게 된 지간의 사정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또 북한에서는 식량난 및 생필품 부족으로 인한 불만과 더불어 북한 화폐에 대한 불신이 거의 극에 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돈은 휴지와 같다’는 자조적인 꾸밈에서부터 ‘조선돈은 개도 안 먹는다’, ‘우리돈 돈이냐?’ 등 북한 화폐에 대한 경시태도를 강

하게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심각한 인플레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들 사이에 현물교환식의 상거래를 성행하게 만들고, 암시장에서의 비정상적인 물품 유통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표 6> 생계유지를 위한 반합법적·적극적 대응방식에 관련된 은어·풍자어 (경제영역 범주 [2])

	은어·풍자어	응답자 수		재생산집단			재생산빈도	
		A	B	I	II	III	낮음	높음
1	농장 포전은 나의 포전	14	III-3		2	9	1	13
2	농장밭은 나의 밭이다	11		1	1	9	2	9
3	직업이 돈이다	11			1	10	2	9
4	노동자는 노골적으로 훔쳐 먹는다	11	III-1			10	1	10
5	내 손에 풀이 있을 때 챙겨야 한다	8				8		8
6	보따리 장사	8		1		7	1	7
7	[주민들은] 손으로 채 먹고, 간부들은 입으로 채 먹는다[말로 벌어 먹는다]	7				7	2	5
8	3가지 부(간부·어부·과부)가 잘 산다	6			1	5		6
9	농장원은 농장의 논밭만 지키고 농작물만 훔쳐 먹는다	6		2		4		6
10	깨지 못한 사람	6		1		5	1	5
11	경제박사	5		1		4		
12	햇빛회사·달빛회사	4				4		
13	교원은 교묘하게 학생에게 뺏어 먹는다	3		1		2		
14	희망새, 멍멍이	3				3		
15	농기계	2	III-1			1		

주) <표 3>의 주 1), 2) 참조

범주 [2]에 속하는 은어와 풍자어도 범주 [1]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최소한도의 생계유지를 위해 일 개인이나 가족 또는 특정한 집단이 취하게 되는 불법적(‘반합법적’)·적극적 대응양식을 보여주는 것들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화폐물신주의라는 새로운 행위지향의 가치 기준 형성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우선 <표 6>에서 1-9에 해당하는 은어나 풍자어는 생계유지를 위한 거의 필사적인 방편으로서 국유재산의 불법적인 사적 절취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과, 암시장의 현물

교환에 배달될 수밖에 없는 일반주민들의 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 수준에서 적극적인이면서도 불법적인 대응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공장이나 농장의 공유재산의 절취는 대체로 암시장 거래를 염두에 두고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사적 절취와 관련된 풍자를 보면, 북한의 주요한 직업계층인 노동자와 농민이 모두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적발시 엄중 처벌한다는 북한당국의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적 절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말이 광범위하게 유포된다는 것은 절취행위가 사회구조적 병폐라고 할 정도로 만연된 뇌물의 먹이사슬과 결착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뇌물수수를 매개로 한 현장 절취 관련자들의 불법적이고 암묵적인 공모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⁹⁾.

북한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공모의 외연으로서 암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역예정 군관들이 암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군대물자를 부정은닉하는 행위를 비난하는 ‘보따리 장사’나, 암시장을 뜻하는 ‘햇빛회사·달빛회사’라는 은어는 일반주민들의 경제생활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변화에는 구소련 및 동구사회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암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개인들간 상거래의 확산과 이윤추구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가치척도로서의 화폐의 위력에 대한 대중적 체득과정이 수반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의 불정에 밝은 러시아 별목공 출신 노동자들을 ‘경제박사’라고 비유하고, 또 ‘작업이 돈이다’라는 풍자의 재생산에 피변접자들의 약 2/3가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은 화폐불신주의가 북한사회의 새로운 가치규준으로 점차 부각되어 가는 경향을 보여준다. 집지키는 남편(‘명명이’)을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에 나선 아낙네들을 ‘희망새’로 비유하는 은어에서도 이런 인식은 비교적 간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전체적으로 보아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범주 [2]에 해당하는 은어나 풍자어의 재생산빈도는 범주 [1]과 마찬가지로 높다. 물론 이 점은 무엇보다도 최근의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한 가중된 생활고 ‘해결문제’가 주민들의 최우선적인 관심사로 부각

9)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10) 이 점은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사회분위기를 흐리놓는 제일북송동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갈매기페’라는 은어에 대한 응답이 전혀 없는 태에서도 확인된다.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재생산집단 유형에서도 ‘일반 주민들’이 가장 많다는 것은 이 범주의 은어나 풍자어가 전반적으로 널리 빈번하게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관련된 범주 [2]의 은어나 풍자어의 재생산은 범주 [1]의 그것에 비해 경제체제의 정당성에 가하는 위협의 수준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범주의 은어나 풍자어는 기존 경제체제의 운용원칙에 관한 의문이나 도전적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일종의 기술적 또는 도구적인 차원에서의 불가피한 일탈이라는 틀 안에 놓여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곤란하다. 마찬가지로 17명 중 4명이 빈번하게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햇빛회사·달빛회사’라는 은어의 재생산빈도가 낮은 데에서도 시사되지만, 개인적인 상거래(압사장) 활동을 통한 사적 이윤 추구와 그에 따른 사회적 가치규범의 변화도 아직까지는 국지적인 차원에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표 7>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는 은어·풍자어 (경제영역 범주 [3])

	은어·풍자어	응답자 수		재생산집단			재생산빈도	
		A	B	I	II	III	낮음	높음
1	개방해야지, 사람 못살겠다	8		3	2	3	4	4
2	위대한 장군님이 계시는데 웃으며 극복합시다	7	II-1, 외-1	2	2	1	3	4
3	총리나 농업비서가 힘이 있나	6		3		3	2	3

주) <표 3>의 주 1), 2) 참조

범주 [2]의 은어나 풍자어와는 달리 기존 경제체제의 운용원칙에 관한 유보적인 차원의 정당성 부여나 그 구조적 한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함의하는 은어나 풍자어는 기존 지배체제의 정당성에 질적으로 다른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범주 [3]에 포함될 수 있다.

심각한 식량난이나 생필품 배급체제의 파탄이라는 경제적 현실을 복한 경제체제의 구조적 한계로 파악하는 은어와 풍자어는 경제체제에 대한 회의 내지 의구심 또는 부정적 비판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말들의 재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

으로도 해당 개인이나 가족이 정치범으로 몰릴 수 있는 커다란 위험부담을 수반한다. 따라서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빈주 [3]에 해당되는 은어나 풍자어는 희소하다고 할 수 있다.

구소련과 동구사회주의 나라들의 몰락을 일차적으로 무분별한 개방정책에서 기인한다고 이해하는 북한정권이 ‘우리식 사회주의에 잡사상이 끼여들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쳐야 한다’고 강조한 데에서도 이런 접은 쉽게 이해된다. 따라서 ‘개혁·개방 = 북한 사회주의의 멸망’이라는 동식이 현실적으로 위세를 떨치는 상황에서 ‘개방’이라는 말은 가족·친인척·친구와 같은 매우 친밀한 소규모집단 내에서 조심스럽게 유포되고 있다고 보인다. ‘개방해야지 사람 못 살겠다’는 말¹¹⁾이 은어나 풍자어가 아님에도 설문에 포함시킨 이유는 이처럼 사회구조적인 수준과 연관된 주민들의 사회적 의식의 현재적 지형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다. 이 말에 응답한 8명 중 대부분이 평북의 신의주와 함북 등지의 국경교역이 활발한 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북한지역 전체를 놓고 볼 때 그 재생산 범위는 좀더 한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량위기를 주체농법의 실패에서 찾는 ‘총리나 농업비서가 힘이 있나’라는 풍자 역시 정직된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한 북한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직시한다는 점에서 ‘위대한 장군님이 계시는데 웃으며 극복합시다’¹²⁾라는 풍자와 상통한다.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그 대상으로 삼는 이 두 가지 풍자는 앞의 개방에 관한 말보다 재생산 정도가 약간 더 낮다. 그렇지만 1988년의 평양축전 개최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북한의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을 김정일정권에서 찾고, 그 타개책을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에서 구하는 경제영역 빈주 [3]의 은어들이 확대재생산될 경우, 이는 대중적 열망을 수용한 위로부터의 체제내적 개혁을 통한 ‘경제위기의 완화 가능성이 가져올 기존 지배체제의 약화 내지 해체에 대한 전망’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전망을 부분적으로 시사해 준다.

11) 개방에 대한 강렬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이 말은 한 응답자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온 것인데, 다수의 응답자들은 실제로 이보다 완화된 표현을 사용한다고 증명했다.

12) 이 풍자어의 재생산 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는 7명의 응답자들 중 1명은 이 말을 당의 선전영화에서 나오는 대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 경제위기를 지도자를 따라 굶겨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다른 1명은 체리시아 벌복공 시절에 이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5. 사회영역의 은어·풍자어와 일탈행위의 자기정당화

북한의 사회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되는 은어와 풍자어들은 당·정 간부들의 관료주의적 지배행태와 부정부패에 대한 고발적 표현과 더불어 양적으로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사회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체험적 삶에 대한 일상화된 질곡이 현저하게 발현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여기서 사회영역과 관련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하위범주들은 출신성분(토대)에 기초한 사회적 불평등체제와 이와 연관된 주요한 일탈행위의 영역들, 즉 뇌물 수수, 매춘, 범죄 문제이다.

앞서의 정치·경제영역의 은어·풍자어에 대한 범주 구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영역에 관련된 이러한 언술들이 북한의 지배체제에 잠재적 또는 현재적(manifest) 위협을 제기할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를 일단 유형적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범주 [1]에는 출신성분에 토대¹³⁾한 '새로운' 신분제적 위계질서로부터 배태되는 사회구조적 모순에 대한 주민들의 자조적이면서 즉자적·소극적 대응양식을 표출해주는 은어·풍자어와 주민통제기제의 작동 결과 나타나는 공적영역에 의한 사적 영역의 지배와 침식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 상태를 표현해주는 내용의 은어와 풍자어가 여기에 속한다.

<표 8>은 이에 해당하는 은어와 풍자어의 빈도수를 조사·정리한 것이다.

우선 출신성분의 귀속적 지위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자조적 의식을 드러내 주는 12, 13, 14, 17번 등과 같은 풍자어가 매우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귀속적 지위의 위계질서의 상층에서는 백두산 줄기로 비유되는 김일성의 항일게릴라활동¹⁴⁾과의 연관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권층

13) 북한이 토대에 의하여 사람의 성분을 규정하는 사회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자기 부모가 북한 사회가 규정하는 어느계급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이렇게 북한에서 토대를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는 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도 사회의 계층구조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혁명가의 자식이라고 해서 저절로 혁명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투쟁 속에서 단련될 때라야 혁명가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단련을 강조한다. 이러한 상승이동의 가능성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지속적인 충성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노동자, 농민출신 가운데 '당성'이 강한 극소수의 사람들을 간부로 등용시키거나, 토대가 나쁘더라도 간혹 그 중 한명을 간부로 등용하기도 하지만 토대에 의한 사회계층구조는 여전히 허물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14) 이들은 북한 정권수립 이후 고위직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차번호가 『55-』로 시작되는 벤츠나 볼보

과 일반주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에 대한 인식은 ‘까치는 끼리끼리 산다’, ‘끼리끼리 달라진다’와 같이 재생산 빈도가 높은 풍자어들 속에서도 나타난다.

이와 같은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대우는 일반 주민들에게서 사회적 불평등구조에 대해 양기적인 의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안면이 사촌보다 낫다’, ‘족벌이나 야부꾼 아니면 출세 못하는 세상’이라는 풍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부정적이고 방관적인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태도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드러나는 태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연줄망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지붕이 낮아도 사다리가 있어야 올라간다’, ‘높은 곳으로는 사다리가 있어야 올라간다’는 풍자가 이에 해당한다. ‘일 잘하는 아들보다 말 잘하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 라는 자 ‘직업이 사람이다’라는 풍자는 이보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 상승이동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망을 드러내 준다. 물론 이러한 류의 적극적인 풍자에도 체념적이거나 자조적인 측면이 들어있다.

<표 8> 사회적 불평등체계에 대한 즉자적·소극적 대응과 관련된 은어·풍자어

(사회영역의 범주 [1])

	은어·풍자어	응답자 수	재생산집단			재생산빈도		
			I	II	III	낮음	높음	
1	잔등도 낡이다	16			14	1	15	
2	안면이 사촌보다 낫다	16	III-1	2	13	1	15	
3	II호차	15		1	14	1	14	
4	까치는 끼리끼리 산다	14			14		14	
5	깔개	14		5	9	1	13	
6	바람재	13	III-1		12		13	
7	양반 백성[상놈]	13		2	11	1	12	
8	일 잘하는 아들보다 말 잘하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	13	III-2	1	10	1	12	
9	직업이 사람이다	13	II,III-1	2	9	2	11	
10	백두산 줄기나 낙동강줄기야 출세할 수 있다 [~ ~ 아니면 힘들다]	13	III-1	3	2	7	2	11
11	난사람	12	III-2	3	1	6	4	8
12	당세쓰다	11		1	2	8	3	8

가 제공되고, 특수 진료소 및 서비스배분의 특권과 더불어 정보의 독점 등 이른바 북한학의 ‘성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백두산 줄기’라고 불린다.

	은어·풍자어	응답자 수		재생산집단			재생산빈도	
				I	II	III	낮음	높음
13	구명수	10		1	1	8	2	8
14	백두산 줄기여야 올라간다	9	III-1			8		9
15	바탕이 있어야 오를 수 있다	9	III-1			8		9
16	죽별이나 아부꾼 아니면 출세못하는 세상	9		1	2	6	1	8
17	간부사업	9	III-1		1	7	2	7
18	만백성에게 해당하는 해당화	8				8		8
19	태백산 줄기가 아니면 출세할 수 없다	8	I-1			7		8
20	국정가격과 도덕에는 왕가물이 들었다	8			2	6		8
21	텔레비각쟁이	8			1	7	1	7
22	지붕이 낮아도 사다리가 있어야 올라간다 [백이 있어야 출세한다]	7			1	6	1	6
23	높은 곳으로는 사다리가 있어야 올라간다	7		1	2	4	3	4
24	병아리도 빼양빼양하고 운다	6			3	3	1	5
25	해방된 조선	6		2		4	3	3
26	돼지사냥 [꿀꿀이 사냥]·돼지목장	5				5		5
27	땅집이라도 그렇다	5				5		5
28	호박당원	5		1		4	1	4
29	유보도 대장	4		1	1	2	3	1
30	해방만세 차	3				3		3
31	시래미 잡기	3				3		3
32	끼리끼리 달라진다	3				3		3
33	삼백프로	3	III-1			2		3
34	총마개	3				3	1	2
35	쑥섬신세	3			1	2	1	2
36	때밀기	3			1	2	1	2
37	사람사업	3			1	2	1	2
38	물·안·지 법칙	2				2		2
39	꽃맞추기	2				2		2
40	벨풀이	2				2		2
41	칼포대기	2			1	1		2
42	상덕 상집	2			1	1		2
43	평양꾸민 사람 따로 있고 평양사는 사람 따로 있다	2				2	1	1
44	고급세미나르	2				2	1	1
45	까탈쟁이	2				2	1	1

주) <표 3>의 주 1), 2) 참조

흥미롭게도 이러한 사회구조적 불평등 문제는 부분적으로는 지역간 불평등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비록 빈도수는 높지 않지만 ‘병아리도 빼양빼양 하고 운다’, ‘평양꾸민 사람 따로 있고 ~’라는 풍자에서 평양과 여타 지역과의 차별 문제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범주 [2]에는 대다수 피지배층의 사회적 상승이동의 기회가 구조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식량 및 기초 생필품의 국가배급체계의 대체적인 붕괴라는 전반적인 위기 상황이 중첩됨에 따라 증폭될 수밖에 없었던 사적영역의 부정적인(매춘행위, 사기 및 도둑질처럼 행위의 내용적 성격이 부정적인)·점진적인 복원과 사회주의체제를 이끌어 가는 지배적인 규범 및 공적 규율의 약화와 일탈의 증가현상을 시사해 주는 은어·풍자어가 포함될 수 있다.

침예하게 부각된 이러한 전면적인 사회적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은 개인이나 가족이 최저 수준의 생물학적 생계방편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회체제의 규범이나 조직 원리로부터 벗어나 부정적인 일탈행위를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바, 범주 [2]에 포함되는 은어와 풍자어들은 이러한 전이과정에서 표출되는 사회적 가치지향의 변모와 관계된다. 그런데 이 과정은 수령-당-대중의 삼위일체식 집단주의에 기초한 북한만의 독특한 ‘국가가족론’의 물질적 토대와 이념적 정당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체제안정도에 미치는 위해(危害)의 정도가 낮지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범주 [2]에 해당하는 은어·풍자어의 빈도수와 유형별 재생산집단을 정리해 놓은 <표 9>을 보면, 무엇보다도 ‘고이다’라는 뇌물을 받친다는 뜻의 은어가 일상생활 언어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면접자 모두가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재생산되는 은어로서 ‘고이다’를 지적인 테에서도 잘 드러난다. <표 9>에 나와 있는 뇌물수수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 중에서도 특히 ‘뇌물은 인간의 도리다’라는 풍자는 사회적 규범 윤리의 광범한 전도현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범주 [1]에 속하는 ‘뺨이 있어야 출세한다’, ‘죽벌이나 아부꾼 아니면 출세 못하는 세상’이라는 자조적 비아냥거림이나 연줄망 형성을 위한 개인적 노력이 공공연한 뇌물 수수로 발전해 나가면서, 아예 뇌물이 사회생활의 ‘정도(正道)로까지 치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육십이 동창이다’, ‘1900년대는 동창’, ‘아바이 동부’라는 가부장제사회에서 중요한 도덕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장유유서 관념의 급속한 퇴조현상은 다음에 보게 될 범주 [3]의 행위양식을 예비해 주는 것들이다. 이것은 뇌물을 매개로 한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이 그러한 관계에서의 인간적 신뢰와 인격의 상실을 배태하고, 그러한 변질된 가치체계로부터 범주 [3]으로 연결되어 나가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사회적 기초 윤리의 점진적 붕괴는 ‘생활조절위원회’(잘사는 집을 털면서 이를 부의 공정한 분배를 꾀하는 행위라고 빗대는 말), ‘문차기’, ‘사기당하는 놈이 머저리다’, ‘사기친놈이 똑똑 하고 ..’, ‘결쇠질’, ‘빚을 많이 진 놈이 똑똑한 놈이다’ 등 도둑질 및 사기 행위가 점점 더 자기정당화되는 사회적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결쇠질’이라는,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따고서 도둑질하는 것을 뜻하는 은어가 요즘에는 아예 대놓고 ‘문차기’라는 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증언, 그리고 도둑질하러 가면서 ‘생활조절’하러 간다든지 ‘공작간다’라는 당에 의해 공식화된 과업적 표현들을 마구 빗대어 쓰고 있는 현상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북한체제의 경제적 위기관리역량의 복원 정도에 따라 대체로 좌우될 문제이겠지만, 범주 [2]에 해당되는 소극적·부정적 일탈에 대한 자기정당화는 생계유지와 연계되어 좀더 적극적이고 부정적인 일탈행위를 자기정당화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수준의 일탈행위의 확산은 새로운 사회적 행위의 가치지향을 부분적으로 내재화하게 된 개인이나 가족을 기존 사회체제의 지배적 규범으로부터 더욱 현저하게 분리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표 9> 소극적·부정적 일탈행위에 관련된 은어·풍자어 (사회영역의 범주 [2])

	은어·풍자어	응답자 수		재생산집단			재생산빈도	
				I	II	III	낮음	높음
1	고이다	17			1	16	1	16
2	꽃제비	17	III청-1		1	15	1	16
3	육십이 동창이다	15	III-1	1	4	9	2	13
4	생활조절위원회	15		1	3	11	3	12
5	문차기	14	II청-1		1	12	1	13
6	협잡(사기)당하는 놈이 머저리다	14	III-1	1		12	2	12
7	사기친 놈이 똑똑하고, 사기당한 놈이 머저리다	12			1	11		12
8	야생	12	III청-1	1		10	1	11
9	결쇠질	11		2	3	6	2	9

	은어·풍자어	응답자 수		재생산집단			재생산빈도	
				I	II	III	낮음	높음
10	공작을 한다	11		3	1	7	3	8
11	단독치기	10			2	8	3	7
12	뚜룩꾼	9		1	1	7		9
13	붓하는게 머저리나	9		1		8	2	7
14	술, 담배가 본이다	8			2	6		8
15	아바이동부	7	III-1			6		7
16	쌀과 술이 시험치지 사람이 시험치나	7		1	1	5	1	6
17	토벌간다	5			1	4	1	4
18	1900년대는 동창	4				4		4
19	[뇌물은 인간의 도리이다] 모두가 자기 방면에서 쪼아 먹으면서 산다	4		1	1	2		4
20	깡쟁이	4		1		3	1	3
21								
22	혹 나간다	3			1	2	1	2
23	빚을 많이 진 놈이 똑똑한 놈이다	2				2		2
24	고선생 모시고 왔습니나 [고선생(과 같이) 왔나?]	2				2		2
25	해방치녀	2				2		2
26	교수는 신인 부용수보다 못하나	2		1		1	1	1

주) <표 3>의 주 1), 2) 참조

아래의 <표10>에 나와 있는, 범주 [3]에 포함되는 은어와 풍자어는 범주 [2]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인 및 집단의 일탈행위에 대한 자기정당화 유형이 새로운 행위 기준으로서 확산되고 있는 변화된 규범과 가치지향을 함축하는 것들이다. 또 이것들은 범주 [2]에 해당되는 은어·풍자어보다 잠재적인 효과면에서 훨씬 더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부당한 자기행위에 대해서 범주 [2]에서는 '자기 당하는 놈이 머저리나', '자기친 놈이 똑똑하고 자기당한 놈이 머저리나' 식의 표현이 범주 [3]에서는 '돈을 꿔주는 놈은 머저리고 그 돈을 갚아 주는 놈은 더 머저리나'라는 식으로 정상적인 행위가 일탈적 행위로 전도되어 나타나는 가치지향을 엿볼 수 있다.

<표10> 적극적·부정적 일탈행위에 관련된 은어·풍자어 (사회영역의 범주 [3])

	은어·풍자어	응답자 수		재생산집단			재생산빈도	
				I	II	III	낮음	높음
1	공동변소	11			2	9	2	9
2	북조선에서 슷처녀를 성으려면 탁아소에나 가봐라	11	III-4		1	6	3	8
3	우선 때리고 봐야 한다	8	III-1		1	6	2	6
4	돈을 쥐주는 놈은 머저리이고, 그 돈을 갚아주는 놈은 더 머저리이다	7				7		7
5	오늘은 햇빛봐도 내일은 못봐	5			1	4	2	3
6	호치 따 먹자	5	III-1	1	1	2	1	3
7	뿡도 따고 돈도 비네	4				4	1	3
8	함지박[송편 버찌 꽃 생생보] 사세요	4		1		3	1	3
9	팔 게 없어서 고기를 팔아서 사나	3		1		2	1	2
10	꼬장떡	1		1			1	

주) <표 3>의 주 1), 2) 참조

아울러 개인이나 집단의 일탈행위와 관련하여 ‘우선 때리고 봐야 한다’, ‘오늘은 햇빛 봐도 내일은 못봐’라는 표현에서처럼 적극적인 선제행동이나 폭력행사의 과시적인 위협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사회영역에서의 이러한 잠재적인 위협적 경향의 증대가 국가에 의해 지배되어 온 공적영역을 침식하면서 ‘사적 자율성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쪽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그러한 경향의 현실적 발현은 자본주의사회의 부정적인 내생적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일탈행위들과 친화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범주 [2]에 해당하는 일탈행위들은 해당 행위주체들의 개인이기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공모’ 위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물론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범주 [2]와 [3]의 구분은 분석적 목적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지, 실제 사회영역에서 양자는 많은 경우 혼재되어 진행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범주의 은어나 풍자어들 가운데 성의 상품화의 확산 경향을 보여주는 것들도 적지 아니하다. 다수의 피면접자들이 <표 10>의 2, 6번과 같은 말들은 대체로 농담조의 형태로 재생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하였지만, 이러한 현상 역시 위에서 살펴 본 기존의 지배적인 사회적 규범의 급속한 해체 조짐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6.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북한사회의 정치·경제·사회영역의 '가장 심각한' 현재적 문제들에 대한 주민들의 사회적 의식의 반영이자 행위의 가치지향을 예시해 주는 지배적인 은어·풍자어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북한 사회의 각 영역에서의 체제안정도를 저해하는 현상들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체제안정도 문제를 검토하고자 했다.

이 작업은 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본 연구가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것임이 판명되었다.

우선, 식량난이 극도로 심각해진 현재의 북한사회에서 새롭게 생성되거나, 그 표현 또는 뜻풀이가 변형되거나, 새롭게 바뀐 은어와 풍자어를 수집할 수 있었다. 또 이러한 경제상황의 급변에 따라 과거에 (대체로 1980년대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주로 사용되던 은어나 풍자어들 가운데 상당수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는 특정한 은어나 풍자어의 뜻풀이가 현재 북한에서는 그러한 표현이나 의미를 상실하고, 일상적인 용어로 정착되어 더 이상 은어 및 풍자어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리고 전혀 그 의미가 잘못 알려진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의 각 영역별로 3개의 분석범주를 사용하여 은어 및 풍자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였다.

첫째, 정치·경제·사회 각 영역에서 유포되고 있는 은어와 풍자어들중 범주 [1]에 속하는 것들에는 대체로 해당 영역에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재생산과정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적·물적 대상에 대한 자기비하, 원망, 증오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를 북한체제의 안정도 문제와 관련시켜 볼 때, 가장 높은 빈도수와 확장된 재생산집단을 갖는 은어나 풍자어들이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의식 속에서 북한체제의 탈정당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둘째, 범주 [2]에 속하는 은어·풍자어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사회영역과 경제영역에 관련된 것들은 범주 [1]의 은어나 풍자어들에 비해 북한체제의 정당성 유지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가 일정하게나마 예견하게 만들고, 또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치영역에 관련된 범주 [2]의 은어와 풍자어는 이와 달리 수령관과 유일당

지도체제에 입각한 북한의 정치체제를 탈정당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를 낳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점은 당·정간부에 대한 매우 직설적이고 신랄한 비유나 풍자가 공식적인 영역에서 널리 재생산되고 있음에도 범주 [3]의 은어나 풍자어를 생성·유포시키는 데에는 극히 부정적인 매개역할을 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범주 [3]에 속하는 은어·풍자어는 사회 전영역에 걸쳐 그 빈도수나 재생산집단의 확장 범위에 있어서 범주 [1], [2]에 비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사회영역에 한정시켜 볼 경우 현실적으로 범주 [2]와 [3]에 속하는 은어나 풍자어들이 상호분리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영역의 일탈문제의 해결은 경제영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영역에 관계된 범주 [3]의 은어·풍자어의 유포실태가 북한체제의 안정도의 변화를 일정하게 반영해 주는 지표로 역할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사회영역에서의 일탈적 행위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범주 [3]의 은어나 풍자어가 북한사회 전영역에 걸쳐 가장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고 할 때 예상되는 결과이다. 범주 [3]의 은어나 풍자어에 반영되는 바와 같이 북한체제의 안정도가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체제 해체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경우, 그러한 국면을 경과하고 난 이후의 북한사회에서 범주 [3]에 반영된 새로운 가치규범은 그 부정적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나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처럼 총체적인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현재 북한사회의 현재적 문제들에 대한 주민들의 사회의식의 반영물이자 앞으로 일정한 행위 지향을 예시해 주는 은어·풍자어를 북한체제의 안정도와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 북한사회의 현재적 문제들이 사회 전반에 체제이완현상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마도 이러한 체제 이완현상이 지배적인 현상으로 가시화될 때 북한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것 처럼 북한사회의 지배적인 은어와 풍자어 분석을 통해 볼 때 아직은 그러한 현상이 체제안정도와 관련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성분별로 동요계층의 동요가 상당히 보여지지만 북한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군중과 기본군중들 사이에서는 북한 사회가 식량난을 얼마큼 극복하느냐에 따라 현재 범주 [3]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의식들의 상당 부분이 잠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한 시사점이다.

분명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의 경제난 심화로 가중되고 있는 주민들의 일탈적 행위들이 점차 지배적으로 된다면 이는 앞으로 북한체제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Buslowicz Malgorzata, "Social Perceptions of Authority", Social Control and the Law in Poland, J. Kwasniewski et al. eds., Berg, 1991.
- Denemark Robert A. & Howard P. Lehman, "South African State Terror: The Costs of Continuing Repression", The State as Terrorist, M. Stohl et al. eds., Greenwood Pr., 1984.
- Dundes Alan, Cracking Jokes: Studies of Sick Humor Cycles and Stereotypes, Berkeley, 1987.
- Fowler Roger, B.Hodge., G.Kress, T.Trew, Language and Control, RKP, 1979.
- Henry Stuart, "The construction and deconstruction of social control: thoughts on the discursive production of state law and private justice", Transcarceration: essays in the sociology of social control, J.Lowman et al. eds., Gower, 1987.
- Miller James R. ed., Politics, work, and daily life in the USS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Podgorecki Adam, "The Authorisation of Illegality", Social Control and the Law in Poland, J. Kwasniewski et al. eds., Berg, 1991.
- Sanjian Andrea Stevenson, "The social construction of deviance and the transition from communist rule", The Social Legacy of Communism, Millar, James R. & Sharon L. Wolchik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Schutz Charles E., Political Humor: From Aristophanes to Sam Ervin. Rutherford, 1977.
- Scott James C.,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Peasant Resistance. Yale Univ. Pr., 1985.
- Thurston Robert W., "Social Dimensions of Stalinist Rule: Humor and Terror in the USSR, 1935-1941", Journal of Social History, vol.24 (3) (1991)
- アエラ編集部, 『北朝鮮・亡命者五十人の証言』. 朝日新聞社, 1995.
- 강릉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북한사회의 이해』, 집문당, 1996.

- 구종서, “북한의 조기 붕괴론”, 한국정치학회, 1997. 3월 한국전쟁/북한 학술토론회 발표문.
- 『내외통신』(주간판·보도판), 1993. 6 ~ 1997. 10월분.
- 내외통신사 부설 북한문제연구소, 『북한실상 종합자료집』, 1995.
- _____, 『북한의 현실』, 1993.
- 동아일보사, 『김정일 북한대백과』, 신동아 1995년 1월호 별채부록.
- 류길재, “김정일 정권하의 북한체제와 체제변화 가능성의 검토”, 『국가전략』, 제 3권 1호 (새종연구소), 1997.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1996.
-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누를수록 피져가는 은어”, 『통일』, 1996년 8월호.
- 박명진, “즐거움(pleasure), 저항, 이태올로지”,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1991.
- 북한연구소, “북한의 사회일탄현상 점검”, 『북한』, 1996년 3월호.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나남, 1995.
- 손종국·우영옥, 『북한학』, 학문사, 1996.
- 연합통신(편), 『평양의 지붕밑』, 1991.
- 이성연, “북한 국이사전 예분의 사회통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북한·통일연구 논문집』 제7권, 통일원, 1993.
- 이운죽, 『북한사회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 _____,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법문사, 1993.
-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1995.
- 전수태·최효철, 『남북한 언어비교』, 녹진, 1989.
- 전현준, “김정일정권 조기붕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회, 1997. 3, 한국전쟁/북한 학술토론회 발표문.
- 조선일보사, 『북한, 그 충격의 실상』, 월간조선 1991년 신년호 별채부록.
-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전환기 '북한적' 정치현상의 재인식』,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평화문제연구소·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공편, 『통일·북한핸드북』, 평화문제연구소, 1997.

한겨레21 편집부, “북에서 온 편지 ① ~ ④”, 『한겨레21』, 제160-163호, 1997. 6.

경제사회연구원,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1996.

〈부록 I〉

권 별 수 록 논문 일 램 표

권별	논 문 제 목	연 구 자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관한 인식제고 방안 - 대학생들의 의식조사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 한반도 통일시 위기관리 방안 연구 - 독일의 난민, 탈주민 및 재이주민대책 사례를 중심으로 ○ 통일 후 북한기업의 사유화 방안 - 동유럽 국가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사유화 정책구상 ○ 남북한 통합시 북한 국공채의 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 국제법상 국가채무의 승계문제를 중심으로 ○ 통일원 「전자 상황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 ○ 민간통일운동의 주요 논의 동향과 통일 정책 수용여부에 관한 연구 	<p>金永夏(경북대 강사)</p> <p>金世淵(인제대 전임강사)</p> <p>金學民(순천향대 조교수)</p> <p>申性秀(한국사회통일연구원 연구위원)</p> <p>宋裕旻(부경대 강사)</p> <p>朴燦奭(안양전문대 강사)</p>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 중국 경제개혁의 북한수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중국의 對한반도 기본전략 - 북한의 위기사 예상되는 중국의 반응을 중심으로 ○ 독일통일 후 과거청산에 관한 논쟁 연구 ○ 북한 정보통신 시장의 이행경제적 전망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 ○ 한국교회의 통일논의에 관한 연구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p>鄭俊杓(영남대 조교수)</p> <p>鄭煥禹(외교안보연구원 연구원)</p> <p>金永鎭(숭실대 사회과학 연구원 연구원)</p> <p>高相斗(연세대 사회과학 연구소 연구원)</p> <p>李 雄(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원)</p> <p>池忠楠(서강전문대 강사)</p>

권별	논 문 제 목	연 구 자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주태실태와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 김정일체제하 북한군 및 군엘리트 연구 ○ 해방직후 북한의 교육·문화실태 일연구 - 소련의 대북한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 북한주민의 이미지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 북한 사회주의체계의 전환과 구조적 제약 ○ 북한사회의 풍자적·은어적 담론분석을 통해 본 체제안정도 문제 	<p>尹惠楨(평태대 전임강사)</p> <p>金秉租(국방대학원 조교수)</p> <p>姜仁求(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p> <p>鄭基仙(성균관대 강사)</p> <p>盧炳喆(서울대 강사)</p> <p>吳存錫(전남대 강사)</p>
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남북한관계 변화 전망 ○ 남북한 친족구조의 비교 - 남북한 가족법의 문화인류학적 접근 ○ 남북한 가족의 가족중심의식과 사회통합 가능성의 모색 ○ 일본기업의 북한투자, 대만·한국기업의 중국투자 경험으로부터 본 한국기업의 북한 투자진출 전략 ○ 「환동해경제권」 형성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연계 가능성 ○ 남북한 당국간 회담유형과 남북한 관계변화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정치·경제, 사회·체육분야의 회담유형을 중심으로 	<p>崔龍燮(광주보건전문대 조교수)</p> <p>申仁澈(영남대 강사)</p> <p>崔妍實(상명대 전임강사)</p> <p>徐錫興(부경대 부교수)</p> <p>李鉉勳(강원대 부교수)</p> <p>扈光石(동국대 강사)</p>
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대비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모형 개발 ○ 가치교육 기법을 활용한 통일교육 교수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한 통일정책의 적극적 홍보 ○ 통일 후 북한주민 재교육을 위한 인터넷상의 가상대학 구축 방안 ○ 남북한 의무교육비제 통일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탈북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p>秋乘完(서울대 강사)</p> <p>金信君(경상대 강사)</p> <p>李眞根(경민전문대 조교수)</p> <p>權奇泰(강릉대 부교수)</p> <p>金容逸(한국해양대 전임강사)</p> <p>金鎮潤(한국정치발전 연구원 책임연구원)</p>

〈부록 I〉

권 별 수 록 논 문 일 략 표

권별	논 문 제 목	연 구 자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관한 인식제고 방안 - 대학생들의 의식조사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 한반도 통일시 위기관리 방안 연구 - 독일의 난민, 탈주민 및 재이주민대책 사례를 중심으로 ○ 통일 후 북한기업의 사유화 방안 - 동유럽 국가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사유화 정책구상 ○ 남북한 통합시 북한 국공채의 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 국제법상 국가채무의 승계문제를 중심으로 ○ 통일원 「전자 상황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 ○ 민간통일운동의 주요 논의 동향과 통일 정책 수용여부에 관한 연구 	<p>金永夏(경북대 강사)</p> <p>金世淵(인제대 전임강사)</p> <p>金學民(순천향대 조교수)</p> <p>申性秀(한국사회통일연구원 연구위원)</p> <p>宋裕旻(부경대 강사)</p> <p>朴燦奭(안양전문대 강사)</p>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 중국 경제개혁의 북한수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중국의 對한반도 기본전략 - 북한의 위기사 예상되는 중국의 반응을 중심으로 ○ 독일통일 후 과거청산에 관한 논쟁 연구 ○ 북한 정보통신 시장의 이행경제적 전망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 ○ 한국교회의 통일논의에 관한 연구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p>鄭俊杓(영남대 조교수)</p> <p>鄭煥禹(외교안보연구원 연구원)</p> <p>金永鎭(숭실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p> <p>高相斗(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p> <p>李 雄(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원)</p> <p>池忠楠(서강전문대 강사)</p>

권별	논 문 제 목	연 구 자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주택실태와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 김정일체제하 북한군 및 군엘리트 연구 ○ 해방직후 북한의 교육·문화실태 일연구 - 소련의 대북한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 북한주민의 이미지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전환과 구조적 제약 ○ 북한사회의 풍자적·은어적 담론분석을 통해 본 체제안정도 문제 	<p>尹惠楨(평택대 전임강사)</p> <p>金秉租(국방대학원 조교수)</p> <p>姜仁求(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p> <p>鄭基仙(성균관대 강사)</p> <p>盧炳喆(서울대 강사)</p> <p>吳有錫(전남대 강사)</p>
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남북한관계 변화 전망 ○ 남북한 친족구조의 비교 - 남북한 가족법의 문화인류학적 접근 ○ 남북한 가족의 가족중심의식과 사회통합 가능성의 모색 ○ 일본기업의 북한투자, 대만·한국기업의 중국투자 경험으로부터 본 한국기업의 북한 투자진출 전략 ○ 「환동해경제권」형성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연계 가능성 ○ 남북한 당국간 회담유형과 남북한 관계변화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정치·경제, 사회·체육분야의 회담유형을 중심으로 	<p>崔龍燮(광주보건전문대 조교수)</p> <p>申仁澈(영남대 강사)</p> <p>崔妍實(상명대 전임강사)</p> <p>徐錫興(부경대 부교수)</p> <p>李鉉勳(강원대 부교수)</p> <p>扈光石(동국대 강사)</p>
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대비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모형 개발 ○ 가치교육 기법을 활용한 통일교육 교수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한 통일정책의 적극적 홍보 ○ 통일 후 북한주민 재교육을 위한 인터넷상의 가상대학 구축 방안 ○ 남북한 의무교육법제 통일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탈북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p>秋乘完(서울대 강사)</p> <p>金信君(경상대 강사)</p> <p>李眞根(경민전문대 조교수)</p> <p>權奇泰(강릉대 부교수)</p> <p>金容逸(한국해양대 전임강사)</p> <p>金銀潤(한국정치발전 연구원 책임연구원)</p>

〈부록 I〉

권 별 수 록 논 문 일 랑 표

권별	논 문 제 목	연 구 자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관한 인식제고 방안 - 대학생들의 의식조사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 한반도 통일시 위기관리 방안 연구 - 독일의 난민, 탈주민 및 재이주민대책 사례를 중심으로 ○ 통일 후 북한기업의 사유화 방안 - 동유럽 국가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사유화 정책구상 ○ 남북한 통합시 북한 국공채의 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 국제법상 국가채무의 승계문제를 중심으로 ○ 통일원 「전자 상황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 ○ 민간통일운동의 주요 논의 동향과 통일 정책 수용여부에 관한 연구 	<p>金永夏(경북대 강사)</p> <p>金世淵(인재대 전임강사)</p> <p>金學民(순천향대 조교수)</p> <p>申性秀(한국사회통일연구원 연구위원)</p> <p>宋裕旻(부경대 강사)</p> <p>朴燦奭(안양전문대 강사)</p>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 중국 경제개혁의 북한수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중국의 對한반도 기본전략 - 북한의 위기사 예상되는 중국의 반응을 중심으로 ○ 독일통일 후 과거청산에 관한 논쟁 연구 ○ 북한 정보통신 시장의 이행경제적 전망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 ○ 한국교회의 통일논의에 관한 연구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p>鄭俊杓(영남대 조교수)</p> <p>鄭煥禹(외교안보연구원 연구원)</p> <p>金永鎭(숭실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p> <p>高相斗(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p> <p>李 雄(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원)</p> <p>池忠楠(서강전문대 강사)</p>

권별	논 문 제 목	연 구 자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주택실태와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 김정일체제하 북한군 및 군엘리트 연구 ○ 해방직후 북한의 교육·문화실태 일연구 - 소련의 대북한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 북한주민의 이미지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 북한 사회주의체계의 전환과 구조적 제약 ○ 북한사회의 풍자적·은이적 담론분석을 통해 본 체제안정도 문제 	<p>尹惠楨(평택대 전임강사)</p> <p>金秉租(국방대학원 조교수)</p> <p>姜仁求(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p> <p>鄭基仙(성균관대 강사)</p> <p>盧炳喆(서울대 강사)</p> <p>吳有錫(전남대 강사)</p>
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남북한관계 변화 전망 ○ 남북한 친족구조의 비교 - 남북한 가족법의 문화인류학적 접근 ○ 남북한 가족의 가족중심의식과 사회통합 가능성의 모색 ○ 일본기업의 북한투자, 대만·한국기업의 중국투자 경험으로부터 본 한국기업의 북한 투자진출 전략 ○ 「환동해경제권」형성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연계 가능성 ○ 남북한 당국간 회담유형과 남북한 관계변화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정치·경제, 사회·체육분야의 회담유형을 중심으로 	<p>崔龍燮(광주보건전문대 조교수)</p> <p>申仁澈(영남대 강사)</p> <p>崔妍實(상명대 전임강사)</p> <p>徐錫興(부경대 부교수)</p> <p>李鉉勳(강원대 부교수)</p> <p>盧光石(동국대 강사)</p>
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대미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모형 개발 ○ 가치교육 기법을 활용한 통일교육 교수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한 통일정책의 적극적 홍보 ○ 통일 후 북한주민 재교육을 위한 인터넷상의 가상대학 구축 방안 ○ 남북한 의무교육법제 통일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탈북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p>秋秉完(서울대 강사)</p> <p>金岱君(경상대 강사)</p> <p>李眞根(경민전문대 조교수)</p> <p>權奇泰(강릉대 부교수)</p> <p>金容逸(한국해양대 전임강사)</p> <p>金鎮潤(한국정치발전 연구 원 책임연구원)</p>

〈부록2〉

최근 연도별 연구과제 목록('95~'97년)

'95년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실태 분야〉

- 북한사회주의의 경제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사회주의 경제의 체재전환에 관한 연구
- 사회주의체제 전환에 있어서 개인, 사회구조, 국가의 논리
- 북한의 권력구조 및 권력엘리트 변화에 대한 연구
- 북한의 자립적 발전전략의 정치경제
- 북한의 자립적 발전노선에 관한 연구
- 북한사회주의 중앙 - 지방관계의 변화유형 예측
- 북한 지방행정 체계의 구조와 활동방식
- 북한의 도시정책
- 북·일수교과정 및 수교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북한의 대외무역변화와 전망에 관한 연구
- 북한의 노동정책

〈통일정책 및 협상전략 분야〉

- 북한체제의 변화시나리오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통일을 대비한 한민족 여성공동체 조성방안을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
- 대북한 핵억제정책과 합리적 선택
-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남북교류·협상 분야〉

- 남북한 교역에서 준국제사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자유경제 무역지대 진출을 통한 남북경협 발전 전략
- 남북이산가족의 고통화에 따른 이산가족문제 해결대책
- 나진-선봉지구 경제협력에 따른 남북경제 공동위 가동 전략소고
- 남북한 여성교류 활성화 방안
- 남북한의 환경 및 에너지에 관한 교류협력 방안연구
- 남북교류협력 법·제도 보완 및 발전 방안연구

<통일이후 대비 및 이념문제 분야>

- 통일후 예상되는 북한주민들의 통일사회 적응에 대한 연구
- 국민들의 통일비용 지불의사 측정(II)
- 통일대비 교육을 위한 정보통신매체의 이용실태와 활용방안 모색
- 통일이후 간도지역 회복에 관한 법적 연구
- 통일을 전후한 시기의 한국영역 및 국경에 관한 연구
- 북한 도시계획의 특성분석과 통일후의 계획 페리다임의 정립에 관한 연구
- 통일비용과 통일기금에 대한 의식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접근
- 통일한국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자유민주주의 원리

<통일환경 및 통일교육 분야>

- 북·일국교 교섭과 일본의 대북정책
- 북한-일본 국교정상화 교섭
-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대북심리전 향상방안
- 통일교육의 교수, 학습 준거설정에 관한 연구
-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개입의 합법성 및 그 방법

'96년~

<통일정책 분야>

- 탈북귀순자의 한국사회 적응력제고에 관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김정일정권 붕괴시나리오와 한국정책 대응모형
- 통일대비 교포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남북한 통일헌법의 성립절차에 관한 연구

- 러시아한인들의 민족정체성과 한반도통일에 대한 인식 연구
- 남북한 군비경쟁의 계량모형 분석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분야>

- 북한출신 남한이주자의 국내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지원모델 개발
-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일 교육방안의 모색
- 통일시대를 위한 정치교육방안 연구
- 통일후의 바람직한 기업구조 연구
- 북한의 정치교육 효과성에 관한 연구
- 통일이후 남북한 법체계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통일에 대비한 북한기업소들의 발전적 해체 및 사유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북교류 · 협력분야>

- 남북한 신뢰구축
- 통일에 대비한 한국항공정책의 과제와 방향
- 북한의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남북한 환거래 및 금융협력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과 대북투자의 법적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실태 분야>

- 중국농촌의 탈사회주의 개혁과 북한의 진로
- 북한여성의 「여성의식」에 관한 연구
- 북한정치체제 변혁의 역동성
- 북한 “인민”생활세계 연구
- 북한의 화법(話法)연구
- 3차원적 문화구조를 통해본 북한주민의 가치 정향 연구

<통일환경 분야>

- 한·중관계발전이 남북관계 및 한반도 안정에 미치는 영향
- 미북협상과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 북한의 대미협상전략의 효율성과 한계성

- 동북아 평화체제구성과 전망에 있어서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의미와 역할
- 북한의 대미접근과 한국의 대응방안
- 러시아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97년

<통일정책·통일환경 분야>

-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관한 인식제고 방안
- 한반도 통일시 위기관리 방안 연구
- 통일 후 북한기업의 사유화 방안
- 남북한 통합시 북한 국공채의 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 통일원 「전자 상황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
- 민간통일운동의 주요 논의 동향과 통일정책 수용여부에 관한 연구
- 4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방안
- 중국 경제개혁의 북한수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중국의 對한반도 기본전략
- 독일통일 후 과거청산에 관한 논쟁 연구
- 북한 정보통신 시장의 이행경제적 전망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
- 한국교회의 통일논의에 관한 연구

<북한실태 분야>

- 북한의 주택실태와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 김정일체제하 북한군 및 군엘리트 연구
- 해방직후 북한의 교육·문화 실태 일연구
- 북한주민의 이미지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전환과 구조적 제약
- 북한사회의 풍자적·은어적 담론분석을 통해본 체제 안정도 평가문제

<교류협력·인도지원·남북협상분야>

-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남북한관계 변화 전망
- 남북한 친족구조의 비교
- 남북한 가족의 가족중심의식과 사회통합 가능성의 모색
- 일본기업의 북한투자, 대만·한국기업의 중국투자 경험으로부터 본 한국기업의 북한 투자진출 전략
- 「환동해경제권」 형성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연계가능성
- 남북한 당국간 회담유형과 남북한 관계변화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통일교육·홍보분야>

- 통일대비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모형 개발
- 가치교육 기법을 활용한 통일교육 교수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한 통일정책의 적극적 홍보
- 통일 후 북한주민 재교육을 위한 인터넷 상의 가상 대학 구축 방안
- 남북한 의무교육법제 통일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탈북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北 韓 實 態 (Ⅲ)

인 쇄 : 1997. 12. 22

발 행 : 1997. 12. 24

발행처 : 정보분석실 조사관리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154-1
광화문우체국 6층(☎ 730-7013~4)

인쇄처 : 덕성문화사 (☎ 274-5916)
